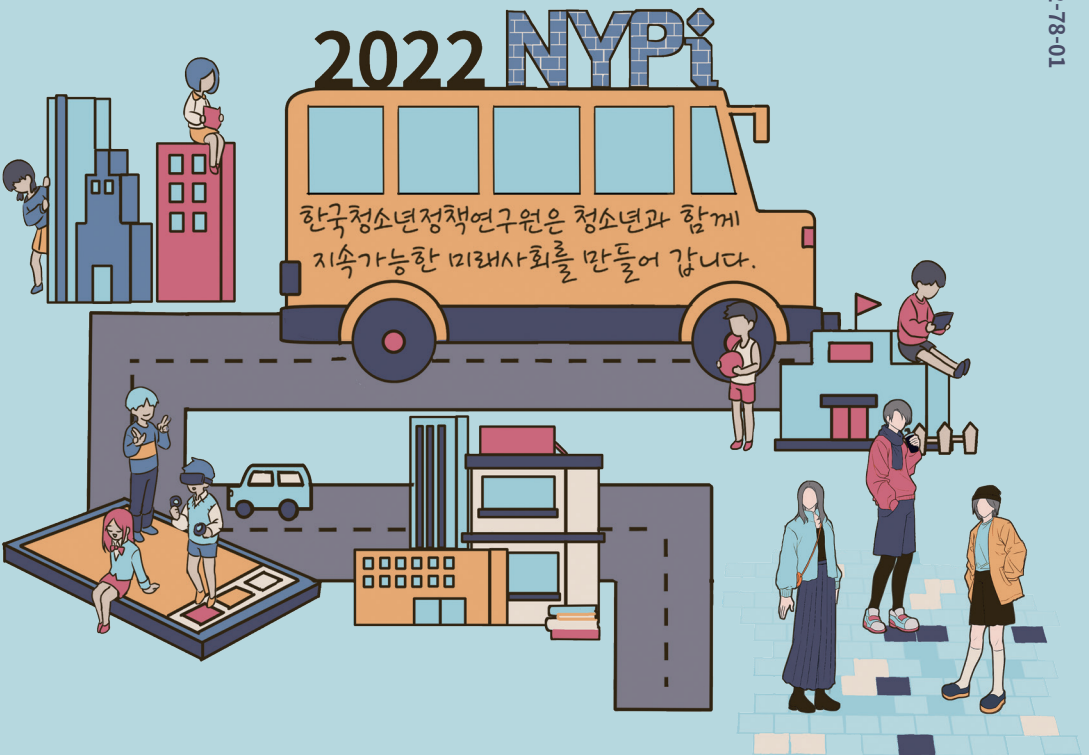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김형주 · 장근영 · 박미선 · 정세정 · 변금선 · 배정희

연구보고 22-일반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협동연구총서 22-78-01
연구보고 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저 자 김형주, 장근영, 박미선, 정세정, 변금선, 배정희

연구진 연구책임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박미선(국토연구원 · 연구위원)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연구위원)
변금선(서울연구원 · 부연구위원)
배정희(성균관대학교 · 조교수)
연구보조원_ 김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 실태를 다년 연속연구를 통해 이행경로 및 영향요인을 추적하여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임
- 금년도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한 빈곤 인식, 정책 욕구를 토대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내용

- 3개년 연구로 수행하는 연속연구과제로서 2차년도 연구인 금년도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 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고찰하였음
- 둘째, 우리나라 청년의 빈곤 현황에 관해 1차년도에 수립한 다차원 청년 빈곤 영역과 지표에 대해 다차원적인 실태 분석을 하였음
- 셋째, 청년 빈곤 문제 주요영역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에 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 넷째, 청년 빈곤의 2차년도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및 주거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청년층 심층면담조사를 하였음
- 다섯째,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로서, 정책 비전 및 방향,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 첫째, 문헌고찰로서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청년 빈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청년 빈곤과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고찰, 해외의 청년 빈곤과 관련된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음
- 둘째, 전문연구기관간 협동연구로 추진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각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청년 빈곤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 분석과 청년 빈곤지표에 대한 실태 분석 등을 공동연구 하였음
- 셋째, 2차 데이터 분석으로서 1차년도에 수립한 청년 빈곤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 청년의 경제, 노동,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에 대한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다차원 빈곤 집단 심층분석을 하였음
- 넷째, 설문조사로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인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교육훈련 및 주거영역에 대한 현황, 인식, 정책 인지도와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 수 4,032명을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여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다섯째, 심층면담조사로서 청년 빈곤의 심도깊은 분석을 목적으로 청년들의 교육훈련과 주거와 관련된 삶을 중심으로 빈곤의 인식과 상태, 위험요인, 정책 욕구 등에 대해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실시하였음
- 여섯째, 청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 및 포럼을 통해 청년 빈곤 현황, 원인,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였음
- 일곱째, 정부부처 정책담당자, 정책사업 수행기관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연구의 주요방향, 현행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방안 등 정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1차년도에 이어 통계청 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2차년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는데,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 시계열 변화 추이,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통해 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과 양상 변화를 분석하였음
- 청년은 이행기 주요 과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는 청년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21년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경제: 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 실업, 비정규직, 정신건강)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2021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빈곤, 비정규직 비율, 정신건강 결핍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은 전통적인 빈곤 기준인 소득 외에도 자산,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다차원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음. 특히, 청년층의 가구소득 빈곤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둘째, 청년 가구주의 높은 자산빈곤율과 열악한 주거는 최근 청년층의 집단내 불평등 수준이 더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 셋째, 코로나19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특히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위험이 매우 증가하였음. 청년의 경우 건강한 집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코로나19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영역의 근로소득 빈곤과 노동영역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의 상대적 빈곤 위험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임금 근로가 아닌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 청년 빈곤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 고찰
- 청년의 교육 및 주거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추진 동향 분석

● 청년 빈곤 관련 의식, 전망,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결과

- 우리나라의 만 19세~34세(법정 연령)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에 대한 3개년 연구 중 2차년도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및 주거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 수 청년층 4,032명에 대해서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 추출로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성별, 청년연령대 내의 구분, 주관적 계층, 2인가구 중위소득 등을 중심으로 표본수에 있어서 가급적 균형을 맞추었음
- 1차년도에 개발한 청년 빈곤 분류틀 및 지표에 따라 교육훈련과 주거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실태, 인식, 정책욕구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청년의 교육훈련 관련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학 진학보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진학하지 않았다는(56.6%) 의견이 두드러진 반면,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로는 취업을 하려면 대학 진학이 유리(59.1%) 하고,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51.5%)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남.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23.3%)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45.1%)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이해됨. 한편,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직업훈련 교육 전반적 만족도는(77.0%) 매우 높게 나타났음.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이 부족해(39.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86.8%)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55.1%)하거나, 국가 장학금을 확대(42.9%)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준비(42.8%)를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의 주거 관련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응답자가 아파트에(55.7%)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8.5%로 파악되었다. 현재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향(63.3%)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 스스로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보다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53.9%)을 통해 주거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우리 사회에서 주거란 '안정적인 삶의 기반'(64.6%)이며, 청년 과반수가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이 필요(64.4%)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해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25.8%)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37.1%)과,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23.0%)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부모의 자금 지원(76.9%)이 있어야만 자가 마련이 가능하며, 청년 대다수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가 마련이 불가능(76.3%)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비용이 경감(42.8%)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34.3%) 또는 청년 임대주택(48.5%)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결과

- 심층면담조사는 2차년도 청년 빈곤의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및 주거에 대해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청년의 일상에서 교육훈련 및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빈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빈곤의 실태, 원인, 전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육빈곤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청년들은 대학 교육, 사교육 및 이외 교육 훈련 비참여가 경제적 빈곤에 의한 교육빈곤이라기 보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비참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교육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소수 있었고, 특히 고용 분야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체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음

- 니트 및 교육빈곤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육, 훈련, 진학 및 취업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현 청년세대들이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취업 실패 등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음. 교육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격차 등 '부모'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교육훈련 관련 정책육구와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 지원 정책의 개선 사항으로 실무자의 현장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동일 훈련 분야 참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등 공유의 장을 만들어 줄 것, 일자리 연계를 보다 강화해 줄 것, 청년 진로 방향 등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 등이 있었음
- 심층면담 참여 청년들은 현재 주거 관련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 및 자가 마련을 위한 대출 의존도도 매우 높았음. 특히, 독립과 혼인이 보다 당면한 문제인 30대 청년들은 주택마련과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20대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집값과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 및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빈곤이란 '자가가 없어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주거비용을 감당이 어려운 상태'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 등으로 분석됨.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주거빈곤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청년 주거 지원 사업 개선 의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 보완 요구가 가장 많았음. 월세 지원, 임대차보호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당장의 주거빈곤과 어려움을 경감하는 지원 외에도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TV, DSR 확대 등의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정책 비전 및 분야

- 본 연구에서는 금년 2차년도 연구에서 중점주제로 다룬 교육훈련 분야와 주거 분야, 그리고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 등 3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교육훈련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
-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
-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강화
-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 청년의 주거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청년정책시행계획의 재정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주거 지원정책 확대
- 주거 지원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청년 빈곤층 수혜 확대를 위한 주거지원 선별기준 평가 및 체계화
- 취약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사업 강화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 자립안전망 체계를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 청년 빈곤 해소 및 자립안전망 지원을 강화한 청년기본법 개정
- 청년정책의 아젠다 및 정책의 질 관리를 위한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22-일반06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8
- 3. 연구내용 9
- 4. 연구방법 10

II.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 1.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 13
- 2. 청년의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0
- 3.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 니트 및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25
- 4. 해외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43

III. 청년 빈곤 실태 분석

-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 65
-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68
- 3. 청년 주거 빈곤 심층 분석 100

IV.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1. 조사 개요	121
2. 청년의 교육훈련	123
3. 청년의 주거	212
4. 요약 및 시사점	310

V.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1. 면담조사 개요	317
2. 면담조사 분석결과	321
3. 요약 및 시사점	366

VI.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375
2. 정책 제언	376
3. 결론	400

참고문헌	409
-------------------	------------

부 록	421
------------------	------------

표 목차

표 I-1. 청년 주거빈곤 가구의 규모	6
표 II-1. 청년 관련 법령 상 청년의 범위	14
표 II-2. 지자체 청년 수당 지원사업 현황	15
표 II-3. 지자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16
표 II-4.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성 평가	17
표 II-5. 김기현 외(2021)의 한국형 니트 정의와 그에 따른 규모 추정 결과	26
표 II-6. 청년도전 지원사업 주요 내용	27
표 II-7.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8
표 II-8.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청년 니트 관련 내용	29
표 II-9. 청년기본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조항	31
표 II-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조항	32
표 II-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일부 법률조항	33
표 II-12. 청년 주거지원 국토부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39
표 II-13. 호주 청년 빈곤층 실태 (2017년 기준)	44
표 II-14. Youth Allowance 수급 조건 - 학생	50
표 II-15. Youth Allowance 수령액 - 학생	51
표 II-16. Youth Allowance 수령액 - 구직자	52
표 II-17. Youth Payment 수령액	58
표 II-18. Young Parent Payment 수령액	59
표 II-19. Jobseeker Support 수령액	60
표 III-1.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최종안)	66
표 III-2. 청년 빈곤 지표별 분석자료	67
표 III-3. 분석 내용	69
표 III-4.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측정방법	70
표 III-5. 분석자료 개요	72
표 III-6.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74
표 III-7.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1)	75

표 III-8. 순자산 빈곤율 (2017~2021)	77
표 III-9. 실업률 (2011~2021)	78
표 III-1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13~2021)	80
표 III-11.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0)	81
표 III-12.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2019, 2020)	83
표 III-13. 가구특성별 RIR (2017~2020)	85
표 III-14.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10)	86
표 III-15.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6~2021)	88
표 III-16.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1)	89
표 III-17.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5, 2019, 2020)	91
표 III-18.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4~2021)	92
표 III-19. 시간 빈곤율	94
표 III-20. 영역 및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97
표 III-2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제2011-490호)	104
표 III-22. 변수 측정	106
표 III-23. 주거빈곤 실태	107
표 III-24. 전체 및 주거빈곤 청년의 특성	109
표 III-25. 청년 주거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10
표 III-26. 청년 주거환경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112
표 III-27. 청년 주거환경 빈곤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114
표 IV-1. 조사 응답자 특성	122
표 IV-2. 대학 진학을 안 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124
표 IV-3. 대학 진학을 안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배경변인별)	125
표 IV-4. 대학에 진학한 이유	126
표 IV-5. 대학에 진학한 이유 (배경변인별)	127
표 IV-6. 진학한 대학의 종류	128
표 IV-7. 진학한 대학의 종류 (배경변인별)	129
표 IV-8. 진학한 대학의 학과	130
표 IV-9. 진학한 대학의 학과 (배경변인별)	131

표 IV-10.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132
표 IV-11.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배경변인별)	133
표 IV-12.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134
표 IV-13.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배경변인별)	135
표 IV-14.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136
표 IV-15.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배경변인별)	137
표 IV-16.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8
표 IV-17.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배경변인별)	139
표 IV-18.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140
표 IV-19.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배경변인별)	141
표 IV-20.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142
표 IV-21.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배경변인별)	143
표 IV-22.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144
표 IV-23.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배경변인별)	145
표 IV-24.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146
표 IV-25.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배경변인별)	147
표 IV-26.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148
표 IV-27.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149
표 IV-28.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150
표 IV-29.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배경변인별)	151
표 IV-30.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152
표 IV-31.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배경변인별)	153
표 IV-32.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154
표 IV-33.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배경변인별)	155
표 IV-34.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156
표 IV-35.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배경변인별)	157

표 IV-36.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158
표 IV-37.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배경변인별)	159
표 IV-38.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않았던 이유	160
표 IV-39.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않았던 이유 (배경변인별)	161
표 IV-40.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 (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162
표 IV-41.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 (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163
표 IV-42.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164
표 IV-43.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배경변인별)	165
표 IV-44.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166
표 IV-45.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167
표 IV-46.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168
표 IV-47.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배경변인별)	169
표 IV-48.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170
표 IV-49.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배경변인별)	171
표 IV-50.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172
표 IV-51.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173
표 IV-52.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174
표 IV-53.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배경변인별)	175
표 IV-54.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176
표 IV-55.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배경변인별)	177
표 IV-56.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178
표 IV-57.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배경변인별)	179

표 IV-58.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180
표 IV-59.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181
표 IV-60.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182
표 IV-61.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183
표 IV-62.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184
표 IV-63.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배경변인별)	185
표 IV-64. 대학생 국가장학금	186
표 IV-65. 대학생 국가장학금 (배경변인별)	187
표 IV-66.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188
표 IV-67.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배경변인별) ...	189
표 IV-68.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190
표 IV-69.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배경변인별)	191
표 IV-70.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2
표 IV-71.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배경변인별)	193
표 IV-72.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4
표 IV-73.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5
표 IV-74.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6
표 IV-75.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배경변인별)	197
표 IV-76.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	198
표 IV-77.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배경변인별)	199
표 IV-78.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200
표 IV-79.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배경변인별) ...	201
표 IV-8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202
표 IV-8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배경변인별) ...	203
표 IV-82.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204
표 IV-83.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배경변인별)	205
표 IV-84.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206
표 IV-85.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배경변인별)	207

표 IV-86.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208
표 IV-87.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배경변인별)	209
표 IV-88.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210
표 IV-89.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배경변인별)	211
표 IV-90.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212
표 IV-91.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배경변인별)	213
표 IV-92.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214
표 IV-93.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배경변인별)	215
표 IV-94.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216
표 IV-95.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배경변인별)	217
표 IV-96. 대출 여부	218
표 IV-97. 대출 여부 (배경변인별)	219
표 IV-98.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220
표 IV-99.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배경변인별)	221
표 IV-100.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222
표 IV-101.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배경변인별)	223
표 IV-102.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224
표 IV-103.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배경변인별)	225
표 IV-104.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226
표 IV-105.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배경변인별)	227
표 IV-106.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228
표 IV-107.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배경변인별)	229
표 IV-108.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230
표 IV-109.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배경변인별)	231
표 IV-110.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232
표 IV-111.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배경변인별)	233
표 IV-112.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234
표 IV-113.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배경변인별)	235
표 IV-114.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236
표 IV-115.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237
표 IV-116.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238
표 IV-117.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배경변인별)	239

표 IV-118.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240
표 IV-119.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배경변인별)	241
표 IV-120.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242
표 IV-121.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배경변인별)	243
표 IV-122.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244
표 IV-123.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배경변인별)	245
표 IV-124.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246
표 IV-125.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배경변인별)	247
표 IV-126.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248
표 IV-127.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배경변인별)	249
표 IV-128.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250
표 IV-129.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배경변인별)	251
표 IV-130.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252
표 IV-131.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배경변인별)	253
표 IV-132.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254
표 IV-133.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255
표 IV-134.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256
표 IV-135.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257
표 IV-136.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	258
표 IV-137.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배경변인별)	259
표 IV-138.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260
표 IV-139.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배경변인별)	261
표 IV-140.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262
표 IV-14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263
표 IV-142.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	264

표 IV-143.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련 인식(배경변인별)	265
표 IV-144.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	266
표 IV-145.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267
표 IV-146.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268
표 IV-147.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269
표 IV-148.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70
표 IV-149.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배경변인별)	271
표 IV-150.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272
표 IV-151.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배경변인별)	273
표 IV-152.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274
표 IV-153.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275
표 IV-154.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276
표 IV-155.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배경변인별)	277
표 IV-156.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278
표 IV-157.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배경변인별)	279
표 IV-15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80
표 IV-15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배경변인별)	281
표 IV-16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82
표 IV-16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배경변인별)	283
표 IV-162. 취약 주거지 개선	284
표 IV-163. 취약 주거지 개선 (배경변인별)	285
표 IV-164. 청년주택 공급 확대	286
표 IV-165.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배경변인별)	287
표 IV-166. 공공지원 민간임대	288
표 IV-167. 공공지원 민간임대 (배경변인별)	289
표 IV-168.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290
표 IV-169.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배경변인별)	291

표 IV-170.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292
표 IV-171.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배경변인별)	293
표 IV-172.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294
표 IV-17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배경변인별)	295
표 IV-174.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자원	296
표 IV-17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자원 (배경변인별)	297
표 IV-17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98
표 IV-17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배경변인별)	299
표 IV-178. 신혼희망타운	300
표 IV-179. 신혼희망타운 (배경변인별)	301
표 IV-180. 공공자가주택	302
표 IV-181. 공공자가주택 (배경변인별)	303
표 IV-182. 민영주택 특별공급	304
표 IV-183. 민영주택 특별공급 (배경변인별)	305
표 IV-184.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안	306
표 IV-185.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안 (배경변인별)	307
표 IV-186.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1+2+3순위)	308
표 IV-187.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1+2+3순위) (배경변인별)	309
표 V-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318
표 V-2. 청년빈곤 심층면담 주요내용	319
표 VI-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377
표 VI-2.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소요 예산	379
표 VI-3.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 소요예산	381
표 VI-4.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강화 소요예산	383
표 VI-5.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385
표 VI-6.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소요예산	385
표 VI-7.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예산 확대	387
표 VI-8. 주거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	389

표 VI-9. 청년 주거 지원 선별기준 분석 평가 및 체계화 사업	391
표 VI-10. 취약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사업 강화	393
표 VI-1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	395
표 VI-12. 청년기본법 조문 구성	396
표 VI-13. 청년기본법 개정(안)	397
표 VI-14. 청년기본법 개정 소요예산	397
표 VI-15. 청년기본법 개정 소요예산	398
표 VI-16.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설치 소요예산	399

그림 목차

그림 Ⅰ-1.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5
그림 Ⅰ-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6
그림 Ⅰ-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8
그림 Ⅱ-1. 청년 연령규정	13
그림 Ⅱ-2.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18
그림 Ⅱ-3.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	19
그림 Ⅱ-4. 주거권 구성요소와 청년 주거정책 수단의 연계	41
그림 Ⅱ-5. 호주 주/준주별 빈곤율 (2011-12 회계연도 기준)	46
그림 Ⅱ-6. Queensland Youth Strategy 프레임워크	47
그림 Ⅱ-7. 호주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48
그림 Ⅱ-8. Child and Youth Wellbeing Strategy 프레임워크	56
그림 Ⅲ-1.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74
그림 Ⅲ-2.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1)	76
그림 Ⅲ-3. 순자산 빈곤율 (2017~2020)	77
그림 Ⅲ-4. 연령별 실업률 (2011~2021)	79
그림 Ⅲ-5. 비정규직 비율 (2014~2021)	80
그림 Ⅲ-6.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0)	82
그림 Ⅲ-7. 청년 니트 비율 변화	84
그림 Ⅲ-8. 가구특성별 RIR (2017~2020)	85
그림 Ⅲ-9.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20)	87
그림 Ⅲ-10.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6~2021)	88
그림 Ⅲ-11.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0)	90
그림 Ⅲ-12.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0,2019,2020)	91
그림 Ⅲ-13.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4-2021)	93
그림 Ⅲ-14. 시간 빈곤율 (2014)	95
그림 Ⅲ-15. 코로나19 전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 추세 변화 효과	96

그림 III-16.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98
그림 III-17. 청년주거빈곤 심층분석 분석모형	102
그림 III-18. 사회적관계의 조절효과 : 주거환경 빈곤-우울 관계	113
그림 III-19. 사회적관계의 조절효과 : 주거환경 빈곤-자아존중감 관계	115
그림 IV-1. 대학 진학을 안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123
그림 IV-2. 대학에 진학한 이유	126
그림 IV-3. 진학한 대학의 종류	128
그림 IV-4. 진학한 대학의 학과	130
그림 IV-5.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132
그림 IV-6.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134
그림 IV-7.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136
그림 IV-8.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8
그림 IV-9.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140
그림 IV-10.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142
그림 IV-11.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144
그림 IV-12.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146
그림 IV-13.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148
그림 IV-14.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150
그림 IV-15.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152
그림 IV-16.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154
그림 IV-17.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156
그림 IV-18.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158
그림 IV-19.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160
그림 IV-20.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 (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162
그림 IV-21.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164
그림 IV-22.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166

그림 IV-23.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168
그림 IV-24.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170
그림 IV-25.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172
그림 IV-2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174
그림 IV-27.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176
그림 IV-28.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178
그림 IV-29.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180
그림 IV-30.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182
그림 IV-31.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184
그림 IV-32. 대학생 국가장학금	186
그림 IV-33.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188
그림 IV-34.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190
그림 IV-35.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2
그림 IV-36.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4
그림 IV-37.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196
그림 IV-38.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198
그림 IV-39.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200
그림 IV-4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202
그림 IV-41.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204
그림 IV-42.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206
그림 IV-43.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208
그림 IV-44.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210
그림 IV-45.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212
그림 IV-46.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214
그림 IV-47.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216
그림 IV-48. 대출 여부	218
그림 IV-49.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220
그림 IV-50.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222

그림 IV-51.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224
그림 IV-52.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226
그림 IV-53.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228
그림 IV-54.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230
그림 IV-55.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232
그림 IV-56.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234
그림 IV-57.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236
그림 IV-58.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238
그림 IV-59.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240
그림 IV-60.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242
그림 IV-61.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244
그림 IV-62.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246
그림 IV-63.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248
그림 IV-64.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250
그림 IV-65.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252
그림 IV-66.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254
그림 IV-67.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256
그림 IV-68.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	258
그림 IV-69.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260
그림 IV-70.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262
그림 IV-71.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	264
그림 IV-72.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266
그림 IV-73.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가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268
그림 IV-74.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가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70
그림 IV-75.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272
그림 IV-76.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274
그림 IV-77.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276
그림 IV-78.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278

그림 IV-7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80
그림 IV-8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82
그림 IV-81. 취약 주거지 개선	284
그림 IV-82. 청년주택 공급 확대	286
그림 IV-83. 공공지원 민간임대	288
그림 IV-84.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290
그림 IV-85.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292
그림 IV-86.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294
그림 IV-87.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296
그림 IV-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98
그림 IV-89. 신혼희망타운	300
그림 IV-90. 공공자가주택	302
그림 IV-91. 민영주택 특별공급	304
그림 IV-92.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안	306
그림 IV-93.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1+2+3순위)	308
그림 V-1. 니트족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330
그림 V-2. 니트족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상용직)	331
그림 V-3. 니트족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임시직 취업자 및 비취업자) ..	331
그림 V-4. 교육빈곤층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333
그림 V-5. 집의 의미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346
그림 V-6. 집의 의미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20대)	347
그림 V-7. 집의 의미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30대)	347
그림 V-8. 주거지 선택 요인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355
그림 V-9. 주거 빈곤층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357
그림 VI-1. 정책 비전 및 분야	375
그림 VI-2.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376
그림 VI-3.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378
그림 VI-4.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	379
그림 VI-5.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380
그림 VI-6.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382

그림 VI-7.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384
그림 VI-8.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수혜 경험율 전체(%)	386
그림 VI-9. 청년 주거 지원정책 인지도	388
그림 VI-10. 빈곤층 대비 비 빈곤층 청년의 주거 지원 정책 수혜 경험율 분포	390
그림 VI-11. 청년들의 주거지 선택 요인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392
그림 VI-12. 청년들의 주거정책 인지도 (수도권 대비 전체)	394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빈곤층을 규정할 때 전통적으로 소득과 노동을 중심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연령층으로는 아동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나, 20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청년 고용의 문제로 인해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장기적인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년층이 더 이상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 잠깐 거치는 이행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려움은 응당 감당해야 한다는 기존 관점을 깨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최근의 청년층의 삶은 빈곤에 직면하거나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장기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장기간의 고용 침체로 인한 삶의 여러 부문에서의 문제가 다발적으로 촉발되어 회복탄력성이 상실된 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청년의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이가 필요하다.

청년기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시기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청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로 자산의 축적이나 사회적인 지위 역시 가장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년의 빈곤은 보편적이었으나 그들 대다수는 자신이 결국에는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와 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기에 쉽지 않아지면서 청년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OECD 연구(2014)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를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본다. 그 이전에는 노년층이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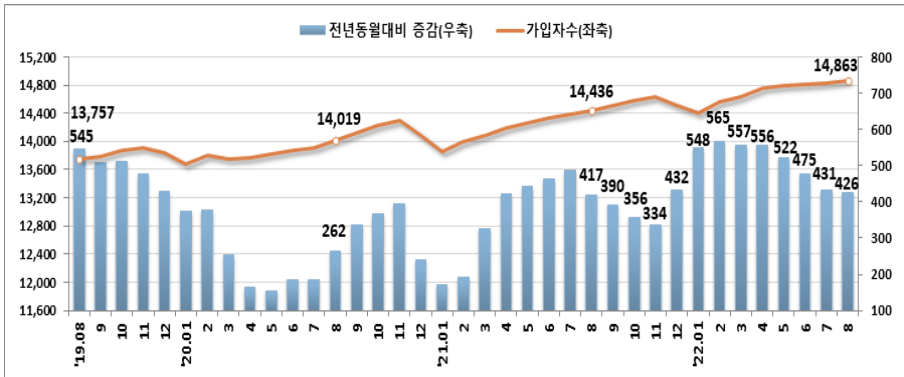
주 빈곤층이었으나 점차 청년층의 빈곤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층이 가장 빈곤에 취약한 집단이 되었다고 본다(Kangas & Palme, 2000; 김수정, 2020에서 재인용).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사회경제적인 모든 방면에서 위기를 초래하였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청년층의 삶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위기와 이에 대한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습하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청년의 문제를 상세화하여 맞춤형 정책은 펴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최근 2년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매우 나빠졌다. 그 결과 청년 세대의 확장 실업률²⁾이 2019년까지는 22%를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2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유근식, 2021; 김강산, 2021에서 간접인용). 이렇게 악화된 고용 환경의 결과,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응답한 비율이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강산, 2021). 이렇듯 악화된 청년 취업현황은 청년 실업과 직결된 청년 니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주거 빈곤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결과임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이런 열악한 고용 상황이 주거 빈곤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6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2만 6천명(+3.0%) 증가하였는데, 양호한 제조업 업황,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세 지속, 비대면 디지털 수요 증가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에 힘입어 피보험자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보건복지(+82천명), 제조업(+78천명), 출판영상통신(+65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8천명) 등의 산업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이 중 제조업은 생산 증가 및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21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 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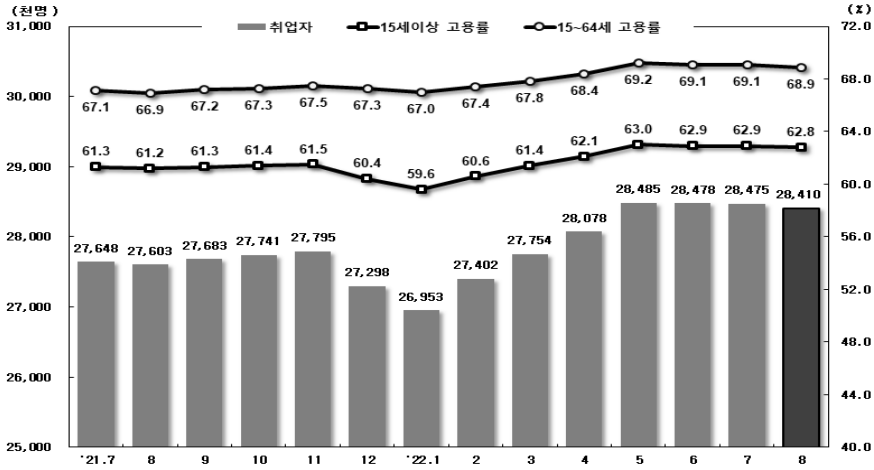
2) 주36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추가 취업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인구를 실업자에 추구하고,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인구를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분모에 추가하여 실업률로 반영하는 지수



* 출처: 고용노동부 (2022c),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 8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9.13. p.1.

그림 1-1.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전년 동월대비 2.0%p 상승하였는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3%로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여 2.1%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감소하였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4%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다. 취업자는 2,84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만 7천명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연로(7만 4천명, 3.1%)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쉬었음(-16만 6천명, -6.9%), 육아(-15만 9천명, -14.1%)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1만 2천명 감소하였으며, 구직단념자는 4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 감소하였다(통계청, 2022).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을 찍어 전반적인 고용 위축이 있었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 다소 회복되는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통계청 (2022). 2022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2.9.16. p.3.

그림 1-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청년의 주거빈곤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가구의 8.9%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7%는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과부담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가구는 33.1%로 나타나 청년 가구의 적지 않은 비율이 주거빈곤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을 위한 사회적 주택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김비오, 2019)

표 1-1. 청년 주거빈곤 가구의 규모

구분		비율(%)
최저주거기준	충족	91.1
	미달	8.9
주거비 과부담	비해당	75.3
	해당	24.7
주거빈곤	비해당	66.9
	해당	33.1

* 출처: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p.423.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주요 청년 지원 정책에서는 소득 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청년은 아직 젊고 스스로 노력하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노인과 같은 소득보장 중심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대 청년층의 빈곤은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고 높은 실업률로 임금소득 획득이 어려우며 주거 불안,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청년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빈곤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 빈곤 문제는 본인과 더불어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김태완, 최준영, 2017).

또한 삶의 여러 방면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이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 노동 뿐만이 아니라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 청년의 삶의 전반을 살펴보고 부진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이에 정책적인 지원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위해 청년의 빈곤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삶의 여러 부분에서의 빈곤 위험에 대처하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³⁾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 실태를 다년 연속연구를 통해 이행경로 및 영향요인을 누적하여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차년도는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지표 개발, 지표별 실태, 빈곤 집단 유형 분석, 소득 및 노동 빈곤에 관한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금년도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한 빈곤 인식, 정책 욕구를 토대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3) 본 연구는 3개년 연속연구로서 연구의 기본 목적과 연차별 세부 연구목적은 1차년도에 수립한 목적과 동일함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4)

청년 빈곤 실태 및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며 연차별 연구 중점분야 등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2021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조사, 청년 빈곤층에 대한 규모 추정, 정책육구 파악 등을 통한 자립안전망 토대 구축
	내용	• 소득(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안정성 등 분류를 및 지표 개발,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집단 유형 분석 및 도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공인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소득, 노동)에 관한 청년층 의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소득, 노동),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2차년도 (2022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생애주기 빈곤이행 경로 및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교육훈련, 주거)에 관한 청년층 의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교육훈련, 주거),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3차년도 (2023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 도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안정성)에 관한 청년층 의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건강, 안정성),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7.

그림 1-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4) 본 연구는 3개년 연속연구로서 연차별 연구추진계획은 1차 년도에 수립한 각 년도 계획과 동일함

3. 연구내용⁵⁾

3개년 연구로 수행하는 연속연구과제로서 2차년도 연구인 금년도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우선 청년 빈곤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정책적 개념화 동향 분석과 청년 빈곤에 대한 최근의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청년 빈곤과 관련되어 추진한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 국회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청년 빈곤 관련 입법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을 선정하여 청년 빈곤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분석 등을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청년의 빈곤 현황에 관한 다차원적인 실태 분석이다. 2022년 한국 청년의 빈곤 실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고용,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을 중심으로 수립한 빈곤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공식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빈곤 유형에 따른 생애주기적 빈곤이행의 원인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하였다.

셋째, 청년 빈곤 문제 주요영역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에 관한 욕구 조사이다. 이는 1차년도에 도출한 청년 빈곤 분류틀을 기초로 하여 2차년도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주거 영역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심층면담조사이다. 청년의 삶에서 교육훈련, 주거 영역에 있어서 빈곤 상황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들의 일과 삶 전반에서 빈곤의 상태, 원인 및 경로, 그리고 위험성 예측을 위한 빈곤 청년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이다. 정책 비전 및 방향,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5) 본 연구는 3개년 연속연구로서 연차별 연구내용의 기본 틀은 동일함

4. 연구방법⁶⁾

3개년 연속과제 중 2차년도인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분석, 설문을 통한 조사연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청년 전문가들의 자문, 정책포럼, 정책담당자들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로서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청년 빈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청년 빈곤과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고찰, 해외의 청년 빈곤과 관련된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문연구기관간 협동연구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각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청년 빈곤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 분석과 청년 빈곤지표에 대한 실태 분석 등을 공동연구 하였다.

셋째, 2차 데이터 분석으로서 1차년도에 수립한 청년 빈곤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 청년의 경제, 노동,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에 대한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다차원 빈곤 집단 심층분석을 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로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인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교육훈련 및 주거영역에 대한 현황, 인식, 정책 인지도와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 수 4,032명을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여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다.

다섯째, 심층면담조사로서 청년 빈곤의 심도깊은 분석을 목적으로 청년들의 교육훈련과 주거와 관련된 삶을 중심으로 빈곤의 인식과 상태, 위험요인, 정책 욕구 등에 대해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청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 및 포럼을 통해 청년 빈곤 현황, 원인,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였다.

일곱째, 정부부처 정책담당자, 정책사업 수행기관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연구의 주요방향, 현행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방안 등 정책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6) 본 연구는 3개년 연속연구로서 연차별 연구방법의 기본 틀은 동일함

○ — 제2장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 1.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
- 2. 청년의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 관련 선행연구 고찰
- 3.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 니트 및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4. 해외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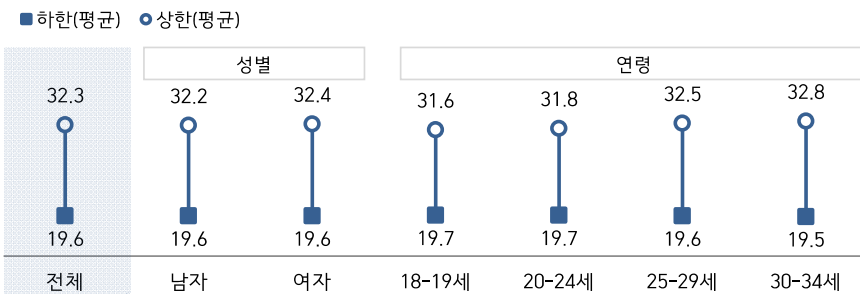
2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1.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⁷⁾

청년의 사전적 정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고, 빈곤은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상태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우선 청년에 대한 정의 중 가장 핵심인 연령범위를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상에는 만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19.6세에서 32.3세를 청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청년의 연령 상한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배진우, 2020).

(단위: 세)



* 출처: 김형주 외(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p.121.

그림 II-1. 청년 연령규정

7)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청년기본법 이외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서도 청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타 법령에서 제도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청년 연령의 하한은 일반적으로 15세로 두고 있고, 상한은 작게는 29세, 많게는 39세로 두고 있어서 청년기본법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1. 청년 관련 법령 상 청년의 범위

법령명	청년 정의	주요 내용	비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세 ~ 29세 (15세 ~ 34세)	취업지원 및 공공기관 고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2조 개정 (공공기관에 대해 34세로 확대) 2013.10.30. • 동법 시행령 8조의2 신설 (30 ~ 34세로 지원대상 확대) 2016.09.13.
고용정책 기본법	15세 ~ 29세 (15세 ~ 34세)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의를 준용
조세특례 제한법	15세 ~ 29세 (병역이행 시 최대 35세)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23조4항 개정 (청년 정의 포함) 2010.12.30. • 동법 시행령 23조8항 개정 (동법 27조1항에 따른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 내에서 현재 연령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령 적용) 2014.02.21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15세 ~ 34세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12조1항 개정 (종전 29세에서 34세로 연령범위 확대) 2017.0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 39세	청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6조의2 신설 (청년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7.05.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39세	청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5조의4 신설 (청년창업자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5.05.01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2 재인용.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연령규정은 대체로 청년기본법 상의 연령규정인 만 19세에서 34세의 범위로 수렴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자체 정책사업인 청년 수당 지원 대상의 청년의 연령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지자체 청년 수당 지원사업 현황

지역	사업명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서울	청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34세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경과자 - 미취업자 - 주 26시간 이하 단기노동자 - 3개월 이하 단기노동자 - 중위소득 150% 이하¹⁾ -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최대 300만원 - 체크카드 지급 	- 50,280명 (30,000명)
경기	청년기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24세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100만원 - 최대 1년 지원 -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151,930명
대전	청년취업 희망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34세 - 대전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경과자 - 미취업자 - 주 3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최대 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체크카드 지급 	- 2,500명
부산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디딤돌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34세 - 부산 주민등록상 거주자 - 학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미취업자 - 주 3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 -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최대 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체크카드 지급 	- 1,000명
광주	청년 드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34세 - 광주 주민등록상 거주자 - 학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미취업자 - 주 3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50만원 - 최대 5개월 지원 - 최대 25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체크카드 지급 	- 1,120명

* 출처: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조양진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p.237. 재인용.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책사업 중 지자체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지원대상인 청년의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까지 연령 하한은 낮춰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 지자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지역	사업명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34세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취업자 - 본인 근로소득 중위 140%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타 사업 참여자 제외 -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납입액 100% - 10만원, 15만원 납입 - 2년 최대 360만원 지원 - 2년 최대 720만원+이자 적립 - 3년 최대 540만원 지원 - 3년 최대 1,080만원+이자 적립 	- 3,000명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34세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 - 취업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타 사업 참여자 제외 -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납입액 100% - 10만원 납입 - 2년 최대 340만원 지원 - 2년 최대 580만원+이자 적립 - 100만원 지역화폐 	- 9,000명
부산	청년희망 날개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34세 - 부산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취업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타 사업 참여자 제외 - 신용불량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납입액 100% - 10만원 납입 - 3년 최대 360만원 지원 - 3년 최대 720만원+이자 적립 	- 1,300명

* 출처: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조양진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p.238. 재인용.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는 대체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그 폭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흐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청년 고용문제와 이로 인한 입직연령의 후퇴, 1인 가구 및 미혼 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무자녀 가정의 증가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 형성의 부진 혹은 지연이라는 사회적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년 빈곤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 청년의 정의와 더불어 빈곤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의 방향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빈곤에 대한 의미를 기초에서 살펴보기 위해 백과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빈곤의 정의를 살펴보면, 백과사전에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하고,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하며,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사회발전이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고, 마지막은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2022).

작년 1차년도 연구에서 청년 빈곤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다.

표 II-4.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성 평가

(n= 23,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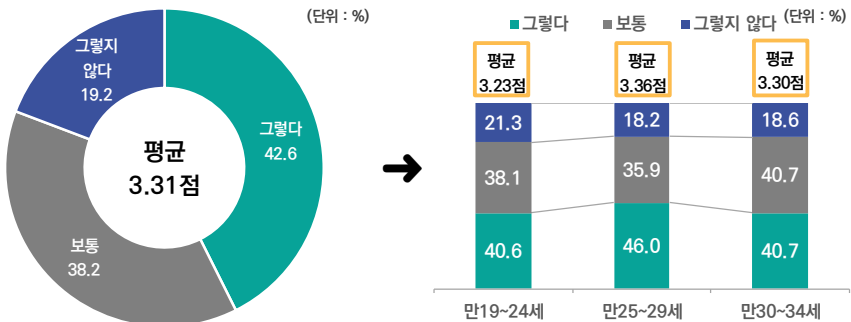
구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1차(A)	0.0	8.7	4.3	60.9	26.1	8.7	87.0	2.00	5.00	0.82	4.04
2차(B)	0.0	8.7	13.0	60.9	17.4	8.7	78.3	2.00	5.00	0.81	3.87
GAP (B-A)	0.0	0.0	+8.7	0.0	-8.7	0.0	-8.7	0.00	0.00	-0.01	-0.17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00.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에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는데, 델파이조사 결과, 현재의 빈곤 상태와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일시적 빈곤 상태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 빈곤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최종 정의하였다(김형주 외, 2021). 이에 따라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도 청년 빈곤에 대한 일관된 연구방향성과 빈곤 실태의 연차별 비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정의를 유지하고자 한다.

청년 연령층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빈곤에 대한 개념 인식을 묻었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이 ‘그렇지 않다’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 만30~34세, 만19~24세 순으로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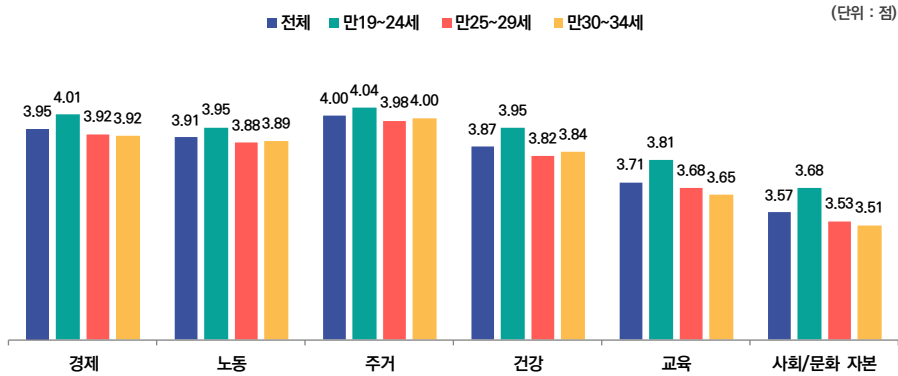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418.

그림 II-2.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청년층이 느끼는 주관적인 빈곤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빈곤의 다차원 영역별로 나눠 그 중요성을 살펴보았을 때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이 인식하는 청년 빈곤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 ‘노동’,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문화 자본’

영역은 타 영역 대비 낮게 조사되었다. 연령별 청년 빈곤 영역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주거', '경제', '노동', '건강' 영역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김형주 외, 2021).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426.

그림 II-3.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에서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전통적인 소득과 노동 중심의 빈곤 개념에서 경제, 노동,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으로 그 개념을 다차원화 하여 확대하였다. 이는 앞서 주관적인 빈곤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빈곤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만연되어 있고, 삶의 여러 방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문제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청년의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 관련 선행연구 고찰⁸⁾

1) 청년 교육훈련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교육훈련 빈곤 청년은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며 비고용상태'를 의미하는 니트(NEET) 상태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청년 니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니트로 이행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조한혜정 외(2016),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배진우(2015)의 연구에서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 훈련도 이수하지 않아 노동시장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던져지는 사례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대학진학율이 70%에 가까운 현실에서 30% 정도의 비진학 고졸자 중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질적 연구 결과, 이들은 소수집단으로 정책적 무관심과 사회적 기회 불균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자, 박진아, 이해정, 2019). 이와 관련해서 윤철경(2017)은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니트로 이행하는 경로를 분석했는데, 현재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 120만명 이상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저학력 니트와는 별도로 고학력 니트에 주목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는 한국의 청년 니트의 특성으로 고학력과 상태 의존성, 그리고 내적 이질성(internal heterogeneity)을 지적했다. 우선 다른 나라 청년 니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 니트 청년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졸자의 비중도 외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상태 의존성이란, 성인기 진입 초기 상태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청년이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갈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실업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청년 교육 빈곤이 낮은 교육 기회보다는 취업 실패자라는 부정적인 인식, 두 번째 기회(the second chance)의 결여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 중에 오랜 기간 니트 상태에 머무는 장기 니트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상태 의존성과 무관하지 않다. 내적 이질성은 청년 니트들 간의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 집단은 크게

8) 이 절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자발적 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의 4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에서부터 현 상태에 대한 만족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까지 전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배진우, 2018). 따라서 아무리 효과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수요자와 정책 효과 대상자는 전체 니트 청년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통해 니트 청년 대상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진형익, 강지윤, 최동수, 이미숙, 2020)에서도 니트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취업이나 진로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커뮤니티 활동, 심리 상담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함을 보여준 바 있다.

청년 니트 발생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 중,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 데이터에서 OECD 22개국 자료를 2차 분석한 박미희(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화와 기술 발전 자체는 청년 니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체협상 적용률과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술 발전은 청년 니트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와 고용시장 개방과 해외 취업 경로 확대는 전반적으로 청년 니트의 발생확률을 감소시켰다. 단체협상 적용율이 높을수록 이런 감소효과는 더욱 컸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직업교육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와 같은 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직업 중심의 훈련보다 보편적인 역량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기능이 청년 니트 감소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2) 청년 주거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주거 빈곤은 높은 주거비 부담등의 원인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태, 혹은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유다은, 이지원, 장은지, 2022; 이다은, 서원석, 2019).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강미나, 박미선 외, 2021)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의 가구주가 있는 청년 가구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즉 주거 빈곤에 해당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2020년에 7.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의 10.5%에 비하면 현저히 개선된 것이지만 같은 해 일반 가구의 주거 빈곤비율인 4.6%에 비하면 여전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에는 10.1%(수도권) 대 10.9%(비수도권)로 수도권이 약간 낮았지만 이후 비수도권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2020년에는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자가를 보유했거나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자가점유율)은 2017년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20년에는 일반 가구의 1/3 이하인 17.3%, 16.1%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은 수도권에서 12.5% 및 13.8%로 비수도권 20.2%, 21.3%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았다.

주거 빈곤은 다른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은 경우,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임세희, 박경하, 2017). 이태진 외(2016)의 연구에서도 소득 면에서의 빈곤이 주거 빈곤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가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김강산(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어 청년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된 결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에 따라 주택 임대료까지 상승하면서 주거비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9월 기준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은 2017년 대비 60.6%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도 같은 기간에 3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강산, 2021). 또한 교육 빈곤과 마찬가지로 주거 빈곤 역시 상태 의존성이 있어서 부모 세대로부터 이런 환경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 그리고 그 시도의 효과가 현재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다(박신영, 2012).

주거 문제는 인간의 건강한 생존과 직결된 조건으로서 주거 빈곤 혹은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된다(강정구, 마강래, 2017; 김민영, 황진영, 2016;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 주택 가격이 높고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의 결혼 의향이나 실제 결혼하는 청년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보고된 바 있다(곽윤철, 2017; 도난영, 최막중, 2018; 임보영, 강정구, 마강래, 2018). 또한 자가 주택 거주 청년 부부에 비해 전세 가구 청년 부부가 출산을 연기하거나 자녀 수가 적다는 연구(이삼식, 최효진, 2012),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

율이 낮다는 결과(김민영, 황진영, 2016), 자가 주택에 거주할수록,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클수록, 주거 관련 대출상환금 대비 일반적인 주거 생활비의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 숫자가 많다는 연구 결과 역시 주거 환경이 청년 세대의 출산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보영 외, 2018;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한국에서 청년 주거 빈곤은 1인 청년 가구에서 특히 부각된다. 김수정(2020)은 OECD 국가들의 청년 빈곤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높은 국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청년 가구의 빈곤 위험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연구자는 그 이유로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는 경우는 대부분 빈곤한 가정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환경과 유형별 주거 빈곤 비율을 분석한 장은지와 유다은(2021)에 따르면 주거 환경을 기준으로 주거 빈곤 상태인 1인 가구의 비율은 25.2%로 나타났다. 주거 빈곤의 유형으로는 습기, 일조, 환기 등 위생과 건강, 침수 피해 등에 취약한 지하 혹은 반지하 거주가 30.9%를 차지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청년 주거 빈곤의 유형이 뚜렷이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주거 빈곤 가구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신상영, 2010;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금천구와 구로구 성북구는 주택의 유형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은 곳으로, 그 때문에 주거 빈곤 기준 중에서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주거 빈곤 유형이 90%에 달했다. 반면 관악구(40.1%)와 광진구(34.9%), 마포구(32.4%)는 지하와 반지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15%)와 마포구(10.5%)는 옥탑방 거주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수요도 자치구별로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3) 시사점

청년의 교육훈련 빈곤을 대표하는 니트 문제는 가장 먼저 주목받은 주제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이다. 청년 니트들이 그 시작 경로에서부터 현재의 주관적·객관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경로가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은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많은 청년에게 있어 니트는 성인기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좌절하고 멈추어버린 상태이며,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게는 부모의 빈곤이 대물림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진입 장벽이 높은 한국의 취업 시장은 일단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그 결과 청년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니트 상태에 고착되기 쉽다. 이와 같은 청년 교육훈련 빈곤의 문제는 이후 성인기에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는 큰 부담이 되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부적응과 빈곤이 지속되는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니트 청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주거 빈곤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빈곤은 주거 빈곤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재생산된다. 이와 동시에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운용 지표, 그리고 여러 산업 영역과 연결되어있는 매우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다. 주거의 이런 다층적 의미는 청년만을 위한 주거정책이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주거 빈곤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거 빈곤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즉, 주거 빈곤의 해결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3.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 니트 및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1) 청년 니트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⁹⁾

(1) 청년 니트 정책 현황과 쟁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니트 청년이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취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NEET 지표 개발을 통해 청년 구직포기 가능성을 사전 파악하고 고용복지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니트를 정책지원대상으로서 언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a).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취약계층으로서 니트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2021년 청년정책시행계획과 2022년 청년정책시행계획에서는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서 1) 구직단념청년발굴 및 고용연계 사업과 2)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관계부처 합동, 2022). 구직단념청년발굴 및 고용연계사업으로는 니트 청년 현황 및 유형 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1년 김기현, 유민상 외(2021)에 의해 니트 및 비경제활동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동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형 니트 개념을 3가지로 도출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준¹⁾에 따라 20-34세 청년 중 2020년에는 2,181,600명이, 2019년에는 2,098,713명이 니트로 분류됨을 보고했다. 또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니트 유형을 구직니트(실업자)와 비구직니트로 대분류하고 비구직니트는 구직단념니트, 자발적니트, 육아가사니트, 질병니트, 진학준비니트, 취업준비니트, 심리적니트, 기타니트로 구분한 뒤, 2020년 기준 구직니트가 32.4%를 차지하고, 육아가사니트가 26.5%, 취업준비니트가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이 절은 정세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5. 김기현 외(2021)의 한국형 니트 정의와 그에 따른 규모 추정 결과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수정기준: (비학업 실업자 + 비학업 비경활) - (비학업 비경활 중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 한국기준1: (비학업 실업자 + 비학업 비경활) - (비학업 비경활 중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 한국기준2: (비학업 실업자 + 비학업 비경활) - (비학업 비경활 중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육아, 가사) • 한국기준3: (비학업 실업자 + 비학업 비경활) - (비학업 비경활 중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육아, 가사,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20-34세 니트 규모 (한국기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2,199,839명 • 2016년: 2,190,250명 • 2017년: 2,162,998명 • 2018년: 2,118,810명 • 2019년: 2,098,713명 • 2020년: 2,181,600명

* 출처: 김기현,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박성재, 정지운, 조양진 (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1, 23의 표 내용의 일부를 발췌·수정하여 표로 재작성하여 제시함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은데, 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의욕 고취 및 구직역량 프로그램 강화, 사업 이수에 대한 지원금 20만원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이수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II-6. 청년도전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구직단념 청년의 발굴,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 7)」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 8)」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자차체별 목표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7,000명
지원내용	(청년)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수 시 1인당 20만원 지원)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맞춤형(멘토링, 스킬 및 역량 강화 등)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운영기관) - 사업 운영비(청년 1인당 80만원) 지급 (취업시) - 프로그램 이수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 (2022a).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1070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세부 운영방안의 주요내용 일부를 발췌·수정하여 표로 재작성하여 제시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15~69세(청년: 18~34세)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심층상담,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에는 일반에 비해 소득 기준이나 취업경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I유형의 선발형 중 청년특례의 경우에는 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하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경험과 무관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제공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의 경우에는 청년에게는 재산과 취업경험 이외에도 소득기준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 단, 실비의 성격을 갖는 취업활동비용은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청년의 경우에는 제도 설계자체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중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의무와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병희, 2021)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니트에 해당하는 청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니트 관련 정책이라 볼 수 있으나, 제도자체가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즉 비구직니트의 경우에는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정책 노력이라 보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사업 참여 대상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는 것 까지를 사업 추진체계로 포함하고 있어 장기 추이를 지켜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표 II-7.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I	요건 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 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선발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 경험 무관)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II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 한 없음)	무관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 지원 경로(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 알선 진행 등 (수당지원)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자소득층, 특정계층)

* 출처: 고용노동부(2022b).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 주: '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994,812원. (4인가구) 5,121,08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끝으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니트 예방 또는 니트 지원대책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지원(국정과제52), 둘째, 청년층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 확대를 통해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국정과제54), 취업지원혁신을 포함하는 국정과제 90이 있다. 국정과제 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구직단념청년과 취약청년을 위한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과제들이 청년정책시행계획 등을 통해 기추진 되어 오던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예: 정책지원대상, 사업공급량 확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

표 II-8.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청년 니트 관련 내용

목표	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국토부· 금융위· 고용부· 중기부· 교육부· 국방부· 국조실

목표	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고용부· 권익위· 금융위· 복지부· 국조실

*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0>에서 2022년 5월 13일 인출.

(2) 청년 니트 관련 법률 현황과 쟁점

이 장에서는 청년 니트와 관련된 법제도 동향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 니트와 관련된 법제도 동향 및 정책은 김기현 외(2018)과 김기현, 유민상 외(2021)에서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이후의 주요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니트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에서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관련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고용 분야의 취약계층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니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추진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니트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써 시행령을 통해 니트를 고용 분야의 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표 II-9. 청년기본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조항

조항	내용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 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니트와 관련된 또 다른 법률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는 뒤에서 살펴볼 니트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직접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듯이 제8조의 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와 동법 시행령 제7조(취업애로 청년)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을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훈련을 받고 있지 않으며,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가장 구체적으로 정책대상으로의 니트를 상정하고 있고, 그 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표 II-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조항

조항	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청년고용촉진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다음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있는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4항(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근거한 자에게 우선 지원해야 함을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 제3조4항(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서 니트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표 II-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일부 법률조항

조항	내용
제3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4. 30., 2021. 1. 5.>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12조(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이러한 법령 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아동복지지원법이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에서 청년 니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일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법률들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마찬가지로 니트 정의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책대상으로서 니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고용취약 계층으로서 니트를 포함하고, 특별 대책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사항이 필요함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도 우선지원대상으로 니트를 포함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니트 관련 정책 및 법률 현황과 쟁점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니트를 정책대상으로 직접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지만 상위법률에 해당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니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니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니트를 고용 분야의 취약 청년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기본법은 지도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념과 원칙,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동법에서 니트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청년정책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 및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니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확대해 나가는데도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우선지원대상을 동법 제3조4항(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니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니트 또한 우선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 볼 수 있다. 또, 선정 기준의 지표인 문답표와 선정기준 자체가 계량지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정책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지원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제공량 자체가 2021년 기준 전국기준 14개 단체, 2022년 기준 28단체에 불과하다는 점과 사업참여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1년 이내 도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참고로 김기현, 유민상 외(2021)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정책 대상 명칭을 구직단념청년이 아닌 사회진입 준비 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동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센터 중앙지원기관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 바도 있다.

한편, 니트를 겨냥한 제도라 볼 수 없지만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청년층에게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의무와 제재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구직니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재학단계의 청년들에게 조기개입을 통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등을 위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근간에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과 관련 제도간의 연계 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무엇보다 니트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제공량 확대와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과 관련된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과 소득의 안정성은 사회통합과도 유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는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지원 정책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노동시장 참여 뿐 아니라 청년 니트 지표 추이의 관찰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 정치참여, 신뢰, 시민의식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

2) 청년의 주거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¹⁰⁾

(1) 주거정책 대상 및 정책 지원 기준

가. 주거정책 대상자의 설정

청년이 주거정책 대상으로 자리잡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는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거분야에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주거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주거약자 지원에 관련된 법률과 기타 다른 세부 지침 등을 통해 명시되고 있다.

주거분야 가장 상위법이 되는 주거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주거 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 함은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거나 주거비를 우선 지원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전반적으로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층이 주거정책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10) 이 절은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나. 주거빈곤과 지원 원칙

모든 가구가 주거지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는 청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거분야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기타 조건에 기반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기본법」에서도 주거복지 수요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청년이 정책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거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빈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고 있다. 즉,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물리적으로 적정한 거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정책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정책 지원 방식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거나 물리적 거처의 수준을 향상하는 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정책지원의 원칙은 단순히 물리적 거처의 적정성이나 경제적 부담가능성 보다는 더 큰 이론이나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주거권의 측면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1976년 유엔 인간정주회의인 해비타트 회의가 밴쿠버에서 개최되면서 비공식거처 중심으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주거권 확보를 주장하였고 1996년 두 번째로 열린 유엔 인간정주회의인 해비타트 II에서는 주거권을 하나의 권리로 명확히 인식하고 주거권 확보를 위하여 각국의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주거권을 넘어서 도시권으로까지 확대된 개념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사회통합, 평등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화를 인식해야 하는 요구 등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였다(박미선 외, 2019). 따라서 정책대상의 설정과 지원수단의 측면에서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주거권의 구성요소와 정책 지원방식

주거권은 모든 이들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로 정의된다.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적절한 주거란, 점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퇴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거처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United Nations OHCHR, 2022).¹¹⁾

주거권의 구성요소로는 점유의 안정성,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주거비용의 부담가능성, 물리적 거주 적합성, 사회적 접근성, 주거입지의 적합성, 주택건축의 문화적 적절성을 들 수 있다. 즉, 점유형태와 무관하게 강제퇴거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거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비용 측면의 부담가능성은 소득에서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 물리적 거주 적합성은 물리적 결함과 안전, 구조적 위해나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처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노인, 아동, 피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입지의 적합성은 주거지가 직장, 교통수단, 의료서비스 등에 근접해야 함을 의미하며, 문화적 적절성은 다양한 인종이나 배경을 갖는 이들의 정체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건축자재와 문화적 표현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주거권의 개념과 주거권 구성요소를 고려하면, 청년 정책 지원방식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박미선 외, 2019).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책이 경제적 측면의 주거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비용지원 방식이 있다. 이는 주거비용의 부담가능성이라는 주거권 구성요소에 부합하고,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된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 측면에서 적정 거처에 거주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물리적 빈곤 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적정한 거처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세 번째로는 점유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특수한 임대차 계약 관행에 따라 보증금이 낮거나 없는 월세보다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점유안정성이 높아지므로 전세계약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청년에게 대출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점유안정성보다는 좀 더 확대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주거입지의 적합성과 사회적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단독의 수단보다는 청년이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고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시 대중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다른 앞의 세가지 지원 방식 안에 녹아 들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11) United Nations OHCHR (2022).

<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sr-housing/human-right-adequate-housing>에서
2022년 4월 3일 인출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세가지 지원방식, 주거비 지원, 물리적 거처의 직접 제공, 점유형태 상승 지원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추가로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단은 보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청년 주거정책 동향

청년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이 채택되면서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때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목표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강화되었고, 이외에도 청년 특성을 감안한 주거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제공이 지원에 포함되었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및 자금 지원이 포함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묶였고, '17년 확정된 주거복지로드맵 이후에 '18년 7월에 추가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하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 관계부처 합동, 2018).

이에 더하여 '20년 3월에는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공급 및 지원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기에 이른다(국토교통부, 2020). 이때는 기존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물량에 추가로 청년대상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독신가구 지원을 보완하며 비주택 거주 청년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이 강화되는 등 진일보한 지원책이 포함되었다(표 II-12) 참조).

청년정책의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청년기본법은 '20년 2월 제정되어 '20년 8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고 이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이 '20년 12월 의결되면서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의 첫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이에 따라 매년 연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 와중에 '21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되면서 주거분야에서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국무조정실, 2021). 가장 최근에는 '22년 2월에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22).

물론 유관 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있다. 제3차(‘16~’20) 기본계획 이후 제4차 계획이 ‘20년 말에 수립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관계 부처 합동, 2020b). 그러나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 이상이 추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현실적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담긴 주거부문 청년지원과 ‘21년 특별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지원 수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II-12. 청년 주거지원 국토부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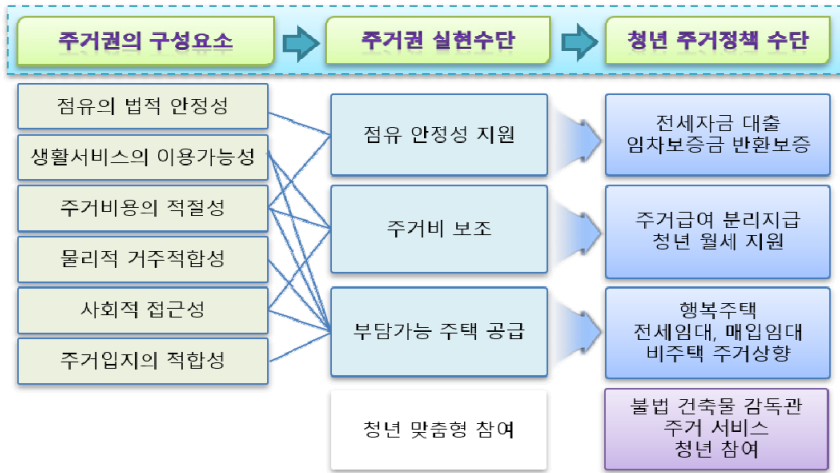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17.11.29)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 30만실(주택 25만+기숙사 5만) 공급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7만호), 매입·전세임대(6만호) - 공공지원주택: 12만실 공급 -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인원 확대
		청약통장 도입, 자금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만 29세 이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 만 19-25세 청년 전세대출 지원 강화(단독세대주 가능)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정보·교육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주거정보 제공 강화: 마이홈 포털-대학 홈페이지 연계 - 주거관련 교육 강화: 주거복지센터 등이 대학교, 청년단체와 연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 15→30% 확대 - 매입·전세형 신혼부부 임대 신규 도입 - 지원대상 확대: 혼인 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확대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육아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
		신혼자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도입, 이자부담 경감 ○ 저소득 신혼부부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18.7.5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구체화	공공주택 및 창업·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 25만실 본격 공급(2만호 추가)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1만호 추가) - 집주인 임대사업 청년 우선공급(1만호 추가) ○ 대학생 기숙사 입주 6만명(1만명 추가) -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 상가 공급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금융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조건: 최고 3.3%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 대상 확대: 비 근로소득자 포함 ○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13.5만가구 추가) - 보증부 월세대출 신설, 버팀목대출 청년 0.5%p 우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강화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주거복지로드맵 2.0 ('20.3.20)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평가 및 보완 확대방안 제시	생애주기 주거 지원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 - 일자리 연계주택 6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호,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1만호 등 맞춤형 주택 35만호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공유주택의 정의 신설, 모태펀드 사업 자금 지원 ○ 금융 지원: 청년버팀목 지원 대상 확대 - 대출한도 인상, 금리인하 ○ 주거급여 수급가구 미혼 청년 별도 급여 분리 지급 추진 예정
		저출산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신혼희망타운 '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호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건설임대 단지 확대 40만호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월세 구입자금 지원 대출금리 우대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향 지원 사업 - 쪽방, 고시원, 반지하 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 역세권 불량거주지 리모델링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 2018), 국토교통부(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청년 주거정책 수단별 주요 내용 및 법제도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청년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처를 마련하고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 가시적인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주거권 구성요소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 그리고 청년 주거정책 수단의 연계 고리는 아래의 [그림 II-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주거권 구성요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경제적 측면의 주거비 보조와 물리적 측면의 부담가능 주택공급이라는 대분류 이외에 점유 안정성을 지원하는 전세자금 지원이 보완된다. 또한 청년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담고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이 추가된 것이 현재 청년 주거정책을 구성하는 주요한 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1-4. 주거권 구성요소와 청년 주거정책 수단의 연계

(4) 청년 주거정책 지원수단 검토의 시사점

청년 주거정책을 주거권 실현수단과 연계하여 구분하고 각 정책수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 주거정책이 도입 이후 지속 변화하고 있고 청년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크게 정책의 분류를 세가지로 하였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 보조정책,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정책, 그리고 점유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지원정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대상자 특성을 감안한 참여와 맞춤형 정책을 특수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청년 주거정책 세부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복잡성, 접근성, 일반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정책 그룹별로 사업이 다양하고 또한 사업별로 제도의 운용이 복잡하고 다가한 측면이 있어 이를 이해하고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정책용어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자격 기준이 각 사업마다 달라 청년의 정책 접근성이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은 도입 초기의 정책대상과 목표에 따라 각기 대상자 선정기준과 구비서류 및 요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년 주거정책으로서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일 수도 있다.

일부 정책은 과연 이것이 청년 정책인지 일반적인 주거정책인지 불확실한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비저정거처에 오래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은 청년이 아닌 전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고 그 중 청년이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청년정책이 독립하면서 청년 주거정책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나, 허위물건 게재 등은 민간임대차 시장의 규율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물론 청년이 정보접근과 차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일부로 추가된 점은 이해되나, 이를 청년 주거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서 발급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청년 주거정책 내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리 전세자금 대출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대출은 가장 낮은 금리로 가장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상대적으로 다른 청년 대상 사업에 비해 유리한 것이다. 청년 뿐 아니라 모든 저소득 민간임차가구에게 필요한 제도를 청년에게만 제공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보증료 할인)사업이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공적기구가 보증상품으로 판매하고 특정 계층에게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는 청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민간임대차 시장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필요하므로 청년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을 위한 법제도 미비, 인력 확보 미흡 등으로 사업의 시행 및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청년 월세지원 특별한시 대책도 마찬가지여서, 제한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시사업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1회성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걱정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주거비 지원과 같은 수요자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효과적임이 주거정책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졌음(Schwartz, 2021)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속성 담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주거부문에 포함된 신혼부부 자가마련 지원 제도가 과연 청년 주거정책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자가마련을 지원하

는 제도이므로 넓은 의미로는 점유안정성 강화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시장 참여가 가능한 계층까지 확대되어 있어 이를 청년정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책이고, 자산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추가되어 있음도 주주의 사실이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도 지원가능하고 생애최초 주택공급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중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이외의 다른 자가 마련 희망 계층과 비교하여 균형이 필요하다.

4. 해외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¹²⁾

호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마다 청년 빈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복 정책에 대해 조정 기능을 하여 연방제 국가보다는 중앙의 기능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도 청년정책이 지방정부를 필두로 추진해 온 역사가 있고, 또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방제 국가 호주의 청년 빈곤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다각적 도입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청년 빈곤정책은 아동빈곤감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정책 범위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1) 호주의 청년 빈곤정책 추진 동향

(1) 호주 청년빈곤정책의 배경 및 핵심 내용

호주는 1901년 6개 영국 식민지가 합의해 창설한 연방제 국가로서 권력은 연방정부와 6개 주(state) 및 2개 준주(territory)에 분산되어 있다.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주 사이에도 법률과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를 개혁하거나 전국적 통일을 도모할 경우에는 연방과 주 정부 간 협의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들의 견제작용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집권당이 다른 경우가 많다¹³⁾.

12) 이 절은 조문선(주한호주대사관)이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13) 외교부, 호주주 대한민국 대사관(2022)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551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가. 연방정부¹⁴⁾

2021년 호주 15~24세 청년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이는 국민 8명 중 1명, 경제활동(15~64세)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호주사회서비스협회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가 발간한 Poverty in Australia 2020¹⁵⁾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기준 15~24세 청년 빈곤층은 424,800명이고 기준선을 60%로 확대 시 590,100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실업이 청년 빈곤의 최대 위험요소라 지적했다. 청년 실업자(15~24세)는 2021년 9~11월 3개월 동안 8만9,900명에서 9만3,4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 9.3%는 계절조정 전국 실업률 4.0%의 두 배가 넘는다.

표 II-13. 호주 청년 빈곤층 실태 (2017년 기준)

	빈곤기준선 (중위가구소득의 50%)	빈곤기준선 (중위가구소득의 60%)
비 율		
인구 전체		
빈곤기준선 미만 인구 비율	13.6%	21.0%
아동 및 청소년		
빈곤기준선 미만 15세 미만 인구 비율	17.7%	25.7%
빈곤기준선 미만 15~24세 인구 비율	13.9%	19.3%
규 모 (명)		
인구 전체		
빈곤기준선 미만 인구	3,239,000	5,010,000
아동 및 청소년		
빈곤기준선 미만 15세 미만 인구	774,000	1,128,000
빈곤기준선 미만 15~24세 인구	424,800	590,100
빈곤 격차(Poverty Gap)		
빈곤기준선 미만 인구의 빈곤 격차(호주불/주)	주당 \$282	주당 \$292
빈곤기준선 미만 인구의 빈곤 격차 (빈곤기준선 대비 비율)	42.0%	36.0%

* 출처: Davidson, P., Saunders, P., Bradbury, B. and Wong, M. (2020), Poverty in Australia 2020: Part 1, Overview, ACOSS/UNSW Poverty and Inequality Partnership Report No. 3, Sydney: ACOSS, p.14

14) 연방정부의 청년 대상 사회보장제도는 Services Australia 제공 정보를 토대로 정리함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a). Youth Allowance.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 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15) 빈곤기준선(poverty line)을 주거 비용을 제한 후 중위 가구 소득의 50%로 정의.
Davidson, P., Saunders, P., Bradbury, B. and Wong, M. (2020), Poverty in Australia 2020: Part 1, Overview, ACOSS/UNSW Poverty and Inequality Partnership Report No. 3, Sydney: ACOSS, p.14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제도는 Youth Allowance이다. 16~24세 대상이며 학업 여부, 싱글/커플,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 조건에 따라 2주 당 원화 30~80만원을 수령한다. Youth Allowance 수령자의 경우 Rent Assistance (주거비 보조), Fare Allowance (교통비 보조) 등 여타 제도 또한 수급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은 장기 실업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복지 의존도가 높다. 2022년 2월 기준 청년 약 153,300명이 Youth Allowance 또는 JobSeeker¹⁶⁾를 수령 중이다.

나. 뉴사우스웨일스 주¹⁷⁾

2011-12 회계연도¹⁸⁾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호주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인구 전체(12.8%) 및 15세 미만 인구(13.8%)의 빈곤율은 태즈메니아 주(각각 15.1% 및 15.8%)에 이어 두 번째였고 2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은 13.4%로 태즈메니아(14.7%)와 북부준주(13.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2020년 기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의 인구는 호주 전체 인구의 31.5%에 해당하는 810만 명이고 이 중에서 530만 명이 시드니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다 보니 주거비용이 높은 편으로 호주 주요 도시 월세 평균보다 10~20% 높다 (2022년 3월 기준)¹⁹⁾. 월세는 주 전역에 걸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공실율은 1% 미만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다른 연령층 대비 청년들의 실업,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일자리 비율이 더 심각하다. 청년층의 임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동안 하락한 반면, 중장년층의 임금은 계속 상승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주거지 물색 시 청년들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세입자 이력 (rent reference)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청년들은 열악하고 과밀한 주거지로 몰리거나 노숙자가 되고 있다. 상황 개선을 위해 주 정부는 민간 월세

16) 2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자 대상 복지제도

17) Barriers to young people renting, Yfoundations 의견서를 토대로 정리함

Yfoundations (2022). Barriers to young people renting.

<https://yfoundations.org.au/wp-content/uploads/2022/01/Barriers-to-young-people-renting-position-paper-FINAL-2022.pdf>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18)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회계연도는 7월에 시작

19) Domain (2022). March 2022 Rental Report. <https://www.domain.com.au/research/rental-report/march-2022/>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시장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연방정부의 주거비 보조에 더해 월세 보조금과 복지사 지원을 결합한 Rent Choice Youth 제도를 마련했다.



* 출처: Phillips, B., Miranti, R., Vidyattama, Y., & Cassells, R.(2013). Poverty, Social Exclusion and Disadvantage in Australia, NATSEM, Report prepared for UnitingCare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p.1014

그림 II-5. 호주 주/준주별 빈곤율 (2011-12 회계연도 기준)

다. 빅토리아 주

빅토리아(Victoria) 주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이어 호주에서 두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빅토리아 주의 인구는 호주 전체 인구의 25.9%에 해당하는 666만 명이며 15~24세 청년 인구 77만 명 중 15.6%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²⁰⁾. 빅토리아 주정부는 청년정책을 신설하고자 2020년 10~12월에 걸쳐 청년들은 물론 각급 기관, 단체와 협의(consultation)를 진행하고 2021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Victoria Youth Strategy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상태이다²¹⁾

20) Tanton, R., Peel, D. and Vidyattama, Y..(2018), Every suburb Every town Poverty in Victoria, NATSEM, Institute for Governance and Policy Analysis (IGPA), University of Canberra. Report commissioned by VCOSS, P.21.

21) Engage Victoria (2022). <https://engage.vic.gov.au/project/victorian-youth-strategy/timeline/30625>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라. 퀸즐랜드 주

2021년 기준 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인구는 호주 전체 인구의 18.3%에 해당하는 470만 명이며 15~24세 청년 인구는 61만 명이다²²⁾. 퀸즐랜드 주정부가 2017년 발표한 Queensland Youth Strategy²³⁾에 따르면 대학생 21%는 연소득이 1만 호주불(약890만원) 미만이고 노숙자의 23.4%가 12~24세 청소년이다. Queensland Youth Strategy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제기한 문제와 기회를 반영해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고 매년 청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과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 출처: The State of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 Child Safety and Disability Services (2017), Building young Queenslanders for a global future, p.10.

그림 II-6. Queensland Youth Strategy 프레임워크

2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national-state-and-territory-population/sep-2021>에서 2022년 5월 31일 인출

23) The State of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 Child Safety and Disability Services (2017). Building young Queenslanders for a global future, p.10.

(2) 호주 청년빈곤정책의 추진체계

가. 연방정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집행은 2004년 설립된 정부기관 Services Australia에서 담당한다. 조직은 육아, 주거, 고령화, 일자리, 교육, 보건 및 장애 분야로 나누며 Youth Allowance는 교육, JobSeeker는 일자리, Rent Assistance는 주거 분야에서 서비스한다.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P.5

그림 II-7. 호주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는 2019년 보건부 내에 한시적으로 Youth Taskforce를 설치하고 청년정책체계 수립을 위한 1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국 단위의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2019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1차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7월에서야 완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를 발표했다. Framework는 코로나19가 교육, 고용, 사회적 기회 등 청년들의 삶 전반에 큰 지장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원,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는다²⁴⁾.

24)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는 호주 교육기능고용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2022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이 패배하면서 8년만에 노동당으로 집권당이 교체되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청년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재정, 복지 측면에서 소외되었다고 직전 자유-국민당 연합이 추진한 청년정책(Youth Taskforce, JobMaker, Youth Jobs PaTH)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및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3년 자유-국민당 연합은 과거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한 Youth Advisory Council과 Office for Youth를 폐지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 Office For Youth 및 청년장관(Minister for Youth)을 복원하고 청년 최대 15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뉴사우스웨일스 주

NSW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아동 및 청소년의 권익 대변을 위해 1998년 아동 및 청소년위원회법(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에 따라 주정부 내에 설치된 독립적 법정 조직이다.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은 주 의회에 직접 보고하며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의 감독을 받는다.

주 정부 내에 아동 및 청소년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따로 없지만 지방부(Department of Regional NSW) 내 지방청년장관(Minister for Regional Youth)과 지방청년국(Office for Regional Youth)을 두고 농촌 및 광산촌 지역의 소외된 청년 인구를 위해 Regional Youth Framework에 따른 Regional Youth Action Plan을 이행 중이다²⁵⁾. 주의 대표 청년빈곤정책인 Rent Choice Youth 사업은 주 정부 내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및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소관이다.

다. 빅토리아 주

Victorian Youth Strategy 수립을 포함한 청년정책 전반은 가족, 공정 및 주거부(Department of Families, Fairness and Housing) 내 청년장관(Minister for Youth)이 청년국(Office for Youth)을 두고 이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일자리, 교외 및 지방부(Department of Jobs, Precincts and Regions) 소관이다.

25) 뉴사우스웨일스 주 지방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 NSW Government, Regional NSW (2022). Office for Regional Youth. <https://www.regional.nsw.gov.au/our-work/pwa-rd/office-for-regional-youth>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라. 퀸즐랜드 주

Queensland Youth Strategy 수립을 포함한 청년정책 전반은 과학 및 청년업무 장관(Minister for Science and Youth Affairs)이 이끌며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용, 중소기업 및 훈련부(Department of Employment, Small Business and Training), 주거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주거 및 디지털경제부(Communities, Housing and Digital Economy) 소관이다.

(3) 호주 주요 청년 빈곤 정책 예시

가. 연방정부

가) Youth Allowance²⁶⁾

1998년 파편화되어 있던 청년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실시 중인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 청년빈곤정책으로 수급자의 상황(학생 또는 구직자)에 따라 연령 조건이 다르다. 학생의 경우 대상 연령은 16~24세이며 상황에 따라 연령 조건이 다르다.

표 II-14. Youth Allowance 수급 조건 - 학생

연령	조건
18 - 24	전업 학생
16 - 17	전업 학생으로 독립 또는 학업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
16 - 17	전업 학생으로 12학년 수료 완료
16 - 24	전업 Australian Apprenticeship 활동 중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b). Youth Allowance for students and Australian Apprentic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for-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또한 수입과 자산 상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수령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부모(또는 보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6) Youth Allowance는 호주 연방정부 복지 포털(Services Australia)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a). Youth Allowance.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표 II-15. Youth Allowance 수령액 - 학생

가족 및 생계 조건	최대 수령액 (2주당)	
	호주불	원화
싱글, 자녀 없음, 18세 미만, 부모 집에서 거주	313.80	281,500
싱글, 자녀 없음, 18세 미만, 학업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 구직 중	530.40	475,800
싱글, 자녀 없음, 18세 이상, 부모 집에서 거주	367.00	329,000
싱글, 자녀 없음, 18세 이상, 학업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 구직 중	530.40	475,800
싱글, 자녀 있음	679.00	609,000
커플, 자녀 없음	530.40	475,800
커플, 자녀 있음	577.40	517,900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b), Youth Allowance for students and Australian Apprentic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for-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구직자의 경우 대상 연령은 16~21세이며 1) 전일제 일자리 구직 중, 2)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하면서 구직 중, 3) 일시적으로 일이나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태 중 하나여야 한다. 또한 수입과 자산 상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수령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부모(또는 보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II-16. Youth Allowance 수령액 - 구직자

가족 및 생계 조건	최대 수령액 (2주당)	
	호주불	원화
싱글, 자녀 없음, 18세 미만, 부모 집에서 거주	313.80	281,500
싱글, 자녀 없음, 18세 미만, 학업/훈련/구직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	530.40	475,800
싱글, 자녀 없음, 18세 이상, 부모 집에서 거주	367.00	329,000
싱글, 자녀 없음, 18세 이상,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	530.40	475,800
싱글, 자녀 있음	679.00	609,000
커플, 자녀 없음	530.40	475,800
커플, 자녀 있음	577.40	517,900
싱글 구직자로 대가족의 가장이거나 아동을 위탁 중	880.20	789,000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c). Youth Allowance for job seeker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for-job-seekers>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나) Youth Jobs PaTH²⁷⁾

Youth Jobs PaTH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업무 경험을 얻도록 도와주는 연방정부 제도로 2019~2024년 5년 간 청년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자유-국민당 연합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5년 간 4억5천만 호주 달러(한화 약 4천억원) 예산을 배정했다²⁸⁾. 이 제도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준비(Prepare): Employability Skills Training은 청년들이 고용주의 기대치를 파악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능, 태도(behavior)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25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며 3주 또는 5주에 걸쳐 75시간 코스 두 개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만 받거나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

27) Youth Jobs PaTH 제도는 호주 교육기능고용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Youth Jobs PaTH. <https://www.dese.gov.au/newsroom/articles/explainer-youth-jobs-path>에서 2022년 5월 26일 인출.

28) 호주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7월에 시작.

- 시험(Trial): 4~12주 간 자원 인턴십을 통해 비고용 청년들이 실제 직장에서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 고용(Hire):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Youth Bonus Wage Subsidy 최대 1만 호주 달러(한화 약 9백만원, 부가세 포함)을 6개월 기한으로 지원한다. 사업체는 15~24세의 적격 구직자를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고용해야 한다.

세 가지 요소는 청년 개인의 니즈와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순서에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Employability Skills Training을 받고 인턴십을 수행한 다음 다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Employability Skills Training 이수 후 Youth Bonus Wage Subsidy를 지원받아 취직을 할 수도 있다.

2022년 2월 말 기준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Employability Skills Training참여 청년의 취업 가능성이 증가한다. 교육 수료 6개월 내에 구직자의 44.2%가 취업 제안 및/또는 인턴십을 받았다. 또한 교육 후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는 동일 연령대 미참여 구직자에 비해 취직 및 일자리 유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2022년 2월 말 기준 139,300명이 넘는 청년이 이 제도에 참여했고 88,900명(63.8%)이 일자리를 얻었다. 인턴십 참여 인원은 Job Services Australia가 제공하는 유사한 무급직업체험제도 대비 거의 3배 많다.

참가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반 소득 지원금 외에 2주당 200 호주 달러를(한화 약 18만원)을 인센티브(비임금)로 받는다. 참가 사업체는 인센티브로 1천 호주불을 선지급 받는다. 인턴십은 2주 당 30~50시간 근무로 4~12주 동안 진행된다.

나. 뉴사우스웨일스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2017년 도입한 Rent Choice Youth²⁹⁾제도는 주 전역에 걸쳐 저소득 및 노숙 위험에 처한 16~24세 청년들에게 3년 기한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최대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으며 사례 담당 복지사 지원금 및

29) Rent Choice Youth 제도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NSW Government, Service NSW (2022). Rent Choice Youth.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rent-choice>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부동산 중계료도 별도 지원된다. 수급 청년들은 기간 동안 학업 또는 취업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Rent Choice Youth는 '단계적 보조금(step-down subsidy)' 모델이다. 첫 12개월 동안 수급자는 본인 주급의 25%와 연방정부 Rent Assistance 보조금 100%를 월세로 내고 나머지는 Rent Choice Youth가 부담한다. 12개월 이후에는 수급자의 실적과 수입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증가한다. 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자가 보조금 없이 월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융통성이 있어 수급자의 월세 부담금이 기간 내 변동 가능하며 사정이 나빠질 경우 25%까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수급자의 주급이 650 호주불(약 58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 빅토리아 주

빅토리아 주정부가 2020년 도입한 Youth Employment Scheme (YES)³⁰⁾ 제도는 15~29세 청년들에게 12개월 간 빅토리아 주 공공 서비스 부문(주정부 및 산하 기관)에서 초급 수준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현업 교육은 물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갖는다. 참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5~29세
- 실업 상태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 현재 고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음
- 졸업 후 취득한 자격증 없음(국가공인 자격증 과정 제외)

라. 퀸즐랜드 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Free apprenticeships for under 25s³¹⁾는 2021년 1월 1일~2022년 9월 30일 기간 중 국가공인 자격증(Certificate III)을 요하는 우선 직종에서

30) Youth Employment Scheme 제도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Jobs Victoria. (2022) Youth Employment Scheme. <https://jobs.vic.gov.au/help-for-jobseekers/skill-and-training/youth-employment-programs>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31) Free apprenticeships for under 25s 제도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Queensland Government (2022). Free apprenticeships for under 25s. <https://desbt.qld.gov.au/training/training-careers/incentives/free-apprenticeships>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견습 또는 훈련을 시작하는 25세 미만 청년의 급여를 지원한다. 우선 직종은 다음 업종 내 139 분야에 달한다:

- 농업 및 원예
- 자동차
- 항공
- 이미용
- 건축 및 건설
- 보육
- 지역 사회 서비스
- 인쇄
- 물 산업
- 전기 기술 및 유틸리티
- 공학
- 요리 및 제빵
- 임상병리
- 제조 및 설계
- 육류 가공
- 경마
- 자원 및 광업

주정부는 2020-2021 회계연도동안 39개 비정부 기관에 Homelessness Program 3,610만 호주 달러(한화 약 323억원)를 집행해 주 전역에 걸쳐 61개 노숙자 전문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 또한 Youth Foyer on the Gold Coast를 신설하고 1,230만 호주불(약 110억원)을 배정해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청년 최대 40인에게 집이라 칭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2) 뉴질랜드의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1) 뉴질랜드 청년 빈곤 정책의 배경 및 핵심내용³²⁾

뉴질랜드의 아동(0~17세) 빈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대 중반 경제 고도 성장 시기에 아동수당(Working for Families)이 도입되면서 그 빈곤율이 떨어졌지만 결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후 많은 아동들의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푸드뱅크와 집행 기관들이 기록적 수요를 보고했다. 건축 재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 서비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2008년 이후 아동 빈곤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증가

32) 뉴질랜드 총리내각부 내 아동복지및빈곤퇴치그룹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Child and Youth Wellbeing (2022). <https://childyouthwellbeing.govt.nz/>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했다³³⁾.

총리 겸 아동빈곤퇴치장관이 직접 주도한 아동빈곤감소법(Child Poverty Reduction Act 2018)과 2018 수정아동법(Children's Amendment Act)은 2018년 12월 의회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집권당에 상관없이 청년빈곤정책이 지속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아동빈곤감소법에 따라 정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아동 빈곤 대책에 대해 장기(10년) 및 중기(3년) 목표 설정
- 아동 빈곤 대책에 대해 매년 보고
-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에 아동 빈곤 경감 예산과 정부의 목표 달성 방법 보고
- 아동 빈곤 관련 지표 보고

수정아동법은 정부가 아동 및 청년의 복지, 특히 아동 빈곤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개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Child and Youth Wellbeing Strategy를 발표했다.



* 출처: 아동복지및빈곤퇴치그룹(Child Wellbeing and Poverty Reduction Group) 웹사이트, Child and Youth Wellbeing (2022). <https://childyouthwellbeing.govt.nz>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그림 II-8. Child and Youth Wellbeing Strategy 프레임워크

33) D Wynd (2012).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s Expert Advisory Group' Solutions to Child Poverty. Child Poverty Action Group Submission. P.2.

2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에는 프레임워크를 비롯, 비전과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이니셔티브, 제도 및 계획을 제시하는 현재 실행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20개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75개 이상의 조치와 49개 보조 조치가 이행된다. 2019년 정부 예산에서 이들 조치 이행에 35억 NZD (약 2조9천억원)를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 1~5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행 및 확대할 것이다.

한편, 뉴질랜드 청년(15~24세) 실업률은³⁴⁾ 2021년 3분기 기준 9.6%로 전국 실업률은 3.2% 및 25~64세 실업률 2.3%에 비해 훨씬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13.2%, 13.8%까지 상승했다가 1년 만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여전히 그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다. 뉴질랜드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이후 25~64세 실업률의 약 3~4배, 전체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의 2.5배 수준을 유지했다.

청소년은 전통적으로 계절 노동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방학 동안인 하절기에 증가, 동절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0대 실업자의 다수가 학업 중이기 때문이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2021년 3분기 기준 10대 실업자(15~19세) 23,100명 중 12,200명(53%)이 학업 또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실업자(20~24세) 중 학업 또는 훈련 중인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2) 뉴질랜드 청년 빈곤 정책의 추진체계³⁵⁾

2017년 10월 총선에서 8년 만에 노동당을 승리로 이끌며 총리가 된 저신더 아던은 아동빈곤퇴치장관(Minister for Child Poverty Reduction)을 겸직하면서 2018년 초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내에 아동복지및빈곤퇴치그룹(Child Wellbeing and Poverty Reduction Group)을 설치했다. 이 그룹은 아동 복지팀과 아동빈곤팀으로 나뉘는데 아동빈곤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4) 뉴질랜드 통계청 2021년 12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Stats NZ (2021). Youth unemployment rate three times national average. <https://www.stats.govt.nz/news/youth-unemployment-rate-three-times-national-average/>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35) 뉴질랜드 총리내각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22). Child Wellbeing and Poverty Reduction Group. <https://dpmc.govt.nz/our-business-units/child-wellbeing-and-poverty-reduction-group>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2018년 아동빈곤감소법(Child Poverty Reduction Act 2018) 이행요건 지원
- 법 시행 기관을 지원
- 아동 빈곤 감소를 위한 조치 및 정책 파악을 위해 협력
- 아동 관련 사안에 대해 장관들에게 자문 제공
- 복지 전략의 빈곤 관련 측면에 있어 아동복지팀과 공조

1964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따른 가족 수당의 일환으로 Youth Payment 및 Young Parent Payment 그리고 실업 수당인 Jobseeker Support가 제공된다. 중앙정부 내 사회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가 관장한다.

(3) 뉴질랜드 주요 청년정책 예시³⁶⁾

가. Youth Payment

2012년 시행된 뉴질랜드의 대표 청년빈곤정책으로 부양 자녀가 없는 16~17세 청소년을 지원한다. 부모(또는 보호자)와 동거 또는 부양 받지 못할 사정이어야 하고 싱글이어야 하며 커플일 경우 반려자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승인된 교육 또는 승인된 업무 기반 학습을 전업으로 수행 중이거나 수행 가능해야 한다.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시 소득 심사를 거친다.

표 II-17. Youth Payment 수령액

조건	최대 수령액 (주 당)	
	NZD	원화
싱글, 16~17세	274.37	225,000
커플, 자녀 없음	536.00	439,000

* 출처: Work and Income (2022b). Youth Paymen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youth-payment.html>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36) 뉴질랜드 중앙정부 복지 포털(Work and Income)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Work and Income (2022a).
<https://www.workandincome.govt.nz/>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나. Young Parent Payment

부양 자녀가 있는 16~18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16~17세 싱글은 부모(또는 보호자)와 동거 또는 부양 받지 못할 사정이어야 하고 동거/부양 받더라도 부모(또는 보호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16~18세 커플은 두 사람 모두 특정 다른 혜택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정이어야 한다.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승인된 교육 또는 승인된 업무 기반 학습을 전업으로 수행 중이거나 수행 가능해야 한다.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시 소득 심사를 거친다.

표 II-18. Young Parent Payment 수령액

조건	최대 수령액 (주 당)	
	NZD	원화
싱글, 16~17세, 동거 부모(또는 보호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254.38	208,000
커플	566.00	464,000
커플, 반려자가 수급 자격이 없음	283.00	231,800
편부모	440.96	361,000

* 출처: Work and Income (2022c). Young Parent Paymen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young-parent-payment.html>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다. Jobseeker Support

실업 수당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직할 수 있는 18세 이상(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0세 이상)을 지원한다.

표 II-19. Jobseeker Support 수령액

조건	최대 수령액 (주 당)	
	NZD	원화
싱글, 18~19세, 부모와 동거	233.75	191,500
싱글, 18~19세,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274.37	224,700
싱글, 20~24세	274.37	224,700
싱글, 25세 이상	315.00	258,000
커플, 자녀 없음	536.00	439,000
커플, 자녀 있음	566.00	464,000
커플, 반려자가 수급 자격이 없음, 자녀 있음	283.00	231,800
편부모	440.96	361,000

* 출처: Work and Income (2022d). Jobseeker Suppor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jobseeker-support.html>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3) 호주와 뉴질랜드 청년 빈곤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호주 청년정책에서 청년은 15~24세 연령의 인구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연령(초기 청년)과 같다. 호주는 초기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립 주거, 독립 생활을 하는 문화로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이 초기 청년기를 부모와 동거하면서 대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호주의 청년빈곤정책의 대표제도는 Youth Allowance로 우리나라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와 비교할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정책은 대상이 16~24세이지만 학업 여부, 혼인 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24세 이하로, 전업 학생이나 견습생인 경우에는 Youth Allowance을 2주마다 최대 313~577 달러(호주)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나 아프거나 상해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청년은 Jobseeker를 통해 2주마다 최대 642~880달러(호주)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호주의 Youth Allowance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실업상태이거나 상병 상태일 경우에 더 많은 수당은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25세 이상이 되더라도 전업 학생이거나 호주 견습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수당을 연장할 수 있다. 또 Youth Allowance를 수령할 경우, 주거비 보조나 교통비 보조의 수급 가능성이 커진다. 16~24세 이하이면서 실업상태로 구직 중이거나 아프거나 부상으로 일이나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Jobseeker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연령구간 내에서도 청년의 상황(독립 가구,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전업 학업 여부, 상병 여부 등)에 따라 급여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 연령이 19~34세로 호주 제도보다 구간이 넓다. 지원 요건도 유형1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호주 제도(중위소득 50~60%)보다 요건 기준이 낮고, 취업경험의 유무, 소득 기준 등의 요건이 있지만 호주에 비해서는 자격요건이 단순하다. 대략 청년 연령 구간에 있는 미취업 상태 청년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급여액은 유형1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로 연간 300만원이다. 호주의 청년수당과 비교하면 1인 최저 금액(2주간 313호주 달러를 1개월치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57만원 수준)보다 낮고, 지급 기한도 최대 6개월로 별도로 지급종료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호주 정책보다 짧다. 다만, 호주의 정책이 연간 15만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책은 2021년에만 25.4만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인 지원 형태를 띄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Rent Choice Youth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서울,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주거복지지원서비스와 유사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월세지원사업이 호주 주정부의 사업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대신 지원금액이 낮다. 빅토리아 주의 youth employment scheme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와 유사하지만, 주당 15시간 미만의 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빅토리아 주의 모델의 특징이 있다. 초급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풀타임 위주의 공공일자리로 편성된 우리나라 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퀸즐랜드 주의 Free apprenticeships for under 25s는 청년을 위한 교육훈련급여로 우리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해 보인다.

호주의 청년빈곤정책은 가구소득이 낮은, 실업상태(구직 중, 상병 중 포함)이거나 전업

학생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빈곤의 다층적 요인을 전업 학생, 실업, 부모로부터 독립 주거, 자녀 양육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각 요인마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급여액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청년 빈곤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세제공제 지원, 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금과 자립지원서비스, 실업상태의 청년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빈곤청년에 집중된 정책은 사실 상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각종 급여 제공, 국민취업지원서비스의 청년특례 일부라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의 빈곤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빈곤정책을 특정하고, 기존의 정책을 연계하는 시도가 부족하다. 호주의 사례에서 학생지원과 구직자 지원이라는 카테고리는 대학진학률 70% 이상인 우리나라와 딱 맞지는 않아보인다. 그러나 다층적 빈곤 요인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청년 빈곤정책 도입은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인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월세지원이나 주거급여지원 등 생계급여나 실업부조 이외에 연계가 가능한 각종 급여와 수당 정책을 연결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청년 빈곤정책인 Youth Payment와 Youth Parent Payment는 16~18세의 전업 학생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이다. Jobseeker Support는 18세 이상 구직자 청년을 위한 실업수당으로 호주 정책과 유사하게 부모와 동거 여부, 혼인 또는 커플 동거 여부, 자녀 양육 여부, 한부모 여부 등 요건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지원되는 구조이다.

16세부터 17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Youth Payment와 16세부터 18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Young Parent Payment는 청소년정책으로 적합하나, 정책대상인 수혜 연령대를 확대하여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청년 빈곤정책은 대상 연령구간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과 맞닿아 있어 청년정책의 시사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호주의 사례처럼 청년 빈곤의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는 급여구조는 우리 청년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청년 빈곤 실태 분석

-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
-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 3. 청년 주거 빈곤 심층 분석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³⁷⁾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차년도 연구에서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 영역, 지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다. 1, 2차 델파이조사를 거치면서 청년 빈곤 개념은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현재 빈곤 상태와 빈곤에 빠질 위험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고, 일시적 빈곤 상태가 제외되는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라는 개념으로 확정하였다(김형주 외, 2021).

빈곤 지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은 1차년도 연구에서 1차와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경제, 노동,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으로 구성하였다.

청년 빈곤의 영역별 지표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가처분 소득 기준 수정 및 순자산과 노동안정성,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의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고,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여가·문화비 지출의 지표를 삭제하였다(김형주 외, 2021). 다음은 본 연구의 청년 빈곤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37)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1.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최종안)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빈곤선(cut-off)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50%미만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가구총자산-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노동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경활자)인 경우
	노동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RIR)가 30%초과한 경우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09의 표를 영역 배치순서 등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각 빈곤 지표의 분석자료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은데,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에 각 지표 빈곤율 산출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시기를 포괄해 분석하였으며, 청년 연령도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집단 변수의 연령을 이용하였다(김형주 외, 2021)

표 III-2. 청년 빈곤 지표별 분석자료

영역	지표	청년 연령	시기	분석자료
경제	가구소득 빈곤	19~34세	2016~2019	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빈곤	19~34세	2005~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순자산 빈곤	19~34세 가구주	2017~202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	실업 ¹⁾	15~29세	2010~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안정성	15~29세	2013~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²⁾	13~29세	2012~2020	통계청, 「사회조사」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비참여)	15~29세	2007, 20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등
주거	주거비 부담	20~34세 가구주	2017~20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건강	장애 및 정신건강 ³⁾	20~30대	2015~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의료비 부담	19~34세 가구주	2010,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한국 복지패널조사」
사회· 문화자본	사회적 지지	20~30대	2013~202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 시간(자택시간)	20~30대	2014	노혜진(2019) 「한국노동패널」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15~116의 표에서 영역 배치순서를 수정하여 제시함

- 주 : 1) 노동의 '실업' 원지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이나, 연령대별로 장기실업을 측정하기 어려워 실업으로 측정함.
 2) 교육의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원지표는 '경제적 혹은 신체적 사유로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이나, 직업훈련에 관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없어서 '교육기회 미충족 사유' 문항으로 측정함.
 3) 건강의 '장애 및 정신건강'의 원지표는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이나, 장애, 질환, 정신건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해 장애인 비율과 우울증 환자 비율로 측정함.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³⁸⁾

청년의 이행기 특성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변금선, 이해림, 2022; ILO, 2020).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이 확대되었으나, 변화하는 청년의 삶과 청년기에 가중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한 6개 영역 13개 지표를 이용해 청년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표별 최신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코로나19 전후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 추이를 확인하였다.

1) 분석 내용

청년층의 빈곤 실태와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연령별 빈곤 지표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전체 대비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전후 청년층의 빈곤 위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 시점의 상대적 빈곤 위험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38) 이 절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3. 분석 내용

구분	분석 내용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6개 영역별 지표의 변화 추이 분석 ■ (시간) 시계열 분석 19-34세 청년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에 관한 최근 10여년 이내의 변화 추이 분석
청년의 다차원 빈곤 특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연령집단과 청년집단의 6개 영역별 지표의 차이 분석 ■ (연령) 연령 비교 분석 19-34세가 포함된 집단과 전체, 다른 연령집단과의 지표별 차이 비교 분석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비교 분석 ■ (상대적 빈곤 위험) 전체 연령 대비 청년의 빈곤 위험을 산출하여 과거보다 현재 청년의 빈곤 위험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 분석 ■ (코로나19 전후 비교) 코로나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시점 상대적 빈곤 위험 비교

*출처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정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15의 표 III-14 발췌 및 수정

2) 지표 정의 및 분석자료

다음 <표 III-4>는 지표별 측정방법이다. 경제영역의 빈곤 지표는 가구소득, 근로소득, 순자산 빈곤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 빈곤은 OECD의 균등화 지수(가구원 수의 제곱근)를 적용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근로소득 빈곤은 임금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비율로 측정하였다. 순자산 빈곤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가구균등화 중위자산의 50%에 못 미치는 청년 가구 비율로 측정하였다.

노동영역의 빈곤 지표는 실업과 노동 안정성이다. 실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을 하지 못한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노동안정성은 비정규직 비율로 측정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 한시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 III-4.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측정방법

영역	지표		측정방법
경제	가구소득 빈곤		가구원 수 재평균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의 빈곤율
	근로소득 빈곤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경우
	순자산 빈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
노동	실업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노동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의 비율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교육기회가 미충족된 사유로 '하비 마련이 어려워서' 혹은 '질병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비참여)		만15-29세 청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
	주거 결핍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방 혹은 면적 미달)
비전형 주거		반지하, 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건강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인 비율	주민등록 인구 중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수 비율
		우울증 환자 비율	주민등록 인구 중 건강보험 우울증 환자 수 비율
	의료비 부담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돌봄,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량시간)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솟값을 차감. 재량시간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 재량시간 빈곤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09의 표를 세부지표와 측정방법 설명을 넣고 영역 배치순서 등을 수정하여 제시함

주거영역 빈곤 지표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 결핍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ent-to-Income Ratio)로 측정하였다. 주거 결핍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과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로 측정하였다.

건강영역 빈곤 지표는 신체 및 정신건강 결핍을 보여주는 장애인 비율과 우울증 환자 비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박탈을 보여주는 과부담 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로 측정하였다. 장애인 비율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중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수 비율로, 우울증 환자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건강보험 질병통계의 우울증 환자 수 비율로 측정하였다.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은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하였다(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교육영역 빈곤지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과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유로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기회가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회·문화자본 영역 빈곤지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활동 시간 결핍이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돌봄,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OECD의 사회적 고립 척도로 활용된다. 재량시간 빈곤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솟값을 차감한 재량시간이 중위값의 50% 이하면 재량시간 빈곤으로 정의하였다(노혜진, 2019;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다음 표 <III-6>은 분석자료를 요약한 표이다. 모든 분석은 통계청 승인통계 혹은 이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로, 연령 구분은 각 조사자료가 제공하는 연령 구분 값을 활용하되, 직접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인 19-34세를 적용하였다.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은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사회조사의 특성상 최근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워 1차년도 값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재량시간 빈곤은 1차연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표 III-5>는 본 장에서 활용한 자료의 개요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영역의 빈곤 지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영역의 빈곤 지표인 실업과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거영역의 빈곤 지표는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건강영역 빈곤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를 이

용하였다. 교육영역 빈곤 지표 중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닛트 비율은 OECD(2021a)의 Education database 등과 정재현(2022)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지표 중 사회적 지지는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시간빈곤 지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시간 빈곤을 분석한 노혜진(2019)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표 III-5. 분석자료 개요

영역	지표	청년 연령	시기	분석자료
경제	가구소득 빈곤	19~34세	2016~2020	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빈곤	19~34세	2005~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순자산 빈곤	19~34세 가구주	2017~202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	실업	15~29세	2011~20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15~29세	2014~20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3~29세	2012~2020	통계청, 「사회조사」
	닛트(NEET) (교육 및 훈련 비참여)	15~29세	2007~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등
주거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옥탑방 등 거주 가구 비율	20~34세 가구주	2017~2020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건강	장애 및 정신건강	20~30대	2016~202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의료비 부담	19~34세	2015 2019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한국복지패널조사」
사회·문화자본	사회적 지지	20~30대	2013~2020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량시간)	20~30대	2014	노혜진(2019) 「한국노동패널」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15-116의 표에서 영역 배치순서를 수정하여 제시함

3)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1) 경제영역 청년 빈곤 실태

가. 가구소득 빈곤

〈표 III-6〉과 [그림 III-1]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해 소득자료를 보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빈곤율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전체 빈곤율과 청년 빈곤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집단보다 낮은 수준이다. 19-34세 청년의 빈곤율은 2016년 10.4%에서 2019년 8.9%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인 2020년에는 8.2%로 빈곤감소 경향이 유지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2020년 청년 빈곤율은 2.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빈곤율 감소 폭(2.3%p)보다 낮고, 18-65세의 빈곤율 감소 폭(2.3%p)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등이 확대된 것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 동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는 청년의 독립을 더욱 지연시켜 청년의 빈곤율이 감소하는 착시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³⁹⁾.

39) 우리나라 15-29세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89%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음(OECD, 2021b;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표 III-6.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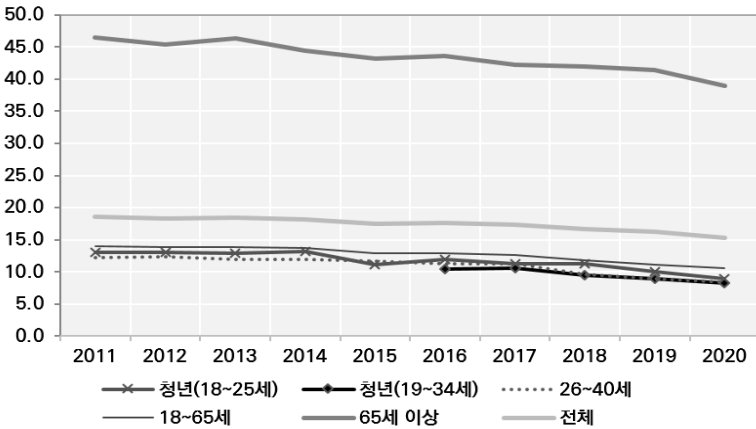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A)	2017	2018	2019	2020(B)	B-A
18-25세	13.0	13.1	12.9	13.2	11.1	11.9	11.3	11.3	10.0	9.0	-2.9
19-34세	--	--	--	--	--	10.4	10.6	9.5	8.9	8.2	-2.2
26-40세	12.2	12.4	11.9	12.0	11.7	11.2	11.3	9.6	8.9	8.4	-2.8
18-65세	14.0	13.9	13.8	13.7	12.9	12.9	12.6	11.8	11.1	10.6	-2.3
전체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15.3	-2.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19-34세 빈곤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조사자료 분석결과.

주 :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개인 빈곤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19-34세 빈곤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조사자료 분석결과.

그림 III-1.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나. 근로소득 빈곤

〈표 III-7〉과 [그림 III-2]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임금근로자 비율 변화이다.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2%로 2005년보다 10.5%p 감소하였다. 15-19세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6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4.5%)보다는 감소하였지만, 2020년(57.1%)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4세, 25-29세 청년에게서도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집단과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율 감소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지연으로 인해 초기 청년의 고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으며⁴⁰⁾, 2021년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이 초기 청년에 집중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7.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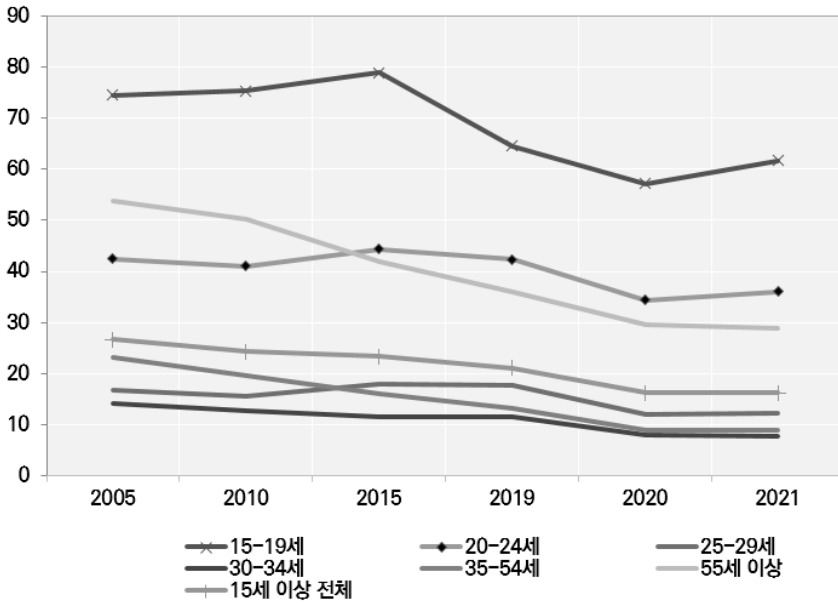
구분	2005(A)	2010	2015	2019	2020	2021(B)	B-A
15-19세	74.4	75.3	78.8	64.5	57.1	61.7	-12.7
20-24세	42.5	41.0	44.3	42.3	34.4	36.0	-6.5
25-29세	16.7	15.6	17.9	17.8	12.0	12.2	-4.5
30-34세	14.2	12.7	11.5	11.5	8.1	7.9	-6.3
35-54세	23.2	19.7	16.1	13.2	9.0	8.9	-14.3
55세 이상	53.8	50.3	41.8	36.1	29.7	28.9	-24.9
15세 이상 전체	26.7	24.3	23.4	21.1	16.3	16.2	-1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비율

4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19년 58.2%에서 2021년 57.4%로 감소하였으며, 15-1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19년 7.6%에서 2020년 7.4%로 감소하였음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그림 III-2.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1)

다. 순자산 빈곤

〈표 III-8〉과 [그림 III-3]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구주의 연령별 순자산 빈곤율이다. 2021년 기준 19-34세 청년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은 52.3%로 전체 가구주(31.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2017년 47.6%에서 2021년 52.3%로 4.7%p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형성의 어려움이 청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8. 순자산 빈곤율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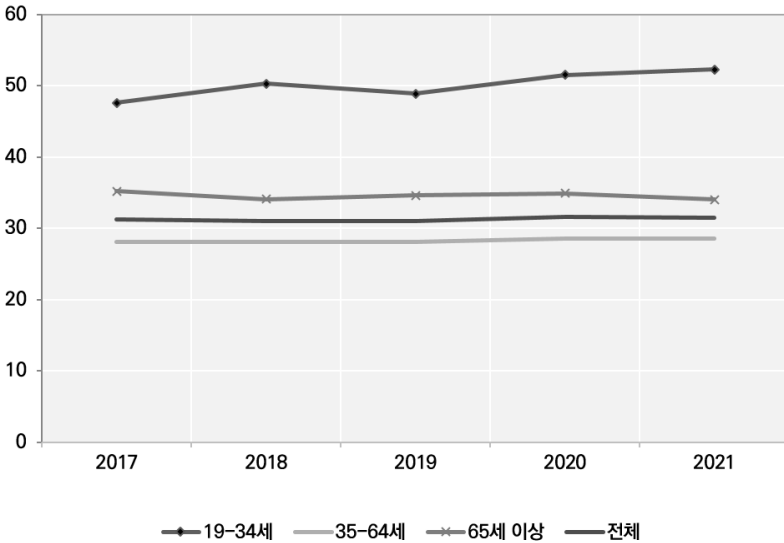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B-A
19-34세	47.6	50.3	48.9	51.5	52.3	+4.7
35-64세	28.1	28.1	28.1	28.5	28.5	+0.4
65세 이상	35.2	34.1	34.6	34.9	34.0	-1.2
전체	31.3	31.0	31.0	31.6	31.5	+0.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당해연도 기준,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함.
 2)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주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해당연도 기준,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함.
 2)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주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그림 III-3. 순자산 빈곤율 (2017~2020)

(2) 노동영역 청년 빈곤 실태

가. 실업

〈표 III-9〉와 [그림 III-4]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실업률 추이이다. 2021년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8%로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3.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이 2011년 3.4%에서 2021년 3.7%로, 15세~29세 청년 실업률은 7.6%에서 7.8%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직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 2021년 실업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청년 실업률은 2019년 8.9%에서 2020년 9.0%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등 비경제활동 청년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표 III-9. 실업률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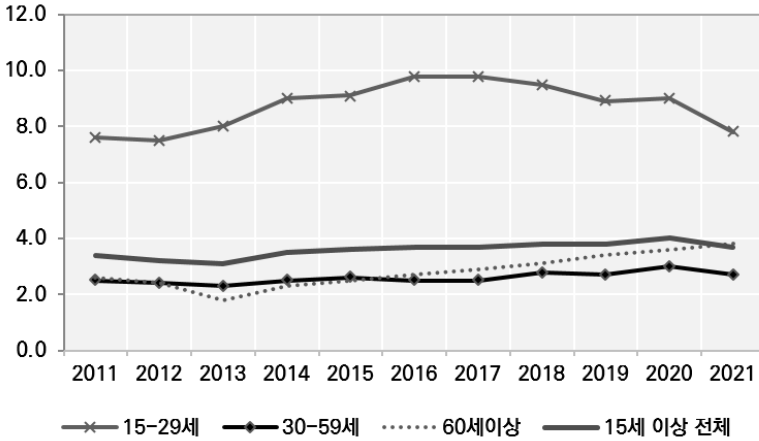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B)	B-A
15-29세	7.6	7.5	8.0	9.0	9.1	9.8	9.8	9.5	8.9	9.0	7.8	+0.2
30-59세	2.5	2.4	2.3	2.5	2.6	2.5	2.5	2.8	2.7	3.0	2.7	+0.2
60세 이상	2.6	2.4	1.8	2.3	2.5	2.7	2.9	3.1	3.4	3.6	3.8	+1.2
15세 이상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3.7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비율

그림 III-4. 연령별 실업률 (2011~2021)

나. 노동 안정성 : 비정규직 비율

〈표 III-10〉과 [그림 III-5]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21년 기준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1%로 15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8.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⁴¹⁾, 20대는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30대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0대는 많이 증가였다. 2019년 1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77.8%에서 2021년 85.1%로 7.3%p 증가하였는데, 15-29세 청년 전체,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폭(1.7%p)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반영하므로, 비임금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 이후 배달 플랫폼 노동의 증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노동 안정성은 더욱 악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4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9년부터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을 측정하여 이전 시점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김형주 외, 2021 재인용).

표 III-1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13~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A)	2020	2021(B)	B-A
15~29세	34.7	35.1	35.2	35.7	34.6	40.4	39.9	42.1	+1.7
15~19세	70.0	74.3	75.2	73.4	74.0	77.8	84.2	85.1	+7.3
20~29세	32.0	32.1	32.2	33.1	32.3	38.3	37.8	40.0	+1.7
30~39세	21.8	21.2	21.1	20.6	21.0	23.7	22.8	22.8	-0.9
15세 이상 전체	32.2	32.4	32.8	32.9	33.0	36.4	36.3	38.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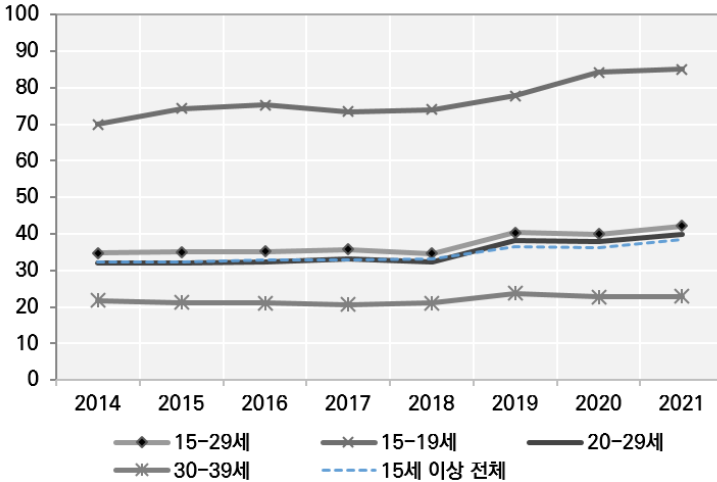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2월 9일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통계로보는 사회보장 2021 <표 3-3> 수정.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2월 9일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표 3-3> 반영하여 도식화함.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그림 III-5. 비정규직 비율 (2014~2021)

(3) 교육영역 청년 빈곤 실태

가. 교육기회 미충족

〈표 III-11〉과 〈그림 III-6〉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 추이이다.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관련 문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격년 조사로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최신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1차년도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기회 미충족 수준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지 않았으며, 추이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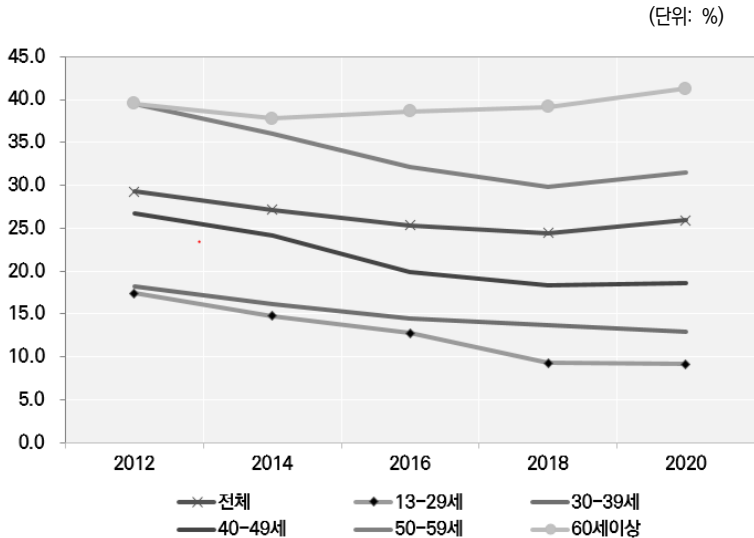
구분	2012(A)	2014	2016	2018	2020(B)	B-A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a*(b+c/100))	전체	29.3	27.1	25.3	24.4	25.9	-3.4
	13-29세	17.4	14.8	12.8	9.3	9.2	-8.2
	30-39세	18.2	16.2	14.5	13.7	12.9	-5.3
	40-49세	26.7	24.1	19.9	18.4	18.6	-8.1
	50-59세	39.4	36.0	32.2	29.8	31.5	-7.9
	60세이상	39.5	37.8	38.6	39.1	41.2	+1.7
(a)교육기회 미충족	전체	53.0	49.8	46.3	43.8	43.9	-9.1
	13-29세	34.2	31.2	27.4	22.3	20.3	-13.9
	30-39세	37.5	31.6	27.9	26.1	24.0	-13.5
	40-49세	48.1	44.2	38.5	35.5	35.3	-12.8
	50-59세	62.2	58.5	52.8	49.2	48.9	-13.3
	60세이상	74.6	72.5	70.5	67.8	67.5	-7.1
(b)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전체	54.0	53.4	53.6	54.5	57.9	+3.9
	13-29세	49.1	45.3	44.7	39.7	42.5	-6.6
	30-39세	47.4	50.2	50.6	50.0	52.2	+4.8
	40-49세	54.1	53.2	50.4	50.6	51.7	-2.4
	50-59세	62.1	60.4	59.6	59.4	63.4	+1.3
	60세이상	52.1	51.4	54.1	56.8	60.2	+8.1

구분	2012(A)	2014	2016	2018	2020(B)	B-A	
(c) 질병, 신체적 장애	전체	1.2	1.1	1.1	1.3	1.1	-0.1
	13-29세	1.8	2.1	2.0	2.0	2.7	+0.9
	30-39세	1.2	1.0	1.4	2.6	1.7	+0.5
	40-49세	1.5	1.3	1.4	1.2	0.9	-0.6
	50-59세	1.3	1.2	1.3	1.1	1.0	-0.3
	60세이상	0.9	0.7	0.7	0.9	0.9	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p.135의 표 III-26 발췌

- 주 1) '교육기회 미충족' 은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2) b와 c는 교육기회가 미충족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사유를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혹은 '질병, 신체적 장애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p.134의 그림 III-12 발췌

그림 III-6.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0)

그러나 고등교육 보편화와 학력 인플레이 등을 고려할 때 청년 시기의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의 결과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삶의 여러 부분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 등 형식교육 외에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결핍 수준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 전환시대 이공계 중심의 일자리 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전공별 일자리 질 격차 확대를 고려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나. 청년 니트 비율

〈표 III-12〉와 〈그림 III-7〉은 2007년, 2017년, 2019년, 2020년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니트 비율이다. 니트는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지 않고 OECD 국가와 비교하였다(김형주 외, 2021). 2020년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비율은 20.6%로 OECD 국가 평균(13.4%)보다 7.2%p 더 높았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율은 2007년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OECD 국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포기, 비경제활동 청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가 악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2.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2019,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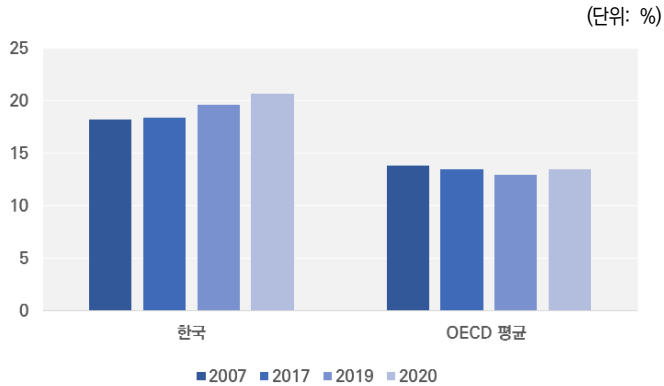
구분	2007(A)	2017	2019	2020(B)	B-A
한국	18.2	18.4	19.6	20.6	+2.4
OECD 평균	13.8	13.4	12.9	13.4	-0.4

*자료: OECD(2021a).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http://database.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민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선, 남원석, 김승언, 윤민석, 손창우, 방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 (2020)의 p.62 결과를 표로 재구성함. (원자료 출처: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2019년 2020년 한국 니트비율은 정재현(2022). 청년 NNET 특성 및 유형분석. 에서 발췌.

- 주 1)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현재 일,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비율임.
2) 2019년과 2020년 OECD 국가 니트 비율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OECD(2021a).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http://database.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서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 반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 (2020)의 p.62 결과를 표로 재구성함. (원자료 출처: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주 :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현재 일,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비율임.

그림 III-7. 청년 니트 비율 변화

(4) 주거영역 청년 빈곤 실태

가. 주거비 부담 : 주거비 과부담 위험

〈표 III-13〉과 〈그림 III-8〉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인 RIR(Rent to Income Ratio) 변화 추이이다. 2020년 기준 20-34세 청년 가구의 RIR은 16.8%(중위기준)로 일반 가구(16.6%)보다 높았다. 청년 가구의 RIR은 2017년 18.8%에서 2020년 16.8%로 감소하였는데, 일반 가구의 RIR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가구특성별 RIR (2017~2020)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B)	B-A
중위수	청년 가구	18.8	20.1	17.7	16.8	-2.0
	일반 가구	17.0	15.5	16.1	16.6	-0.4
평균	청년 가구	21.9	20.5	21.0	20.4	-1.5
	일반 가구	21.8	21.1	21.3	20.9	-0.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327&hFormId= 예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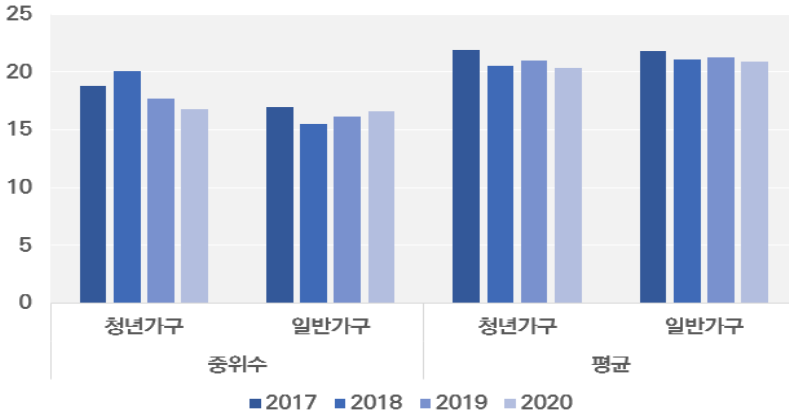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p.49의 표 II-22 일부 발췌.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RIR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강미나, 김혜승 외, 2021, p.47 주11 발췌)

$$RIR_t = \frac{\text{median}(R_{j,t})}{\text{median}(I_{j,t})} \text{ or } \frac{\text{mean}(R_{j,t})}{\text{mean}(I_{j,t})}$$

- 3) RIR 계산 시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7년 8월 6.40%, 2018년 9월 6.20% 2019년 6.10%, 2020년 9월 5.7%(강미나, 김혜승 외, 2021)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327 &hFormId= 예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p.49의 표 II-22 반영하여 도식화

그림 III-8. 가구특성별 RIR (2017~2020)

나. 주거 결핍 :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표 III-14〉와 〈그림 III-9〉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이하 반지하 등 거주비율) 변화 추이다. 2020년 기준 20~34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7.5%로 일반가구(4.6%)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지하 등 거주비율(2.0%)도 일반가구(1.6%)보다 높았다.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7.5%로 3.0%p 감소해 일반가구 감소 수준(1.3%p)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지하 등 거주가구 비율은 청년 가구와 일반가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파악하므로 전체 청년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⁴²⁾.

표 III-14.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10)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B)	B-A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5	9.4	9.0	7.5	-3.0
	일반가구	5.9	5.7	5.3	4.6	-1.3
지하·반지하· 옥탑방	청년가구	3.1	2.4	1.9	2.0	-1.1
	일반가구	2.3	1.9	1.3	1.6	-0.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327&hFormId=> 예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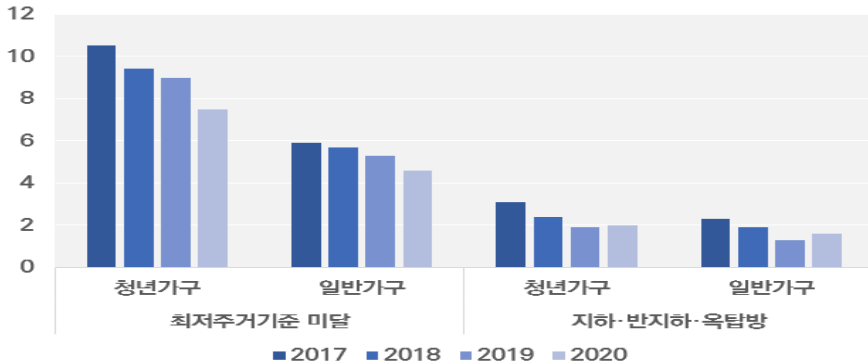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재,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p.29의 표 II-11과 p.35의 표 II-15 일부 발췌.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교통부(2011)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제2011-490호)을 따름. 시설기준은 전용 임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침실 수 및 주택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판단(강미나, 김혜승 외, 2021, p.34).

42) 수도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7년 10.1%에서 2020년 10.4%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10.9%에서 4.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일반가구(수도권 6.7%에서 5.6%로 감소, 수도권 외 5.2%에서 3.6%로 감소)와 다른 결과로, 청년 주거 빈곤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줌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327&hFormId=>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재,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p.29의 표 II-11과 p.35의 표 II-15 내용을 일부 발췌해 도식화함.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교통부(2011)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제2011-490호)을 따름.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침실 수 및 주택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판단(강미나, 김혜승 외, 2021, p.34)

그림 III-9.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20)

(5) 건강영역 청년 빈곤 실태

가.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 등록장애인 비율 및 우울증 환자 비율

〈표 III-15〉와 [그림 III-10]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장애인 수와 주민등록인구 기준 등록장애인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2021년 20~34세 청년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1.48%~1.57%로 전체 인구의 장애인 비율(5.12%)보다 낮았다.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대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30대는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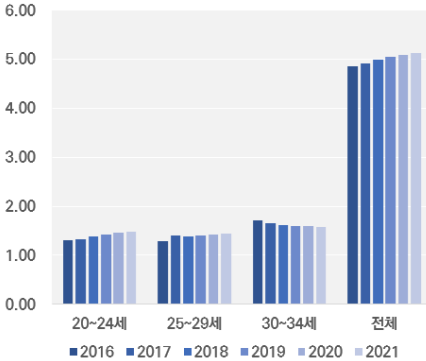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B)	B-A	
장애인 비율(%)	20-24세	1.31	1.34	1.39	1.43	1.45	1.48	+0.17
	25-29세	1.29	1.40	1.39	1.40	1.42	1.45	+0.16
	30-34세	1.70	1.66	1.62	1.60	1.59	1.57	-0.13
	전체	4.86	4.92	4.99	5.05	5.08	5.12	+0.26
장애인 수(명)	20-24세	46,251	46,582	47,363	47,397	47,280	46,090	-161.00
	25-29세	45,313	46,388	47,433	49,009	50,581	51,252	5,939
	30-34세	59,903	54,924	51,742	50,630	49,985	50,439	-9,464
	전체	2511,051	2545,637	2555,876	2618,918	2633,026	2644,700	133,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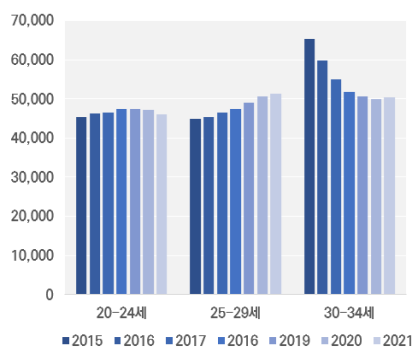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등록장애인 비율은 주민등록통계 7월 1일 기준 인구수 중 등록장애인 비율임.

A. 등록장애인 비율(%)



B. 등록장애인 수(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그림 III-10.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6~2021)

〈표 III-16〉과 [그림 III-11]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 환자 수와 주민등록 대비 우울증 환자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21년 20-34세 청년의 우울증 환자 비율은 2.55%로 15세 이상 전체인구의 우울증 환자 비율(1.76%)보다 높았다. 변화 추이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명확히 확인되었다. 20-34세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6년 1.00%에서 2021년 2.5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우울증 환자 비율이 2016년 1.24%에서 2021년 1.76%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20대 청년의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9년 1.79%에서 2020년 2.23%, 2021년 2.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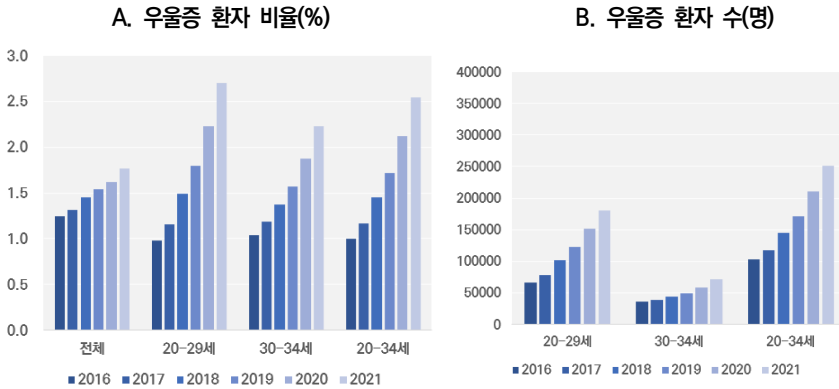
표 III-16.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1)

(단위: %, 명)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B)	B-A
우울증 환자 비 율(%)	전체	1.24	1.31	1.45	1.54	1.62	1.76	+0.52
	15-19세	0.70	0.85	1.24	1.48	1.69	2.00	+1.30
	20-29세	0.98	1.15	1.49	1.79	2.23	2.70	+1.72
	30-34세	1.04	1.18	1.37	1.57	1.87	2.22	+1.18
	20-34세	1.00	1.16	1.45	1.72	2.12	2.55	+1.55
우울증 환자 수 (명)	전체	643,102	680,169	751,930	796,364	837,808	910,785	267,683
	15-19세	21,947	25,039	34,888	39,472	41,456	46,985	25,038
	20-29세	66,409	78,558	101,458	122,119	151,923	179,973	113,564
	30-34세	36,564	39,151	43,714	49,439	58,943	71,540	34,976
	20-34세	102,973	117,709	145,172	171,558	210,866	251,513	148,5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우울증 환자 비율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기준 각 연령 인구를 우울증 환자 수로 나눈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그림 III-11.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0)

나. 의료서비스 박탈 :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표 III-17〉과 [그림 III-12]는 2015년, 2019년, 2020년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0년 19-34세 청년 중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은 10.2%,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13.1%로, 전체 연령집단보다 낮았다. 청년의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 연령집단,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증가 경향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청년층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노동 경력 단절이 장기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I-17.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5,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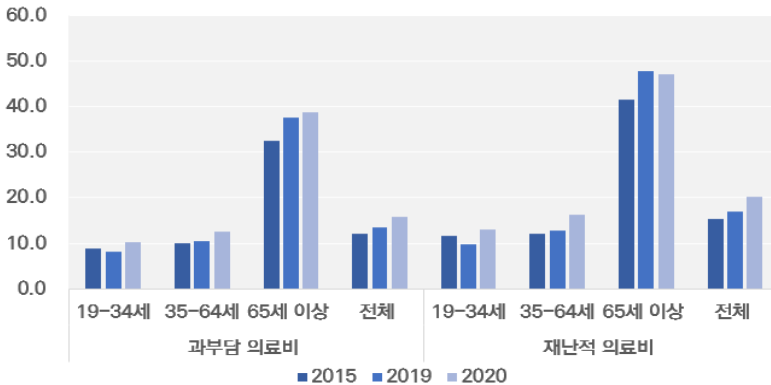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5(A)	2019	2020(B)	B-A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19-34세	8.9	8.2	10.2	+1.3
	35-64세	10.1	10.4	12.6	+2.5
	65세 이상	32.5	37.5	38.7	+6.2
	전체	12.1	13.6	15.9	+3.8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19-34세	11.8	9.8	13.1	1.3
	35-64세	12.2	12.8	16.2	4.0
	65세 이상	41.6	47.8	47.2	5.6
	전체	15.3	17.1	20.2	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소득기준 2015년), 15차(2019년), 16차(2020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
 2) 과부담의료비는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식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함(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소득기준 2015년), 15차(2019년), 16차(2020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
 2) 과부담의료비는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식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함(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그림 III-12.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0,2019,2020)

(6) 사회·문화자본 영역 빈곤 실태

가. 사회적 지지 결핍률

〈표 III-18〉과 [그림 III-13]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 지지 결핍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 19-29세 청년 중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음(경제적 지지)’ 비율은 24.8%였으며,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음(돌봄 지지)’은 4.1%,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음(정서 지지)’ 비율은 2.3%였다. 경제적 지지 결핍은 전체 집단의 결핍 비율(21.8%)보다 높고, 돌봄과 정신적 지지 결핍 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적지지 결핍률은 2014년 22.3%에서 2021년 24.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 결핍률(31.3%)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청년은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소득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지 결핍으로 인한 결과는 공적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III-18.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4-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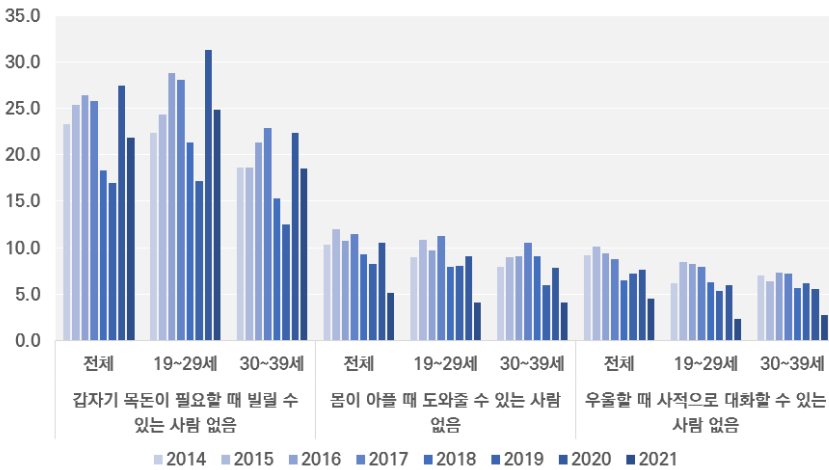
구분		2014(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B)	B-A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사람 없음	전체	23.3	25.4	26.4	25.8	18.3	17.0	27.4	21.8	-1.5
	19-29세	22.3	24.3	28.8	28.1	21.3	17.2	31.3	24.8	2.5
	30-39세	18.6	18.6	21.3	22.9	15.3	12.5	22.3	18.5	-0.1
	40-49세	20.1	21.9	23.7	21.8	13.8	16.0	19.9	18.4	-1.7
	50-59세	24.8	29.8	27.6	26.7	18.0	16.5	23.6	18.9	-5.9
	60-69세	36.1	36.5	32.7	31.1	25.0	23.7	-	-	-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10.3	12.0	10.7	11.5	9.3	8.2	10.5	5.1	-5.2
	19-29세	9.0	10.8	9.7	11.3	7.9	8.0	9.1	4.1	-4.9
	30-39세	7.9	9.0	9.1	10.5	9.1	6.0	7.8	4.1	-3.8
	40-49세	9.8	11.1	10.9	10.5	7.8	7.5	10.1	3.6	-6.2
	50-59세	10.5	13.5	11.9	10.6	10.9	8.1	9.9	5.5	-5.0
	60-69세	16.8	17.8	12.4	15.8	11.0	12.1	-	-	-

구분		2014(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B)	B-A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9.2	10.1	9.4	8.8	6.5	7.2	7.6	4.5	-4.7
	19-29세	6.2	8.4	8.2	7.9	6.3	5.3	6.0	2.3	-3.9
	30-39세	7.0	6.4	7.3	7.2	5.6	6.2	5.5	2.7	-4.3
	40-49세	8.3	8.1	9.4	8.8	5.5	7.4	7.5	4.0	-4.3
	50-59세	9.8	13.0	11.0	9.0	7.2	7.4	7.2	4.7	-5.1
	60-69세	18.4	16.8	11.3	12.0	8.2	10.1	-	-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 현황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주 :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 현황임.

그림 13-13.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4-2021)

나. 시간 빈곤율

〈표 III-19〉와 [그림 III-14]는 2014년 시간빈곤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노혜진, 2019). 재량시간 빈곤은 1차년도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20대와 30대 재량시간 빈곤율은 40대, 5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기 특성, 높은 미취업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시간 빈곤은 다양한 상태와 특성에 따라 다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³⁾.

표 III-19. 시간 빈곤율

(단위: %)

구분	자유시간	활용가능시간	재량시간
20대	0.7	2.9	2.3
30대	1.2	3.4	2.2
40대	2.1	6.3	4.9
50대	2.4	7.6	5.4
60대	1.9	9.7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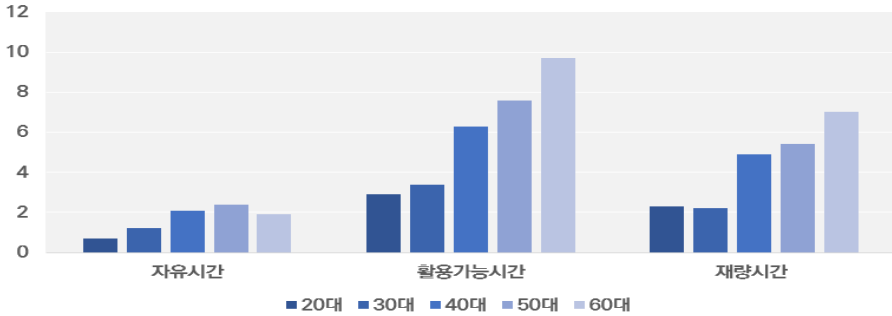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 출처: 노혜진(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p.80의 〈표 5〉 분석결과 일부 발췌.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 주 1) '자유시간 빈곤율'은 자유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에서 필수 개인 유지 시간(수면시간, 개인 관리시간), 필수 유급노동(통근시간, 주된 취업 활동, 부업시간), 필수 무급노동(자녀 돌봄, 자녀의 돌봄, 가사활동)을 차감한 시간이 중위 50% 미만인 경우임(노혜진, 2019, p.73).
- 2) '활용가능시간 빈곤율'은 총 시간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차감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1,066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노혜진, 2019, p.73).
- 3) '재량시간 빈곤율'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솟값을 차감한 값이 재량시간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노혜진, 2019, p.73).

43)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해 닛트 청년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박미희와 조미라(2014)는 닛트 청년이 시간 사용 특성에 따라 돌봄, 취업과 진학 준비, 취업과 진학 몰입형, 은둔형, 주간 활동, 야간활동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하고,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형태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박미희, 조미라, 2019, p.193;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단위: %)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 출처: 노혜진(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p.80의 <표 5> 분석결과 일부 발췌,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 주 1) '자유시간 빈곤율'은 자유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에서 필수 개인 유지 시간(수면시간, 개인관리시간), 필수 유급노동(통근시간, 주된 취업활동, 부업시간), 필수 무급노동(자녀돌봄, 자녀외돌봄, 가사활동)을 차감한 시간이 중위 50% 미만인 경우임(노혜진, 2019, p. 73).
- 2) '활용가능시간 빈곤율'은 총 시간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차감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1,066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노혜진, 2019, p. 73).
- 3) '재량시간 빈곤율'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소값을 차감한 값이 재량시간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노혜진, 2019, p. 73).

그림 3-14. 시간 빈곤율 (2014)

4)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여기서는 영역별 빈곤 지표를 전체 빈곤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위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지표별로 측정단위와 분포가 다르므로 표준화하여 지표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상대적 빈곤 위험(relative poverty risk)은 조사대상 전체의 빈곤율을 청년 빈곤율로 나누는 것으로, 청년이 전체 연령집단보다 빈곤율이 높거나 낮은지를 보여준다(OECD, 2014). 상대적 빈곤 위험이 코로나19 전후로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실험설계에서 활용하는 방법인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 방식⁴⁴⁾을 차용하여 코로나19 이전 2개 시점의 차이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2개 시점 차이를 이중차분하였

44) 이중차분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정책 시행 전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이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는 방식임. 코로나19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코로나19 이전 두 시점을 통제집단으로, 코로나19 이후 두 시점을 실험집단으로 간주해 두 시점간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다. [그림 III-15]는 코로나19 전후 상대적 빈곤위험의 추세 변화에 관한 이중차분 원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2개 시점(t_1 , t_2)과 코로나19 이후 1개 시점(t_3)에 빈곤위험이 $t_1(1.5)-t_2(1.0)-t_3(0.8)$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더라도, 이중차분 방식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이후 빈곤 위험 감소 경향이 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상대적 빈곤위험 감소 추이가 지속되었다면 t_3 시점 상대적 위험은 0.8이 아니라 0.5로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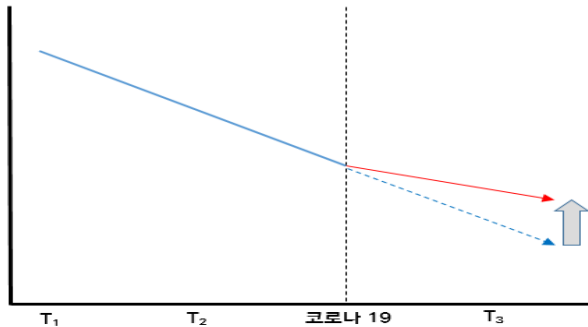


그림 III-15. 코로나19 전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 추세 변화 효과

〈표 III-20〉은 영역별 빈곤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3개 시점의 상대적 빈곤 위험과 이중차분 방식을 적용했을 때 빈곤 위험 변화 방향이다. [그림 III-16]은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 수준을 도식화한 것이다.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큰 영역은 경제, 노동, 주거, 교육, 사회·문화자본이었다. 세부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모두 큰 영역은 노동과 주거였다. 성인 초기 청년이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은 반지하 등 주거(2.30배), 실업(2.11배), 순자산 빈곤(1.66배), 최저주거기준 미달(1.63배), 니트(1.54배) 정신건강(1.44배), 사회적 지지(1.14배), 노동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1.10배) 순으로 높았다.

표 III-20. 영역 및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영역	지표	청년 연령	비교 시점 (A, B, C)	상대적 빈곤 위험			DID (C-B)- (B-A)
				A	B	C	
경제	가구소득 빈곤	19~34세	2016, 2019, 2020	0.59	0.55	0.54	+
	근로소득 빈곤	25~29세	2015, 2019, 2021	0.76	0.84	0.75	-
	순자산 빈곤	19~34세 가구주	2017, 2019, 2021	1.52	1.58	1.66	+
노동	실업	15~29세	2015, 2019, 2021	2.53	2.34	2.11	-
	비정규직 비율	15~29세	2015, 2019, 2021	1.08	1.11	1.10	-
주거	주거비 부담	20~34세 가구주	2017, 2019, 2020	1.11	1.10	1.01	-
	최저주거기준 미달			1.78	1.70	1.63	+
	반지하 등 거주			1.90	2.79	2.30	-
건강	장애	25~29세	2016, 2019, 2021	0.27	0.28	0.28	-
	정신건강	20~34세		0.81	1.12	1.44	+
	의료비 부담	19~34세	2015, 2019, 2020	0.77	0.57	0.65	+
교육	교육기회 결핍	13~29세	2014, 2018, 2020	0.54	0.38	0.35	+
	니트(NEET)	15~29세	2017, 2019, 2020	1.37	1.52	1.54	-
사회·문화자본	사회적 지지 (경제) 결핍	19~29	2015, 2019, 2020	0.96	1.01	1.14	+
	재량시간 빈곤	20대	201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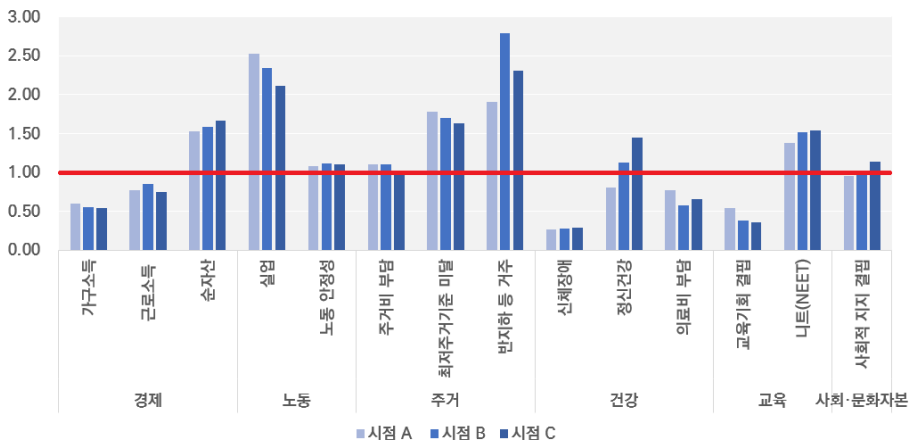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 p.80의 <표 III-6>부터 p.100의 <표 III-19>를 이용하여 분석함.

주 1) 상대적 빈곤 위험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 해당 지표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임. 상대적 빈곤 위험 값이 1보다 크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함.

2) 니트의 경우, OECD 평균으로 나눈 값을 제시함.

3개 시점 비교를 통해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상대적 빈곤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역은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영역이었다. 지표 중에는 순자산 빈곤율, 정신건강, 니트, 사회적지지(경제) 결핍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분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빈곤 위험 추세 변화를 확인한 결과, 가구소득 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교육기회 결핍은 상대적 빈곤 위험 수준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빈곤 위험 감소 추세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사회적 지지 결핍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후까지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본 연구 p.103의 <표 Ⅲ-20>을 이용해 도식화함

주 : 상대적 빈곤 위험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 해당 지표 값을 10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임. 상대적 빈곤 위험 값이 1보다 크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함.

그림 Ⅲ-16.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5) 시사점

1차연도에 이어 통계청 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다.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 시계열 변화 추이,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통해 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과 양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은 이행기 주요 과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는 청년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경제: 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 실업, 비정규직, 정신건강)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빈곤, 비정규직 비율, 정신건강 결핍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은 전통적인 빈곤 기준인 소득 외에도 자산,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다차원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가구소득 빈곤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의 빈곤지표는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일부 지표는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단의 빈곤이 감소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가구주의 높은 자산빈곤율과 열악한 주거는 최근 청년층의 집단내 불평등 수준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성인 초기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청년의 자산과 주거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년기 자산 격차와 주거 문제는 이후 중장년, 노년기의 불평등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자산과 주거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특히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위험이 매우 증가하였다. 청년의 경우 건강한 집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코로나19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의료비 과부담 비율에서도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근로연령 집단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사례로 언급되는 수원 세 모녀, 송파 세 모녀 사건 모두 젊은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실직과 질병으로 인해 빈곤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결핍과 이로 인한 빈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영역의

근로소득 빈곤과 노동영역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의 상대적 빈곤 위험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임금 근로가 아닌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 19가 청년층의 노동 등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청년 주거 빈곤 심층 분석⁴⁵⁾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본 분석은 청년의 주거빈곤 실태를 분석하고, 주거빈곤이 청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 수준에 따라 주거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빈곤, 사회적 관계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분석 배경

최근 몇 년간 청년 주거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청년들이 일명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어졌고, 실제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임대주택 5.4만호를 공급하는 정책,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 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보다 실효성있는 청년 주거빈곤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주거빈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청년 주거빈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빈곤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살생각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에 부정적인

45) 이 절은 배정희 조교수(성균관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정민, 허용창 외, 2015). 그러나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노인(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신수민, 정규형, 2017; 이지은, 2022) 또는 아동(임세희, 이창숙, 2020; 임세희, 김희주, 2019)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주거환경과 거주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역시 노인(김택수, 2019; 임광빈, 강동훈, 2018) 또는 저소득층(한수정, 전희정, 2018)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청년들의 주거빈곤과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최근 3년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인터뷰를 통한 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청년들의 주거빈곤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박애리 외, 2017; 박지현, 2020), 도시 주거빈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옥탑방에 대한 연구(김성태, 권영상, 2020), 청년 가구주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김비오, 2019),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연구(박미선, 2017),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영주, 곽인경, 2020)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탐색적 수준에서 청년 주거빈곤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청년 주거빈곤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분석문제

이에 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 주거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청년 주거빈곤은 청년의 정신건강(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청년 주거빈곤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2) 분석 방법

(1) 분석모형

본 분석은 청년의 주거 빈곤, 즉 현재 거주지의 특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청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취업여부, 소득,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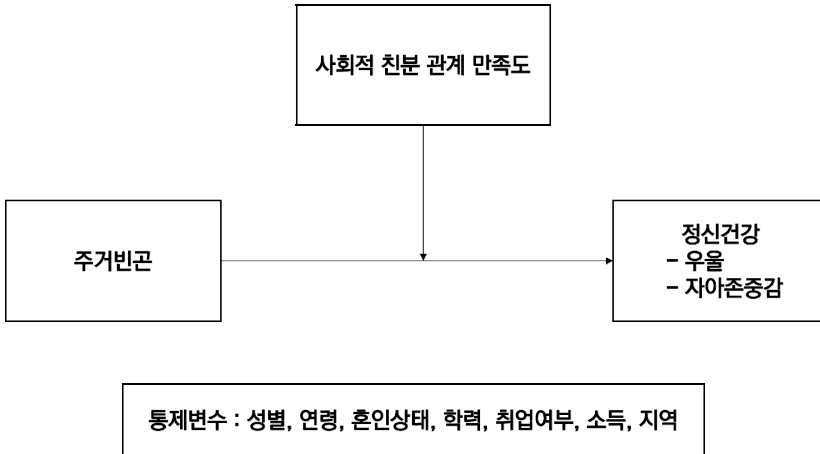


그림 III-17. 청년주거빈곤 심층분석 분석모형

(2)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분석은 2021년에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제1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민의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2006년에 처음 시작된 패널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용 조사, 가구원용 조사, 부가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과 주거환경과 주거비 등 주거관련 세부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주거 빈곤 연구에서 활용되었다(예: 박정민, 오육찬, 이진민, 2015; 김비오, 2019; 임세희, 김선숙, 2016).

본 분석의 분석 대상은 2021년 제16차 한국복지패널에 응답한 가구원 중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출생한 이들로, 조사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1,9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 주거빈곤 연구에서 가구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나, 본 분석에서는 청년 주거빈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인 청년과 가구원인 청년 모두를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 중 가구주인 청년의 수는 299명(15.7%), 가구원인 청년의 수는 1,602명(84.3%)이다. 모든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 변수 측정

본 분석의 독립변수는 주거빈곤이다. 본 분석에서는 청년의 주거 빈곤을 주거환경 빈곤으로 측정하였다. 주거환경 빈곤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거환경 빈곤상태로 정의하였다. 주거환경 빈곤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제 17조)을 활용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최저주거기준을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된 것으로, 다음 표와 같다. 본 분석에서는 면적기준, 방기준, 설비기준, 환경기준 중 1가지라도 미달하는 경우, 주거빈곤상태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주거면적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할 경우 주거빈곤으로 보았다. 분석대상 청년의 최대 가구원 수는 7인이었는데, 7인의 경우 총 주거면적이 64㎡ 미만인 경우 주거빈곤인 것으로 보았다. 방 구성 역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 별 필요한 최소 방 수에 미달할 경우 주거빈곤으로 보았다. 7인 가구의 경우 방 4개 미만인 경우 주거빈곤인 것으로 보았다. 설비기준은 주거시설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① 상하수도를 단독사용, ② 부엌을 단독사용(입식), ③ 화장실을 단독사용(수세식), ④ 목욕시설을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한다고 응답한 경우 최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거빈곤상태로 보았다. 환경기준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문항에서 ① 영구건물로 튼튼하고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적절성, ④ 해일·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⑤ 안전한 전기시설 및 피난 구조·설비 중 두 가지 이상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최저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았다. 각 기준별 충족여부를 파악한 후, 각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인 경우 주거빈곤으로 보았다.

표 III-2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제2011-490호)

기준	변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제2조)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필수적 설비 (제3조)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제4조)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1).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 제2011-490호.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8285에서 2022년 11월 28일 인출.

종속변수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이다. 먼저, 우울은 CESD-11 척도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을 ‘식욕이 없음’, ‘비교적 잘 지냈다’ 등 11개의 문항에 대해 1점(극히 드물다)에서 4점(대부분 그랬다)까지 리커트 척도로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CESD-11 척도에 따른 우울 수준은 1-4점까지의 응답을 0-3점으로 변환(역코딩 문항인 2, 7번은 반대로 계산)하여 합산한 뒤 20/11을 곱한 값으로, 0에서 60점 사이의 값을 갖는다. 값이 높을수록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등 10개의 문항에 대해 1점(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문항별 응답값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역문항인 3, 5, 8, 9, 10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10점에서 4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조절변수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원 조사 중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과 관련하여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를 5점척도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로 측정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응답값을 그대로 활용하여 1점에서 5점 사이의 값을 갖는 연속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취업여부, 소득, 지역을 포함하였다. 변수별 구체적인 측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 변수 측정

변수유형	변수	측정
독립변수	주거빈곤	최소주거기준 중 ① 면적기준, ② 방기준, ③ 설비기준, ④ 환경기준 중 1가지 기준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주거 빈곤(=1), 그렇지 않은 경우 비빈곤(=0)
종속변수	우울	CESD-11 척도의 11가지 문항을 0-3점으로 변환하여 합산 후 20/11을 곱하여 계산 (*역문항은 역채점)
	자아존중감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의 10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값 1-4점을 합산하여 계산 (*역문항은 역채점)
조절변수	사회적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통제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19-34 사이의 값을 갖는 연속변수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이혼·별거 범주형변수
	학력	최종학력 및 학위상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세 가지 범주로 조작화 ① 고졸이하, ② 대졸이상, ③ 대학·대학원 재학
	취업여부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실업자 또는 비경제 활동인구인 경우 미취업(=0), 임금근로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취업(=1)
	소득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의 자연로그값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이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1),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0)

(4) 데이터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7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문제인 청년 주거빈곤 실태파악은 주거빈곤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두 번째 분석문제인 주거빈곤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분석문제인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1) 주거빈곤 실태 및 청년 특성

청년 주거빈곤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거환경에 있는 청년의 비율은 83%,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 즉 주거환경 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율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을 주거기준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열·내화·방열·방습,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소음·진동·악취, 자연재해 안전성, 피난 구조·설비 안전성 등 환경의 안정성이 미충족된 거주지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비율이 전체 청년 중 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 대비 최소한의 방의 개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6.6%, 가구원 수 대비 최소 주거면적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2%, 상하수도, 단독사용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적절한 설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1%로 나타났다. 주거기준 미충족 항목의 수를 살펴보면, 청년 중 14.6%는 네 가지 최저기준 중 1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2.2%, 3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0.2%로 나타났다.

표 III-23. 주거빈곤 실태

항목		비율 (%)
주거 빈곤 (최저 주거기준 미충족)		17
주거기준 미충족 유형	면적기준	2
	방기준	6.6
	설비기준	1
	환경기준	10
주거기준 미충족 항목 수	1개	14.6
	2개	2.2
	3개	0.2

주: 분석에는 횡단면 모수추정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다음으로, 이와 같은 주거빈곤 여부에 따라 분석대상 청년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 청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전체 청년 중 53.3%는 남성, 46.7%는 여성이었다. 주거환경 빈곤집단과 주거환경 비빈곤집단에서도 성별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빈곤집단에서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아졌다(54.4%).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평균 연령은 26.5세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빈곤집단의 청년의 연령(26.2세)이 비빈곤집단의 연령(26.6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 중 87.4%가 미혼, 12.4%가 기혼이었으나, 주거환경 빈곤집단에서는 89.4%가 미혼, 10.6%가 기혼으로 나타나 미혼인 청년이 주거환경 빈곤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 중 고졸이하가 28.1%, 대졸이상인 45.6%,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가 26.3%였다. 주거환경 빈곤 집단의 경우 고졸이하 청년의 비율이 34.6% 높게 나타나, 고졸이하 청년이 대학교를 재학중이거나 대졸이상인 청년들보다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거환경 빈곤집단에서 수도권 청년의 비율이 56.9%로, 비수도권 청년의 비율 43.1%보다 높게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우울수준은 4.9점이었다. 그러나 주거환경 빈곤집단의 우울은 평균 6.4점, 비빈곤집단의 우울은 4.6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역시 주거환경 빈곤 집단은 30.8점, 비빈곤집단은 32.1점으로 집단 간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전체 청년, 주거환경 빈곤·비빈곤 집단에서 모두 약 3.8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III-24. 전체 및 주거빈곤 청년의 특성

구분		전체 (n=2,771)			주거환경 빈곤					
					비빈곤 (n=2,300)			빈곤 (n=471)		
		비율	평균	표준편차	비율	평균	표준편차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53.3			53			54.4		
	여	46.7			47			45.6		
연령	만19-24	36.9	26.5	4.5	36.3	26.6	4.5	39.9	26.2	4.8
	만25-29	32.9			33.7			28.9		
	만30-34	30.2			30			31.2		
혼인 상태	미혼	87.4			87			89.4		
	기혼	12.4			12.7			10.6		
	사별/이혼/별거	0.2			0.3			0		
학력	고졸이하	28.1			26.8			34.6		
	대졸이상	45.6			46.2			42.8		
	대학/대학원 재학	26.3			27			22.6		
취업	취업	53.9			53.9			53.7		
	미취업	46.1			46.1			46.3		
소득(로그)			8.2	0.5		8.2	0.5		8.1	0.5
지역	수도권	53.6			53			56.9		
	비수도권	46.4			47			43.1		
우울			4.9	7.4		4.6	7		6.4	8.6
자아존중감			31.9	4.2		32.1	4.1		30.8	4.8
사회적관계 만족도			3.8	0.7		3.8	0.7		3.8	0.7

주: 분석에는 횡단면 표본분석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가중치가 적용된 전체 N은 2,771명으로 계산됨

(2) 청년 주거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분석문제인 주거빈곤 여부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분석 결과, 청년의 주거환경 빈곤 여부는 청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른 개인 특성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청년의 주거빈곤 여부는 청년의 우울을 증가시키고($B = 1.577, p < .001$),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B = -1.085,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학력이 낮을수록, 미취업 상태인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도권에 사는 경우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청년 주거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우울	자아 존중감
주거환경 빈곤(ref. 비빈곤)	1.577***	-1.085***
성별 (ref. 남)	2.422***	-0.722***
연령	0.189***	-0.049*
기혼(ref. 미혼, 기타)	-1.429**	1.237***
고졸이하(ref. 대학재학 이상)	1.130**	-1.394***
취업 (ref. 미취업)	-1.291***	0.772***
소득(로그)	-0.670*	0.574**
수도권 (ref. 비수도권)	1.114***	-0.803***
(상수)	3.985	29.131***
F	16.215***	19.594***
R2	0.052	0.064
수정된 R2	0.049	0.061

주 :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분석에는 횡단면 표본분석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세 번째 분석문제는 청년 주거빈곤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두 관계를 조절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주거환경이 빈곤한 청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이 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따라 주거환경 빈곤여부가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조절효과가 있다면, 똑같은 주거빈곤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년은 우울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자아존중감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년은 높은 청년보다 우울이 더욱 크게 증가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더욱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환경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우울에 대한 설명변수로 주거환경 빈곤만 투입한 모형1의 경우, 설명력이 4.9% 이었으나($F=16.215, p < .001$), 주거빈곤과 사회적관계 변수를 투입한 모형2는 설명력이 13.2%로 증가하였다($F=41.214, p < .001$). 또한 모형2의 R^2 값의 F 변화량은 228.734 ($p < .001$)으로, 모형1과 모형2의 R^2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 사회적관계, 주거빈곤*사회적관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은 설명력이 13.5%로 증가하였다($F = 38.281, p < .001$). 또한, 모형3의 R^2 값의 F 변화량은 10.416($p < .01$)으로, 모형2와 모형3의 R^2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빈곤여부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1을 살펴보면, 청년의 주거환경 빈곤여부는 청년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577, p < .001$). 다음으로, 주거환경 빈곤 여부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2에서도 주거환경 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B = 1.528, p < .001$),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252, p < .001$).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거환경 빈곤여부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빈곤이 우울에 긍정적 (+) 영향($B = 7.895, p < .001$)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우울에 부적 영향 ($B = -2.913, p < .001$)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빈곤과 사회적 신뢰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B=-1.685, p < .01$),

주거환경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26. 청년 주거환경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주거환경 빈곤 (ref. 비빈곤)	1.577***	1.528***	7.895***
사회적관계 만족도		-3.252***	-2.913***
주거빈곤*사회적관계 만족도			-1.685**
성별 (ref. 남)	2.422***	2.356***	2.270***
연령	0.189**	0.102*	0.092*
기혼 (ref. 미혼, 기타)	-1.429**	-1.006*	-0.968*
고졸이하 (ref. 대학재학 이상)	1.130**	0.565	0.557
취업 (ref. 미취업)	-1.291***	-0.658*	-0.643*
소득(로그)	-0.670*	-0.366	-0.326
수도권 (ref. 비수도권)	1.114***	1.037***	1.098***
(상수)	3.985	15.949***	14.606***
F	16.215***	41.214***	38.281***
R2	0.052	0.135	0.139
수정된 R2	0.049	0.132	0.135
R2 변화량		0.083	0.004
F 변화량		228.784***	10.416**

주 :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사회적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사회적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평균 이상, 고)과 낮은 집단(평균 미만, 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주거빈곤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은(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는 사회적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빈곤 상태가 되더라도 우울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사회적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빈곤 상태가 될 경우 우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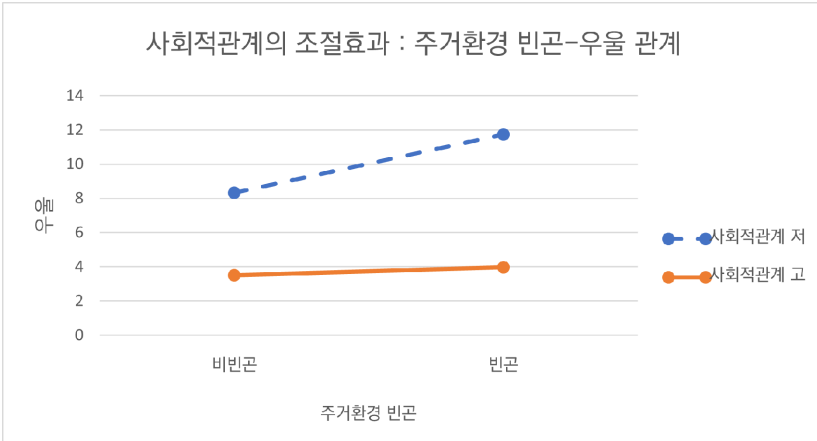


그림 III-18. 사회적관계의 조절효과 : 주거환경 빈곤-우울 관계

다음으로, 주거빈곤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변수로 주거빈곤만 투입한 모형1의 경우, 설명력이 6.1% 이었으나($F=20.359, p<.001$), 주거빈곤과 사회적관계 변수를 투입한 모형2는 설명력이 16.1%로 증가하였다($F=52.044, p<.001$). 또한 모형2의 R^2 값의 F 변화량은 286.016($p<.001$)으로, 모형1과 모형2의 R^2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 사회적관계, 주거빈곤*사회적관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은 설명력이 16.7%로 증가하였다($F=48.935, p<.001$). 또한 모형3의 R^2 값의 F 변화량은 17.668($p<.001$)로, 모형2과 모형3의 R^2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빈곤여부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1을 살펴보면, 청년의 주거환경 빈곤여부는 청년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085, p <.001$). 다음으로, 주거환경 빈곤여부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2에서도 주거환경 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B = -1.054, p < .001$),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48, p <.001$).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거빈곤여부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3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빈곤이 자아존중

감에 부적(-) 영향 ($B = -5.718, p < .001$)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 ($B = 1.8, p < .001$)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B=1.234, p < .001$), 주거빈곤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27. 청년 주거환경 빈곤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주거빈곤 (ref. 비빈곤)	-1.085***	-1.054***	-5.718***
사회적관계 만족도		2.048***	1.800***
주거빈곤*사회적관계 만족도			1.234***
성별 (ref. 남)	-0.722***	-0.680***	-0.618***
연령	-0.049 [†]	0.006	0.013
기혼 (ref. 미혼, 기타)	1.237***	0.971***	0.943***
고졸이하 (ref. 대학재학 이상)	-1.394***	-1.037***	-1.031***
취업 (ref. 미취업)	0.772***	0.373 [†]	0.362 [†]
소득(로그)	0.574**	0.382 [†]	0.353 [†]
수도권 (ref. 비수도권)	-0.803***	-0.755***	-0.799***
(상수)	29.131***	21.595***	22.578***
F	20.359***	52.044***	48.935***
R2	0.064	0.165	0.171
수정된 R2	0.061	0.161	0.167
R2 변화량		0.1	0.006
F 변화량		286.016***	17.668***

주 :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마지막으로, 사회적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사회적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평균 이상, 고)과 낮은 집단(평균 미만, 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주거빈곤 여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사회적 관계가 낮은(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빈곤 상태가 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회적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빈곤 상태가 될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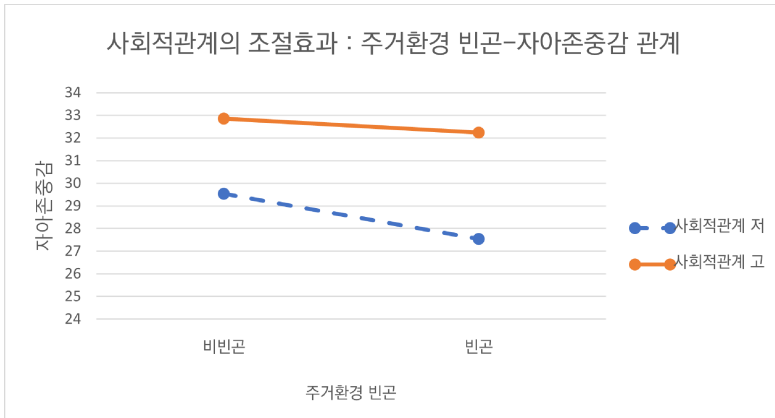


그림 III-19. 사회적관계의 조절효과 : 주거환경 빈곤-자아존중감 관계

4) 결론 및 논의

본 분석은 주거환경 빈곤 변수를 활용하여 청년의 주거빈곤이 청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변수 간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1년 제16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19세-34세 연령대의 청년 1,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v.27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청년의 비율은 전체 청년 중 17%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이나 방음, 환기, 채광 등이 열악하거나 자연재해와 피난으로부터의 구조가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비율이 전체 청년 중 10%를 차지하였다.

둘째, 전체 분석대상 청년과 주거빈곤집단 및 비빈곤집단을 나누어 개인특성을 살펴본 결과, 미혼인 청년의 경우 주거환경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고졸이하 청년들과

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거환경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수준은 주거환경 빈곤집단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주거환경 빈곤집단에서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 주거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 거주지역을 통제했을 때 주거환경 빈곤여부가 우울에는 정적(+인) 영향을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지은, 2022; 임세희, 이창숙, 2020)과 유사하게 청년집단에서도 주거빈곤 여부가 우울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청년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거환경 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년 집단에서는 주거환경 빈곤 상태가 되더라도 우울이 매우 소폭 상승할 뿐이었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년집단에서는 주거환경 빈곤 상태가 될 경우 우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역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년 집단에서는 주거환경 빈곤 상태가 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매우 미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년집단에서는 주거환경 빈곤 상태가 될 경우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청년 주거빈곤의 현 상황을 전국표본 가구·가구원 데이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주거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청년 주거정책 설계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며, 청년 주거빈곤에 대한 학술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둘째,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분석은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빈곤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분석은 주거환경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는 주거환경 빈곤이 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관계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대한 개입으로 그 영향력을 완화 또는 지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청년 주거정책 사업은 주거비 지원사업과 주택 지원사업이라는 큰 두 축을 중심으

로 발전해 왔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비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시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단순히 청년이 잠자고 생활하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을 넘어서서, 청년들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지역사회 공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빈곤한 주거지역일수록 이러한 주거환경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도록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은 2021년 한국복지패널의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 간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 데이터 변수의 제한으로 인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빈곤에 대한 종단연구, 인구사회학적 다양한 변수들의 포함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분석은 청년의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청년 주거정책 형성을 위한 실증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4장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 1. 조사 개요
- 2. 청년의 교육훈련
- 3. 청년의 주거
- 4. 요약 및 시사점

4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⁴⁶⁾

1. 조사 개요

1) 모집단

본 조사는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34세의 청년이다.

2) 조사 설계

본 조사의 표본수, 조사방법, 표본추출, 조사기간, 주요 조사내용 등 기본적인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 표본수 : 총 4,032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등할당
- 조사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04일
- 주요 조사내용 :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경험 및 실태,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일반적 인식 및 전망,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정책 욕구, 청년의 주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전망, 청년의 주거에 관한 정책 욕구

46)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032)	100.0%
성별	남성	(2,000)	49.6%
	여성	(2,032)	50.4%
연령	만19-24세	(1,348)	33.4%
	만25-29세	(1,343)	33.3%
	만30-34세	(1,341)	3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2.0%
	대학교(재/졸)	(3,356)	83.2%
	대학원(재/졸)	(194)	4.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2.4%
	청년 독립가구	(1,141)	28.3%
	청년 동거가구	(1,976)	49.0%
	기타	(10)	0.2%
권역별	수도권	(2,200)	54.6%
	충청권	(418)	10.4%
	전라권	(351)	8.7%
	경상권	(911)	22.6%
	강원/제주	(152)	3.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2.1%
	비빈곤층	(1,931)	47.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2.8%
	중위소득 미만	(1,904)	47.2%

2. 청년의 교육훈련

1)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실태 및 경험

(1) 대학 진학을 안 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고등학교 졸업 이하(N=482)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안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진학 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가고 싶었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돼서'(19.5%), '가고 싶었으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파서'(1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안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59.5%, 25~29세: 58.3%, 30~34세: 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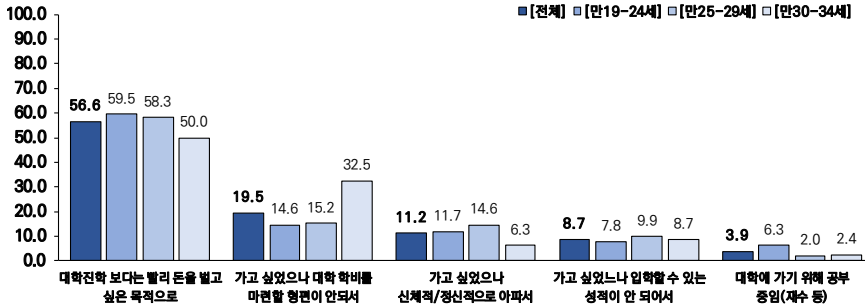


그림 IV-1. 대학 진학을 안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표 IV-2. 대학 진학을 안 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학진학 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가고 싶었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돼서	가고 싶었으나 신체적/정신적 으로 아파서	가고 싶었으나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 안 되어서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 중임 (재수 등)	χ^2
전체	(482)	56.6	19.5	11.2	8.7	3.9	-
만19~24세	(205)	59.5	14.6	11.7	7.8	6.3	26.149***
만25~29세	(151)	58.3	15.2	14.6	9.9	2.0	
만30~34세	(126)	50.0	32.5	6.3	8.7	2.4	

* $p < .05$, ** $p < .01$, *** $p < .001$

대학 진학을 안 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63.4%), 권역별로는 충청권(63.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4.7%),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66.4%) 집단에서 대학진학 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표 IV-3. 대학 진학을 안한 경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학진학 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 으로	가고 싶었 으나 대학 학비를 마 련할 형편 이 안돼서	가고 싶었 으나 신체 적/정신적 으로 아파서	가고 싶었 으나 입학 할 수 있는 성적이 안 되어서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 중임 (재수 등)	χ^2
전체		(482)	56.6	19.5	11.2	8.7	3.9	-
성별	남성	(278)	57.2	18.0	10.8	11.2	2.9	7.275
	여성	(204)	55.9	21.6	11.8	5.4	5.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6.6	19.5	11.2	8.7	3.9	-
	대학교(재/졸)	(0)	0.0	0.0	0.0	0.0	0.0	
	대학원(재/졸)	(0)	0.0	0.0	0.0	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105)	60.0	25.7	3.8	8.6	1.9	22.070*
	청년 독립가구	(145)	63.4	18.6	9.7	4.8	3.4	
	청년 동가구	(227)	51.1	17.2	15.4	11.0	5.3	
	기타	(5)	40.0	20.0	20.0	20.0	0.0	
권역별	수도권	(244)	53.7	21.3	8.6	12.7	3.7	27.354*
	충청권	(73)	63.0	19.2	6.8	5.5	5.5	
	전라권	(44)	61.4	15.9	9.1	11.4	2.3	
	경상권	(100)	56.0	17.0	21.0	2.0	4.0	
	강원/제주	(21)	61.9	19.0	14.3	0.0	4.8	
주관적 계층	빈곤층	(332)	53.0	25.0	9.6	9.3	3.0	24.161***
	비빈곤층	(150)	64.7	7.3	14.7	7.3	6.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4)	66.4	20.1	4.7	7.5	1.4	28.110***
	중위소득 미만	(268)	48.9	19.0	16.4	9.7	6.0	

* $p < .05$, ** $p < .01$, *** $p < .001$

(2) 대학에 진학한 이유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순위 기준, ‘취업하려면 대학 졸업이 유리해서’(59.1%), ‘그냥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51.5%), ‘고졸과 대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차이 때문에’(3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을 하려면 대학 졸업이 유리해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19~24세: 63.9%, 25~29세: 59.6%, 30~34세: 54.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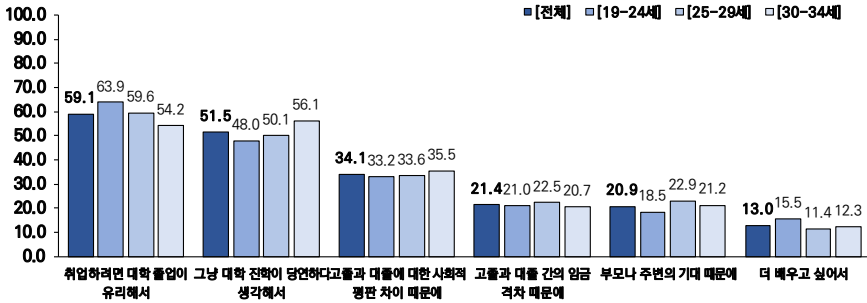


그림 IV-2. 대학에 진학한 이유

표 IV-4. 대학에 진학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취업하려면 대학 졸업이 유리해서	그냥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고졸과 대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차이 때문에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 격차 때문에	부모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서
전체	(3,550)	59.1	51.5	34.1	21.4	20.9	13.0
만19~24세	(1,143)	63.9	48.0	33.2	21.0	18.5	15.5
만25~29세	(1,192)	59.6	50.1	33.6	22.5	22.9	11.4
만30~34세	(1,215)	54.2	56.1	35.5	20.7	21.2	12.3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1.8%),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59.5%),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62.0%),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1.8%),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비빈곤층(59.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59.5%) 집단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 졸업이 유리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표 IV-5. 대학에 진학한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취업하려면 대학 졸업이 유리해서	그냥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고졸과 대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차이 때문에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 격차 때문에	부모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서
전체	(3,550)	59.1	51.5	34.1	21.4	20.9	13.0
성별	남성 (1,722)	61.8	42.7	32.9	25.8	23.3	13.4
	여성 (1,828)	56.6	59.8	35.2	17.2	18.6	12.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0	0.0
	대학교(재/졸) (3,356)	59.5	51.2	34.5	21.4	21.0	12.5
	대학원(재/졸) (194)	53.1	56.7	27.3	21.1	19.6	22.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800)	62.0	43.3	34.9	29.5	20.3	10.1
	청년 독립가구 (996)	57.0	49.9	31.8	23.1	24.1	14.1
	청년 동가구 (1,749)	59.1	56.1	35.0	16.8	19.3	13.7
	기타 (5)	40.0	60.0	20.0	0.0	60.0	20.0
권역별	수도권 (1,956)	59.7	51.2	33.9	22.6	20.0	12.6
	충청권 (345)	52.5	52.2	32.2	22.9	22.9	17.4
	전라권 (307)	58.3	49.2	35.8	20.2	22.1	14.3
	경상권 (811)	60.4	52.2	34.6	19.4	21.6	11.8
	강원/제주 (131)	61.8	55.0	34.4	14.5	22.1	12.2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58.8	48.3	33.7	25.2	21.8	12.2
	비빈곤층 (1,781)	59.5	54.7	34.5	17.6	20.0	13.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59.5	51.9	34.0	22.8	21.2	10.7
	중위소득 미만 (1,636)	58.7	51.0	34.2	19.7	20.6	15.8

* $p < .05$, ** $p < .01$, *** $p < .001$

(3) 진학한 대학의 종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356)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학한 대학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 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2년제 대학'(15.3%), '3년제 대학'(5.8%) 순으로 나타났다.

진학한 대학의 종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19~24세: 76.9%, 25~29세: 79.4%, 30~34세: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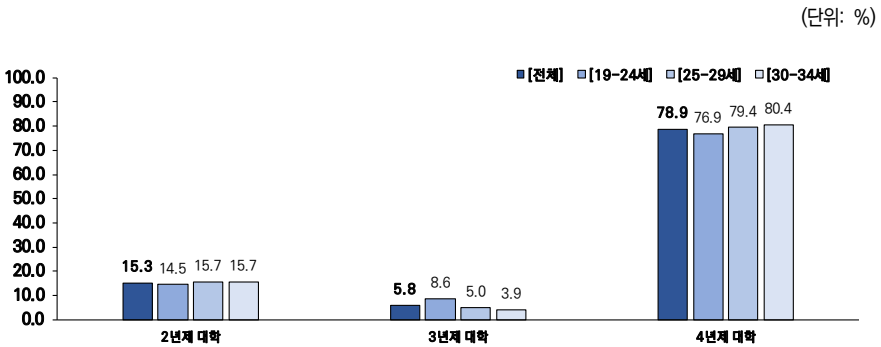


그림 IV-3. 진학한 대학의 종류

표 IV-6. 진학한 대학의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χ^2
전체	(3,356)	15.3	5.8	78.9	-
만19~24세	(1,130)	14.5	8.6	76.9	24.552***
만25~29세	(1,130)	15.7	5.0	79.4	
만30~34세	(1,096)	15.7	3.9	80.4	

* $p < .05$, ** $p < .01$, *** $p < .001$

진학한 대학의 종류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80.4%),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81.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81.7%),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80.1%) 집단에서 4년제 대학 진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진학한 대학의 종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χ^2	
전체	(3,356)	15.3	5.8	78.9	-	
성별	남성	(1,624)	14.8	4.8	80.4	7.281*
	여성	(1,732)	15.8	6.8	77.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
	대학교(재/졸)	(3,356)	15.3	5.8	78.9	
	대학원(재/졸)	(0)	0.0	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32)	18.9	6.3	74.9	22.654***
	청년 독립가구	(917)	13.0	5.6	81.5	
	청년 동거가구	(1,702)	14.9	5.8	79.4	
	기타	(5)	60.0	20.0	20.0	
권역별	수도권	(1,834)	15.3	5.1	79.6	10.591
	충청권	(326)	14.1	5.2	80.7	
	전라권	(294)	16.3	9.2	74.5	
	경상권	(776)	15.5	6.3	78.2	
	강원/제주	(126)	14.3	7.9	77.8	
주관적 계층	빈곤층	(1,682)	17.5	6.4	76.1	15.846***
	비빈곤층	(1,674)	13.1	5.3	81.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760)	15.1	4.8	80.1	7.202*
	중위소득 미만	(1,596)	15.5	7.0	77.6	

* $p < .05$, ** $p < .01$, *** $p < .001$

(4) 진학한 대학의 학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학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과’ 응답이 57.2%로 나타났고, ‘이과’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진학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문과에 진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24세: 54.9%, 25~29세: 55.0%, 30~34세: 6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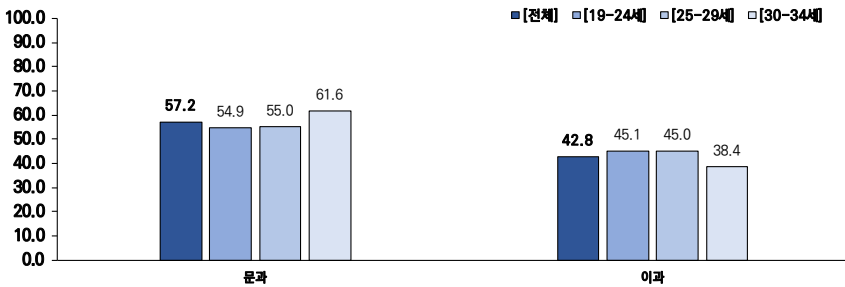


그림 IV-4. 진학한 대학의 학과

표 IV-8. 진학한 대학의 학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과	이과	χ^2
전체	(3,550)	57.2	42.8	-
만19~24세	(1,143)	54.9	45.1	14.303***
만25~29세	(1,192)	55.0	45.0	
만30~34세	(1,215)	61.6	38.4	

* $p < .05$, ** $p < .01$, *** $p < .001$

진학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권역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65.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57.7%),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1.1%) 집단에서 문과에 진학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 진학한 대학의 학과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과	이과	χ^2
전체		(3,550)	57.2	42.8	-
성별	남성	(1,722)	48.8	51.2	95.765***
	여성	(1,828)	65.1	34.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5.695*
	대학교(재/졸)	(3,356)	57.7	42.3	
	대학원(재/졸)	(194)	49.0	51.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800)	56.8	43.3	5.408
	청년 독립가구	(996)	54.7	45.3	
	청년 동거가구	(1,749)	58.8	41.2	
	기타	(5)	80.0	20.0	
권역별	수도권	(1,956)	59.2	40.8	12.570*
	충청권	(345)	55.4	44.6	
	전라권	(307)	49.5	50.5	
	경상권	(811)	55.6	44.4	
	강원/제주	(131)	61.1	38.9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58.3	41.7	1.650
	비빈곤층	(1,781)	56.1	43.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56.5	43.5	0.786
	중위소득 미만	(1,636)	58.0	42.0	

* $p < .05$, ** $p < .01$, *** $p < .001$

(5)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가 장학금’(24.9%), ‘학자금 대출’(11.1%), ‘스스로 벌어서 마련(아르바이트 등)’(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19~24세: 52.7%, 25~29세: 47.1%, 30~34세: 5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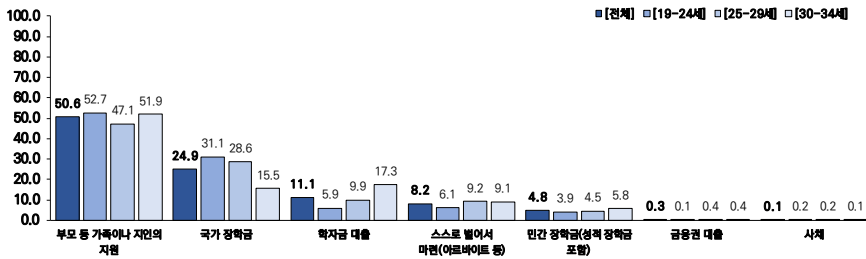


그림 IV-5.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표 IV-10.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스스로 벌어서 마련(아르바이트 등)	민간 장학금(성적 장학금 포함)	금융권 대출	사채	χ^2
전체	(3,550)	50.6	24.9	11.1	8.2	4.8	0.3	0.1	-
만19~24세	(1,143)	52.7	31.1	5.9	6.1	3.9	0.1	0.2	159.570***
만25~29세	(1,192)	47.1	28.6	9.9	9.2	4.5	0.4	0.2	
만30~34세	(1,215)	51.9	15.5	17.3	9.1	5.8	0.4	0.1	

* $p < .05$, ** $p < .01$, *** $p < .001$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50.6%),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55.1%), 권역별로는 수도권(52.1%),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8.9%),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4.6%) 집단에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배경변인별)

구분		사례수 [명]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스스로 벌어서 마련(아 르바이트 등)	민간 장 학금(성적 장학금 포함)	금융권 대출	사채	χ^2
전체		(3,550)	50.6	24.9	11.1	8.2	4.8	0.3	0.1	-
성별	남성	(1,722)	50.6	24.2	10.5	10.2	3.9	0.4	0.1	25.064***
	여성	(1,828)	50.5	25.6	11.8	6.2	5.5	0.2	0.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0	0.0	0.0	11.257
	대학교(재/졸)	(3,356)	50.7	25.3	10.9	8.0	4.6	0.3	0.1	
	대학원(재/졸)	(194)	47.9	18.6	14.9	10.8	7.2	0.5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800)	51.3	20.3	13.8	10.9	3.4	0.4	0.1	92.930***
	청년 독립가구	(996)	42.2	26.9	13.0	11.1	6.3	0.3	0.2	
	청년 동거가구	(1,749)	55.1	25.9	8.9	5.3	4.5	0.3	0.1	
	기타	(5)	40.0	40.0	20.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1,956)	52.1	21.6	12.8	8.4	4.6	0.3	0.2	49.851**
	충청권	(345)	50.1	26.4	9.0	8.4	5.8	0.0	0.3	
	전라권	(307)	50.2	30.0	7.8	8.1	3.6	0.3	0.0	
	경상권	(811)	48.6	29.1	9.6	7.4	4.9	0.4	0.0	
	강원/제주	(131)	41.2	32.8	9.2	9.2	6.1	1.5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42.2	30.0	13.3	9.6	4.4	0.4	0.2	110.711***
	비빈곤층	(1,781)	58.9	19.9	9.0	6.8	5.1	0.2	0.1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47.1	22.6	13.9	10.8	5.0	0.5	0.2	87.011***
	중위소득 미만	(1,636)	54.6	27.7	7.9	5.1	4.5	0.1	0.1	

* $p < .05$, ** $p < .01$, *** $p < .001$

(6)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휴학을 해봤거나 휴학 계획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49.4%로 나타났고, ‘휴학 계획 없음’ 응답이 50.6%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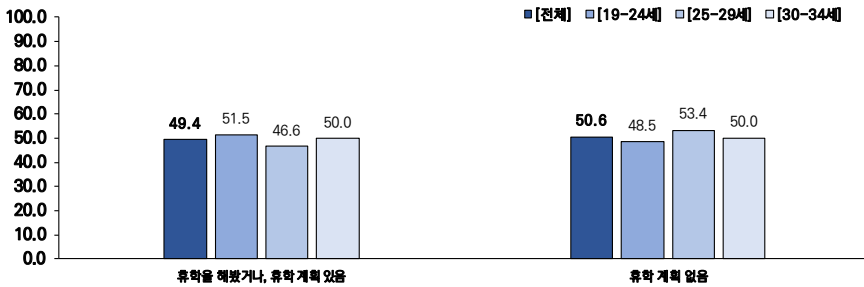


그림 IV-6.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표 IV-12.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휴학을 해봤거나, 휴학 계획 있음 (%)	휴학 계획 없음 (%)	χ^2
전체	(3,550)	49.4	50.6	-
만19~24세	(1,143)	51.5	48.5	5.847
만25~29세	(1,192)	46.6	53.4	
만30~34세	(1,215)	50.0	50.0	

* $p < .05$, ** $p < .01$, *** $p < .001$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권역별, 1인가구 중위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59.6%), 권역별로는 수도권(50.9%),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1.7%) 집단에서 휴학을 해봤거나, 휴학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휴학을 해봤거나, 휴학 계획 있음	휴학 계획 없음	χ^2
전체		(3,550)	49.4	50.6	-
성별	남성	(1,722)	59.6	40.4	141.601***
	여성	(1,828)	39.7	60.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719
	대학교(재/졸)	(3,356)	49.5	50.5	
	대학원(재/졸)	(194)	46.4	53.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800)	47.8	52.3	3.507
	청년 독립가구	(996)	50.9	49.1	
	청년 동거가구	(1,749)	49.3	50.7	
	기타	(5)	20.0	80.0	
권역별	수도권	(1,956)	50.9	49.1	11.310*
	충청권	(345)	46.4	53.6	
	전라권	(307)	42.3	57.7	
	경상권	(811)	50.6	49.4	
	강원/제주	(131)	43.5	56.5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50.9	49.1	3.524
	비빈곤층	(1,781)	47.8	52.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47.3	52.7	6.758**
	중위소득 미만	(1,636)	51.7	48.3	

* $p < .05$, ** $p < .01$, *** $p < .001$

(7)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 대학 교육 기간동안 휴학한 경험이 있는(N=1,752)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역' 이유로 휴학을 했다는 의견이 25.0%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서, '취업/고시 준비'(20.4%), '경제적 어려움'(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집단에서는 병역이유로 휴학을 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고(19~24세: 34.8%), 25~29세 집단에서는 취업/고시 준비로 휴학을 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25~29세: 2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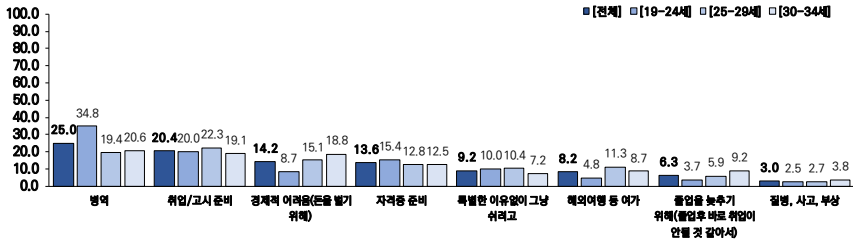


그림 IV-7.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표 IV-14.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병역	취업/고시 준비	경제적 어려움	자격증 준비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려고	해외 여행 등 여가	졸업을 늦추기 위해	질병, 사고, 부상	χ^2
전체	(1,752)	25.0	20.4	14.2	13.6	9.2	8.2	6.3	3.0	-
만19~24세	(589)	34.8	20.0	8.7	15.4	10.0	4.8	3.7	2.5	95.544***
만25~29세	(556)	19.4	22.3	15.1	12.8	10.4	11.3	5.9	2.7	
만30~34세	(607)	20.6	19.1	18.8	12.5	7.2	8.7	9.2	3.8	

* $p < .05$, ** $p < .01$, *** $p < .001$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42.5%),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25.2%),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28.7%),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28.7%),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31.0%) 집단에서 병역 때문에 휴학을 했거나 휴학을 계획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표 IV-15.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 여부 및 계획의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병역	취업/ 고시 준비	경제적 어려움	자격증 준비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려고	해외 여행 등 여가	졸업을 늦추기 위해	질병, 사고, 부상	χ^2
전체	(1,752)	25.0	20.4	14.2	13.6	9.2	8.2	6.3	3.0	-
성별	남성 (1,027)	42.5	15.9	15.8	9.9	4.9	5.0	3.2	2.9	476.990***
	여성 (725)	0.3	26.9	12.0	18.8	15.3	12.8	10.8	3.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0	0.0	0.0	0.0	21.822**
	대학교(재/졸) (1662)	25.2	20.9	14.1	13.6	9.1	8.0	6.4	2.6	
	대학원(재/졸) (90)	21.1	12.2	16.7	13.3	10.0	12.2	4.4	1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382)	19.6	22.3	17.5	16.5	6.5	8.6	5.5	3.4	54.566***
	청년 독립가구 (507)	22.9	18.9	19.1	11.4	8.7	8.9	6.1	3.9	
	청년 동거가구 (862)	28.7	20.5	9.7	13.6	10.7	7.7	6.8	2.3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995)	24.4	20.4	14.7	13.7	9.2	8.7	6.7	2.1	35.664
	충청권 (160)	26.3	17.5	15.0	13.1	13.1	6.9	5.0	3.1	
	전라권 (130)	25.4	25.4	12.3	13.1	5.4	10.0	5.4	3.1	
	경상권 (410)	26.3	21.0	13.2	14.4	8.3	7.1	5.9	3.9	
	강원/제주 (57)	21.1	14.0	15.8	8.8	12.3	7.0	8.8	12.3	
주관적 계층	빈곤층 (901)	21.5	18.5	20.6	14.7	8.2	6.0	7.0	3.4	83.162***
	비빈곤층 (851)	28.7	22.4	7.4	12.5	10.2	10.6	5.6	2.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906)	19.4	19.6	19.0	13.7	7.6	11.1	7.0	2.5	81.201***
	중위소득 미만 (846)	31.0	21.3	9.1	13.5	10.9	5.1	5.7	3.5	

* $p < .05$, ** $p < .01$, *** $p < .001$

(8)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이 58.5%(매우: 7.6% + 조금 그런 편: 50.8%)로 ‘부정’ 응답 41.5%(전혀: 6.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68.5%, 25~29세: 57.6%, 30~34세: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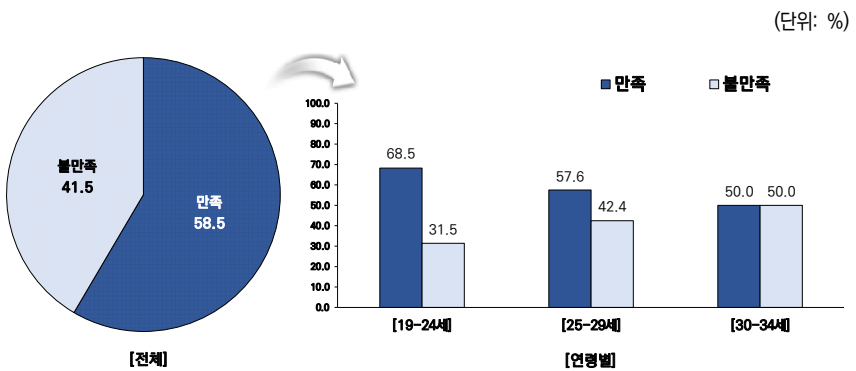


그림 IV-8.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IV-16.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χ^2
전체	(3,550)	7.6	50.8	35.4	6.1	-
만19~24세	(1,143)	10.5	58.0	27.4	4.1	93.750***
만25~29세	(1,192)	7.0	50.6	36.7	5.7	
만30~34세	(1,215)	5.6	44.4	41.7	8.3	

* $p < .05$, ** $p < .01$, *** $p < .001$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60.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66.5%), 가구유형별로는 기타(60.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2.9%), 1인 가구 중위 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61.1%) 집단에서 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χ^2
전체		(3,550)	7.6	50.8	35.4	6.1	-
성별	남성	(1,722)	9.0	51.1	33.3	6.6	14.220**
	여성	(1,828)	6.3	50.6	37.5	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11.793**
	대학교(재/졸)	(3,356)	7.4	50.7	35.7	6.3	
	대학원(재/졸)	(194)	12.4	54.1	30.9	2.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800)	9.0	50.3	33.5	7.3	19.229*
	청년 독립가구	(996)	7.2	50.9	35.7	6.1	
	청년 동거가구	(1,749)	7.2	51.1	36.2	5.4	
	기타	(5)	20.0	40.0	0.0	40.0	
권역별	수도권	(1,956)	7.8	51.4	34.8	6.0	11.143
	충청권	(345)	8.1	44.6	39.4	7.8	
	전라권	(307)	8.8	54.1	32.2	4.9	
	경상권	(811)	6.7	51.4	36.0	5.9	
	강원/제주	(131)	7.6	47.3	38.9	6.1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7.7	46.3	37.5	8.5	51.976***
	비빈곤층	(1,781)	7.6	55.4	33.4	3.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6.9	49.3	38.1	5.7	13.857**
	중위소득 미만	(1,636)	8.4	52.7	32.3	6.5	

* $p < .05$, ** $p < .01$, *** $p < .001$

(9)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 응답이 50.0%(매우: 6.8% + 조금 그런 편: 43.2%)로 나타났고, ‘불충분’ 응답 50.0%(전혀: 8.3%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41.7%)로 나타났다.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61.2%, 25~29세: 48.7%, 30~34세: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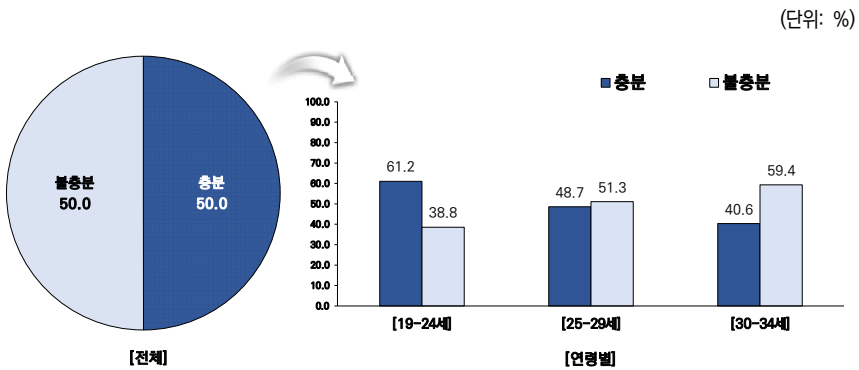


그림 IV-9.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표 IV-18.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하다	조금 충분하다	별로 충분치 않다	전혀 충분치 않다	χ^2
전체	(3,550)	6.8	43.2	41.7	8.3	-
만19~24세	(1,143)	9.8	51.4	33.8	5.0	114.537***
만25~29세	(1,192)	6.0	42.7	42.6	8.6	
만30~34세	(1,215)	4.7	35.9	48.2	11.2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53.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61.3%),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53.1%),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3.7%),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2.8%) 집단에서 대학에서 진로를 위한 교육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9. 대학이 내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정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하다	조금 충분하다	별로 충분치 않다	전혀 충분치 않다	χ^2
전체		(3,550)	6.8	43.2	41.7	8.3	-
성별	남성	(1,722)	7.9	45.2	39.2	7.7	15.641**
	여성	(1,828)	5.7	41.3	44.0	8.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13.271**
	대학교(재/졸)	(3,356)	6.6	42.8	42.2	8.5	
	대학원(재/졸)	(194)	10.8	50.5	33.5	5.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800)	8.1	45.0	37.4	9.5	19.955*
	청년 독립가구	(996)	6.0	42.6	43.6	7.8	
	청년 동거가구	(1,749)	6.6	42.7	42.7	8.0	
	기타	(5)	20.0	40.0	0.0	40.0	
권역별	수도권	(1,956)	6.7	42.8	41.7	8.8	6.888
	충청권	(345)	6.1	42.0	42.9	9.0	
	전라권	(307)	8.8	45.3	39.1	6.8	
	경상권	(811)	6.5	44.4	41.7	7.4	
	강원/제주	(131)	6.9	38.9	45.0	9.2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6.1	40.1	42.6	11.2	45.494***
	비빈곤층	(1,781)	7.5	46.3	40.8	5.5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5.6	42.0	43.9	8.5	15.084**
	중위소득 미만	(1,636)	8.2	44.6	39.1	8.1	

* $p < .05$, ** $p < .01$, *** $p < .001$

(10)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 충분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N=1,776)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학문적이어서’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학문적이어서 진로 준비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9~24세: 26.0%, 25~29세: 35.4%, 30~34세: 43.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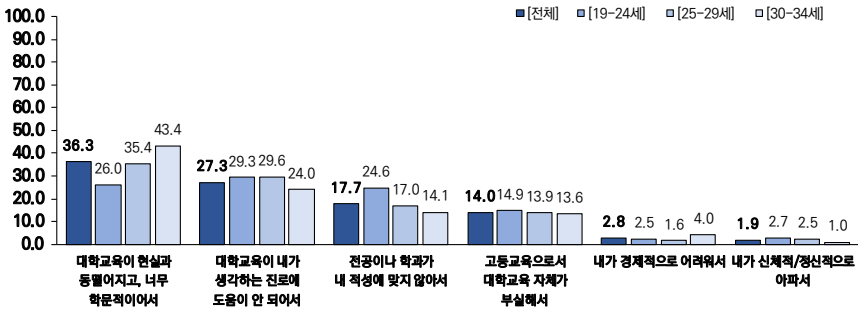


그림 IV-10.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표 IV-20.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학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학문적이어서	대학교육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도움이 안 되어서	전공이나 학과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등교육으로서 대학교육 자체가 부실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파서	χ^2
전체	(1,776)	36.3	27.3	17.7	14.0	2.8	1.9	-
만19~24세	(443)	26.0	29.3	24.6	14.9	2.5	2.7	58.221 ***
만25~29세	(611)	35.4	29.6	17.0	13.9	1.6	2.5	
만30~34세	(722)	43.4	24.0	14.1	13.6	4.0	1.0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가구 유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41.3%), 권역별로는 수도권(37.7%),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비빈곤층(38.6%),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8.5%) 집단에서 대학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학문적이어서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대학으로부터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학교육 이 현실과 동떨어지 고 너무 학문적 이어서	대학교육 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도 움이 안 되어서	전공이나 학과가 내 적성에 맞 지 않아서	고등교육 으로서 대 학교육 자 체가 부실 해서	내가 경제 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신체 적/정신 적으로 아파서	χ^2
전체	(1,776)	36.3	27.3	17.7	14.0	2.8	1.9	-
성별	남성 (808)	36.9	27.0	16.7	14.7	3.1	1.6	2.743
	여성 (968)	35.7	27.5	18.6	13.4	2.6	2.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0	0.0	11.938*
	대학교(재/졸) (1,701)	36.0	27.0	18.2	13.8	2.9	2.0	
	대학원(재/졸) (75)	41.3	33.3	6.7	18.7	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375)	40.0	28.0	14.9	13.3	3.2	0.5	21.390
	청년 독립가구 (512)	37.1	27.3	14.5	15.6	3.1	2.3	
	청년 동거가구 (887)	34.3	26.8	20.7	13.4	2.5	2.3	
	기타 (2)	0.0	50.0	5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987)	37.7	28.6	15.8	14.2	2.3	1.4	37.132*
	충청권 (179)	37.4	20.1	22.3	16.2	2.8	1.1	
	전라권 (141)	27.0	26.2	22.7	17.0	2.1	5.0	
	경상권 (398)	36.7	25.6	19.1	12.3	4.3	2.0	
	강원/제주 (71)	29.6	38.0	15.5	9.9	2.8	4.2	
주관적 계층	빈곤층 (952)	34.2	27.9	17.8	13.4	4.4	2.2	22.631***
	비빈곤층 (824)	38.6	26.5	17.7	14.7	1.0	1.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003)	38.5	28.0	14.9	14.6	3.1	1.0	25.643***
	중위소득 미만 (773)	33.4	26.3	21.5	13.3	2.5	3.1	

* $p < .05$, ** $p < .01$, *** $p < .001$

(11)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있음’ 응답이 40.8%로 나타났고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없음’ 응답이 59.2%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집단에서 진로 상담을 받지 않은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65.2%, 25~29세: 53.2%, 30~34세: 59.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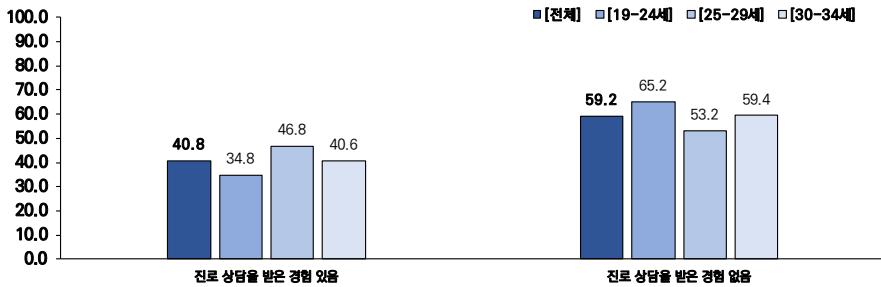


그림 IV-11.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표 IV-22.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있음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없음	χ^2
전체	(3,550)	40.8	59.2	-
만19~24세	(1,143)	34.8	65.2	34.777***
만25~29세	(1,192)	46.8	53.2	
만30~34세	(1,215)	40.6	59.4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및 주관적 계층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43.4%),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44.7%), 권역별로는 경상권(44.3%),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45.7%)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있음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없음	χ^2
전체		(3,550)	40.8	59.2	-
성별	남성	(1,722)	43.4	56.6	9.510**
	여성	(1,828)	38.3	61.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1.379
	대학교(재/졸)	(3,356)	40.6	59.4	
	대학원(재/졸)	(194)	44.8	55.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800)	44.6	55.4	24.989***
	청년 독립가구	(996)	44.7	55.3	
	청년 동거가구	(1,749)	37.0	63.0	
	기타	(5)	0.0	100.0	
권역별	수도권	(1,956)	40.8	59.2	9.769*
	충청권	(345)	34.8	65.2	
	전라권	(307)	39.1	60.9	
	경상권	(811)	44.3	55.7	
	강원/제주	(131)	38.9	61.1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41.9	58.1	1.856
	비빈곤층	(1,781)	39.7	60.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45.7	54.3	40.386***
	중위소득 미만	(1,636)	35.1	64.9	

* $p < .05$, ** $p < .01$, *** $p < .001$

(12)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 대학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해 취창업이나 진로 상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N=1,449)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 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 응답이 66.3%(매우: 11.3% + 조금 그런 편: 54.9%)로 '불충분' 응답 33.7%(전혀: 4.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80.2%, 25~29세: 64.0%, 30~34세: 57.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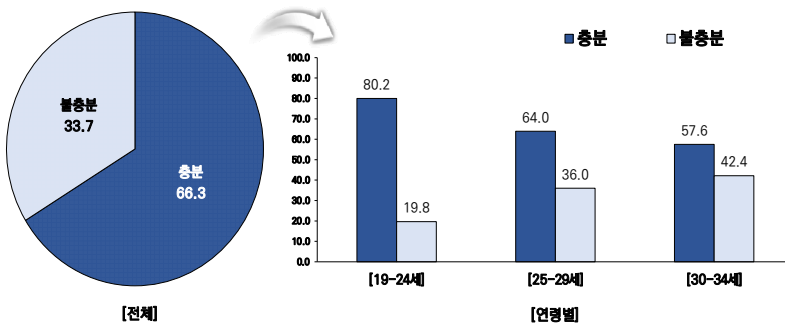


그림 IV-12.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표 IV-24.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449)	11.3	54.9	29.7	4.0	-
만19~24세	(398)	17.8	62.3	18.1	1.8	68.885***
만25~29세	(558)	11.5	52.5	31.9	4.1	
만30~34세	(493)	5.9	51.7	36.7	5.7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주관적 계층, 1인가구 중위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69.4%),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8.9%), 1인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68.5%) 집단에서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 대학에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의 충분하고 다양한 제공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449)	11.3	54.9	29.7	4.0	-
성별	남성	(748)	12.7	56.7	27.4	3.2	8.751*
	여성	(701)	9.8	53.1	32.2	4.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533
	대학교(재/졸)	(1,362)	11.3	54.8	30.0	4.0	
	대학원(재/졸)	(87)	11.5	57.5	26.4	4.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357)	12.9	55.7	27.2	4.2	2.606
	청년 독립가구	(445)	10.6	55.3	29.9	4.3	
	청년 동거가구	(647)	11.0	54.3	31.1	3.7	
	기타	(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799)	11.3	53.1	31.3	4.4	15.489
	충청권	(120)	14.2	57.5	25.0	3.3	
	전라권	(120)	9.2	63.3	23.3	4.2	
	경상권	(359)	12.8	54.0	29.5	3.6	
	강원/제주	(51)	0.0	64.7	33.3	2.0	
주관적 계층	빈곤층	(742)	12.8	50.9	30.7	5.5	16.677***
	비빈곤층	(707)	9.8	59.1	28.7	2.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874)	9.7	55.0	31.8	3.4	9.882*
	중위소득 미만	(575)	13.7	54.8	26.6	4.9	

* $p < .05$, ** $p < .01$, *** $p < .001$

(13)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N=3,550)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 없음’ 응답의 비율이 70.0%로 ‘경험 있음’(30.0%)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교육 외 사교육을 경험한 경향이 나타났다. (19~24세: 23.8%, 25~29세: 30.6%, 30~34세: 35.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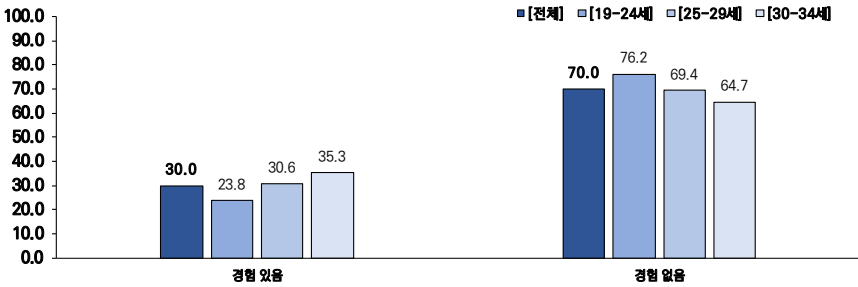


그림 IV-13.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표 IV-26.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전체	(3,550)	30.0	70.0	-
만19~24세	(1,143)	23.8	76.2	37.445***
만25~29세	(1,192)	30.6	69.4	
만30~34세	(1,215)	35.3	64.7	

* $p < .05$, ** $p < .01$, *** $p < .001$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주관적 계층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41.8%),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37.8%), 권역별로는 수도권(32.9%),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4.1%)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정규교육 외 사교육을 경험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전체		(3,550)	30.0	70.0	-
성별	남성	(1,722)	30.4	69.6	0.188
	여성	(1,828)	29.7	70.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13.426***
	대학교(재/졸)	(3,356)	29.4	70.6	
	대학원(재/졸)	(194)	41.8	58.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800)	37.8	62.3	37.363***
	청년 독립가구	(996)	30.7	69.3	
	청년 동거가구	(1,749)	26.2	73.8	
	기타	(5)	0.0	100.0	
권역별	수도권	(1,956)	32.9	67.1	19.998***
	충청권	(345)	27.2	72.8	
	전라권	(307)	23.8	76.2	
	경상권	(811)	28.0	72.0	
	강원/제주	(131)	22.1	77.9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69)	31.3	68.7	2.788
	비빈곤층	(1,781)	28.7	71.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4)	34.1	65.9	32.208***
	중위소득 미만	(1,636)	25.3	74.7	

* $p < .05$, ** $p < .01$, *** $p < .001$

(14)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 대학 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경험한 (N=1,066)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고시 준비'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격증 준비'(31.4%), '학교(전공) 교육의 보완'(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고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아왔다고 응답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24세: 31.6%, 25~29세: 44.4%, 30~34세: 48.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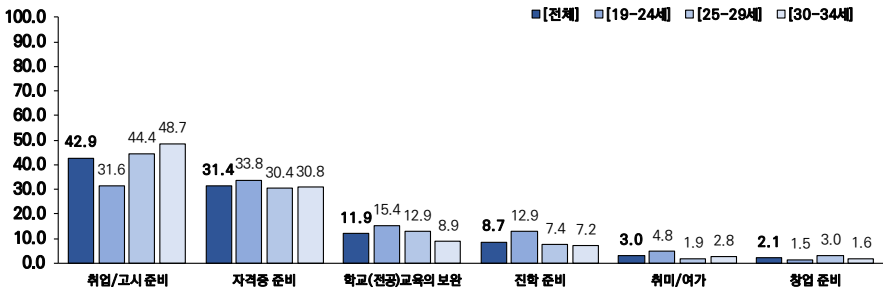


그림 IV-14.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표 IV-28.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취업/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학교(전공) 교육의 보완	진학 준비	취미/여가	창업 준비	χ^2
전체	(1,066)	42.9	31.4	11.9	8.7	3.0	2.1	-
만19~24세	(272)	31.6	33.8	15.4	12.9	4.8	1.5	32.807***
만25~29세	(365)	44.4	30.4	12.9	7.4	1.9	3.0	
만30~34세	(429)	48.7	30.8	8.9	7.2	2.8	1.6	

* $p < .05$, ** $p < .01$, *** $p < .001$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44.7%),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43.5%),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48.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46.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47.9%) 집단에서 취업/고시 준비 때문에 사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취업/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학교(전 공)교육 의 보완	진학 준비	취미/ 여가	창업 준비	χ^2	
전체	(1,066)	42.9	31.4	11.9	8.7	3.0	2.1	-	
성별	남성	(523)	44.7	26.0	12.2	11.3	2.7	3.1	23.519***
	여성	(543)	41.1	36.6	11.6	6.3	3.3	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0	0.0	14.808*
	대학교(재/졸)	(985)	43.5	31.8	12.0	7.9	3.0	1.8	
	대학원(재/졸)	(81)	35.8	27.2	11.1	18.5	2.5	4.9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302)	43.7	21.9	14.2	15.6	1.0	3.6	63.531***
	청년 독립가구	(306)	48.0	29.7	8.5	7.5	3.6	2.6	
	청년 동거가구	(458)	38.9	38.9	12.7	5.0	3.9	0.7	
	기타	(0)	0.0	0.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643)	42.1	31.1	12.8	8.9	3.4	1.7	14.191
	충청권	(94)	43.6	33.0	9.6	10.6	1.1	2.1	
	전라권	(73)	37.0	30.1	15.1	9.6	2.7	5.5	
	경상권	(227)	45.8	30.8	10.1	7.9	3.1	2.2	
	강원/제주	(29)	48.3	41.4	6.9	3.4	0.0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554)	39.5	30.7	12.3	12.5	2.2	2.9	28.211***
	비빈곤층	(512)	46.5	32.2	11.5	4.7	3.9	1.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652)	47.9	30.1	9.0	9.2	1.7	2.1	32.443***
	중위소득 미만	(414)	35.0	33.6	16.4	8.0	5.1	1.9	

* $p < .05$, ** $p < .01$, *** $p < .001$

(15)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 대학 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경험한 (N=1,066)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 응답이 87.0%(매우: 28.1% + 조금 그런 편: 58.8%)로 ‘부담 없음’ 응답 13.0%(전혀: 0.7%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2.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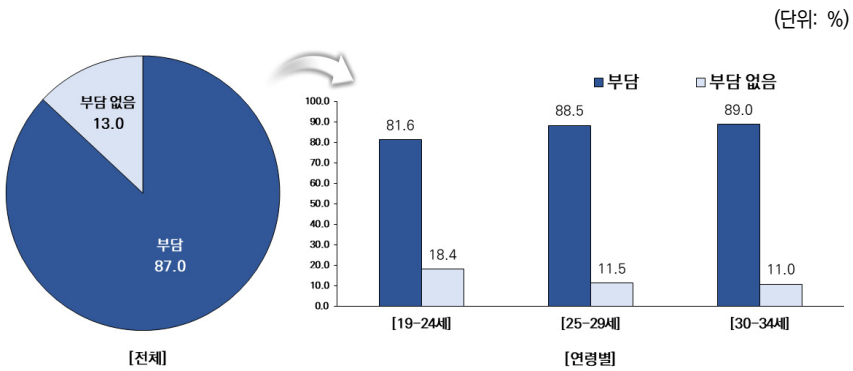


그림 IV-15.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표 IV-30.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된다	조금 부담된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χ^2
전체	(1,066)	28.1	58.8	12.4	0.7	-
만19~24세	(272)	27.2	54.4	17.6	0.7	11.946
만25~29세	(365)	29.0	59.5	10.4	1.1	
만30~34세	(429)	28.0	61.1	10.7	0.2	

* $p < .05$, ** $p < .01$, *** $p < .001$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주관적 계층,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90.2%),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91.3%),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88.5%) 집단에서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된다	조금 부담된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χ^2
전체		(1,066)	28.1	58.8	12.4	0.7	-
성별	남성	(523)	27.0	56.6	15.7	0.8	10.563*
	여성	(543)	29.3	61.0	9.2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0)	0.0	0.0	0.0	0.0	0.641
	대학교(재/졸)	(985)	28.3	58.7	12.4	0.6	
	대학원(재/졸)	(81)	25.9	60.5	12.3	1.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302)	25.5	60.3	13.6	0.7	4.523
	청년 독립가구	(306)	26.5	60.8	12.4	0.3	
	청년 동거가구	(458)	31.0	56.6	11.6	0.9	
	기타	(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643)	28.8	58.0	12.8	0.5	6.069
	충청권	(94)	34.0	55.3	9.6	1.1	
	전라권	(73)	28.8	58.9	11.0	1.4	
	경상권	(227)	23.8	62.1	13.2	0.9	
	강원/제주	(29)	27.6	62.1	10.3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554)	35.0	56.3	8.7	0.0	41.055***
	비빈곤층	(512)	20.7	61.5	16.4	1.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652)	25.3	63.2	11.0	0.5	13.675**
	중위소득 미만	(414)	32.6	51.9	14.5	1.0	

* $p < .05$, ** $p < .01$, *** $p < .001$

(16)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 없음'의 응답이 76.7%로 '경험 있음'(23.3%)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16.2%, 25~29세: 26.7%, 30~34세: 27.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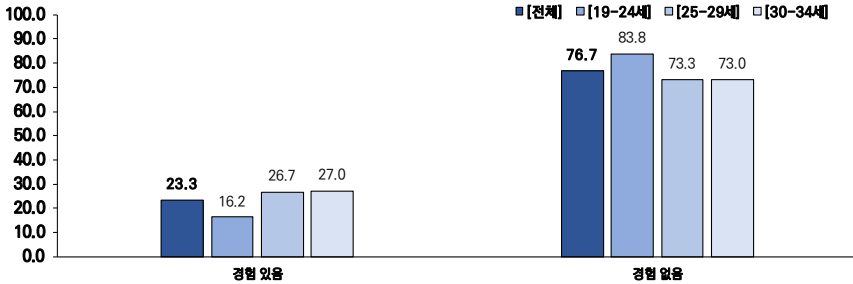


그림 IV-16.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표 IV-32.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전체	(4,032)	23.3	76.7	-
만19~24세	(1,348)	16.2	83.8	56.597***
만25~29세	(1,343)	26.7	73.3	
만30~34세	(1,341)	27.0	73.0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24.8%),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30.3%),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29.2%),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26.9%),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26.7%) 집단에서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전체		(4,032)	23.3	76.7	-
성별	남성	(2,000)	24.8	75.3	4.581*
	여성	(2,032)	21.9	78.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0.3	69.7	19.016***
	대학교(재/졸)	(3,356)	22.0	78.0	
	대학원(재/졸)	(194)	28.4	71.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9.2	70.8	42.744***
	청년 독립가구	(1,141)	26.1	73.9	
	청년 동거가구	(1,976)	19.0	81.0	
	기타	(1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23.1	76.9	5.378
	충청권	(418)	21.1	78.9	
	전라권	(351)	23.1	76.9	
	경상권	(911)	25.6	74.4	
	강원/제주	(152)	19.1	80.9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6.9	73.1	32.263***
	비빈곤층	(1,931)	19.4	80.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6.7	73.3	28.766***
	중위소득 미만	(1,904)	19.5	80.5	

* $p < .05$, ** $p < .01$, *** $p < .001$

(17)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N=940)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77.0%(매우: 16.3% + 조금 그런 편: 60.7%)로 '불만족' 응답 23.0%(전혀: 3.4%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9.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훈련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82.2%, 25~29세: 76.3%, 30~34세: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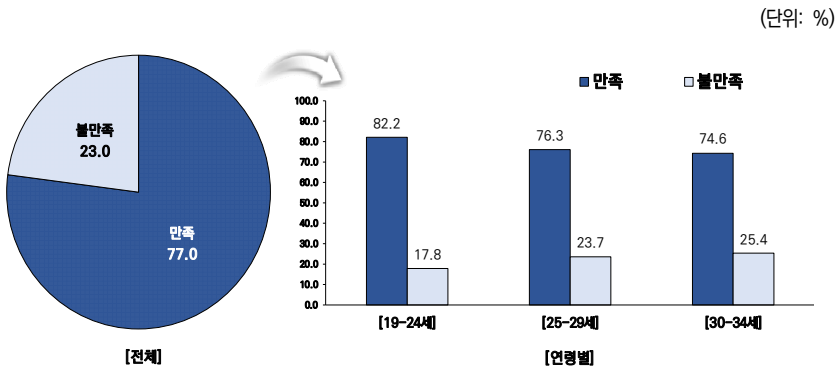


그림 IV-17.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표 IV-34.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χ^2
전체	(940)	16.3	60.7	19.6	3.4	-
만19~24세	(219)	22.4	59.8	14.6	3.2	21.141**
만25~29세	(359)	18.9	57.4	20.6	3.1	
만30~34세	(362)	9.9	64.6	21.5	3.9	

* $p < .05$, ** $p < .01$, *** $p < .001$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중위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77.7%) 집단에서 직업훈련교육 만족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직업훈련교육 전반적 만족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χ^2
전체		(940)	16.3	60.7	19.6	3.4	-
성별	남성	(495)	17.8	59.6	18.6	4.0	3.440
	여성	(445)	14.6	62.0	20.7	2.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46)	17.1	54.1	22.6	6.2	7.522
	대학교(재/졸)	(739)	16.1	61.8	18.9	3.1	
	대학원(재/졸)	(55)	16.4	63.6	2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264)	20.1	58.3	18.2	3.4	6.843
	청년 독립가구	(298)	15.4	59.7	21.8	3.0	
	청년 동거가구	(376)	14.4	63.3	18.6	3.7	
	기타	(2)	0.0	50.0	50.0	0.0	
권역별	수도권	(509)	17.1	59.5	20.2	3.1	13.297
	충청권	(88)	13.6	59.1	25.0	2.3	
	전라권	(81)	21.0	60.5	17.3	1.2	
	경상권	(233)	14.6	63.9	15.9	5.6	
	강원/제주	(29)	10.3	62.1	27.6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566)	15.2	60.6	19.6	4.6	6.941
	비빈곤층	(374)	17.9	61.0	19.5	1.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568)	16.7	59.9	21.3	2.1	9.586*
	중위소득 미만	(372)	15.6	62.1	16.9	5.4	

* $p < .05$, ** $p < .01$, *** $p < .001$

(18)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충분’ 응답이 66.2%(전혀: 13.8%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52.4%)로 ‘충분’ 응답 33.8%(매우: 5.0% + 조금 그런 편: 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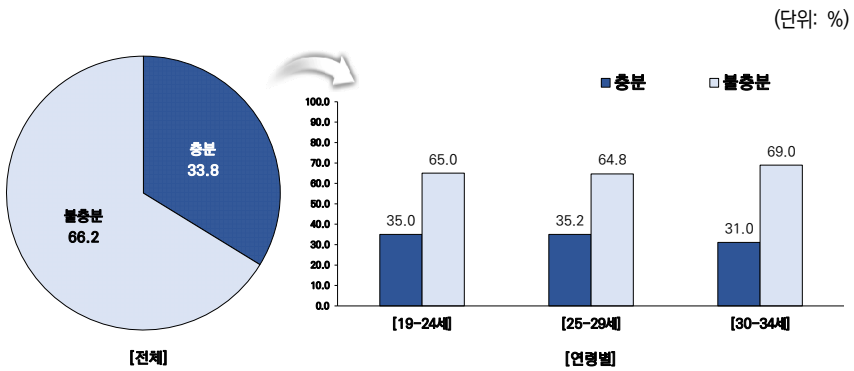


그림 IV-18.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표 IV-36.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5.0	28.8	52.4	13.8	-
만19~24세	(1,348)	5.6	29.5	50.7	14.3	11.556
만25~29세	(1,343)	5.3	29.9	52.6	12.1	
만30~34세	(1,341)	4.1	26.9	53.9	15.1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39.1%),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35.5%),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42.3%), 권역별로는 전라권(39.6%),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36.4%),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5.8%) 집단에서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는지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5.0	28.8	52.4	13.8	-
성별	남성	(2,000)	6.9	32.2	47.6	13.4	63.126***
	여성	(2,032)	3.1	25.4	57.1	14.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8	29.7	45.6	18.9	20.225**
	대학교(재/졸)	(3,356)	4.7	28.8	53.2	13.3	
	대학원(재/졸)	(194)	7.2	26.8	56.2	9.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905)	7.5	34.8	47.2	10.5	63.832***
	청년 독립가구	(1,141)	4.6	31.2	50.9	13.3	
	청년 동거가구	(1,976)	4.0	24.6	55.7	15.6	
	기타	(10)	10.0	30.0	40.0	20.0	
권역별	수도권	(2,200)	5.2	28.6	52.3	13.9	24.710*
	충청권	(418)	5.7	23.7	53.3	17.2	
	전라권	(351)	5.7	33.9	49.6	10.8	
	경상권	(911)	4.3	30.1	53.3	12.3	
	강원/제주	(152)	2.6	25.0	52.0	20.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8	30.7	48.2	15.4	33.644***
	비빈곤층	(1,931)	4.1	26.7	57.0	12.1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3	30.5	51.7	12.5	11.913**
	중위소득 미만	(1,904)	4.6	26.8	53.2	15.3	

* $p < .05$, ** $p < .01$, *** $p < .001$

(19)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N=2,671)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9~24세: 51.0%, 25~29세: 43.1%, 30~34세: 41.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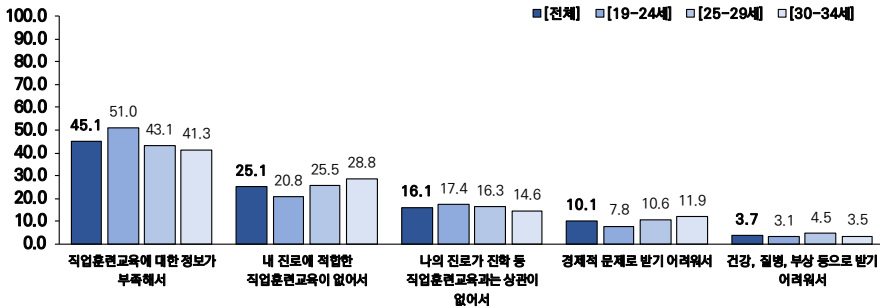


그림 IV-19.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표 IV-38.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내 진로에 적합한 직업훈련교육이 없어서	나의 진로가 진학 등 직업훈련교육과는 상관이 없어서	경제적 문제로 받기 어려워서	건강, 질병, 부상 등으로 받기 어려워서	χ^2
전체	(2,671)	45.1	25.1	16.1	10.1	3.7	-
만19~24세	(876)	51.0	20.8	17.4	7.8	3.1	34.637***
만25~29세	(870)	43.1	25.5	16.3	10.6	4.5	
만30~34세	(925)	41.3	28.8	14.6	11.9	3.5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48.8%),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45.9%), 가구 유형별로는 기타(83.3%),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47.1%),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46.7%) 집단에서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9.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직업훈련 교육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해서	내 진로에 적합한 직 업훈련교육 이 없어서	나의 진로가 진학 등 직 업훈련교육 과는 상관이 없어서	경제적 문 제로 받기 어려워서	건강, 질병, 부상 등으 로 받기 어 려워서	χ^2
전체	(2,671)	45.1	25.1	16.1	10.1	3.7	-
성별	남성 (1,219)	40.7	26.6	16.7	11.2	4.9	24.096***
	여성 (1,452)	48.8	23.8	15.6	9.2	2.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1)	41.2	17.4	21.5	15.1	4.8	30.485***
	대학교(재/졸) (2,232)	45.9	26.1	15.2	9.4	3.4	
	대학원(재/졸) (128)	39.8	25.8	17.2	10.9	6.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22)	39.5	29.5	15.5	9.2	6.3	57.473***
	청년 독립가구 (733)	41.9	23.1	16.1	14.1	4.9	
	청년 동가가구 (1,410)	48.7	24.5	16.3	8.4	2.1	
	기타 (6)	83.3	16.7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1,456)	44.8	25.4	16.3	10.0	3.5	7.189
	충청권 (295)	42.7	26.4	16.3	10.8	3.7	
	전라권 (212)	44.3	24.5	15.1	11.3	4.7	
	경상권 (598)	47.0	24.6	15.4	9.0	4.0	
	강원/제주 (110)	45.5	20.9	18.2	13.6	1.8	
주관적 계층	빈곤층 (1,336)	43.0	24.9	14.2	14.3	3.5	54.665***
	비빈곤층 (1,335)	47.1	25.2	17.9	5.9	3.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366)	43.6	26.9	14.6	11.1	3.8	11.397*
	중위소득 미만 (1,305)	46.7	23.1	17.5	9.1	3.5	

* $p < .05$, ** $p < .01$, *** $p < .001$

(20)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을 하였음'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을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34.5%, 25~29세: 55.6%, 30~34세: 63.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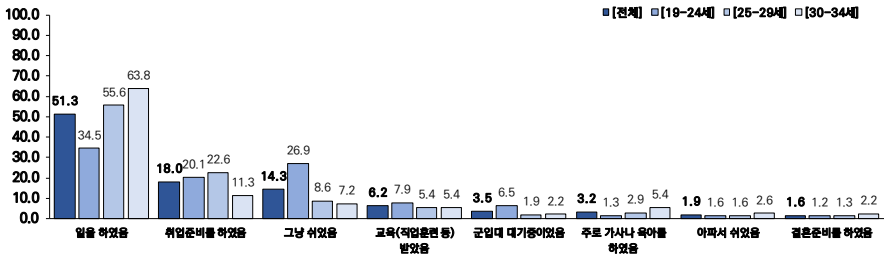


그림 IV-20.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표 IV-40.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일을 하였음	취업 준비를 하였음	그냥 쉬었음	교육(직업훈련 등) 받았음	군인대 대기중이었음	주로 가사나 육아를 하였음	아파서 쉬었음	결혼준비를 하였음	χ^2
전체	(4,032)	51.3	18.0	14.3	6.2	3.5	3.2	1.9	1.6	-
만19~24세	(1,348)	34.5	20.1	26.9	7.9	6.5	1.3	1.6	1.2	508.144***
만25~29세	(1,343)	55.6	22.6	8.6	5.4	1.9	2.9	1.6	1.3	
만30~34세	(1,341)	63.8	11.3	7.2	5.4	2.2	5.4	2.6	2.2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3.4%),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57.2%),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57.3%), 권역별로는 수도권(54.1%),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3.6%),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70.7%) 집단에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일을 하였음	취업준 비를 하였음	그냥 쉬었음	교육 (직업 훈련 등) 받았음	군입대 대기중 이었음	주로 가사나 육아를 하였음	아파서 쉬었음	결혼 준비를 하였음	χ^2
전체	(4,032)	51.3	18.0	14.3	6.2	3.5	3.2	1.9	1.6	-
성별	남성 (2,000)	49.1	17.0	15.3	7.6	6.2	1.3	1.9	1.8	149.212***
	여성 (2,032)	53.4	19.0	13.2	4.8	0.9	5.2	1.9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1.5	15.4	19.1	2.9	1.9	4.1	4.1	1.0	66.328***
	대학교(재/졸) (3,356)	50.9	18.4	14.2	6.6	3.7	3.1	1.6	1.5	
	대학원(재/졸) (194)	57.2	17.0	4.1	7.7	5.2	3.6	1.0	4.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9.0	17.1	7.6	7.2	4.3	9.8	1.5	3.4	358.205***
	청년 독립가구 (1,141)	57.3	14.2	10.8	8.1	4.5	1.4	1.9	1.8	
	청년 동거가구 (1,976)	48.9	20.6	19.3	4.7	2.7	1.3	1.9	0.6	
	기타 (10)	40.0	10.0	20.0	0.0	0.0	0.0	3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54.1	17.2	13.3	5.9	3.8	2.5	1.7	1.5	49.073**
	충청권 (418)	50.2	18.7	13.9	5.7	4.3	3.3	1.9	1.9	
	전라권 (351)	41.6	19.9	16.2	9.1	3.4	5.4	2.6	1.7	
	경상권 (911)	48.3	19.2	14.9	6.6	3.0	4.2	2.1	1.8	
	강원/제주 (152)	52.6	16.4	21.1	3.3	2.0	2.0	2.6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9.1	19.3	14.2	6.6	3.7	3.1	2.4	1.5	16.348*
	비빈곤층 (1,931)	53.6	16.6	14.3	5.7	3.4	3.3	1.3	1.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70.7	11.7	4.2	5.1	3.0	2.4	0.8	2.0	799.592***
	중위소득 미만 (1,904)	29.6	25.0	25.5	7.5	4.1	4.1	3.1	1.2	

* $p < .05$, ** $p < .01$, *** $p < .001$

(21)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 기여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 응답이 64.4%(매우: 10.4% + 조금 그런 편: 54.0%)로 ‘기여하지 않음’ 응답 35.6%(전혀: 5.4%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지금까지의 교육이 사회적·경제적 성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70.2%, 25~29세: 65.2%, 30~34세: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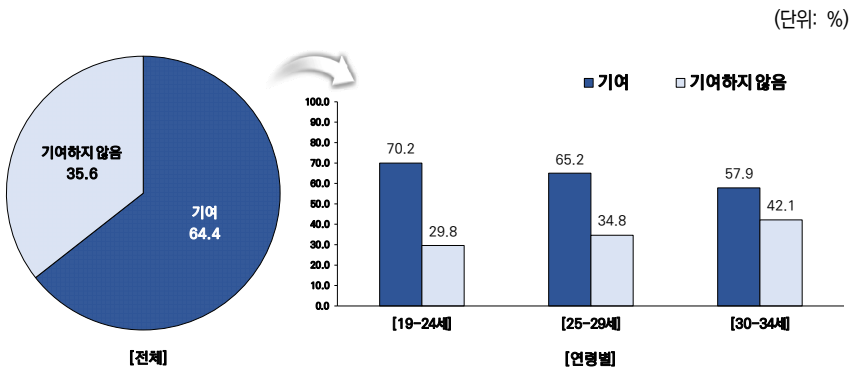


그림 IV-21.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표 IV-42.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10.4	54.0	30.2	5.4	-
만19~24세	(1,348)	13.2	57.0	24.9	4.9	54.081***
만25~29세	(1,343)	9.4	55.8	29.9	4.9	
만30~34세	(1,341)	8.6	49.3	35.7	6.4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및 1인 가구 중위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65.2%),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75.3%), 권역별로는 전라권(66.1%),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비빈곤층(68.9%) 집단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이 사회적·경제적 성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3.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의 기여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10.4	54.0	30.2	5.4	-	
성별	남성	(2,000)	11.6	53.7	28.7	6.1	11.643**
	여성	(2,032)	9.3	54.4	31.6	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7.7	41.9	36.7	13.7	107.438***
	대학교(재/졸)	(3,356)	10.4	55.5	29.7	4.4	
	대학원(재/졸)	(194)	16.5	58.8	22.2	2.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11.0	54.6	30.6	3.8	11.077
	청년 독립가구	(1,141)	10.9	53.3	29.3	6.6	
	청년 동거가구	(1,976)	9.8	54.3	30.5	5.5	
	기타	(10)	20.0	40.0	3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11.2	54.4	29.6	4.8	24.371*
	충청권	(418)	10.5	46.7	34.2	8.6	
	전라권	(351)	11.7	54.4	28.5	5.4	
	경상권	(911)	8.6	56.0	30.2	5.3	
	강원/제주	(152)	6.6	55.9	31.6	5.9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9.9	50.3	32.3	7.5	52.961***
	비빈곤층	(1,931)	10.9	58.1	27.9	3.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0.3	54.7	30.5	4.5	7.190
	중위소득 미만	(1,904)	10.5	53.3	29.9	6.4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일반적 인식 및 전망

(1)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위 대학' 응답이 40.7%(하: 12.1% + 중하: 28.6%)로 '상위 대학' 응답 20.6%(상: 5.9% + 중상: 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내가 졸업한 대학이 사회적 평가에 따라 하위 대학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36.2%, 25~29세: 40.4%, 30~34세: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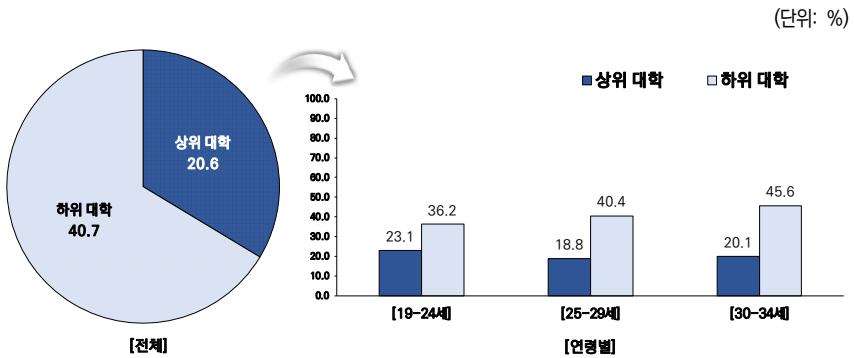


그림 IV-22.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표 IV-44.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상	중상	중	중하	하	χ^2
전체	(4,032)	5.9	14.7	38.6	28.6	12.1	-
만19~24세	(1,348)	6.5	16.6	40.7	25.0	11.2	34.253***
만25~29세	(1,343)	5.5	13.3	40.8	29.6	10.8	
만30~34세	(1,341)	5.7	14.3	34.4	31.2	14.4	

* $p < .05$, ** $p < .01$, *** $p < .001$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중위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42.4%),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63.7%), 권역별로는 전라권(45.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51.2%) 집단에서 내가 졸업한 대학이 사회적 평가에 따라 하위 대학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5. 내가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상	중상	중	중하	하	χ^2
전체		(4,032)	5.9	14.7	38.6	28.6	12.1	-
성별	남성	(2,000)	6.9	15.9	38.2	26.7	12.4	15.750**
	여성	(2,032)	4.9	13.6	39.1	30.5	1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1	5.2	29.0	24.1	39.6	451.537***
	대학교(재/졸)	(3,356)	6.1	15.5	39.7	30.1	8.6	
	대학원(재/졸)	(194)	11.9	25.8	44.8	13.4	4.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6.0	17.7	38.5	28.1	9.8	29.970**
	청년 독립가구	(1,141)	6.3	13.7	39.3	26.9	13.8	
	청년 동가구	(1,976)	5.6	14.1	38.5	29.8	12.0	
	기타	(10)	20.0	0.0	10.0	30.0	40.0	
권역별	수도권	(2,200)	8.1	16.8	37.3	26.7	11.1	83.963***
	충청권	(418)	5.0	11.5	42.1	26.8	14.6	
	전라권	(351)	2.6	11.7	40.7	30.8	14.2	
	경상권	(911)	3.2	11.7	40.1	33.2	11.9	
	강원/제주	(152)	0.7	19.1	35.5	28.3	16.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2	11.2	33.4	33.1	18.0	246.593***
	비빈곤층	(1,931)	7.7	18.5	44.4	23.7	5.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9	15.2	38.8	29.1	11.0	5.524
	중위소득 미만	(1,904)	5.9	14.2	38.5	28.0	13.3	

* $p < .05$, ** $p < .01$, *** $p < .001$

(2)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별 존재' 응답이 87.8%(매우: 40.4% + 조금 그런 편: 47.4%)로 '차별 존재하지 않음' 응답 12.2%(전혀: 1.2%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1.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집단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24세: 89.8%, 25~29세: 85.3%, 30~34세: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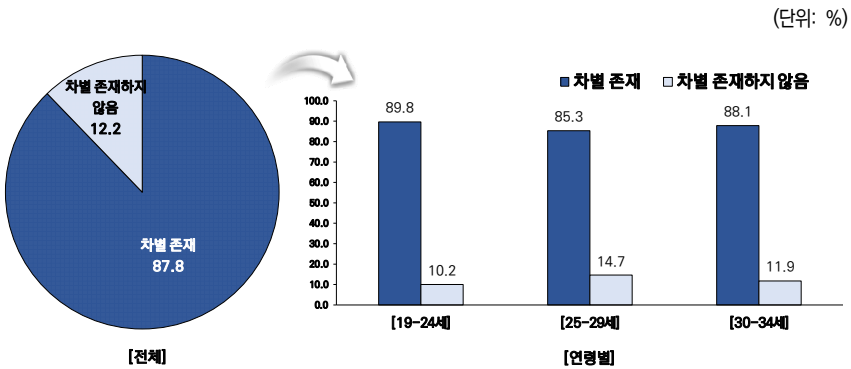


그림 IV-23.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표 IV-46.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0.4	47.4	11.0	1.2	-
만19~24세	(1,348)	45.1	44.7	9.0	1.2	28.890***
만25~29세	(1,343)	37.0	48.3	13.0	1.6	
만30~34세	(1,341)	38.9	49.2	11.0	0.8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1인 가구 중위 소득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90.7%),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91.0%),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88.3%) 집단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7.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존재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0.4	47.4	11.0	1.2	-
성별	남성	(2,000)	36.7	48.1	13.6	1.6	42.477***
	여성	(2,032)	43.9	46.8	8.5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2.3	43.2	12.7	1.9	8.904
	대학교(재/졸)	(3,356)	40.1	48.1	10.7	1.2	
	대학원(재/졸)	(194)	40.2	46.9	12.9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4.7	49.9	13.5	1.9	65.137***
	청년 독립가구	(1,141)	37.5	47.3	13.8	1.4	
	청년 동거가구	(1,976)	44.7	46.4	8.2	0.8	
	기타	(10)	20.0	40.0	3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42.2	46.6	10.2	1.0	19.957
	충청권	(418)	40.2	46.4	11.5	1.9	
	전라권	(351)	34.8	52.1	12.3	0.9	
	경상권	(911)	38.1	48.6	12.1	1.2	
	강원/제주	(152)	40.1	44.1	12.5	3.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9.5	48.4	11.0	1.1	1.961
	비빈곤층	(1,931)	41.3	46.3	11.0	1.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9.0	48.3	11.8	0.9	8.246*
	중위소득 미만	(1,904)	41.9	46.4	10.1	1.5	

* $p < .05$, ** $p < .01$, *** $p < .001$

(3)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별 존재’ 응답이 89.7%(매우: 43.8% + 조금 그런 편: 45.9%)로 ‘차별 존재하지 않음’ 응답 10.3%(전혀: 1.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9.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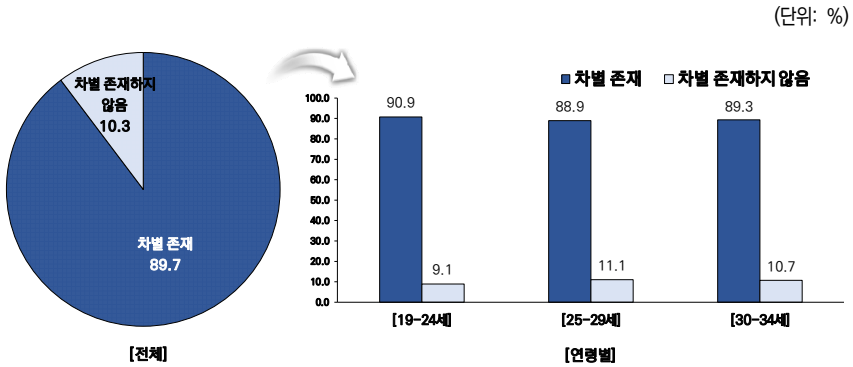


그림 IV-24.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표 IV-48.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3.8	45.9	9.2	1.1	-
만19~24세	(1,348)	46.5	44.4	8.0	1.0	11.846
만25~29세	(1,343)	40.5	48.4	9.9	1.2	
만30~34세	(1,341)	44.4	44.8	9.7	1.0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가구유형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92.5%),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90.2%),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92.4%) 집단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9.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 존재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3.8	45.9	9.2	1.1	-
성별	남성	(2,000)	41.0	45.9	11.6	1.6	39.691***
	여성	(2,032)	46.6	45.9	6.8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1.9	45.4	9.8	2.9	19.411**
	대학교(재/졸)	(3,356)	44.2	45.9	9.0	0.9	
	대학원(재/졸)	(194)	41.2	46.4	11.9	0.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8.1	49.6	10.3	2.0	62.076***
	청년 독립가구	(1,141)	40.5	46.3	11.8	1.4	
	청년 동거가구	(1,976)	48.4	44.0	7.1	0.5	
	기타	(10)	30.0	40.0	3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44.7	45.1	9.0	1.1	6.457
	충청권	(418)	44.7	46.2	8.4	0.7	
	전라권	(351)	42.2	47.0	10.0	0.9	
	경상권	(911)	41.2	48.0	9.7	1.2	
	강원/제주	(152)	48.0	41.4	9.2	1.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5.3	45.0	8.6	1.1	4.798
	비빈곤층	(1,931)	42.3	46.8	9.9	1.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2.4	46.6	9.9	1.1	5.154
	중위소득 미만	(1,904)	45.4	45.1	8.4	1.1	

* $p < .05$, ** $p < .01$, *** $p < .001$

(4)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 응답이 85.9%(매우: 41.2% + 조금 그런 편: 44.8%)로 '비동의' 응답 14.1%(전혀: 1.9%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2.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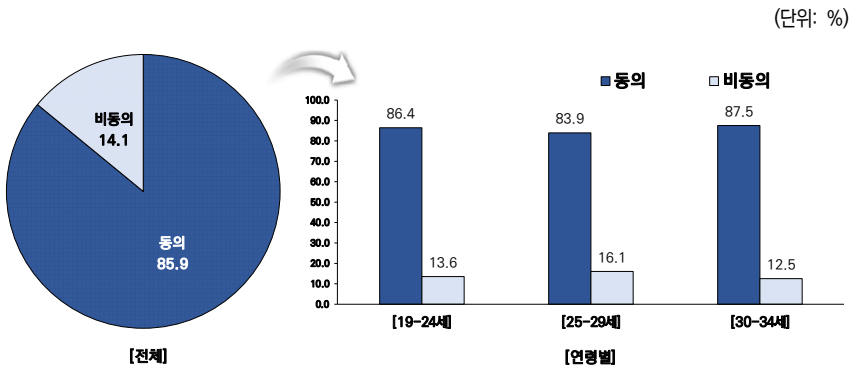


그림 IV-25.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표 IV-50.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1.2	44.8	12.2	1.9	-
만19~24세	(1,348)	42.2	44.2	11.9	1.6	12.441
만25~29세	(1,343)	38.3	45.6	13.6	2.5	
만30~34세	(1,341)	43.0	44.4	11.0	1.6	

* $p < .05$, ** $p < .01$, *** $p < .001$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가구 유형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7.8%),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87.1%),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8.3%) 집단에서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1.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졸업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1.2	44.8	12.2	1.9	-
성별	남성	(2,000)	40.0	44.1	13.6	2.4	12.644**
	여성	(2,032)	42.3	45.5	10.7	1.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5.3	44.2	16.6	3.9	29.513***
	대학교(재/졸)	(3,356)	42.1	45.0	11.3	1.6	
	대학원(재/졸)	(194)	40.2	41.8	16.0	2.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7.9	47.2	13.4	1.5	29.169***
	청년 독립가구	(1,141)	39.5	43.2	14.8	2.5	
	청년 동거가구	(1,976)	43.7	44.6	10.0	1.8	
	기타	(10)	30.0	40.0	3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41.7	44.9	11.7	1.7	5.144
	충청권	(418)	41.6	42.8	12.7	2.9	
	전라권	(351)	40.2	44.7	13.4	1.7	
	경상권	(911)	40.7	44.8	12.5	2.0	
	강원/제주	(152)	37.5	48.7	11.8	2.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2.2	44.1	11.9	1.9	2.032
	비빈곤층	(1,931)	40.0	45.5	12.5	2.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0.9	45.2	12.1	1.7	0.951
	중위소득 미만	(1,904)	41.4	44.3	12.2	2.1	

* $p < .05$, ** $p < .01$, *** $p < .001$

(5)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6.8%(매우: 30.2% + 조금 그런 편: 56.6%)로 '불필요' 응답 13.2%(전혀: 1.3%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 졸업 이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85.8%, 25~29세: 86.6%, 30~34세: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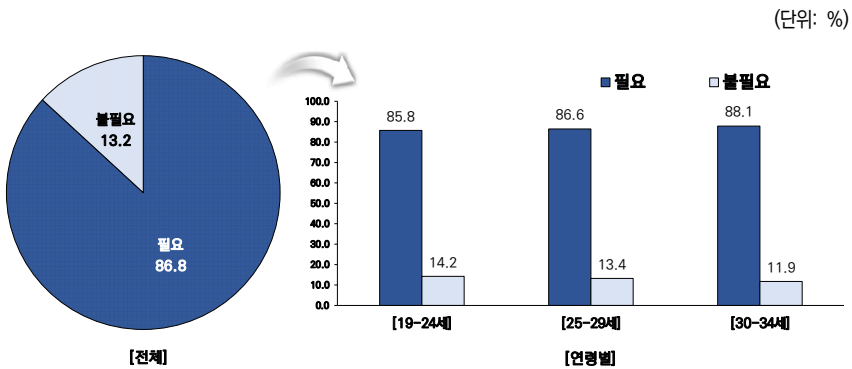


그림 IV-2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표 IV-52.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전체	(4,032)	30.2	56.6	11.9	1.3	-
만19~24세	(1,348)	29.5	56.3	12.2	2.1	14.486*
만25~29세	(1,343)	29.3	57.3	12.2	1.2	
만30~34세	(1,341)	32.0	56.2	11.3	0.6	

* $p < .05$, ** $p < .01$, *** $p < .001$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9.8%),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9.3%),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89.1%),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87.0%) 집단에서 졸업 이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3.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30.2	56.6	11.9	1.3	-
성별	남성	(2,000)	27.1	56.8	14.3	1.9	42.127***
	여성	(2,032)	33.3	56.4	9.5	0.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0.7	52.7	14.9	1.7	8.574
	대학교(재/졸)	(3,356)	30.0	57.3	11.4	1.3	
	대학원(재/졸)	(194)	33.0	53.6	12.9	0.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7.0	57.5	13.9	1.7	33.865***
	청년 독립가구	(1,141)	27.3	57.3	13.8	1.5	
	청년 동거가구	(1,976)	33.4	55.9	9.7	1.0	
	기타	(10)	30.0	40.0	3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30.6	55.9	12.3	1.2	10.879
	충청권	(418)	30.6	54.8	12.2	2.4	
	전라권	(351)	25.6	61.0	12.0	1.4	
	경상권	(911)	30.7	57.4	11.0	0.9	
	강원/제주	(152)	30.9	57.2	10.5	1.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2.7	56.4	9.6	1.3	27.883***
	비빈곤층	(1,931)	27.6	56.9	14.3	1.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8.3	58.3	12.4	1.0	11.794**
	중위소득 미만	(1,904)	32.4	54.7	11.3	1.6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학교 졸업 이후에 직업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N=3,501)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이 부족해서’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이 부족해 졸업 이후 직업훈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19~24세: 41.6%, 25~29세: 38.5%, 30~34세: 3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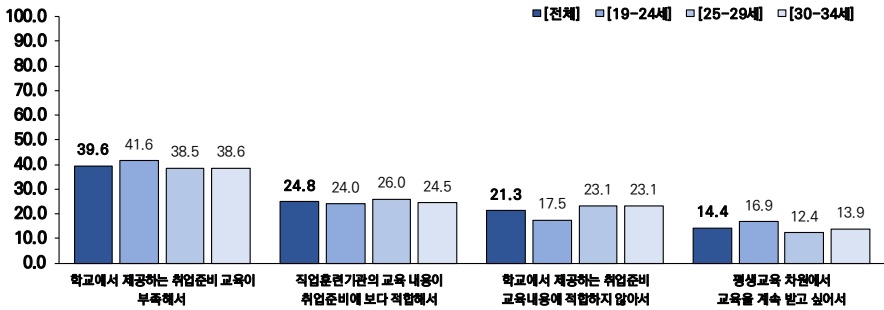


그림 IV-27.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표 IV-54.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이 부족해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내용이 취업준비에 보다 적합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내용에 적합하지 않아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서	χ^2
전체	(3,501)	39.6	24.8	21.3	14.4	-
만19~24세	(1,156)	41.6	24.0	17.5	16.9	22.802***
만25~29세	(1,163)	38.5	26.0	23.1	12.4	
만30~34세	(1,182)	38.6	24.5	23.1	13.9	

*p<.05, **p<.01, ***p<.001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44.8%), 가구유형별로는 기타(87.1%), 권역별로는 경상권(43.1%),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39.6%),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42.2%) 집단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5.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이 부족해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내용이 취업준비에 보다 적합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내용에 적합하지 않아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서	χ^2
전체	(3,501)	39.6	24.8	21.3	14.4	-
성별	남성 (1,677)	33.8	26.3	26.0	13.9	64.367***
	여성 (1,824)	44.8	23.5	16.9	14.8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402)	41.0	25.4	19.2	14.4	8.729
	대학교(재/졸) (2,931)	39.8	24.9	21.1	14.2	
	대학원(재/졸) (168)	32.1	22.6	28.6	16.7	
가구유형	청년 부부 가구 (764)	34.9	26.6	26.8	11.6	47.701***
	청년 독립가구 (966)	36.4	26.2	23.1	14.3	
	청년 동거가구 (1,764)	43.2	23.2	17.9	15.6	
	기타 (7)	57.1	42.9	0.0	0.0	
권역별	수도권 (1,903)	39.3	26.2	21.7	12.9	32.759**
	충청권 (357)	35.3	24.9	20.7	19.0	
	전라권 (304)	41.1	22.7	21.7	14.5	
	경상권 (803)	43.1	20.7	21.3	14.9	
	강원/제주 (134)	30.6	34.3	15.7	19.4	
주관적 계층	빈곤층 (1,871)	39.5	24.7	23.2	12.6	16.303***
	비빈곤층 (1,630)	39.6	24.9	19.0	16.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844)	37.1	25.6	24.3	13.0	29.026***
	중위소득 미만 (1,657)	42.2	24.0	17.9	15.9	

* $p < .05$, ** $p < .01$, *** $p < .001$

(7)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 응답이 66.9%(매우: 11.6% + 조금 그런 편: 55.2%)로 ‘불충분’ 응답 33.1%(전혀: 4.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70.3%, 25~29세: 67.9%, 30~34세: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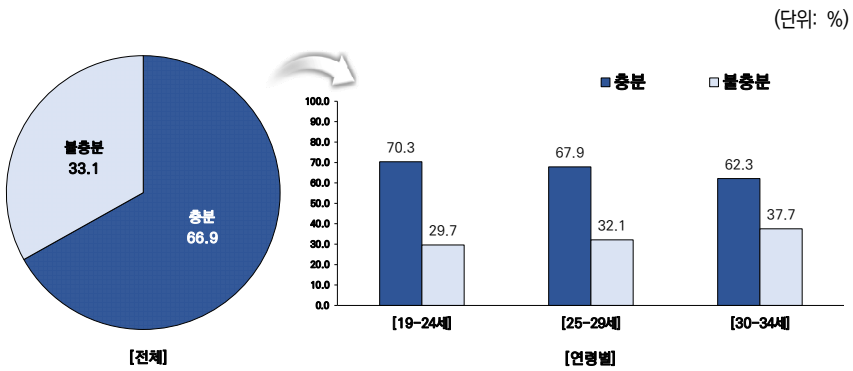


그림 IV-28.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표 IV-56.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11.6	55.2	29.0	4.1	-
만19~24세	(1,348)	13.9	56.4	26.1	3.6	28.888***
만25~29세	(1,343)	10.9	57.0	28.6	3.5	
만30~34세	(1,341)	10.1	52.3	32.4	5.3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권역,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79.4%), 권역별로는 전라권(70.1%),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73.7%) 집단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7.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 수혜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11.6	55.2	29.0	4.1	-
성별	남성	(2,000)	12.2	56.0	27.6	4.2	4.339
	여성	(2,032)	11.1	54.5	30.4	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7.1	42.3	40.0	10.6	119.851***
	대학교(재/졸)	(3,356)	11.9	56.8	28.0	3.3	
	대학원(재/졸)	(194)	19.1	60.3	18.6	2.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11.7	57.5	27.6	3.2	10.274
	청년 독립가구	(1,141)	10.9	54.3	29.8	5.1	
	청년 동가가구	(1,976)	12.0	54.9	29.1	3.9	
	기타	(10)	20.0	30.0	4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12.5	54.5	28.3	4.7	33.348***
	충청권	(418)	11.5	50.5	32.3	5.7	
	전라권	(351)	6.0	64.1	27.9	2.0	
	경상권	(911)	11.7	56.4	29.0	2.9	
	강원/제주	(152)	11.2	52.0	32.9	3.9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9.2	51.4	33.4	6.0	101.795***
	비빈곤층	(1,931)	14.2	59.5	24.3	2.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0.8	56.7	28.9	3.6	7.712
	중위소득 미만	(1,904)	12.6	53.6	29.1	4.7	

* $p < .05$, ** $p < .01$, *** $p < .001$

(8)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충분’ 응답이 54.3%(전혀: 9.4%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44.9%)로 ‘충분’ 응답 45.7%(매우: 7.5% + 조금 그런 편: 3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9~24세: 51.0%, 25~29세: 52.0%, 30~34세: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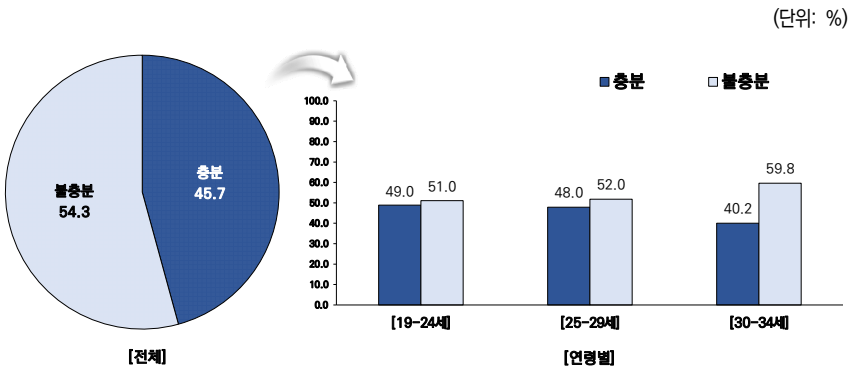


그림 IV-29.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표 IV-58.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7.5	38.2	44.9	9.4	-
만19~24세	(1,348)	8.6	40.4	43.0	8.1	28.566***
만25~29세	(1,343)	8.1	39.9	42.9	9.1	
만30~34세	(1,341)	5.9	34.3	48.8	11.0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60.2%),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57.9%),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57.4%),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빈곤층(55.3%) 집단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9.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7.5	38.2	44.9	9.4	-	
성별	남성	(2,000)	10.2	41.7	38.9	9.3	80.023***
	여성	(2,032)	5.0	34.8	50.8	9.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9.8	32.4	45.2	12.7	18.255**
	대학교(재/졸)	(3,356)	7.2	38.9	45.2	8.8	
	대학원(재/졸)	(194)	8.8	40.7	39.2	11.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8.4	42.8	41.2	7.6	24.206**
	청년 독립가구	(1,141)	8.2	38.7	43.0	10.2	
	청년 동거가구	(1,976)	6.7	35.9	47.7	9.7	
	기타	(10)	20.0	30.0	4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7.6	37.7	44.8	9.9	9.163
	충청권	(418)	7.9	34.0	48.6	9.6	
	전라권	(351)	7.4	40.7	43.6	8.3	
	경상권	(911)	7.6	40.6	43.1	8.7	
	강원/제주	(152)	5.9	36.2	49.3	8.6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8.5	36.2	43.0	12.2	51.660***
	비빈곤층	(1,931)	6.5	40.3	46.9	6.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7.9	39.0	43.6	9.5	3.368
	중위소득 미만	(1,904)	7.1	37.3	46.3	9.2	

* $p < .05$, ** $p < .01$, *** $p < .001$

(9)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 응답이 83.3%(매우: 30.8% + 조금 그런 편: 52.6%)로 '비동의' 응답 16.7%(전혀: 2.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4.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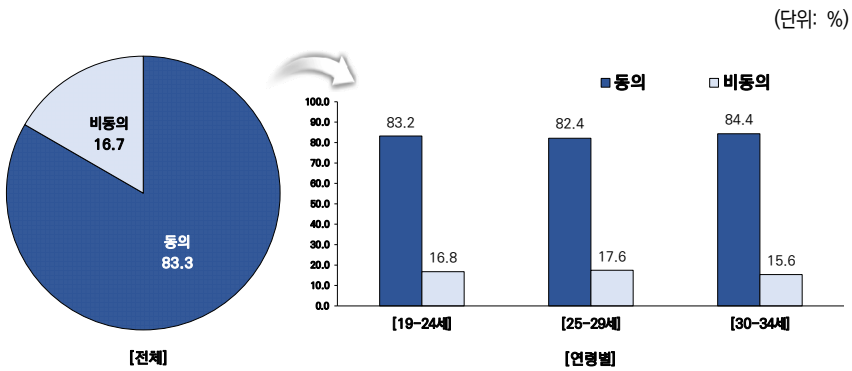


그림 IV-30.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표 IV-60.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30.8	52.6	14.6	2.0	-
만19~24세	(1,348)	30.3	52.8	14.7	2.2	2.490
만25~29세	(1,343)	30.6	51.8	15.3	2.2	
만30~34세	(1,341)	31.4	53.0	13.9	1.7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권역,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5.5%), 권역별로는 전라권(85.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83.9%) 집단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1.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30.8	52.6	14.6	2.0	-
성별	남성	(2,000)	30.6	51.4	15.8	2.3	6.241
	여성	(2,032)	31.0	53.7	13.5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7.0	52.9	17.0	3.1	11.279
	대학교(재/졸)	(3,356)	31.4	52.5	14.3	1.8	
	대학원(재/졸)	(194)	28.9	52.6	14.9	3.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6.4	56.4	14.9	2.3	30.922***
	청년 독립가구	(1,141)	31.4	48.9	17.3	2.5	
	청년 동거가구	(1,976)	32.4	53.0	12.9	1.7	
	기타	(10)	30.0	30.0	4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31.5	52.4	14.0	2.0	22.028*
	충청권	(418)	31.6	48.6	16.7	3.1	
	전라권	(351)	23.9	61.5	14.0	0.6	
	경상권	(911)	31.5	50.9	15.5	2.1	
	강원/제주	(152)	28.9	55.3	13.8	2.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3.1	50.8	14.2	1.9	10.988*
	비빈곤층	(1,931)	28.3	54.4	15.1	2.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0.6	52.3	14.9	2.2	0.660
	중위소득 미만	(1,904)	30.9	52.8	14.3	1.9	

* $p < .05$, ** $p < .01$, *** $p < .001$

(10)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 빈곤층’ 응답이 72.2%(전혀: 23.8%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48.4%)로 ‘교육 빈곤층’ 응답 27.8%(매우: 5.2% + 조금 그런 편: 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못받은 교육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23.2%, 25~29세: 28.6%, 30~34세: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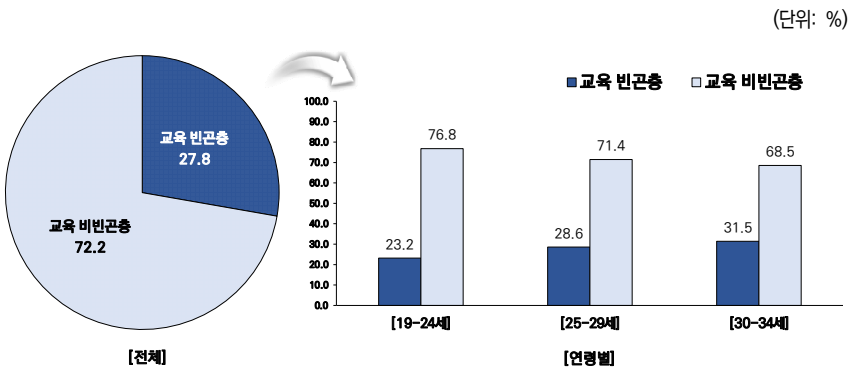


그림 IV-31.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표 IV-62.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5.2	22.5	48.4	23.8	-
만19~24세	(1,348)	4.7	18.5	48.1	28.7	41.959***
만25~29세	(1,343)	4.5	24.1	49.5	21.9	
만30~34세	(1,341)	6.5	25.0	47.7	20.9	

* $p < .05$, ** $p < .01$, *** $p < .001$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32.2%),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48.1%), 가구유형별로는 기타(40.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45.0%)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못받은 교육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3.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5.2	22.5	48.4	23.8	-
성별	남성	(2,000)	6.6	25.7	47.6	20.2	53.224***
	여성	(2,032)	3.9	19.5	49.2	27.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2.9	35.3	38.8	13.1	150.230***
	대학교(재/졸)	(3,356)	4.2	20.7	50.4	24.8	
	대학원(재/졸)	(194)	4.1	23.2	38.7	34.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6.7	30.3	43.6	19.3	99.268***
	청년 독립가구	(1,141)	6.3	24.8	48.5	20.4	
	청년 동가구	(1,976)	3.8	17.7	50.7	27.8	
	기타	(10)	20.0	20.0	30.0	30.0	
권역별	수도권	(2,200)	5.2	21.5	47.3	26.1	20.738
	충청권	(418)	5.3	23.4	51.2	20.1	
	전라권	(351)	5.1	28.2	47.3	19.4	
	경상권	(911)	5.5	22.5	49.6	22.4	
	강원/제주	(152)	3.9	23.0	52.6	20.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9.5	35.5	44.3	10.7	812.364***
	비빈곤층	(1,931)	0.6	8.4	52.9	38.1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9	23.4	49.4	22.4	7.156
	중위소득 미만	(1,904)	5.6	21.6	47.3	25.5	

* $p < .05$, ** $p < .01$, *** $p < .001$

3)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정책요구

(1)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관한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효과성 인식

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87.9%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12.1%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51.7%) 응답이 ‘수혜 받음’(48.3%)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81.2%(매우: 42.4% + 조금 그런 편: 38.8%)로 ‘부정’ 응답 18.8%(전혀: 5.4%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3.4%)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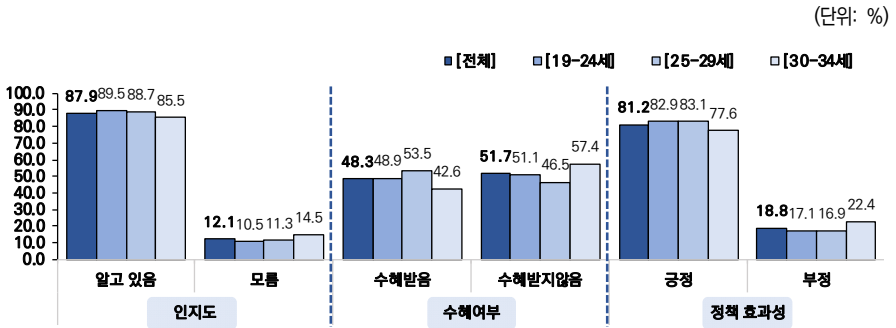


그림 IV-32. 대학생 국가장학금

표 IV-64. 대학생 국가장학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87.9	12.1	-	48.3	51.7	-	81.2	18.8	-
만19~24세	(1,348)	89.5	10.5	11.694 **	48.9	51.1	32.088 ***	82.9	17.1	86.266 ***
만25~29세	(1,343)	88.7	11.3		53.5	46.5		83.1	16.9	
만30~34세	(1,341)	85.5	14.5		42.6	57.4		77.6	22.4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 국가장학금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별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1인가구 중위 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주관적 계층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5. 대학생 국가장학금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87.9	12.1	-	48.3	51.7	-	81.2	18.8	-
성별	남성 (2,000)	83.5	16.6	73.766 ***	45.3	54.7	14.432 ***	78.6	21.5	24.270 ***
	여성 (2,032)	92.3	7.7		51.3	48.7		83.8	1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72.6	27.4	139.770 ***	13.7	86.3	272.251 ***	72.2	27.8	70.757 ***
	대학교(재/졸) (3,356)	90.6	9.4		53.6	46.4		82.7	17.3	
	대학원(재/졸) (194)	79.9	20.1		42.3	57.7		77.8	22.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82.1	17.9	88.826 ***	40.7	59.3	33.230 ***	78.0	22.0	68.701 ***
	청년 독립가구 (1,141)	85.0	15.0		48.9	51.1		79.3	20.7	
	청년 동거가구 (1,976)	92.4	7.6		51.6	48.4		84.0	16.0	
	기타 (10)	50.0	50.0		20.0	80.0		40.0	60.0	
권역별	수도권 (2,200)	87.7	12.3	6.907	45.9	54.1	20.624 ***	79.3	20.7	27.512 **
	충청권 (418)	86.1	13.9		45.5	54.5		79.4	20.6	
	전라권 (351)	87.7	12.3		55.0	45.0		84.9	15.1	
	경상권 (911)	88.3	11.7		51.7	48.3		84.9	15.1	
	강원/제주 (152)	94.1	5.9		55.9	44.1		83.6	16.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86.2	13.8	11.914 ***	51.2	48.8	14.777 ***	80.4	19.6	3.677
	비빈곤층 (1,931)	89.7	10.3		45.2	54.8		82.0	18.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87.0	13.0	3.182	48.3	51.7	0.005	80.3	19.7	28.177 ***
	중위소득 미만 (1,904)	88.9	11.1		48.4	51.6		82.2	17.8	

* $p < .05$, ** $p < .01$, *** $p < .001$

나.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5.1%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4.9%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5%) 응답이 '수혜 받음'(4.5%)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1.4%(매우: 13.8% + 조금 그런 편: 47.6%)로 '부정' 응답 38.6%(전혀: 9.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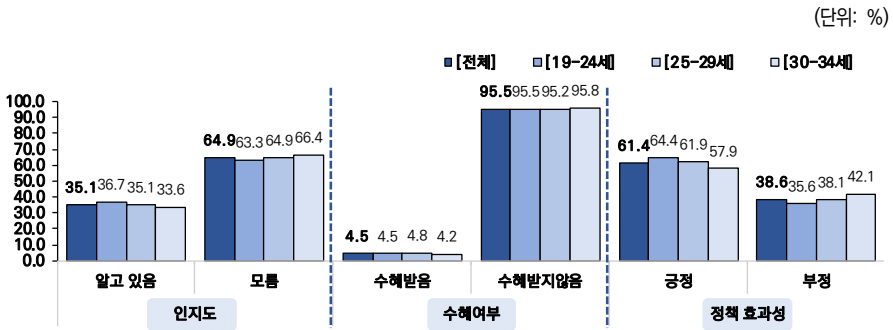


그림 IV-33.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표 IV-66.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5.1	64.9	-	4.5	95.5	-	61.4	38.6	-
만19~24세	(1,348)	36.7	63.3	2.820	4.5	95.5	0.550	64.4	35.6	13.957*
만25~29세	(1,343)	35.1	64.9		4.8	95.2		61.9	38.1	
만30~34세	(1,341)	33.6	66.4		4.2	95.8		57.9	42.1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가구 유형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7.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5.1	64.9	-	4.5	95.5	-	61.4	38.6	-
성별	남성 (2,000)	34.1	65.9	1.897	5.9	94.1	18.425 ***	57.5	42.5	37.735 ***
	여성 (2,032)	36.2	63.8		3.1	96.9		65.3	3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9.7	70.3	8.175*	5.0	95.0	1.794	60.0	40.0	8.545
	대학교(재/졸) (3,356)	35.7	64.3		4.3	95.7		61.9	38.1	
	대학원(재/졸) (194)	39.2	60.8		6.2	93.8		57.2	42.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9.7	60.3	13.866 **	7.6	92.4	54.173 ***	60.6	39.4	30.834 ***
	청년 독립가구 (1,141)	35.0	65.0		6.1	93.9		61.9	38.1	
	청년 동거가구 (1,976)	33.3	66.7		2.1	97.9		61.7	38.3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33.6	66.4	5.591	4.5	95.5	0.566	59.3	40.7	20.351
	충청권 (418)	35.9	64.1		3.8	96.2		62.7	37.3	
	전라권 (351)	37.3	62.7		4.8	95.2		64.4	35.6	
	경상권 (911)	37.1	62.9		4.6	95.4		65.3	34.7	
	강원/제주 (152)	38.8	61.2		4.6	95.4		58.6	41.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6.5	63.5	3.573	5.4	94.6	8.981 **	61.1	38.9	26.222 ***
	비빈곤층 (1,931)	33.7	66.3		3.5	96.5		61.7	38.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6.4	63.6	2.983	4.9	95.1	2.082	60.1	39.9	11.083*
	중위소득 미만 (1,904)	33.8	66.2		4.0	96.0		62.9	37.1	

* $p < .05$, ** $p < .01$, *** $p < .001$

다.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0.3%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9.7%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8%) 응답이 ‘수혜 받음’(3.2%)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8.3%(매우: 13.1% + 조금 그런 편: 45.1%)로 ‘부정’ 응답 41.7%(전혀: 10.5%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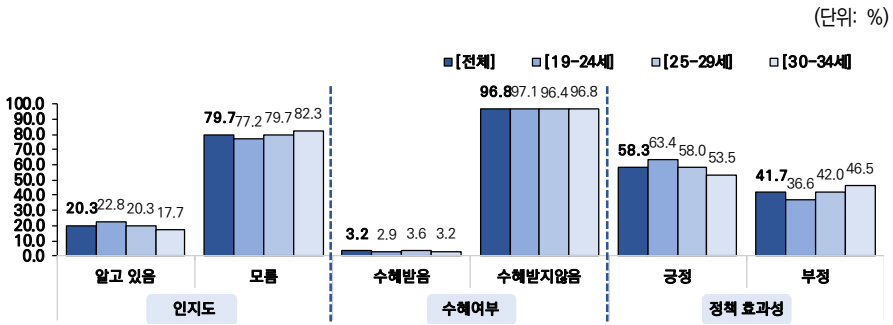


그림 IV-34.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표 IV-68.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0.3	79.7	-	3.2	96.8	-	58.3	41.7	-
만19~24세	(1,348)	22.8	77.2	11.144 **	2.9	97.1	1.233	63.4	36.6	36.875 ***
만25~29세	(1,343)	20.3	79.7		3.6	96.4		58.0	42.0	
만30~34세	(1,341)	17.7	82.3		3.2	96.8		53.5	46.5	

* $p < .05$, ** $p < .01$, *** $p < .001$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9.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0.3	79.7		3.2	96.8		58.3	41.7		
성별	남성 (2,000)	22.4	77.6	11.218	4.3	95.7	13.945	54.6	45.5	26.445	
	여성 (2,032)	18.2	81.8	***	2.2	97.8	***	62.0	38.0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4.1	75.9	4.959	3.7	96.3	1.794	61.2	38.8	19.740	
	대학교(재/졸) (3,356)	19.8	80.2		3.1	96.9		58.1	41.9		**
	대학원(재/졸) (194)	19.1	80.9		4.6	95.4		53.6	46.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7.1	72.9	40.333	6.5	93.5	42.441	57.3	42.7	34.884	
	청년 독립가구 (1,141)	20.4	79.6		3.0	97.0		59.2	40.8		***
	청년 동거가구 (1,976)	17.2	82.8		1.9	98.1		58.5	41.5		***
	기타 (10)	0.0	10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19.0	81.0	6.540	3.2	96.8	2.679	55.8	44.2	22.244	
	충청권 (418)	23.0	77.0		3.3	96.7		62.4	37.6		
	전라권 (351)	19.1	80.9		2.8	97.2		61.0	39.0		
	경상권 (911)	22.0	78.0		3.7	96.3		60.6	39.4		
	강원/제주 (152)	23.0	77.0		1.3	98.7		63.2	36.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2.4	77.6	12.609	4.0	96.0	7.831	58.7	41.3	31.578	
	비빈곤층 (1,931)	17.9	82.1	***	2.4	97.6	**	57.8	42.2	***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9.9	80.1	0.319	3.7	96.3	2.486	56.0	44.0	12.123	
	중위소득 미만 (1,904)	20.6	79.4		2.8	97.2		60.8	39.2	**	

* $p < .05$, ** $p < .01$, *** $p < .001$

라.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0.2%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9.8%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5%) 응답이 '수혜 받음'(3.5%)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8.6%(매우: 13.4% + 조금 그런 편: 45.2%)로 '부정' 응답 41.4%(전혀: 10.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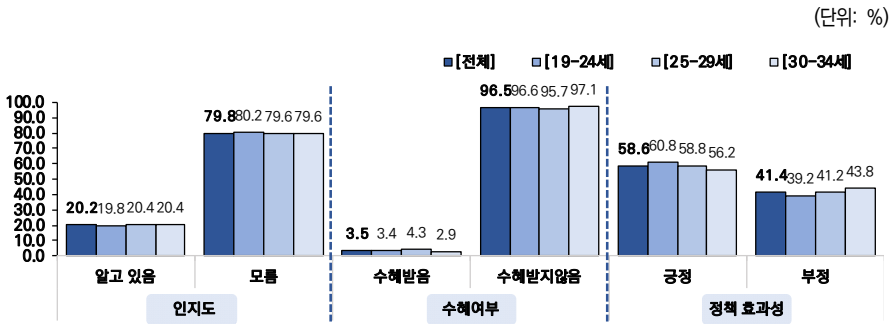


그림 IV-35.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표 IV-70.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0.2	79.8	-	3.5	96.5	-	58.6	41.4	-
만19~24세	(1,348)	19.8	80.2	0.184	3.4	96.6	4.009	60.8	39.2	8.405
만25~29세	(1,343)	20.4	79.6		4.3	95.7		58.8	41.2	
만30~34세	(1,341)	20.4	79.6		2.9	97.1		56.2	43.8	

* $p < .05$, ** $p < .01$, *** $p < .001$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가구유형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및 가구유형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0.2	79.8	-	3.5	96.5	-	58.6	41.4	-
성별	남성 (2,000)	22.9	77.1	18.108	4.6	95.5	11.679	56.0	44.1	16.120
	여성 (2,032)	17.5	82.5	***	2.6	97.4	***	61.2	38.8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7.4	82.6	3.473	3.9	96.1	1.038	58.1	41.9	6.108
	대학교(재/졸) (3,356)	20.4	79.6		3.4	96.6		58.8	41.2	
	대학원(재/졸) (194)	23.2	76.8		4.6	95.4		55.7	44.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4.9	75.1	18.953	6.5	93.5	35.472	57.7	42.3	30.055
	청년 독립가구 (1,141)	19.8	80.2		3.7	96.3		58.0	42.0	
	청년 동거가구 (1,976)	18.4	81.6		2.1	97.9		59.6	40.4	
	기타 (10)	0.0	10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20.3	79.7	3.026	3.3	96.7	2.522	57.4	42.6	14.710
	충청권 (418)	17.7	82.3		3.1	96.9		58.1	41.9	
	전라권 (351)	20.5	79.5		4.3	95.7		59.8	40.2	
	경상권 (911)	21.4	78.6		4.2	95.8		61.3	38.7	
	강원/제주 (152)	17.8	82.2		2.6	97.4		57.9	42.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1.0	79.0	1.963	4.1	95.9	3.832	56.5	43.5	26.689
	비빈곤층 (1,931)	19.3	80.7		3.0	97.0		60.8	39.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1.1	78.9	2.322	3.7	96.3	0.186	57.8	42.2	8.366*
	중위소득 미만 (1,904)	19.2	80.8		3.4	96.6		59.5	40.5	

* $p < .05$, ** $p < .01$, *** $p < .001$

마.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17.4%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82.6%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8%) 응답이 ‘수혜 받음’(3.2%)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6.7%(매우: 13.1% + 조금 그런 편: 43.5%)로 ‘부정’ 응답 43.3%(전혀: 11.2%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2.2%)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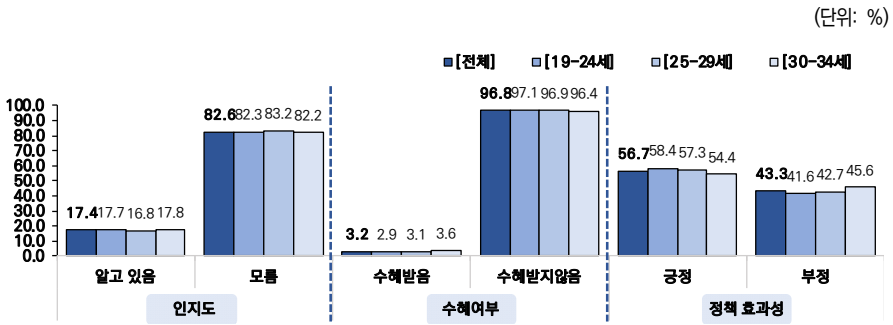


그림 IV-36.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표 IV-72.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7.4	82.6	-	3.2	96.8	-	56.7	43.3	-
만19~24세	(1,348)	17.7	82.3	0.618	2.9	97.1	1.127	58.4	41.6	7.254
만25~29세	(1,343)	16.8	83.2		3.1	96.9		57.3	42.7	
만30~34세	(1,341)	17.8	82.2		3.6	96.4		54.4	45.6	

* $p < .05$, ** $p < .01$, *** $p < .001$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1인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3.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7.4	82.6	-	3.2	96.8	-	56.7	43.3	-
성별	남성 (2,000)	20.2	79.8	21.472	4.5	95.6	21.001	53.1	47.0	33.698
	여성 (2,032)	14.7	85.3	***	1.9	98.1	***	60.2	39.8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6.4	83.6	4.947	5.2	94.8	10.600 **	55.6	44.4	10.266
	대학교(재/졸) (3,356)	17.2	82.8		2.8	97.2		56.9	43.1	
	대학원(재/졸) (194)	23.2	76.8		5.2	94.8		54.6	45.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3.1	76.9	34.214 ***	6.2	93.8	43.015 ***	55.4	44.6	31.188 ***
	청년 독립가구 (11,41)	18.1	81.9		3.5	96.5		55.9	44.1	
	청년 동거가구 (1,976)	14.5	85.5		1.6	98.4		57.9	42.1	
	기타 (10)	0.0	10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16.8	83.2	9.387	3.3	96.7	2.620	54.5	45.5	23.681*
	충청권 (418)	15.3	84.7		2.2	97.8		55.3	44.7	
	전라권 (351)	22.8	77.2		3.1	96.9		61.8	38.2	
	경상권 (911)	18.0	82.0		3.5	96.5		60.8	39.2	
	강원/제주 (152)	15.8	84.2		2.0	98.0		54.6	45.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18.2	81.8	2.045	4.1	95.9	12.045 ***	55.1	44.9	20.052 ***
	비빈곤층 (1,931)	16.5	83.5		2.2	97.8		58.4	41.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8.7	81.3	5.234*	3.8	96.2	5.014*	54.9	45.1	9.299*
	중위소득 미만 (1,904)	16.0	84.0		2.5	97.5		58.7	41.3	

* $p < .05$, ** $p < .01$, *** $p < .001$

바.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0.9%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9.1%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4%) 응답이 ‘수혜 받음’(3.6%)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5.8%(매우: 12.4% + 조금 그런 편: 43.4%)로 ‘부정’ 응답 44.2%(전혀: 10.7%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3.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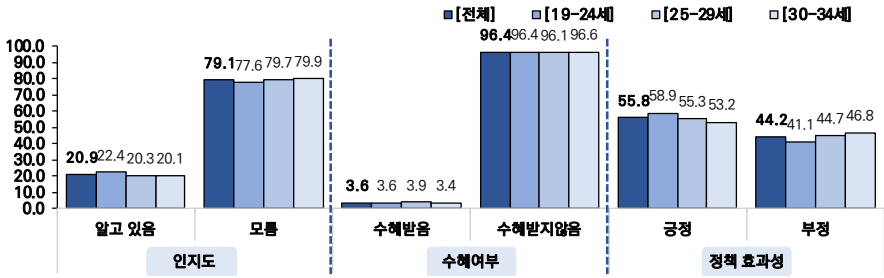


그림 IV-37.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표 IV-74.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0.9	79.1	-	3.6	96.4	-	55.8	44.2	-
만19~24세	(1,348)	22.4	77.6	2.677	3.6	96.4	0.373	58.9	41.1	11.990
만25~29세	(1,343)	20.3	79.7		3.9	96.1		55.3	44.7	
만30~34세	(1,341)	20.1	79.9		3.4	96.6		53.2	46.8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상 분야 인재양성 사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5.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상 분야 인재양성 사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0.9	79.1	-	3.6	96.4	-	55.8	44.2	-			
성별	남성	(2,000)	23.3	76.7	13.439	4.8	95.3	13.773	52.4	47.6	26.354		
	여성	(2,032)	18.6	81.4	***	2.6	97.4	***	59.2	40.8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9.5	80.5	1.200	3.5	96.5	0.147	56.8	43.2	8.466		
	대학교(재/졸)	(3,356)	21.2	78.8		3.6	96.4		55.6	44.4			
	대학원(재/졸)	(194)	19.1	80.9		4.1	95.9		57.7	42.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4.3	75.7	11.994	5.7	94.3	31.010	53.6	46.4	37.591		
	청년 독립가구	(1,141)	21.2	78.8		4.8	95.2		55.6	44.4			
	청년 동거가구	(1,976)	19.3	80.7		**	2.0		98.0	57.2		42.8	***
	기타	(10)	0.0	10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20.5	79.5	1.086	3.7	96.3	0.614	54.5	45.5	21.381*		
	충청권	(418)	22.5	77.5		3.3	96.7		56.7	43.3			
	전라권	(351)	21.7	78.3		3.7	96.3		57.5	42.5			
	경상권	(911)	21.2	78.8		3.7	96.3		57.3	42.7			
	강원/제주	(152)	20.4	79.6		2.6	97.4		59.2	40.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2.6	77.4	7.443	4.7	95.3	14.197	55.4	44.6	19.895		
	비빈곤층	(1,931)	19.1	80.9	**	2.5	97.5	***	56.3	43.7	***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0.5	79.5	0.429	3.9	96.1	1.166	54.7	45.3	3.344		
	중위소득 미만	(1,904)	21.4	78.6		3.3	96.7		57.1	42.9			

* $p < .05$, ** $p < .01$, *** $p < .001$

사.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3.9%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6.1%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7%) 응답이 ‘수혜 받음’(4.3%)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1.0%(매우: 16.6% + 조금 그런 편: 44.4%)로 ‘부정’ 응답 39.0%(전혀: 10.2%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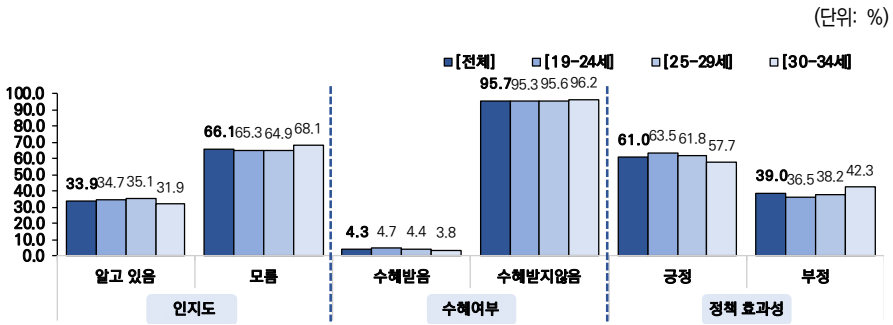


그림 IV-38.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표 IV-76.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3.9	66.1	-	4.3	95.7	-	61.0	39.0	-
만19~24세	(1,348)	34.7	65.3	3.578	4.7	95.3	1.292	63.5	36.5	18.659*
만25~29세	(1,343)	35.1	64.9		4.4	95.6		61.8	38.2	
만30~34세	(1,341)	31.9	68.1		3.8	96.2		57.7	42.3	

* $p < .05$, ** $p < .01$, *** $p < .001$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권역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권역 및 1인 가구 중위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7.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3.9	66.1	-	4.3	95.7	-	61.0	39.0	-
성별	남성 (2000)	32.2	67.9	5.447 *	5.5	94.5	14.133 ***	55.5	44.5	51.933 ***
	여성 (2032)	35.6	64.4		3.1	96.9		66.4	33.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6.3	63.7	1.495	9.5	90.5	38.972 ***	60.6	39.4	18.570 **
	대학교(재/졸) (3356)	33.5	66.5		3.5	96.5		61.3	38.7	
	대학원(재/졸) (194)	34.5	65.5		5.7	94.3		57.2	42.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5.4	64.6	6.593	6.5	93.5	20.366 ***	58.7	41.3	29.278 ***
	청년 독립가구 (1141)	34.4	65.6		4.8	95.2		60.6	39.4	
	청년 동거가구 (1976)	33.1	66.9		3.0	97.0		62.6	37.4	
	기타 (10)	0.0	10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33.4	66.6	4.606	4.1	95.9	3.566	59.9	40.1	20.794
	충청권 (418)	32.3	67.7		3.8	96.2		59.3	40.7	
	전라권 (351)	32.2	67.8		4.0	96.0		61.8	38.2	
	경상권 (911)	35.7	64.3		5.3	94.7		63.8	36.2	
	강원/제주 (152)	39.5	60.5		2.6	97.4		63.2	36.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5.8	64.2	7.340 **	5.4	94.6	13.769 ***	60.8	39.2	13.793 **
	비빈곤층 (1931)	31.8	68.2		3.1	96.9		61.3	38.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5.2	64.8	3.614	4.5	95.5	0.331	60.3	39.7	7.758
	중위소득 미만 (1904)	32.4	67.6		4.1	95.9		61.8	38.2	

*p<.05, **p<.01, ***p<.001

아.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19.1%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80.9%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6%) 응답이 ‘수혜 받음’(3.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6.6%(매우: 13.1% + 조금 그런 편: 43.5%)로 ‘부정’ 응답 43.4%(전혀: 10.9%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2.5%)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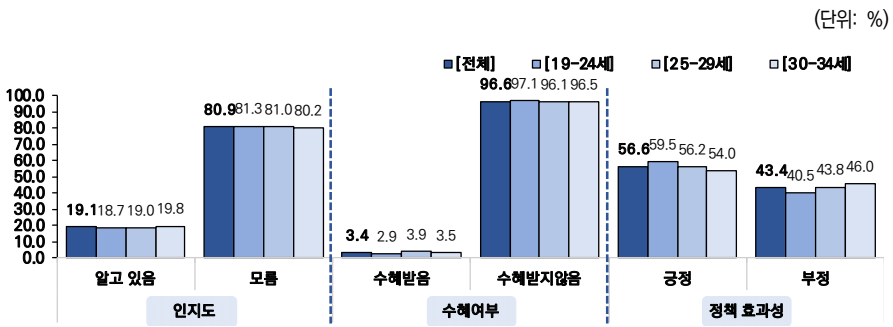


그림 IV-39.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표 IV-78.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9.1	80.9	-	3.4	96.6	-	56.6	43.4	-
만19~24세	(1,348)	18.7	81.3	0.527	2.9	97.1	2.262	59.5	40.5	10.766
만25~29세	(1,343)	19.0	81.0		3.9	96.1		56.2	43.8	
만30~34세	(1,341)	19.8	80.2		3.5	96.5		54.0	46.0	

* $p < .05$, ** $p < .01$, *** $p < .001$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9.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9.1	80.9	-	3.4	96.6	-	56.6	43.4	-
성별	남성 (2,000)	20.7	79.4	5.792 *	4.8	95.2	21.812 ***	52.1	48.0	43.187 ***
	여성 (2,032)	17.7	82.3		2.1	97.9		61.0	39.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9.7	80.3	0.675	4.1	95.9	5.760	54.1	45.9	7.199
	대학교(재/졸) (3,356)	19.2	80.8		3.2	96.8		57.0	43.0	
	대학원(재/졸) (194)	17.0	83.0		6.2	93.8		55.2	44.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4.2	75.8	25.815 ***	5.9	94.1	30.575 ***	57.2	42.8	23.787 **
	청년 독립가구 (1,141)	19.7	80.3		4.1	95.9		56.4	43.6	
	청년 동거가구 (1,976)	16.6	83.4		2.0	98.0		56.6	43.4	
	기타 (10)	0.0	10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18.4	81.6	4.974	3.0	97.0	4.354	54.6	45.4	17.572
	충청권 (418)	21.5	78.5		3.8	96.2		59.3	40.7	
	전라권 (351)	19.1	80.9		5.1	94.9		56.4	43.6	
	경상권 (911)	19.0	81.0		3.5	96.5		59.8	40.2	
	강원/제주 (152)	24.3	75.7		3.9	96.1		58.6	41.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1.8	78.2	19.935 ***	4.3	95.7	9.217 **	56.5	43.5	17.520 ***
	비빈곤층 (1,931)	16.3	83.7		2.5	97.5		56.6	43.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0.7	79.3	7.238 **	3.8	96.2	1.745	54.7	45.3	12.268 **
	중위소득 미만 (1,904)	17.4	82.6		3.0	97.0		58.7	41.3	

*p<.05, **p<.01, ***p<.001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19.8%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80.2%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2%) 응답이 ‘수혜 받음’(3.8%)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3.7%(매우: 12.4% + 조금 그런 편: 41.2%)로 ‘부정’ 응답 46.3%(전혀: 11.2%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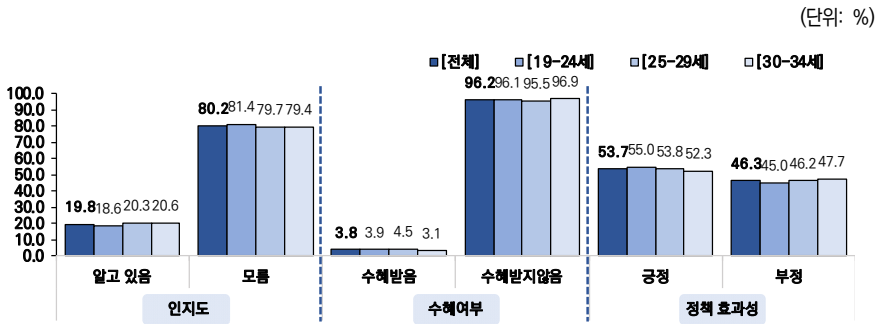


그림 IV-4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표 IV-8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9.8	80.2	-	3.8	96.2	-	53.7	46.3	-
만19~24세	(1,348)	18.6	81.4	1.869	3.9	96.1	3.280	55.0	45.0	7.733
만25~29세	(1,343)	20.3	79.7		4.5	95.5		53.8	46.2	
만30~34세	(1,341)	20.6	79.4		3.1	96.9		52.3	47.7	

* $p < .05$, ** $p < .01$, *** $p < .00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성별,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9.8	80.2	-	3.8	96.2	-	53.7	46.3	-
성별	남성 (2,000)	21.1	78.9	4.115*	4.9	95.2	10.860 ***	50.3	49.8	24.463 ***
	여성 (2,032)	18.6	81.4		2.9	97.1		57.0	43.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6.6	83.4	3.670	4.6	95.4	1.210	50.4	49.6	9.947
	대학교(재/졸) (3,356)	20.2	79.8		3.7	96.3		54.1	45.9	
	대학원(재/졸) (194)	21.1	78.9		4.6	95.4		54.1	45.9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4.4	75.6	24.747 ***	6.5	93.5	31.104 ***	55.0	45.0	33.069 ***
	청년 독립가구 (1,141)	21.0	79.0		4.4	95.6		53.1	46.9	
	청년 동거가구 (1,976)	17.1	82.9		2.3	97.7		53.5	46.5	
	기타 (10)	0.0	100.0		0.0	100.0		30.0	70.0	
권역별	수도권 (2,200)	19.6	80.4	1.270	3.8	96.2	1.941	51.5	48.5	17.994
	충청권 (418)	20.1	79.9		2.9	97.1		55.3	44.7	
	전라권 (351)	20.5	79.5		4.6	95.4		55.8	44.2	
	경상권 (911)	19.4	80.6		4.1	95.9		56.9	43.1	
	강원/제주 (152)	23.0	77.0		4.6	95.4		55.9	44.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0.7	79.3	1.950	4.6	95.4	6.238*	53.2	46.8	20.785 ***
	비빈곤층 (1,931)	18.9	81.1		3.1	96.9		54.2	45.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2.7	77.3	24.312 ***	4.0	96.0	0.474	52.7	47.3	7.361
	중위소득 미만 (1,904)	16.5	83.5		3.6	96.4		54.7	45.3	

*p<.05, **p<.01, ***p<.001

차.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4.6%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5.4%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2%) 응답이 '수혜 받음'(4.8%)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7.1%(매우: 16.5% + 조금 그런 편: 40.6%)로 '부정' 응답 42.9%(전혀: 12.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0.7%)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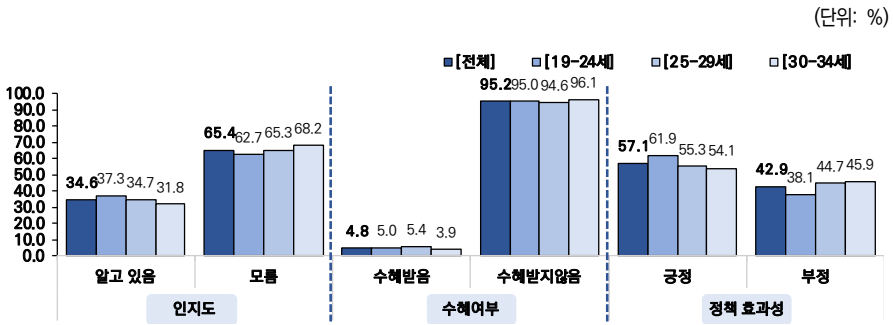


그림 IV-41.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표 IV-82.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4.6	65.4	-	4.8	95.2	-	57.1	42.9	-
만19~24세	(1,348)	37.3	62.7	8.900*	5.0	95.0	3.785	61.9	38.1	31.250***
만25~29세	(1,343)	34.7	65.3		5.4	94.6		55.3	44.7	
만30~34세	(1,341)	31.8	68.2		3.9	96.1		54.1	45.9	

*p<.05, **p<.01, ***p<.001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최종학력 1인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3.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4.6	65.4	-	4.8	95.2	-	57.1	42.9	-
성별	남성 (2,000)	44.2	55.8	160.803	7.4	92.7	58.613	58.2	41.8	32.318
	여성 (2,032)	25.2	74.8	***	2.2	97.8	***	56.1	43.9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8.4	71.6	10.762	3.9	96.1	1.099	57.7	42.3	7.975
	대학교(재/졸) (3,356)	35.7	64.3		4.8	95.2		57.3	42.7	
	대학원(재/졸) (194)	31.4	68.6		5.7	94.3		53.1	46.9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3.1	66.9	7.415	7.1	92.9	34.937	59.7	40.3	24.531
	청년 독립가구 (1,141)	36.2	63.8		6.4	93.6		55.7	44.3	
	청년 동거가구 (1,976)	34.6	65.4		2.8	97.2		57.1	42.9	
	기타 (10)	0.0	10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33.9	66.1	5.125	4.7	95.3	2.202	55.9	44.1	13.269
	충청권 (418)	37.8	62.2		5.3	94.7		59.8	40.2	
	전라권 (351)	33.6	66.4		6.0	94.0		57.3	42.7	
	경상권 (911)	34.2	65.8		4.2	95.8		58.7	41.3	
	강원/제주 (152)	40.8	59.2		5.3	94.7		58.6	41.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3.9	66.1	1.045	5.6	94.4	7.063	56.2	43.8	11.285
	비빈곤층 (1,931)	35.4	64.6		3.8	96.2		58.2	41.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3.1	66.9	4.723	4.8	95.2	0.061	54.6	45.4	20.871
	중위소득 미만 (1,904)	36.3	63.7		4.7	95.3		60.0	40.0	

*p<.05, **p<.01, ***p<.001

카.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3.5%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6.5%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7%) 응답이 '수혜 받음'(3.3%)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6.5%(매우: 12.7% + 조금 그런 편: 43.8%)로 '부정' 응답 43.5%(전혀: 11.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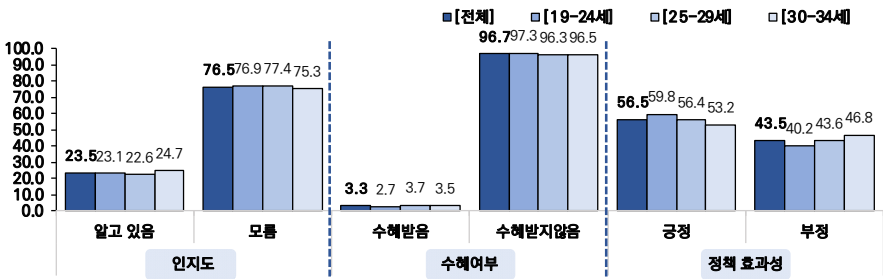


그림 IV-42.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표 IV-84.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5	76.5	-	3.3	96.7	-	56.5	43.5	-
만19~24세	(1,348)	23.1	76.9	1.696	2.7	97.3	2.209	59.8	40.2	25.310 ***
만25~29세	(1,343)	22.6	77.4		3.7	96.3		56.4	43.6	
만30~34세	(1,341)	24.7	75.3		3.5	96.5		53.2	46.8	

* $p < .05$, ** $p < .01$, *** $p < .001$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및 권역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5.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5	76.5	-	3.3	96.7	-	56.5	43.5	-
성별	남성 (2,000)	23.0	77.1	0.637	4.1	96.0	6.521*	52.4	47.7	39.723 ***
	여성 (2,032)	24.0	76.0		2.6	97.4		60.6	39.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9.7	80.3	4.978	3.7	96.3	2.562	56.8	43.2	19.785 **
	대학교(재/졸) (3,356)	24.1	75.9		3.2	96.8		56.8	43.2	
	대학원(재/졸) (194)	21.6	78.4		5.2	94.8		50.5	49.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7.6	72.4	16.624 ***	5.1	94.9	26.678 ***	55.9	44.1	28.975 ***
	청년 독립가구 (1,141)	24.0	76.0		4.5	95.5		56.2	43.8	
	청년 동거가구 (1,976)	21.4	78.6		1.9	98.1		57.1	42.9	
	기타 (10)	0.0	10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21.1	78.9	19.636 ***	3.4	96.6	4.422	54.0	46.0	34.627 ***
	충청권 (418)	24.9	75.1		2.2	97.8		58.4	41.6	
	전라권 (351)	29.3	70.7		4.6	95.4		63.0	37.0	
	경상권 (911)	25.2	74.8		3.5	96.5		59.6	40.4	
	강원/제주 (152)	30.3	69.7		2.0	98.0		54.6	45.4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4.6	75.4	2.809	4.2	95.8	10.218 **	56.6	43.4	10.145
	비빈곤층 (19,31)	22.3	77.7		2.4	97.6		56.3	43.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4.5	75.5	2.487	3.7	96.3	1.640	54.7	45.3	12.203 **
	중위소득 미만 (1,904)	22.4	77.6		2.9	97.1		58.5	41.5	

* $p < .05$, ** $p < .01$, *** $p < .001$

타.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5.7%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4.3%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3.6%) 응답이 ‘수혜 받음’(6.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1.6%(매우: 16.4% + 조금 그런 편: 45.2%)로 ‘부정’ 응답 38.4%(전혀: 10.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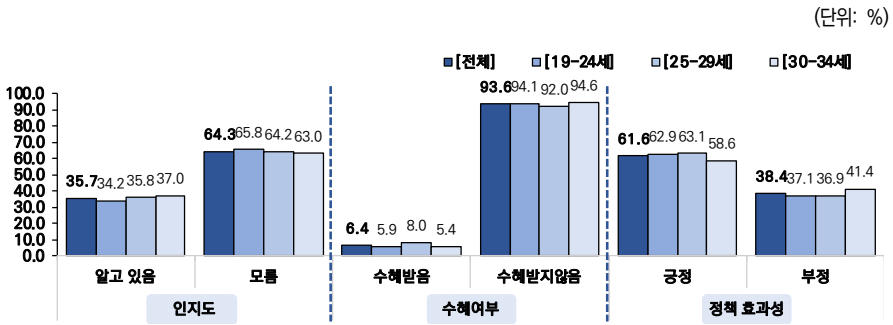


그림 IV-43.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표 IV-86.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5.7	64.3	-	6.4	93.6	-	61.6	38.4	-
만19~24세	(1,348)	34.2	65.8	2.298	5.9	94.1	7.969*	62.9	37.1	10.759
만25~29세	(1,343)	35.8	64.2		8.0	92.0		63.1	36.9	
만30~34세	(1,341)	37.0	63.0		5.4	94.6		58.6	41.4	

* $p < .05$, ** $p < .01$, *** $p < .001$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7.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5.7	64.3	-	6.4	93.6	-	61.6	38.4	-
성별	남성 (2,000)	32.8	67.2	14.194 ***	6.7	93.3	0.416	56.7	43.3	41.843 ***
	여성 (2,032)	38.5	61.5		6.2	93.8		66.3	33.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9.5	70.5	9.531 **	4.6	95.4	3.311	57.3	42.7	13.594*
	대학교(재/졸) (3,356)	36.6	63.4		6.7	93.3		62.2	37.8	
	대학원(재/졸) (194)	34.5	65.5		7.2	92.8		60.3	39.7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6.9	63.1	7.436	7.2	92.8	1.989	60.1	39.9	36.261 ***
	청년 독립가구 (1,141)	34.2	65.8		6.6	93.4		62.3	37.7	
	청년 동거가구 (1,976)	36.1	63.9		6.1	93.9		62.0	38.0	
	기타 (10)	0.0	10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36.0	64.0	5.840	6.6	93.4	1.239	60.1	39.9	25.906*
	충청권 (418)	31.1	68.9		6.9	93.1		62.9	37.1	
	전라권 (351)	33.9	66.1		6.6	93.4		63.5	36.5	
	경상권 (911)	37.5	62.5		6.1	93.9		63.7	36.3	
	강원/제주 (152)	36.8	63.2		4.6	95.4		61.2	38.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5.1	64.9	0.657	7.2	92.8	3.968*	60.8	39.2	16.153 **
	비빈곤층 (1,931)	36.3	63.7		5.6	94.4		62.4	37.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7.2	62.8	4.457*	7.0	93.0	1.916	60.4	39.6	8.231*
	중위소득 미만 (1,904)	34.0	66.0		5.9	94.1		62.9	37.1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순위 기준, '대학등록금 인하'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가 장학금 확대'(42.9%),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준비 지원 확대'(4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집단에서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24세: 55.2%, 25~29세: 55.7%, 30~34세: 54.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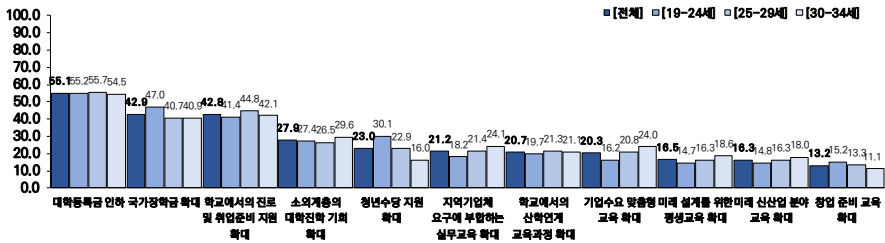


그림 IV-44.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표 IV-88.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학 등록금 인하	국가 장학금 확대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준비 지원 확대	소외계층의 대 학진학 기회 확대	청년 수당 지원 확대	지역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교육 확대	학교에서의 산 학연계 교육과정 확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확대	미래 실 계를 위 한 평생 교육 확대	미래 산산업 분야 교육 확대	창업준비 교육 확대
전체	(4,032)	55.1	42.9	42.8	27.9	23.0	21.2	20.7	20.3	16.5	16.3	13.2
만19~24세	(1,348)	55.2	47.0	41.4	27.4	30.1	18.2	19.7	16.2	14.7	14.8	15.2
만25~29세	(1,343)	55.7	40.7	44.8	26.5	22.9	21.4	21.3	20.8	16.3	16.3	13.3
만30~34세	(1,341)	54.5	40.9	42.1	29.6	16.0	24.1	21.1	24.0	18.6	18.0	11.1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7.9%),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55.6%),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57.2%), 권역별로는 강원/제주(57.9%),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5.3%),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5.5%) 집단에서 대학등록금 인하 항목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89.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대학 등록금 인하	국가 장학금 확대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 확대	소외 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청년 수당 지원 확대	지역 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교육 확대	학교에서의 산학 연계 교육 과정 확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확대	미래 설계를 위한 평생 교육 확대	미래 산업분야 교육 확대	창업 준비 교육 확대
전체	(4,032)	55.1	42.9	42.8	27.9	23.0	21.2	20.7	20.3	16.5	16.3	13.2
성별	남성 (2,000)	52.4	44.1	40.0	27.0	20.9	21.2	21.5	22.9	16.2	19.8	14.3
	여성 (2,032)	57.9	41.7	45.5	28.7	25.2	21.3	19.9	17.9	16.9	13.0	12.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2.7	36.1	42.5	36.3	34.9	15.8	14.1	16.8	18.0	14.5	18.3
	대학교(재/졸) (3,356)	55.6	44.1	43.2	26.6	21.6	21.6	21.2	20.6	16.4	16.4	12.5
	대학원(재/졸) (194)	52.6	37.6	36.1	28.4	18.0	27.8	27.8	23.7	16.0	19.6	12.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51.7	43.8	41.2	33.8	15.2	23.8	23.1	22.1	16.0	17.6	11.7
	청년 독립가구 (1,141)	54.3	41.8	40.1	28.6	22.8	20.7	22.2	21.1	17.8	17.0	13.7
	청년 동거가구 (1,976)	57.2	43.0	45.1	24.6	26.7	20.5	18.8	19.2	15.9	15.4	13.5
	기타 (10)	50.0	60.0	20.0	50.0	30.0	0.0	10.0	0.0	40.0	10.0	30.0
권역별	수도권 (2,200)	55.7	42.5	42.3	27.6	22.9	20.0	20.5	21.1	16.9	16.6	13.8
	충청권 (418)	55.3	43.8	45.9	28.2	22.0	20.8	21.3	18.4	16.0	16.3	12.0
	전라권 (351)	53.6	43.6	43.0	27.6	24.5	23.1	21.9	17.4	16.0	17.1	12.3
	경상권 (911)	53.8	42.5	42.2	28.1	23.5	24.1	21.4	20.1	15.9	15.3	13.2
	강원/제주 (152)	57.9	45.4	44.1	29.6	22.4	19.1	14.5	22.4	17.8	17.1	9.9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5.0	43.8	41.7	30.5	24.5	20.2	20.3	19.7	15.5	15.7	13.0
	비빈곤층 (1,931)	55.3	41.8	43.9	25.0	21.5	22.3	21.1	21.0	17.7	17.0	13.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4.8	41.1	41.8	27.3	18.6	23.4	22.2	23.0	17.5	18.2	12.1
	중위소득 미만 (1,904)	55.5	44.8	43.8	28.5	28.0	18.8	19.1	17.4	15.4	14.3	14.4

3. 청년의 주거

1) 청년의 주거에 관한 실태 및 경험

(1)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파트’ 응답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다세대/빌라’(16.3%), ‘원룸(다가구)’(1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 집단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55.9%, 25~29세: 54.4%, 30~34세: 56.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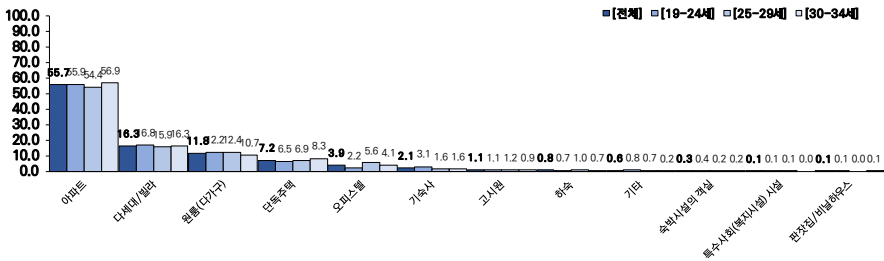


그림 IV-45.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표 IV-90.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다세대 /빌라	원룸	단독 주택	오피 스텔	기숙사	고시원	하숙	기타	숙박 시설의 객실	특수 사회 시설	판잣집 /비닐 하우스	χ^2
전체	(4,032)	55.7	16.3	11.8	7.2	3.9	2.1	1.1	0.8	0.6	0.3	0.1	-	
만19~24세	(1,348)	55.9	16.8	12.2	6.5	2.2	3.1	1.1	0.7	0.8	0.4	0.1	47.568**	
만25~29세	(1,343)	54.4	15.9	12.4	6.9	5.6	1.6	1.2	1.0	0.7	0.2	0.1		
만30~34세	(1,341)	56.9	16.3	10.7	8.3	4.1	1.6	0.9	0.7	0.2	0.2	0.0		

*p<.05, **p<.01, ***p<.001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8.0%),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57.2%),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67.7%), 권역별로는 전라권(62.4%),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4.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7.9%) 집단에서 현재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1.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대세대 /월파	원룸	단독 주택	오피 스텔	가숙사	고시원	하숙	기타	숙박 시설의 객실	특수 사회 시설	편입 비닐 하우스	χ^2
전체	(4,032)	55.7	16.3	11.8	7.2	3.9	2.1	1.1	0.8	0.6	0.3	0.1	0.1	-
성별	남성 (2,000)	53.5	16.1	12.9	7.7	3.1	2.4	1.7	1.5	0.7	0.4	0.2	0.1	58.259 ***
	여성 (2,032)	58.0	16.5	10.7	6.8	4.8	1.8	0.4	0.1	0.4	0.2	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5.9	22.2	11.2	10.6	3.5	1.2	2.3	1.2	1.5	0.2	0.0	0.2	76.228 ***
	대학교(재/졸) (3,356)	57.2	15.9	11.9	6.6	3.8	2.2	0.8	0.7	0.5	0.3	0.1	0.1	
	대학원(재/졸) (194)	55.2	8.8	12.4	9.3	7.2	2.6	3.1	1.5	0.0	0.0	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가 (905)	66.5	14.3	6.2	5.9	3.1	1.5	0.9	0.9	0.3	0.3	0.0	0.1	136.701 ***
	청년 독립 (1,141)	26.5	13.4	34.3	4.6	10.8	4.8	2.5	1.8	0.9	0.6	0.0	0.0	
	청년 동거 (1,976)	67.7	19.0	1.5	9.4	0.4	0.8	0.3	0.2	0.5	0.1	0.2	0.1	
	기타 (10)	50.0	0.0	0.0	20.0	0.0	0.0	20.0	0.0	1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55.0	20.4	10.4	4.1	4.8	2.0	1.3	1.0	0.5	0.2	0.1	0.1	172.960 ***
	충청권 (418)	55.3	8.4	15.8	12.7	3.8	2.2	0.7	0.2	0.2	0.5	0.2	0.0	
	전라권 (351)	62.4	7.7	12.3	10.3	2.3	1.7	1.1	1.1	0.6	0.3	0.3	0.0	
	경상권 (911)	56.2	13.5	13.0	10.1	2.9	2.4	0.7	0.4	0.7	0.2	0.0	0.0	
	강원/제주 (152)	49.3	15.1	13.8	13.2	2.6	2.6	1.3	0.0	1.3	0.7	0.0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7.7	19.7	14.7	7.9	4.4	2.1	1.4	1.0	0.7	0.3	0.1	0.1	124.118 ***
	비빈곤층 (1,931)	64.5	12.6	8.7	6.5	3.4	2.1	0.7	0.6	0.5	0.3	0.1	0.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3.8	16.4	12.5	6.9	5.7	2.2	0.8	1.0	0.4	0.2	0.1	0.1	49.030 ***
	중위소득 미만 (1,904)	57.9	16.2	11.0	7.7	2.0	2.0	1.4	0.6	0.7	0.3	0.1	0.1	

* $p < .05$, ** $p < .01$, *** $p < .001$

(2)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가(자기 소유의 주택)'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세'(23.9%), '보증금이 있는 월세'(2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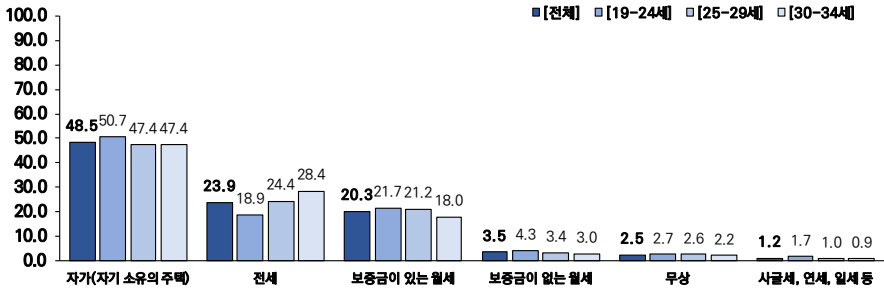


그림 IV-46.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표 IV-92.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자가(자기 소유의 주택)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사글세, 연세, 일세 등	χ^2
전체	(4,032)	48.5	23.9	20.3	3.5	2.5	1.2	-
만19~24세	(1,348)	50.7	18.9	21.7	4.3	2.7	1.7	41.405***
만25~29세	(1,343)	47.4	24.4	21.2	3.4	2.6	1.0	
만30~34세	(1,341)	47.4	28.4	18.0	3.0	2.2	0.9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0.0%),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49.7%),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68.8%), 권역별로는 경상권(52.9%),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8.6%),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2.7%) 집단에서 현재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3. 현재 거주하는 주거 이용형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자가 (자기 소 유의 주택)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사글세, 연세, 일세 등	χ^2
전체	(4,032)	48.5	23.9	20.3	3.5	2.5	1.2	-
성별	남성 (2,000)	47.0	22.7	21.5	4.9	2.8	1.3	27.594***
	여성 (2,032)	50.0	25.1	19.2	2.3	2.2	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1.9	22.2	27.0	3.9	4.4	0.6	46.248**
	대학교(재/졸) (3,356)	49.7	24.3	19.3	3.2	2.2	1.3	
	대학원(재/졸) (194)	44.3	20.6	21.6	8.8	3.1	1.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4.5	34.7	16.1	2.7	1.3	0.7	978.543***
	청년 독립가구 (1,141)	16.9	29.0	40.9	7.4	3.2	2.5	
	청년 동거가구 (1,976)	68.8	16.0	10.4	1.6	2.5	0.7	
	기타 (10)	20.0	30.0	10.0	20.0	2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46.8	26.3	20.4	3.3	2.3	1.0	43.882**
	충청권 (418)	50.5	21.3	22.2	2.2	2.9	1.0	
	전라권 (351)	46.4	21.7	23.1	3.7	4.3	0.9	
	경상권 (911)	52.9	20.7	18.3	4.3	2.1	1.6	
	강원/제주 (152)	47.4	20.4	19.7	6.6	2.6	3.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9.3	26.5	26.4	3.8	2.7	1.3	172.615***
	비빈곤층 (1,931)	58.6	21.1	13.7	3.3	2.3	1.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4.8	28.2	20.3	3.6	2.2	0.8	54.561***
	중위소득 미만 (1,904)	52.7	19.1	20.3	3.5	2.8	1.6	

* $p < .05$, ** $p < .01$, *** $p < .001$

(3)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N=1,957)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47,210만원으로 나타났고, 중위값의 경우 30,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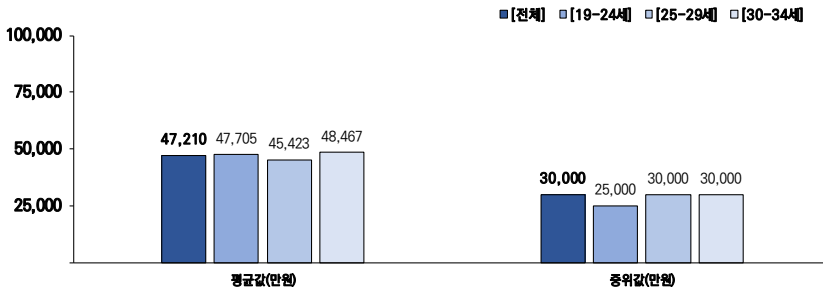


그림 IV-47.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표 IV-94.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F (유의도)
전체	(1,957)	47,210	30,000	-
만19~24세	(684)	47,705	25,000	0.377
만25~29세	(637)	45,423	30,000	
만30~34세	(636)	48,467	30,000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가구 유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67,974만원), 권역별로는 수도권(58,254만원),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5,653만원),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51,491만원) 집단에서 자가 시세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5. 현재 거주하는 자가의 시세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	T/F (유의도)
전체		(1,957)	47,210	30,000	-
성별	남성	(940)	48,937	30,000	1.126
	여성	(1,017)	45,614	30,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02)	30,861	20,000	10.976***
	대학교(재/졸)	(1,669)	48,119	30,000	
	대학원(재/졸)	(86)	67,974	47,5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403)	52,796	31,000	1.390
	청년 독립가구	(193)	45,881	23,000	
	청년 동거가구	(1,359)	45,789	30,000	
	기타	(2)	15,000	15,000	
권역별	수도권	(1,029)	58,254	45,000	16.391***
	충청권	(211)	38,746	20,000	
	전라권	(163)	31,117	20,000	
	경상권	(482)	34,927	20,000	
	강원/제주	(72)	32,837	19,5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825)	35,625	20,000	-7.233***
	비빈곤층	(1,132)	55,653	38,50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953)	51,491	32,000	2.814**
	중위소득 미만	(1,004)	43,146	25,000	

* $p < .05$, ** $p < .01$, *** $p < .001$

가. 대출 여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N=1,957)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 없음' 응답이 63.2%로 '대출 있음'(36.8%)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출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 집단에서 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34.2%, 25~29세: 31.6%, 30~34세: 45.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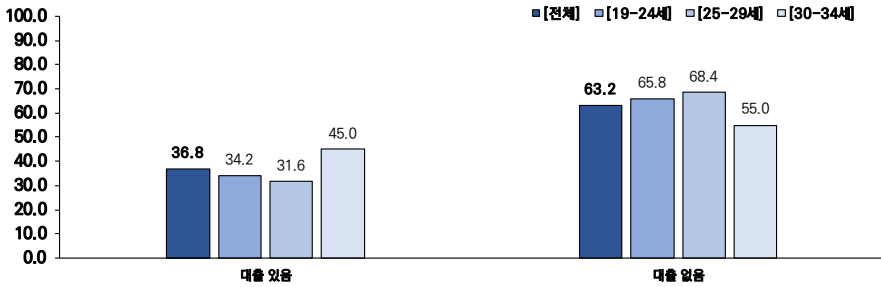


그림 IV-48. 대출 여부

표 IV-96. 대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출 있음	대출 없음	χ^2
전체	(1,957)	36.8	63.2	-
만19~24세	(684)	34.2	65.8	27.741***
만25~29세	(637)	31.6	68.4	
만30~34세	(636)	45.0	55.0	

* $p < .05$, ** $p < .01$, *** $p < .001$

대출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40.0%),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51.2%),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52.4%), 권역별로는 전라권(41.7%),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41.0%) 집단에서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7. 대출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대출 있음	대출 없음	χ^2
전체		(1,957)	36.8	63.2	-
성별	남성	(940)	33.4	66.6	9.188**
	여성	(1,017)	40.0	6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02)	33.2	66.8	8.813*
	대학교(재/졸)	(1,669)	36.5	63.5	
	대학원(재/졸)	(86)	51.2	48.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403)	52.4	47.6	66.394***
	청년 독립가구	(193)	44.6	55.4	
	청년 동거가구	(1,359)	31.2	68.8	
	기타	(2)	0.0	100.0	
권역별	수도권	(1,029)	38.5	61.5	12.552*
	충청권	(211)	28.0	72.0	
	전라권	(163)	41.7	58.3	
	경상권	(482)	36.9	63.1	
	강원/제주	(72)	27.8	72.2	
주관적 계층	빈곤층	(825)	38.2	61.8	1.100
	비빈곤층	(1,132)	35.9	64.1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953)	41.0	59.0	13.990***
	중위소득 미만	(1,004)	32.9	67.1	

* $p < .05$, ** $p < .01$, *** $p < .001$

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자가 대출이 있는 응답자(N=721)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15,596만원으로 나타났고 중위값의 경우 10,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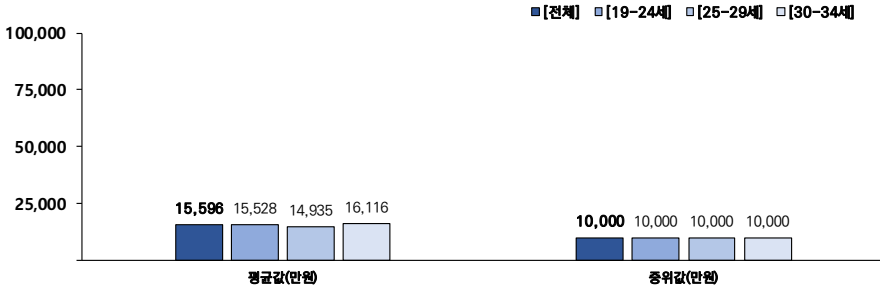


그림 IV-49.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표 IV-98.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F (유의도)
전체	(721)	15,596	10,000	-
만19~24세	(234)	15,528	10,000	0.183
만25~29세	(201)	14,935	10,000	
만30~34세	(286)	16,116	10,000	

* $p < .05$, ** $p < .01$, *** $p < .001$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22,274만원),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17,897만원) 집단에서 대출액의 평균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9.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 (배경변인별)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T/F (유의도)	
전체	(721)	15,596	10,000	-	
성별	남성	(314)	16,120	10,000	0.579
	여성	(407)	15,19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67)	10,324	10,000	2.817
	대학교(재/졸)	(610)	15,903		
	대학원(재/졸)	(44)	19,36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211)	16,055	12,000	5.513**
	청년 독립가구	(86)	22,274		
	청년 동거가구	(424)	14,013		
	기타	(0)	-		
권역별	수도권	(396)	16,746	12,000	1.937
	충청권	(59)	15,854		
	전라권	(68)	13,218		
	경상권	(178)	12,943		
	강원/제주	(20)	23,760		
주관적 계층	빈곤층	(315)	12,631	10,000	-3.551***
	비빈곤층	(406)	17,89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391)	16,467	10,000	1.196
	중위소득 미만	(330)	14,564		

* $p < .05$, ** $p < .01$, *** $p < .001$

다.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가 대출이 있는 응답자(N=721)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8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위값의 경우 5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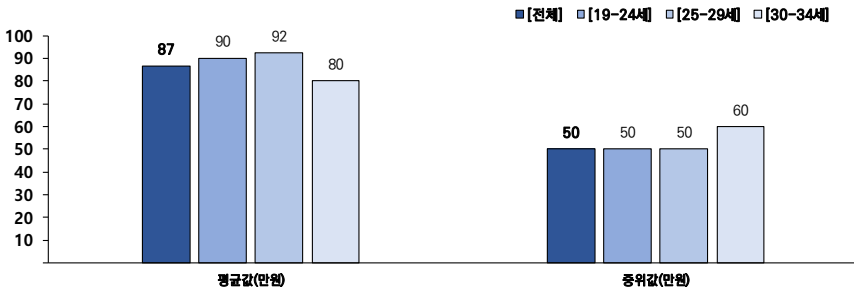


그림 IV-50.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표 IV-100.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F (유의도)
전체	(721)	87	50	-
만19~24세	(234)	90	50	1.315
만25~29세	(201)	92	50	
만30~34세	(286)	80	60	

* $p < .05$, ** $p < .01$, *** $p < .001$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94만원) 집단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1. 대출이 있는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배경변인별)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T/F (유의도)	
전체	(721)	87	50	-	
성별	남성	(314)	92	60	1.490
	여성	(407)	82	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67)	81	50	2.207
	대학교(재/졸)	(610)	85	50	
	대학원(재/졸)	(44)	114	8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211)	85	65	2.498
	청년 독립가구	(86)	107	63	
	청년 동거가구	(424)	83	50	
	기타	(0)	-	-	
권역별	수도권	(396)	91	60	2.352
	충청권	(59)	90	55	
	전라권	(68)	104	75	
	경상권	(178)	71	50	
	강원/제주	(20)	75	50	
주관적 계층	빈곤층	(315)	77	50	-2.694**
	비빈곤층	(406)	94	6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391)	88	60	0.456
	중위소득 미만	(330)	85	50	

* $p < .05$, ** $p < .01$, *** $p < .001$

라.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자가 대출이 있는(N=721)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 원리금 연체 없음’ 응답이 93.2%로 ‘대출 원리금 연체 있음’(6.8%)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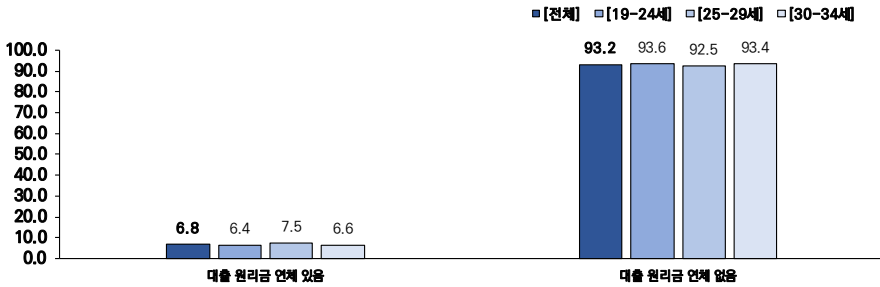


그림 IV-51.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표 IV-102.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721)	6.8	93.2	-
만19~24세	(234)	6.4	93.6	0.207
만25~29세	(201)	7.5	92.5	
만30~34세	(286)	6.6	93.4	

* $p < .05$, ** $p < .01$, *** $p < .001$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11.8%),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10.2%) 집단에서 대출 원리금 연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3.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721)	6.8	93.2	-
성별	남성	7.3	92.7	0.245
	여성	6.4	93.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0.4	89.6	3.374
	대학교(재/졸)	6.1	93.9	
	대학원(재/졸)	11.4	88.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11.8	88.2	13.946***
	청년 독립가구	8.1	91.9	
	청년 동거가구	4.0	96.0	
	기타	0.0	0.0	
권역별	수도권	5.6	94.4	5.594
	충청권	11.9	88.1	
	전라권	7.4	92.6	
	경상권	8.4	91.6	
	강원/제주	0.0	10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10.2	89.8	9.986**
	비빈곤층	4.2	95.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7.4	92.6	0.520
	중위소득 미만	6.1	93.9	

* $p < .05$, ** $p < .01$, *** $p < .001$

(4)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N=1,783)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12,051만원으로 나타났고 중위값의 경우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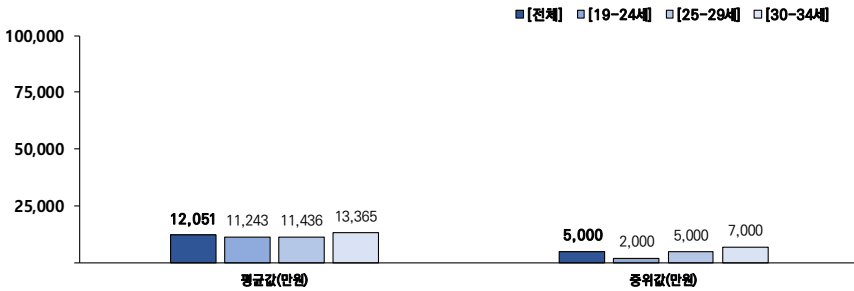


그림 IV-52.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표 IV-104.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F (유의도)
전체	(1,783)	12,051	5,000	-
만19~24세	(547)	11,243	2,000	0.815
만25~29세	(613)	11,436	5,000	
만30~34세	(623)	13,365	7,000	

* $p < .05$, ** $p < .01$, *** $p < .001$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권역, 1인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15,240만원),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13,876만원) 집단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평균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5. 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배경변인별)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T/F (유의도)
전체		(1,783)	12,051	5,000	-
성별	남성	(882)	10,852	4,500	-1.568
	여성	(901)	13,225	5,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37)	8,939	2,000	1.623
	대학교(재/졸)	(1,464)	12,373	5,000	
	대학원(재/졸)	(82)	15,305	6,0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460)	17,823	10,000	12.729***
	청년 독립가구	(798)	7,117	2,000	
	청년 동거가구	(521)	14,420	5,000	
	기타	(4)	24,025	4,750	
권역별	수도권	(1,027)	15,240	6,500	7.013***
	충청권	(182)	5,521	2,621	
	전라권	(157)	5,243	2,000	
	경상권	(356)	9,962	4,000	
	강원/제주	(61)	7,550	1,0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1,112)	11,051	4,000	-1.702
	비빈곤층	(671)	13,709	6,00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749)	13,876	6,250	2.839**
	중위소득 미만	(1,034)	9,531	2,000	

* $p < .05$, ** $p < .01$, *** $p < .001$

(5)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월세에 거주하거나, 사글세, 연세, 일세에 거주하는 응답자(N=1,010)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52만원으로 나타났고 중위값의 경우 4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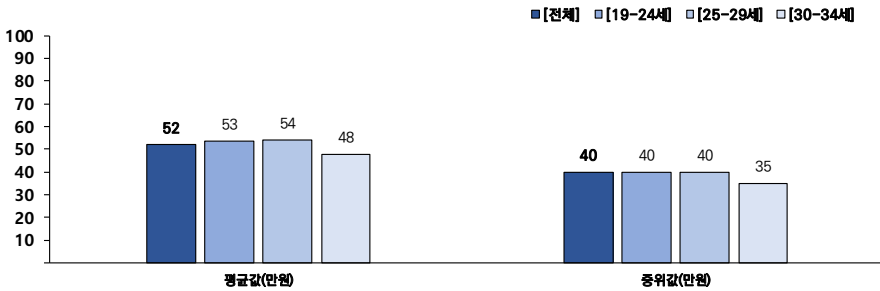


그림 IV-53.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표 IV-106.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F (유의도)
전체	(1,010)	52	40	-
만19~24세	(373)	53	40	0.969
만25~29세	(343)	54	40	
만30~34세	(294)	48	35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력 및 권역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86만원),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1만원) 집단에서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7.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 지출 규모 (배경변인별)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평균값(만원)	중위값(만원)	T/F (유의도)	
전체	(1,010)	52	40	-	
성별	남성	(551)	53	38	0.566
	여성	(459)	51	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52)	46	38	11.169***
	대학교(재/졸)	(796)	50	40	
	대학원(재/졸)	(62)	86	5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176)	58	40	1.425
	청년 독립가구	(580)	49	40	
	청년 동거가구	(251)	55	45	
	기타	(3)	35	35	
권역별	수도권	(541)	57	45	3.070 [*]
	충청권	(106)	47	35	
	전라권	(97)	41	35	
	경상권	(221)	45	35	
	강원/제주	(45)	61	40	
주관적 계층	빈곤층	(662)	49	40	-1.850
	비빈곤층	(348)	57	4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54	40	1.040
	중위소득 미만	(527)	50	40	

* $p < .05$, ** $p < .01$, *** $p < .001$

(6)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 됨’ 응답이 63.3%(매우: 20.5% + 조금 그런 편: 42.9%)로 ‘부담되지 않음’ 응답 36.7%(전혀: 11.5%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59.3%, 25~29세: 61.2%, 30~34세: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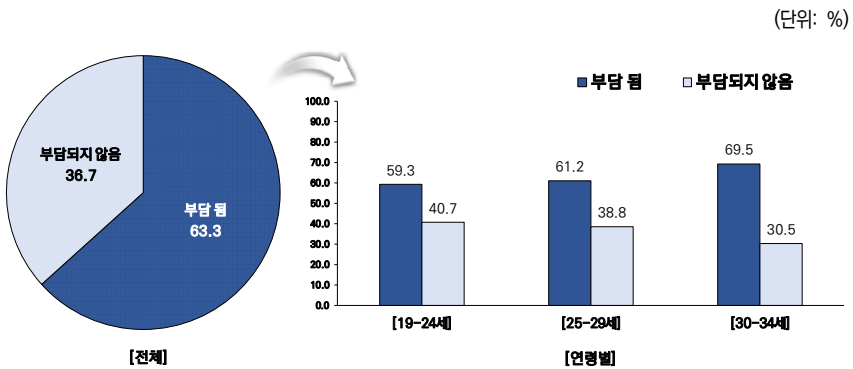


그림 IV-54.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표 IV-108.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된다	조금 부담된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χ^2
전체	(4,032)	20.5	42.9	25.1	11.5	-
만19~24세	(1,348)	17.5	41.8	26.3	14.4	52.360***
만25~29세	(1,343)	18.9	42.3	26.6	12.2	
만30~34세	(1,341)	25.0	44.5	22.5	8.0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63.9%),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68.6%),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독립가구(76.3%),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74.8%),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67.0%) 집단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9.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 인식 (배경변인별)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된다	조금 부담된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χ^2
전체		(4,032)	20.5	42.9	25.1	11.5	-
성별	남성	(2,000)	18.4	45.5	25.5	10.7	17.342***
	여성	(2,032)	22.5	40.3	24.8	12.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3.0	42.1	21.0	13.9	13.993*
	대학교(재/졸)	(3,356)	19.8	43.0	25.9	11.4	
	대학원(재/졸)	(194)	26.3	42.3	22.7	8.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4.6	48.4	20.8	6.2	293.055***
	청년 독립가구	(1,141)	27.9	48.5	18.8	4.9	
	청년 동거가구	(1,976)	14.2	37.1	30.8	17.9	
	기타	(10)	30.0	40.0	3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21.8	42.1	25.0	11.0	18.281
	충청권	(418)	18.2	41.9	23.7	16.3	
	전라권	(351)	18.5	43.6	27.4	10.5	
	경상권	(911)	19.0	45.1	25.4	10.5	
	강원/제주	(152)	20.4	40.8	24.3	14.5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8.5	46.4	17.5	7.7	308.300***
	비빈곤층	(1,931)	11.8	39.0	33.5	15.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2.5	44.5	24.2	8.7	43.745***
	중위소득 미만	(1,904)	18.2	41.0	26.2	14.7	

* $p < .05$, ** $p < .01$, *** $p < .001$

(7)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응답의 비율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일부는 내 스스로 마련'(23.2%), '전적으로 내 스스로 마련'(2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통해 현재 주거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71.3%, 25~29세: 52.9%, 30~34세: 37.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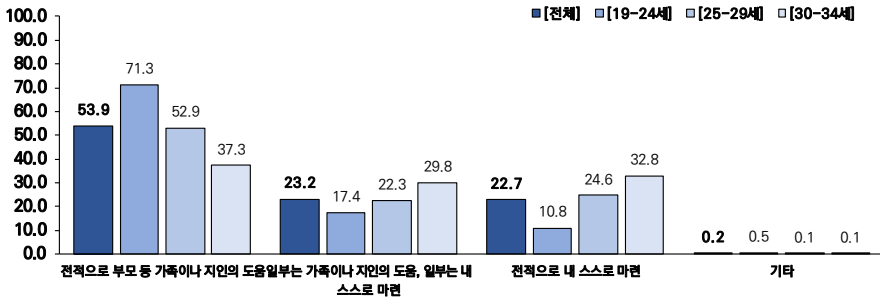


그림 IV-55.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표 IV-110.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일부는 가족 이나 지인의 도움, 일부는 내 스스로 마련	전적으로 내 스스로 마련	기타	χ^2
전체	(4,032)	53.9	23.2	22.7	0.2	-
만19~24세	(1,348)	71.3	17.4	10.8	0.5	344.311***
만25~29세	(1,343)	52.9	22.3	24.6	0.1	
만30~34세	(1,341)	37.3	29.8	32.8	0.1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6.5%),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55.0%),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77.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8.1%),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70.4%) 집단에서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 주거비를 마련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1. 현재 주거비 마련 방법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일부는 내 스스로 마련	전적으로 내 스스로 마련	기타	χ^2
전체	(4,032)	53.9	23.2	22.7	0.2	-
성별	남성 (2,000)	51.2	25.2	23.3	0.3	13.934**
	여성 (2,032)	56.5	21.2	22.2	0.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2.1	18.5	28.6	0.8	44.004***
	대학교(재/졸) (3,356)	55.0	23.5	21.4	0.1	
	대학원(재/졸) (194)	38.7	29.4	32.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7.1	33.9	28.8	0.1	1,710.256***
	청년 독립가구 (1,141)	26.4	28.7	44.9	0.1	
	청년 동거가구 (1,976)	77.5	15.2	7.2	0.2	
	기타 (10)	40.0	0.0	20.0	40.0	
권역별	수도권 (2,200)	54.2	23.5	22.0	0.3	17.957
	충청권 (418)	49.8	22.7	27.3	0.2	
	전라권 (351)	56.7	21.4	21.4	0.6	
	경상권 (911)	55.3	22.6	22.1	0.0	
	강원/제주 (152)	44.7	26.3	28.9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0.0	24.3	25.6	0.2	30.183***
	비빈곤층 (1,931)	58.1	22.0	19.7	0.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9.1	27.9	32.8	0.1	430.074***
	중위소득 미만 (1,904)	70.4	17.9	11.4	0.3	

* $p < .05$, ** $p < .01$, *** $p < .001$

(8)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71.9%(매우: 18.7% + 조금 그런 편: 53.2%)로 '불만족' 응답 28.1%(전혀: 6.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2.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주거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76.1%, 25~29세: 71.6%, 30~34세: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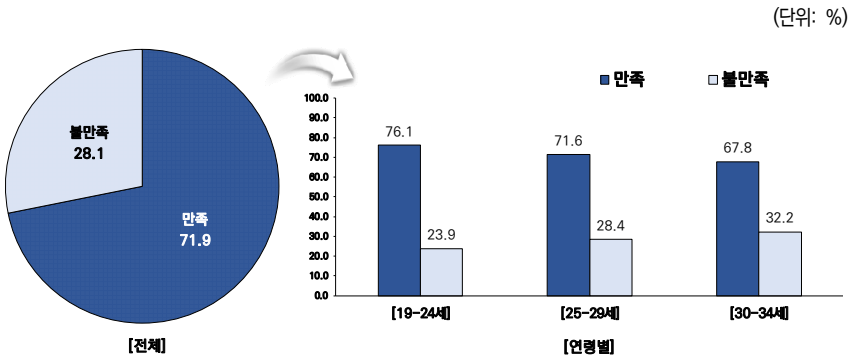


그림 IV-56.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표 IV-112.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χ^2
전체	(4,032)	18.7	53.2	22.1	6.0	-
만19~24세	(1,348)	24.7	51.4	18.3	5.6	62.271***
만25~29세	(1,343)	16.4	55.2	23.2	5.2	
만30~34세	(1,341)	14.8	52.9	24.9	7.3	

*p<.05, **p<.01, ***p<.001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74.2%),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77.2%),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79.4%),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72.3%) 집단에서 현재 주거 상태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3. 현재 주거 상태 만족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χ^2	
전체	(4,032)	18.7	53.2	22.1	6.0	-	
성별	남성	(2,000)	19.4	53.6	21.0	6.1	3.430
	여성	(2,032)	18.0	52.9	23.2	6.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6.2	49.4	25.3	9.1	17.575**
	대학교(재/졸)	(3,356)	18.7	53.9	21.8	5.6	
	대학원(재/졸)	(194)	23.7	50.5	20.6	5.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0.7	56.6	18.5	4.3	75.377***
	청년 독립가구	(1,141)	12.6	51.2	27.9	8.3	
	청년 동거가구	(1,976)	21.2	52.9	20.5	5.5	
	기타	(10)	30.0	40.0	2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17.8	54.0	22.1	6.0	13.826
	충청권	(418)	21.8	48.1	24.6	5.5	
	전라권	(351)	19.4	51.6	23.6	5.4	
	경상권	(911)	18.3	54.6	21.2	5.9	
	강원/제주	(152)	22.4	51.3	17.1	9.2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12.1	52.8	26.1	9.0	195.196***
	비빈곤층	(1,931)	25.7	53.7	17.8	2.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6.4	55.1	22.8	5.7	17.439***
	중위소득 미만	(1,904)	21.2	51.1	21.4	6.4	

* $p < .05$, ** $p < .01$, *** $p < .001$

(9)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의 경우 81.2%로 ‘아니다’(14.2%)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미 자가를 취득했다’ 응답의 경우 4.6%로 나타났다.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 취득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9~24세: 84.6%, 25~29세: 80.2%, 30~34세: 78.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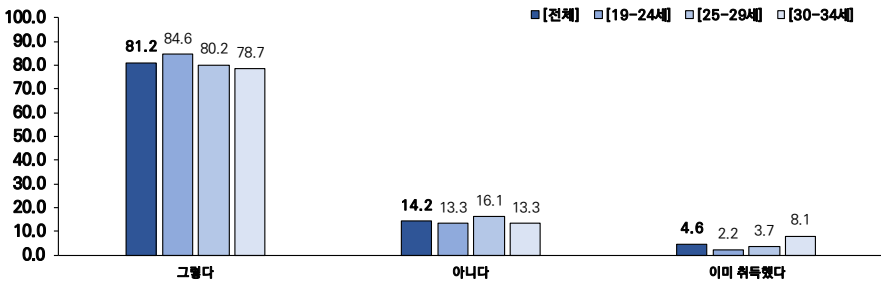


그림 IV-57.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표 IV-114.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이미 취득했다	χ^2
전체	(4,032)	81.2	14.2	4.6	-
만19~24세	(1,348)	84.6	13.3	2.2	62.205***
만25~29세	(1,343)	80.2	16.1	3.7	
만30~34세	(1,341)	78.7	13.3	8.1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력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4.6%),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4.9%), 권역별로는 강원/제주(85.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81.6%),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 소득 미만(82.1%) 집단에서 자가 취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5.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이미 취득했다	χ^2
전체		(4,032)	81.2	14.2	4.6	-
성별	남성	(2,000)	77.6	18.1	4.3	49.371***
	여성	(2,032)	84.6	10.4	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78.4	16.2	5.4	8.839
	대학교(재/졸)	(3,356)	81.9	13.6	4.4	
	대학원(재/졸)	(194)	74.7	19.1	6.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75.5	15.7	8.8	80.486***
	청년 독립가구	(1,141)	79.4	14.8	5.8	
	청년 동거가구	(1,976)	84.9	13.1	2.0	
	기타	(10)	60.0	3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80.3	14.8	4.9	18.165*
	충청권	(418)	82.1	12.4	5.5	
	전라권	(351)	77.8	19.4	2.8	
	경상권	(911)	83.3	12.4	4.3	
	강원/제주	(152)	85.5	9.2	5.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81.6	15.0	3.4	15.856***
	비빈곤층	(1,931)	80.7	13.4	6.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80.3	13.2	6.5	38.768***
	중위소득 미만	(1,904)	82.1	15.4	2.5	

* $p < .05$, ** $p < .01$, *** $p < .001$

(10)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향후에 자가를 취득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취득한(N=3,459)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응답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산 상승을 목적으로'(9.3%), '결혼을 하기 위해서'(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집단에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가 취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24세: 82.2%, 25~29세: 78.4%, 30~34세: 8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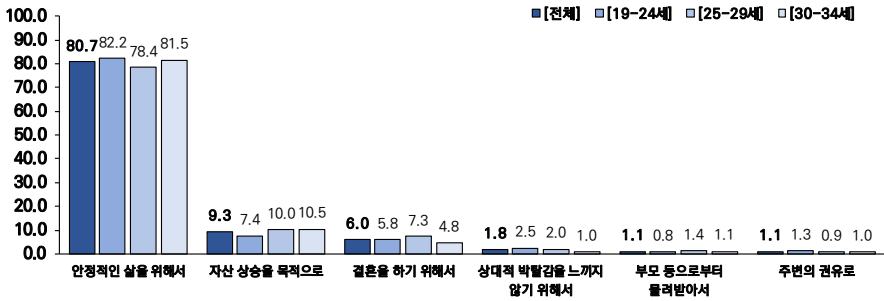


그림 IV-58.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표 IV-116.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산 상승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주변의 권유로	χ^2
전체	(3,459)	80.7	9.3	6.0	1.8	1.1	1.1	-
만19~24세	(1,169)	82.2	7.4	5.8	2.5	0.8	1.3	23.709**
만25~29세	(1,127)	78.4	10.0	7.3	2.0	1.4	0.9	
만30~34세	(1,163)	81.5	10.5	4.8	1.0	1.1	1.0	

*p<.05, **p<.01, ***p<.001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5.2%),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81.8%), 가구 유형별로는 기타(85.7%),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82.1%),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83.6%) 집단에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가 취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7.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산 상승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부모 등 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주변의 권유로	χ^2	
전체	(3,459)	80.7	9.3	6.0	1.8	1.1	1.1	-	
성별	남성	(1,638)	75.8	10.6	9.2	1.9	1.2	1.4	73.887 ***
	여성	(1,821)	85.2	8.2	3.0	1.8	1.0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04)	77.7	8.4	7.9	3.5	1.0	1.5	30.435 ***
	대학교(재/졸)	(2,898)	81.8	8.9	5.6	1.6	1.1	1.0	
	대학원(재/졸)	(157)	69.4	18.5	7.0	1.9	1.9	1.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763)	75.1	14.2	8.3	0.4	1.2	0.9	87.731 ***
	청년 독립가구	(972)	77.6	9.9	6.6	2.9	1.2	1.9	
	청년 동거가구	(1,717)	85.0	6.9	4.6	1.9	1.0	0.6	
	기타	(7)	85.7	0.0	0.0	0.0	0.0	14.3	
권역별	수도권	(1,874)	80.9	10.3	5.4	1.4	1.0	1.0	28.642
	충청권	(366)	79.5	7.9	8.7	2.5	1.1	0.3	
	전라권	(283)	80.2	7.8	6.4	3.2	0.7	1.8	
	경상권	(798)	81.3	8.6	5.8	1.6	1.5	1.1	
	강원/제주	(138)	79.7	6.5	5.8	4.3	1.4	2.2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86)	79.5	9.6	6.4	2.4	0.7	1.4	19.281 **
	비빈곤층	(1,673)	82.1	9.0	5.4	1.2	1.6	0.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848)	78.3	11.5	6.7	1.5	0.9	1.1	32.629 ***
	중위소득 미만	(1,611)	83.6	6.8	5.1	2.2	1.4	1.0	

* $p < .05$, ** $p < .01$, *** $p < .001$

(11)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향후에 자가를 취득할 의향이 있는(N=3,272)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0년 이내 응답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10~15년 이내'(2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2년 이내에 자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24세: 2.0%, 25~29세: 4.5%, 30~34세: 1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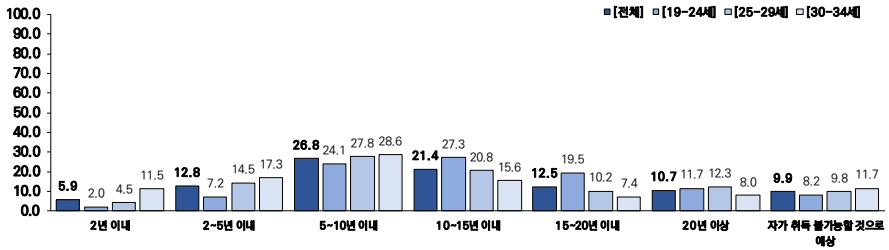


그림 IV-59.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표 IV-118.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15~20년 이내	20년 이상	자가 취득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χ^2
전체	(3,272)	5.9	12.8	26.8	21.4	12.5	10.7	9.9	-
만19~24세	(1,140)	2.0	7.2	24.1	27.3	19.5	11.7	8.2	262.515 ***
만25~29세	(1,077)	4.5	14.5	27.8	20.8	10.2	12.3	9.8	
만30~34세	(1,055)	11.5	17.3	28.6	15.6	7.4	8.0	11.7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6.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17.9%),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16.4%),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8.5%) 집단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자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9.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15~20년 이내	20년 이상	자가 취득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	χ^2	
전체	(3,272)	5.9	12.8	26.8	21.4	12.5	10.7	9.9	-	
성별	남성	(1,552)	6.1	13.0	29.6	21.9	11.1	9.4	8.9	21.274
	여성	(1,720)	5.7	12.7	24.2	20.9	13.8	11.9	10.8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78)	5.8	8.7	22.5	20.4	12.4	13.8	16.4	79.480 ***
	대학교(재/졸)	(2,749)	5.3	13.2	27.4	21.6	13.0	10.4	9.2	
	대학원(재/졸)	(145)	17.9	16.6	26.9	20.0	4.8	8.3	5.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683)	16.4	20.6	27.8	15.5	8.1	6.0	5.6	328.290 ***
	청년 독립가구	(906)	4.1	15.6	27.4	23.1	10.4	9.4	10.2	
	청년 동거가구	(1,677)	2.6	8.2	26.1	23.0	15.6	13.2	11.3	
	기타	(6)	0.0	0.0	16.7	0.0	0.0	33.3	50.0	
권역별	수도권	(1,767)	5.3	12.1	26.8	21.1	13.0	10.5	11.3	36.760*
	충청권	(343)	5.8	11.4	28.6	21.0	11.7	9.9	11.7	
	전라권	(273)	6.2	13.9	31.1	22.3	9.5	11.4	5.5	
	경상권	(759)	7.0	14.6	25.8	20.9	12.3	11.7	7.6	
	강원/제주	(130)	7.7	14.6	17.7	26.9	16.9	7.7	8.5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14)	5.3	12.7	24.0	19.8	11.3	12.4	14.6	111.733 ***
	비빈곤층	(1,558)	6.5	13.0	29.8	23.2	13.9	8.9	4.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709)	8.5	17.6	31.8	18.1	8.4	7.7	7.7	252.296 ***
	중위소득 미만	(1,563)	3.0	7.6	21.2	25.0	17.0	13.9	12.2	

* $p < .05$, ** $p < .01$, *** $p < .001$

가.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N=3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택 가격이 높아서' 응답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내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2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집단에서 주택가격이 높아서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24세: 70.2%, 25~29세: 60.4%, 30~34세: 69.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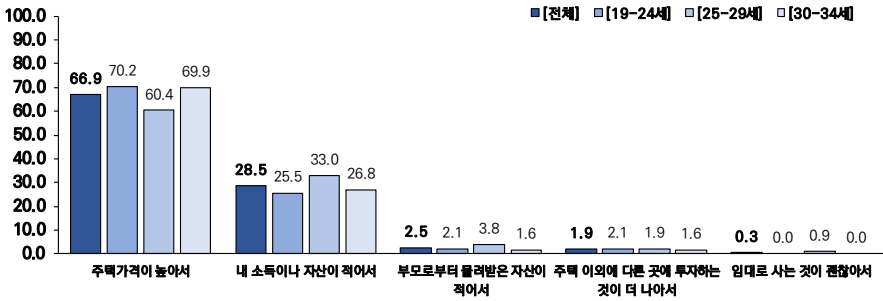


그림 IV-60.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표 IV-120.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주택가격이 높아서	내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적어서	주택 이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아서	임대로 사는 것이 괜찮아서	χ^2
전체	(323)	66.9	28.5	2.5	1.9	0.3	-
만19~24세	(94)	70.2	25.5	2.1	2.1	0.0	5.413
만25~29세	(106)	60.4	33.0	3.8	1.9	0.9	
만30~34세	(123)	69.9	26.8	1.6	1.6	0.0	

*p<.05, **p<.01, ***p<.001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권역, 1인가구 중위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87.5%), 권역별로는 수도권(75.4%),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76.5%) 집단에서 주택가격이 높아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1.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주택가격 이 높아서	내 소득이 나 자산이 적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적어서	주택 이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아서	임대료 사는 것이 편찮아서	χ^2
전체	(323)	66.9	28.5	2.5	1.9	0.3	-
성별	남성 (138)	70.3	23.2	2.2	3.6	0.7	8.265
	여성 (185)	64.3	32.4	2.7	0.5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62)	46.8	48.4	1.6	3.2	0.0	17.609*
	대학교(재/졸) (253)	71.1	24.1	2.8	1.6	0.4	
	대학원(재/졸) (8)	87.5	12.5	0.0	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38)	73.7	18.4	0.0	7.9	0.0	14.002
	청년 독립가구 (92)	68.5	29.3	1.1	1.1	0.0	
	청년 동가구 (190)	64.7	30.0	3.7	1.1	0.5	
	기타 (3)	66.7	33.3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199)	75.4	20.1	2.5	2.0	0.0	28.762*
	충청권 (40)	57.5	40.0	2.5	0.0	0.0	
	전라권 (15)	53.3	46.7	0.0	0.0	0.0	
	경상권 (58)	53.4	37.9	3.4	3.4	1.7	
	강원/제주 (11)	36.4	63.6	0.0	0.0	0.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50)	65.2	30.4	2.8	1.2	0.4	5.224
	비빈곤층 (73)	72.6	21.9	1.4	4.1	0.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32)	76.5	21.2	0.8	1.5	0.0	10.742*
	중위소득 미만 (191)	60.2	33.5	3.7	2.1	0.5	

* $p < .05$, ** $p < .01$, *** $p < .001$

(12)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향후에 자가를 취득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취득한(N=3,459)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도시' 응답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중소도시'(31.2%), '비수도권 대도시'(2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 집단에서 수도권 대도시 에 향후 자가 마련을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9~24세: 30.4%, 25~29세: 29.1%, 30~34세: 35.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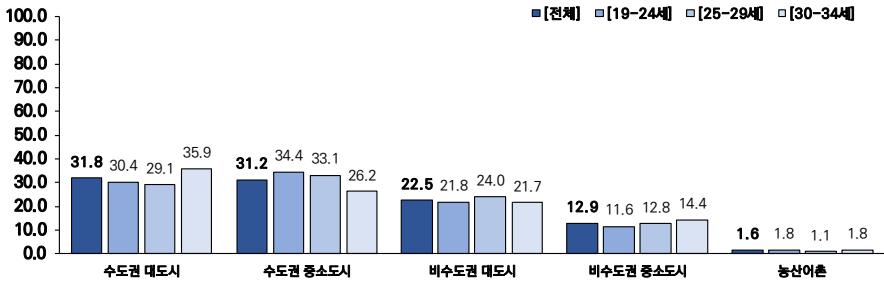


그림 IV-61.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표 IV-122.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수도권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χ^2
전체	(3,459)	31.8	31.2	22.5	12.9	1.6	-
만19~24세	(1,169)	30.4	34.4	21.8	11.6	1.8	31.600***
만25~29세	(1,127)	29.1	33.1	24.0	12.8	1.1	
만30~34세	(1,163)	35.9	26.2	21.7	14.4	1.8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 유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40.8%), 권역별로는 수도권(46.4%),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34.2%),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3.4%) 집단에서 수도권 대도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3. 향후 자가 마련 희망 지역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수도권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χ^2	
전체	(3,459)	31.8	31.2	22.5	12.9	1.6	-	
성별	남성	(1,638)	32.9	29.4	23.4	12.6	1.7	6.375
	여성	(1,821)	30.9	32.9	21.6	13.2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04)	26.0	33.7	19.1	18.8	2.5	30.209***
	대학교(재/졸)	(2,898)	32.2	30.9	23.1	12.4	1.4	
	대학원(재/졸)	(157)	40.8	30.6	20.4	7.0	1.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763)	33.0	29.5	20.3	15.3	1.8	16.897
	청년 독립가구	(972)	32.6	29.0	23.6	13.5	1.3	
	청년 동가가구	(1,717)	30.8	33.2	22.9	11.5	1.6	
	기타	(7)	42.9	42.9	0.0	14.3	0.0	
권역별	수도권	(1,874)	46.4	42.8	7.2	2.9	0.7	1,269.560***
	충청권	(366)	15.8	21.6	38.8	22.1	1.6	
	전라권	(283)	13.1	17.7	36.0	31.1	2.1	
	경상권	(798)	14.7	15.2	44.9	23.1	2.3	
	강원/제주	(138)	14.5	19.6	29.7	29.0	7.2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86)	29.6	33.7	21.2	13.9	1.6	18.472***
	비빈곤층	(1,673)	34.2	28.6	23.8	11.8	1.5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848)	33.4	31.0	21.9	12.7	1.1	9.716*
	중위소득 미만	(1,611)	30.0	31.5	23.2	13.2	2.1	

* $p < .05$, ** $p < .01$, *** $p < .001$

(13)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향후에 자가를 취득할 의향이 있는(N=3,272)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파트'(76.6%), '단독주택'(11.9%), '다가구/다세대/빌라'(7.5%) 등의 순으로 응답값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9~24세: 72.6%, 25~29세: 78.1%, 30~34세: 79.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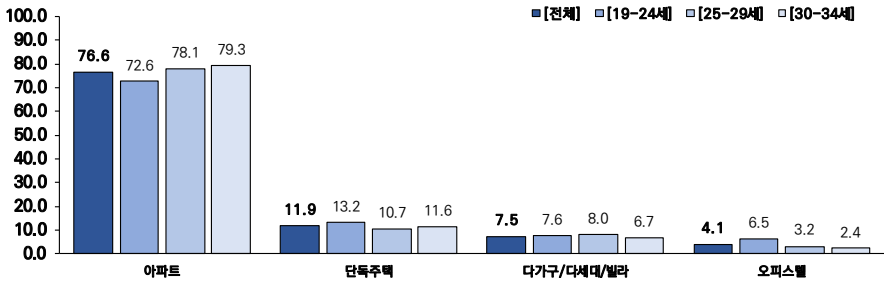


그림 IV-62.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표 IV-124.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빌라	오피스텔	χ^2
전체	(3,272)	76.6	11.9	7.5	4.1	-
만19~24세	(1,140)	72.6	13.2	7.6	6.5	33.608***
만25~29세	(1,077)	78.1	10.7	8.0	3.2	
만30~34세	(1,055)	79.3	11.6	6.7	2.4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가구유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84.1%), 권역별로는 충청권(78.4%),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비빈곤층(81.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81.0%) 집단에서 향후 자가 마련 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5. 향후 자가 마련 시 기대하는 주거 형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빌라	오피스텔	χ^2	
전체	(3272)	76.6	11.9	7.5	4.1	-	
성별	남성	(1,552)	76.6	11.8	7.7	3.9	0.383
	여성	(1,720)	76.6	11.9	7.3	4.2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378)	62.4	19.6	12.7	5.3	56.374***
	대학교(재/졸)	(2,749)	78.1	10.8	7.0	4.1	
	대학원(재/졸)	(145)	84.1	11.7	2.8	1.4	
가구유형	청년 부부 가구	(683)	81.0	10.0	6.3	2.8	12.916
	청년 독립가구	(906)	74.0	13.0	8.2	4.9	
	청년 동거가구	(1,677)	76.3	12.0	7.5	4.2	
	기타	(6)	66.7	16.7	16.7	0.0	
권역별	수도권	(1,767)	76.7	9.6	9.3	4.5	44.429***
	충청권	(343)	78.4	13.7	3.8	4.1	
	전라권	(273)	76.2	15.4	4.8	3.7	
	경상권	(759)	77.2	13.7	5.7	3.4	
	강원/제주	(130)	67.7	20.0	8.5	3.8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14)	72.1	13.7	9.6	4.6	44.229***
	비빈곤층	(1,558)	81.5	9.9	5.1	3.5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709)	81.0	9.4	7.0	2.6	47.402***
	중위소득 미만	(1,563)	71.8	14.6	7.9	5.7	

* $p < .05$, ** $p < .01$, *** $p < .001$

(14)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향후에 자가를 취득할 의향이 있는(N=3,272)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억 이내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왔고, '5~10억 이내'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향후 자가 마련 필요 금액으로 '3~5억 이내'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24세: 28.2%, 25~29세: 32.3%, 30~34세: 34.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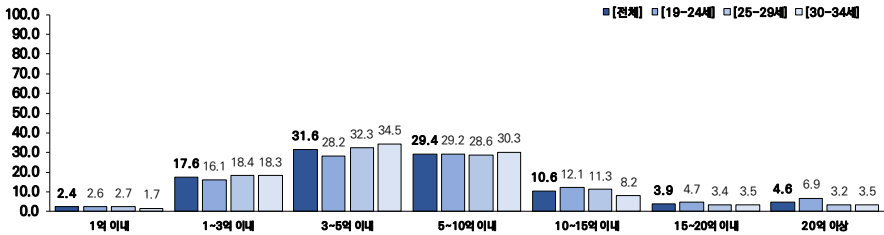


그림 IV-63.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표 IV-126.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억 이내	1~3억 이내	3~5억 이내	5~10억 이내	10~15억 이내	15~20억 이내	20억 이상	χ^2 44.834 ***
전체	(3,272)	2.4	17.6	31.6	29.4	10.6	3.9	4.6	
만19~24세	(1,140)	2.6	16.1	28.2	29.2	12.1	4.7	6.9	
만25~29세	(1,077)	2.7	18.4	32.3	28.6	11.3	3.4	3.2	
만30~34세	(1,055)	1.7	18.3	34.5	30.3	8.2	3.5	3.5	

*p<.05, **p<.01, ***p<.001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졸)(31.9%), 가구 유형별로 청년 부부가구(36.3%), 권역별로는 충청권(37.3%),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32.9%),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5.2%) 집단에서 향후 자가 마련 필요 금액으로 '3~5억 이내'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7. 향후 자가 마련 필요 자금 예상액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억 이내	1~3억 이내	3~5억 이내	5~10억 이내	10~15억 이내	15~20억 이내	20억 이상	χ^2
전체	(3,272)	2.4	17.6	31.6	29.4	10.6	3.9	4.6	
성별	남성 (1,552)	2.9	18.2	30.6	29.2	11.0	3.3	4.9	9.167
	여성 (1,720)	1.9	17.0	32.5	29.5	10.2	4.5	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78)	5.3	21.7	31.2	24.9	7.1	3.4	6.3	36.092 ***
	대학교(재/졸)(2,749)	2.0	17.1	31.9	29.9	10.9	3.8	4.3	
	대학원(재/졸) (145)	1.4	15.9	26.9	31.0	12.4	6.9	5.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683)	4.1	18.6	36.3	27.2	7.2	2.9	3.7	90.184 ***
	청년 독립가구 (906)	2.2	18.1	31.0	28.1	10.9	4.2	5.4	
	청년 동거가구 (1,677)	1.7	16.9	30.1	31.0	11.8	4.2	4.4	
	기타 (6)	0.0	16.7	16.7	0.0	0.0	0.0	66.7	
권역별	수도권 (1,767)	1.8	12.2	28.5	34.2	13.6	4.6	5.1	183.982 ***
	충청권 (343)	2.6	20.7	37.3	24.2	6.4	4.4	4.4	
	전라권 (273)	3.3	27.5	33.7	23.4	7.3	1.5	3.3	
	경상권 (759)	2.2	24.0	36.5	23.5	7.0	2.8	4.1	
	강원/제주 (130)	8.5	23.8	26.2	24.6	7.7	4.6	4.6	
주관적 계층	빈곤층 (1,714)	3.3	18.4	30.5	27.4	10.6	4.4	5.5	30.295 ***
	비빈곤층 (1,558)	1.3	16.6	32.9	31.6	10.6	3.4	3.7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709)	1.6	18.5	35.2	29.3	8.7	3.6	3.0	57.232 ***
	중위소득 미만 (1,563)	3.2	16.6	27.6	29.4	12.6	4.2	6.3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의 주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전망

(1)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위 집단' 응답이 40.0%(하: 9.5% + 중하: 30.5%)로 '상위 집단' 응답 15.5%(상: 2.5% + 중상: 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나의 주거 수준이 하위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24세: 34.3%, 25~29세: 38.2%, 30~34세: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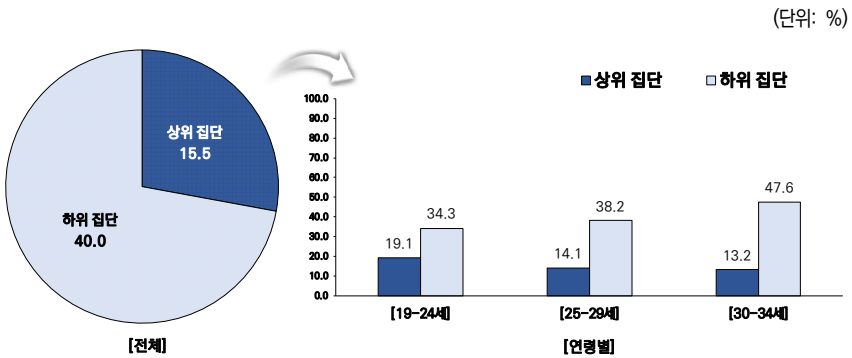


그림 IV-64.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IV-128.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상	중상	중	중하	하	χ^2
전체	(4,032)	2.5	12.9	44.5	30.5	9.5	-
만19~24세	(1,348)	2.6	16.5	46.6	27.1	7.2	71.062***
만25~29세	(1,343)	3.1	11.0	47.7	29.0	9.2	
만30~34세	(1,341)	1.9	11.3	39.2	35.3	12.2	

* $p < .05$, ** $p < .01$, *** $p < .001$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중위소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40.0%),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56.4%) 권역별로는 전라권(47.6%),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58.7%) 집단에서 나의 주거 수준이 하위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9. 나의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상	중상	중	중하	하	χ^2
전체	(4,032)	2.5	12.9	44.5	30.5	9.5	-
성별	남성 (2,000)	3.6	14.8	41.7	30.4	9.6	33.416 ***
	여성 (2,032)	1.5	11.2	47.3	30.6	9.4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5	9.5	31.5	35.9	20.5	122.302 ***
	대학교(재/졸) (3,356)	2.3	13.1	46.4	29.9	8.3	
	대학원(재/졸) (194)	6.7	18.0	44.8	26.3	4.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8	14.9	44.6	28.0	7.7	106.118 ***
	청년 독립가구 (1,141)	1.9	9.6	40.6	34.5	13.4	
	청년 동거가구 (1,976)	1.8	14.1	46.9	29.3	7.9	
	기타 (10)	20.0	0.0	10.0	30.0	40.0	
권역별	수도권 (2,200)	3.3	14.3	44.8	28.5	9.0	47.749 ***
	충청권 (418)	1.7	9.6	46.9	30.4	11.5	
	전라권 (351)	2.6	8.5	41.3	38.7	8.8	
	경상권 (911)	1.1	12.4	45.4	31.5	9.5	
	강원/제주 (152)	2.0	15.8	35.5	33.6	13.2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2	6.4	32.6	42.5	16.3	701.995 ***
	비빈곤층 (1,931)	2.8	20.0	57.5	17.5	2.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9	12.2	45.9	29.8	9.3	6.736
	중위소득 미만 (1,904)	2.2	13.8	43.0	31.3	9.8	

* $p < .05$, ** $p < .01$, *** $p < .001$

(2)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64.4%(매우: 15.9% + 조금 그런 편: 48.6%)로 ‘불필요’ 응답 35.6%(전혀: 4.3%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68.6%, 25~29세: 62.0%, 30~34세: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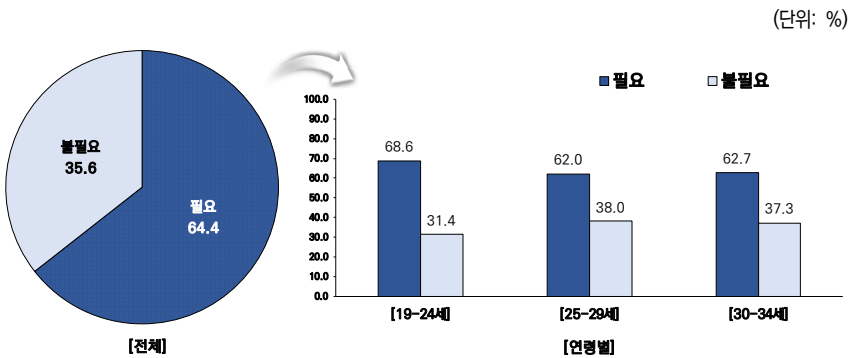


그림 IV-65.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표 IV-130.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15.9	48.6	31.2	4.3	-
만19~24세	(1,348)	18.6	50.0	27.7	3.6	23.864***
만25~29세	(1,343)	14.6	47.4	34.0	4.1	
만30~34세	(1,341)	14.4	48.3	32.0	5.3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68.6%),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71.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70.7%) 집단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1.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의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15.9	48.6	31.2	4.3	-
성별	남성	(2,000)	19.0	49.6	27.4	4.0	44.983***
	여성	(2,032)	12.8	47.5	35.0	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7.8	47.9	30.5	3.7	4.031
	대학교(재/졸)	(3,356)	15.4	48.8	31.3	4.5	
	대학원(재/졸)	(194)	19.1	46.4	30.9	3.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17.7	53.8	25.6	2.9	41.358***
	청년 독립가구	(1,141)	16.7	48.8	30.6	3.9	
	청년 동거가구	(1,976)	14.5	46.2	34.2	5.2	
	기타	(10)	40.0	20.0	3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16.2	49.3	29.9	4.6	15.460
	충청권	(418)	14.8	43.3	37.3	4.5	
	전라권	(351)	14.0	50.4	31.3	4.3	
	경상권	(911)	16.2	49.4	31.1	3.3	
	강원/제주	(152)	16.4	43.4	34.2	5.9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19.2	51.5	25.4	3.9	87.385***
	비빈곤층	(1,931)	12.3	45.4	37.5	4.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5.6	49.7	30.4	4.4	2.413
	중위소득 미만	(1,904)	16.2	47.3	32.1	4.3	

* $p < .05$, ** $p < .01$, *** $p < .001$

(3)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향후 주택 마련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영향이다' 응답의 경우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가 된다'(25.8%),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필요하다'(2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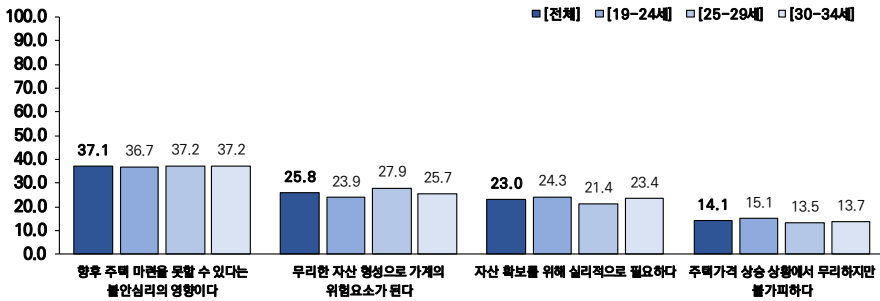


그림 IV-66.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표 IV-132.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향후 주택 마련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영향이다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가 된다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가격 상승 상황에서 무리하지만 불가피하다	χ^2
전체	(4,032)	37.1	25.8	23.0	14.1	-
만19~24세	(1,348)	36.7	23.9	24.3	15.1	8.396
만25~29세	(1,343)	37.2	27.9	21.4	13.5	
만30~34세	(1,341)	37.2	25.7	23.4	13.7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권역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39.2%),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38.6%), 권역별로는 강원/제주(38.8%) 집단에서 향후 주택 마련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영끌을 통한 자가취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V-133. 최근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향후 주택 마련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영향이다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가 된다	자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가격 상승 상황에서 무리하지만 불가피하다	χ^2
전체	(4,032)	37.1	25.8	23.0	14.1	-
성별	남성 (2,000)	34.9	28.3	24.3	12.6	24.055***
	여성 (2,032)	39.2	23.4	21.8	1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5.1	25.5	25.5	13.9	5.580
	대학교(재/졸) (3,356)	37.2	25.7	22.8	14.3	
	대학원(재/졸) (194)	39.2	29.4	21.1	10.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6.9	24.3	28.1	10.7	39.071***
	청년 독립가구 (1,141)	34.6	29.0	22.2	14.2	
	청년 동거가구 (1,976)	38.6	24.7	21.2	15.4	
	기타 (10)	20.0	10.0	30.0	40.0	
권역별	수도권 (2,200)	37.8	25.8	23.2	13.2	26.595**
	충청권 (418)	36.1	21.8	24.4	17.7	
	전라권 (351)	33.3	24.8	22.5	19.4	
	경상권 (911)	36.8	26.8	23.6	12.8	
	강원/제주 (152)	38.8	33.6	15.1	12.5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7.9	24.4	23.5	14.2	4.879
	비빈곤층 (1,931)	36.1	27.4	22.5	13.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6.9	26.2	23.7	13.2	3.934
	중위소득 미만 (1,904)	37.2	25.4	22.3	15.1	

* $p < .05$, ** $p < .01$, *** $p < .001$

(4)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가능’ 응답이 76.3%(전혀: 42.2%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4.2%)로 ‘가능’ 응답 23.7%(매우: 4.3% + 조금 그런 편: 1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24세: 75.4%, 25~29세: 76.6%, 30~34세: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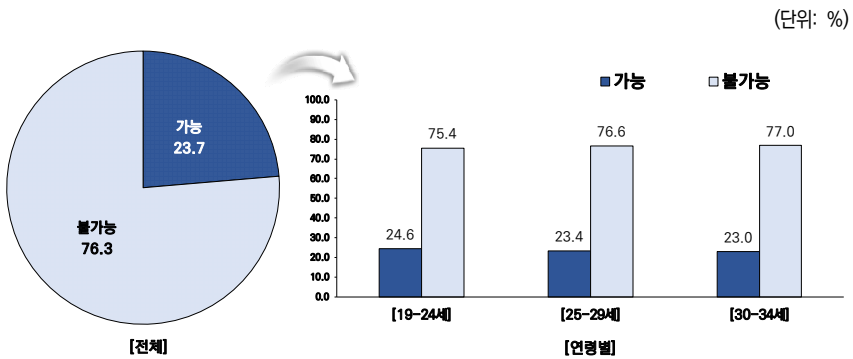


그림 IV-67.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표 IV-134.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3	19.4	34.2	42.2	-
만19~24세	(1,348)	5.1	19.4	39.5	35.9	51.246***
만25~29세	(1,343)	3.4	20.0	34.1	42.5	
만30~34세	(1,341)	4.3	18.7	28.9	48.1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2.9%),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77.0%),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4.0%), 권역별로는 충청권(78.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80.7%),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78.2%) 집단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5.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4.3	19.4	34.2	42.2	-
성별	남성	(2,000)	6.0	24.4	34.3	35.4	119.340***
	여성	(2,032)	2.7	14.5	34.1	48.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6.2	17.2	35.1	41.5	24.274***
	대학교(재/졸)	(3,356)	3.8	19.1	34.4	42.6	
	대학원(재/졸)	(194)	7.2	28.9	27.8	36.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7.8	31.0	29.6	31.5	219.148***
	청년 독립가구	(1,141)	3.9	20.7	33.8	41.6	
	청년 동거가구	(1,976)	2.7	13.3	36.5	47.5	
	기타	(10)	40.0	20.0	20.0	20.0	
권역별	수도권	(2,200)	4.4	18.9	32.5	44.2	28.682**
	충청권	(418)	5.5	16.0	33.0	45.5	
	전라권	(351)	4.0	25.1	35.0	35.9	
	경상권	(911)	3.8	19.9	38.3	38.0	
	강원/제주	(152)	2.6	19.7	34.9	42.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5	22.2	27.4	45.0	99.945***
	비빈곤층	(1,931)	3.0	16.3	41.6	39.1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4	20.9	30.3	44.5	31.175***
	중위소득 미만	(1,904)	4.1	17.7	38.6	39.6	

* $p < .05$, ** $p < .01$, *** $p < .001$

(5)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수’ 응답이 76.9%(매우: 25.7% + 조금 그런 편: 51.1%)로 ‘필수적이지 않음’ 응답 23.1%(전혀: 3.8%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24세: 72.8%, 25~29세: 78.5%, 30~34세: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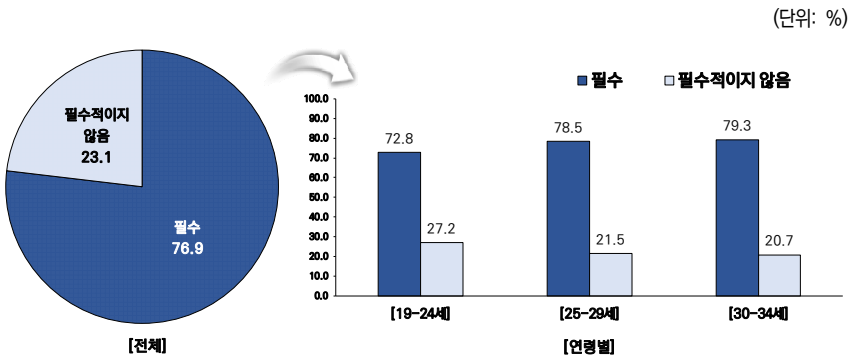


그림 IV-68.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

표 IV-136.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25.7	51.1	19.3	3.8	-
만19~24세	(1,348)	21.6	51.3	22.8	4.3	30.272***
만25~29세	(1,343)	26.5	52.0	18.1	3.4	
만30~34세	(1,341)	29.1	50.2	17.1	3.7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78.3%),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80.4%) 집단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7.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25.7	51.1	19.3	3.8	-
성별	남성	(2,000)	27.4	49.6	19.4	3.8	6.088
	여성	(2,032)	24.1	52.7	19.3	3.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6.3	45.4	23.2	5.0	11.413
	대학교(재/졸)	(3,356)	25.4	52.1	18.9	3.6	
	대학원(재/졸)	(194)	29.4	49.5	17.5	3.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6.9	51.4	17.1	4.6	8.593
	청년 독립가구	(1,141)	24.5	51.4	20.8	3.3	
	청년 동가가구	(1,976)	25.9	50.9	19.5	3.7	
	기타	(10)	40.0	40.0	2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27.8	50.5	18.3	3.4	25.136*
	충청권	(418)	22.7	52.9	18.7	5.7	
	전라권	(351)	25.1	49.9	21.9	3.1	
	경상권	(911)	22.9	53.2	19.8	4.1	
	강원/제주	(152)	21.7	46.1	27.6	4.6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9.0	51.5	15.8	3.7	46.076***
	비빈곤층	(1,931)	22.2	50.8	23.1	3.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7.2	50.5	18.9	3.4	6.339
	중위소득 미만	(1,904)	24.1	51.9	19.9	4.2	

* $p < .05$, ** $p < .01$, *** $p < .001$

(6)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 응답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산 상승의 투자기회’(12.8%), ‘결혼의 전제조건’(10.5%) 등의 순으로 응답값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주거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24세: 66.7%, 25~29세: 64.8%, 30~34세: 6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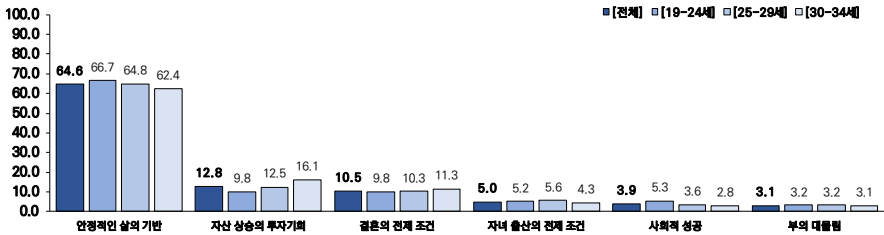


그림 IV-69.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표 IV-138.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안정적인 삶의 기반	자산 상승의 투자기회	결혼의 전제 조건	자녀 출산의 전제 조건	사회적 성공	부의 대물림	χ^2
전체	(4,032)	64.6	12.8	10.5	5.0	3.9	3.1	-
만19~24세	(1,348)	66.7	9.8	9.8	5.2	5.3	3.2	38.322***
만25~29세	(1,343)	64.8	12.5	10.3	5.6	3.6	3.2	
만30~34세	(1,341)	62.4	16.1	11.3	4.3	2.8	3.1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72.4%),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65.6%), 가구 유형별로는 기타(80.0%), 권역별로는 강원/제주(73.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8.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68.0%) 집단에서 주거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라고 응답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IV-139.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안정적인 삶의 기반	자산 상 승의 투 자기회	결혼의 전제 조건	자녀 출 산의 전 제 조건	사회적 성공	부의 대물림	χ^2
전체		(4,032)	64.6	12.8	10.5	5.0	3.9	3.1	-
성별	남성	(2,000)	56.8	15.2	14.6	6.2	4.2	3.1	132.019***
	여성	(2,032)	72.4	10.5	6.4	3.8	3.7	3.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62.9	9.1	11.2	6.0	5.8	5.0	35.078***
	대학교(재/졸)	(3,356)	65.6	12.9	10.2	4.8	3.6	2.9	
	대학원(재/졸)	(194)	52.6	20.6	12.9	5.7	5.7	2.6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54.4	18.5	15.6	6.2	2.1	3.3	151.350***
	청년 독립가구	(1,141)	60.9	13.9	11.6	6.9	4.5	2.2	
	청년 동거가구	(1,976)	71.4	9.6	7.5	3.4	4.5	3.6	
	기타	(10)	80.0	0.0	10.0	0.0	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63.9	14.0	11.0	4.0	3.5	3.7	53.279***
	충청권	(418)	66.3	10.5	11.7	6.0	2.6	2.9	
	전라권	(351)	61.3	10.0	10.3	9.7	6.0	2.8	
	경상권	(911)	65.6	13.2	9.1	5.3	4.7	2.1	
	강원/제주	(152)	73.0	6.6	7.2	4.6	5.3	3.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61.1	14.3	12.5	5.2	3.6	3.3	34.683***
	비빈곤층	(1,931)	68.5	11.2	8.3	4.8	4.3	3.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61.7	15.7	11.6	5.5	3.1	2.4	57.468***
	중위소득 미만	(1,904)	68.0	9.6	9.2	4.5	4.8	3.9	

* $p < .05$, ** $p < .01$, *** $p < .001$

(7)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세' 응답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가'(31.5%), '월세'(8.8%) 등의 순으로 응답값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9~24세: 55.7%, 25~29세: 57.7%, 30~34세: 57.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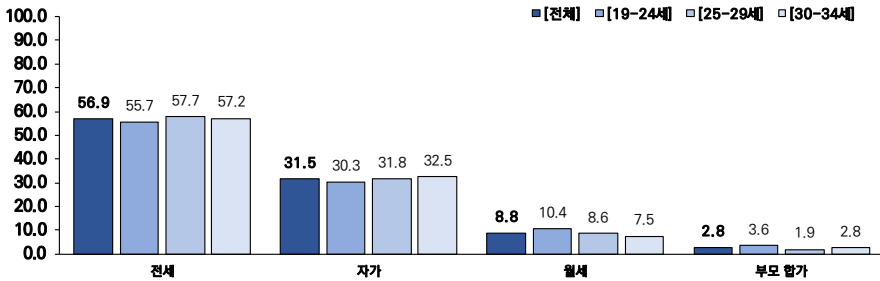


그림 IV-70.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표 IV-140.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세	자가	월세	부모 합가	χ^2
전체	(4,032)	56.9	31.5	8.8	2.8	-
만19~24세	(1,348)	55.7	30.3	10.4	3.6	14.368*
만25~29세	(1,343)	57.7	31.8	8.6	1.9	
만30~34세	(1,341)	57.2	32.5	7.5	2.8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62.6%),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59.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60.6%),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57.6%) 집단에서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로 '전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4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세	자가	월세	부모 합가	χ^2
전체		(4,032)	56.9	31.5	8.8	2.8	-
성별	남성	(2,000)	51.0	34.9	11.1	3.1	62.209***
	여성	(2,032)	62.6	28.3	6.6	2.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3.7	30.7	11.2	4.4	12.031
	대학교(재/졸)	(3,356)	57.5	31.5	8.4	2.6	
	대학원(재/졸)	(194)	53.6	35.1	9.8	1.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54.8	32.6	9.6	3.0	18.878*
	청년 독립가구	(1,141)	54.2	34.1	9.6	2.1	
	청년 동거가구	(1,976)	59.5	29.6	7.9	3.0	
	기타	(10)	40.0	30.0	2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58.7	29.6	8.9	2.9	17.825
	충청권	(418)	55.0	35.6	7.2	2.2	
	전라권	(351)	53.0	33.6	10.3	3.1	
	경상권	(911)	55.1	33.9	8.8	2.2	
	강원/제주	(152)	55.3	29.6	9.9	5.3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3.4	34.8	9.3	2.5	25.778***
	비빈곤층	(1,931)	60.6	28.0	8.3	3.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7.6	33.0	7.4	2.0	23.556***
	중위소득 미만	(1,904)	56.1	29.9	10.4	3.6	

* $p < .05$, ** $p < .01$, *** $p < .001$

(8)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정하지 않음’ 응답이 74.4%(전혀: 34.8%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9.6%)로 ‘공정함’ 응답 25.6%(매우: 5.0% + 조금 그런 편: 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 집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게 주어진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24세: 72.6%, 25~29세: 72.4%, 30~34세: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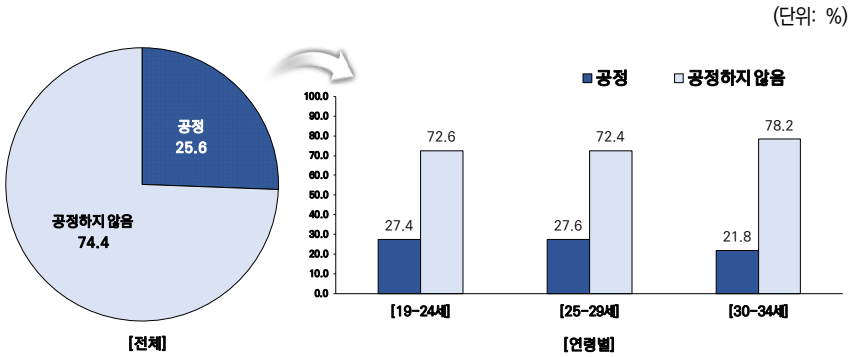


그림 IV-71.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

표 IV-142.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5.0	20.6	39.6	34.8	-
만19~24세	(1,348)	5.8	21.7	43.3	29.2	43.510***
만25~29세	(1,343)	5.0	22.6	37.4	35.1	
만30~34세	(1,341)	4.1	17.7	38.0	40.3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1.2%),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75.3%),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1.5%), 권역별로는 강원/제주(80.3%),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비빈곤층(76.9%),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74.8%) 집단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3.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인식(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5.0	20.6	39.6	34.8	-
성별	남성 (2,000)	7.1	25.5	37.9	29.6	113.630***
	여성 (2,032)	2.9	15.9	41.2	4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6.4	21.0	38.6	34.0	16.701*
	대학교(재/졸) (3,356)	4.6	20.1	39.9	35.4	
	대학원(재/졸) (194)	7.2	29.4	35.6	27.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9.1	31.2	33.4	26.4	177.877***
	청년 독립가구 (1,141)	5.3	20.9	37.6	36.3	
	청년 동거가구 (1,976)	2.8	15.7	43.6	38.0	
	기타 (10)	30.0	20.0	30.0	20.0	
권역별	수도권 (2,200)	4.9	19.5	39.0	36.7	37.142***
	충청권 (418)	5.7	17.2	40.9	36.1	
	전라권 (351)	5.1	29.6	36.5	28.8	
	경상권 (911)	5.3	22.0	41.8	31.0	
	강원/제주 (152)	2.0	17.8	38.2	42.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7	22.2	32.3	39.8	98.983***
	비빈곤층 (1,931)	4.1	19.0	47.4	29.5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3	20.7	37.5	36.6	9.965*
	중위소득 미만 (1,904)	4.6	20.6	41.9	32.9	

* $p < .05$, ** $p < .01$, *** $p < .001$

(9)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 응답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신의 소득 규모'(21.8%), '대출할 수 있는 여력'(9.5%) 등의 순으로 응답값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이 자가 취득을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47.6%, 25~29세: 52.0%, 30~34세: 54.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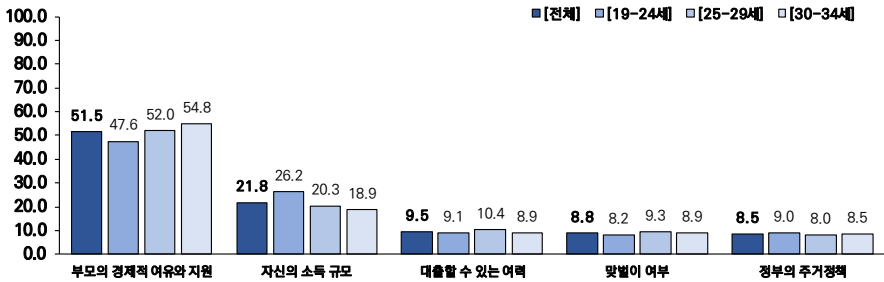


그림 IV-72.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표 IV-144.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	자신의 소득 규모	대출할 수 있는 여력	맞벌이 여부	정부의 주거정책	χ^2
전체	(4,032)	51.5	21.8	9.5	8.8	8.5	-
만19~24세	(1,348)	47.6	26.2	9.1	8.2	9.0	29.328***
만25~29세	(1,343)	52.0	20.3	10.4	9.3	8.0	
만30~34세	(1,341)	54.8	18.9	8.9	8.9	8.5	

*p<.05, **p<.01, ***p<.001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5.6%),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석사졸/박사졸)(55.2%),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53.5%),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52.5%),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52.1%) 집단에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이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5.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에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부모의 경 제적 여유와 지원	자신의 소득 규모	대출할 수 있는 여력	맞벌이 여부	정부의 주거정책	χ^2
전체	(4,032)	51.5	21.8	9.5	8.8	8.5	-
성별	남성 (2,000)	47.3	23.3	9.1	11.4	9.1	48.793***
	여성 (2,032)	55.6	20.3	9.9	6.3	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2.1	25.1	12.2	9.1	11.4	24.715**
	대학교(재/졸) (3,356)	52.6	21.4	9.1	8.7	8.3	
	대학원(재/졸) (194)	55.2	20.6	9.3	9.8	5.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5.4	20.0	9.6	17.5	7.5	138.019***
	청년 독립가구 (1,141)	52.8	19.4	11.0	8.3	8.4	
	청년 동거가구 (1,976)	53.5	23.9	8.6	5.2	8.9	
	기타 (10)	40.0	30.0	0.0	0.0	30.0	
권역별	수도권 (2,200)	52.3	21.0	9.7	9.1	8.0	18.869
	충청권 (418)	53.6	23.7	7.9	6.7	8.1	
	전라권 (351)	49.3	19.9	13.1	8.8	8.8	
	경상권 (911)	49.5	23.4	8.5	9.4	9.2	
	강원/제주 (152)	50.7	22.4	8.6	6.6	11.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0.5	21.6	8.9	10.0	9.0	10.760*
	비빈곤층 (1,931)	52.5	22.0	10.1	7.5	7.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2.1	19.7	10.5	10.2	7.6	27.912***
	중위소득 미만 (1,904)	50.7	24.1	8.4	7.3	9.5	

* $p < .05$, ** $p < .01$, *** $p < .001$

(10)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월하지 않음’ 응답이 78.8%(전혀: 39.6%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9.3%)로 ‘수월함’ 응답 21.2%(매우: 3.8% + 조금 그런 편: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주거를 마련하기에 수월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77.9%, 25~29세: 78.0%, 30~34세: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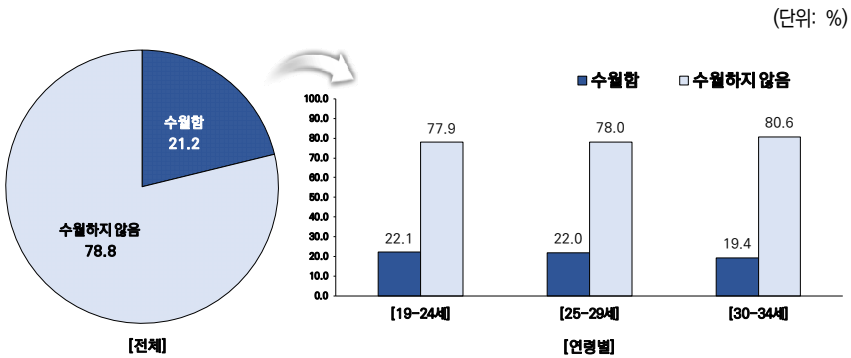


그림 IV-73.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표 IV-146.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3.8	17.3	39.3	39.6	-
만19~24세	(1,348)	4.2	18.0	42.4	35.5	21.268**
만25~29세	(1,343)	3.6	18.5	38.6	39.4	
만30~34세	(1,341)	3.8	15.6	36.8	43.8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4.5%),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79.7%), 청년 동거 가구(86.7%),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82.8%),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 소득 미만(80.7%) 집단에서 청년들이 주거를 마련하기에 수월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인식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7.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에 수월한 환경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3.8	17.3	39.3	39.6	-	
성별	남성	(2,000)	5.5	21.5	38.3	34.8	92.215***
	여성	(2,032)	2.2	13.2	40.3	44.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1	16.2	38.4	41.3	13.993*
	대학교(재/졸)	(3,356)	3.7	17.0	39.7	39.6	
	대학원(재/졸)	(194)	6.2	25.3	33.5	35.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8.4	29.0	34.3	28.4	241.980***
	청년 독립가구	(1,141)	3.5	18.3	39.9	38.3	
	청년 동거가구	(1,976)	1.9	11.4	41.2	45.5	
	기타	(10)	20.0	20.0	40.0	20.0	
권역별	수도권	(2,200)	3.8	16.5	39.0	40.8	25.059*
	충청권	(418)	3.8	16.5	38.5	41.1	
	전라권	(351)	5.4	23.6	35.6	35.3	
	경상권	(911)	3.4	18.6	41.4	36.7	
	강원/제주	(152)	3.3	10.5	41.4	44.7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2	19.6	32.3	42.9	102.041***
	비빈곤층	(1,931)	2.3	14.9	46.9	35.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6	18.2	37.8	39.4	11.426**
	중위소득 미만	(1,904)	3.0	16.3	40.9	39.8	

* $p < .05$, ** $p < .01$, *** $p < .001$

(1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청년들의 주거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N=3,178)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들에게 임대비나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청년들이 주거 마련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져서’ 응답이 16.2%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아 청년들이 주거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19~24세: 51.8%, 25~29세: 47.5%, 30~34세: 47.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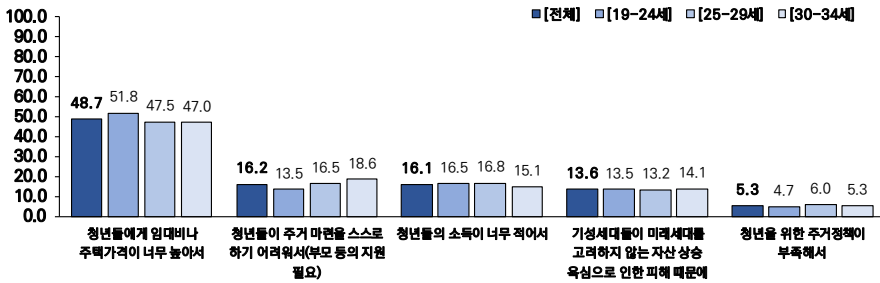


그림 IV-74.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V-148.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들에게 임대비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이 주거 마련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져서	청년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산 상승 욕심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부족해서	χ^2
전체	(3,178)	48.7	16.2	16.1	13.6	5.3	-
만19~24세	(1,050)	51.8	13.5	16.5	13.5	4.7	14.798
만25~29세	(1,047)	47.5	16.5	16.8	13.2	6.0	
만30~34세	(1,081)	47.0	18.6	15.1	14.1	5.3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51.9%),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비빈곤층(49.3%) 집단에서 임대비나 주택 가격이 높아 주거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49.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들에게 임대비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이 주거 마련 을 스스로 하기 어려 워서	청년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산 상승 욕심 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부족해서	χ^2
전체	(3,178)	48.7	16.2	16.1	13.6	5.3	-
성별	남성 (1,460)	45.1	17.5	18.5	13.6	5.3	19.803***
	여성 (1,718)	51.9	15.1	14.1	13.6	5.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4)	49.0	13.8	17.7	15.1	4.4	4.226
	대학교(재/졸) (2,661)	48.8	16.5	15.9	13.5	5.4	
	대학원(재/졸) (133)	47.4	18.0	16.5	12.0	6.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567)	45.7	19.8	18.0	10.9	5.6	18.856
	청년 독립가구 (892)	47.1	16.9	16.0	13.9	6.1	
	청년 동가구 (1,713)	50.7	14.7	15.5	14.3	4.8	
	기타 (6)	33.3	33.3	16.7	16.7	0.0	
권역별	수도권 (1,754)	50.3	16.6	15.4	12.7	4.9	22.605
	충청권 (333)	46.2	15.3	18.6	15.3	4.5	
	전라권 (249)	41.0	18.9	16.9	16.5	6.8	
	경상권 (711)	48.8	15.9	16.6	12.7	6.0	
	강원/제주 (131)	48.1	9.9	15.3	20.6	6.1	
주관적 계층	빈곤층 (1,579)	48.1	14.2	17.1	14.9	5.6	15.093**
	비빈곤층 (1,599)	49.3	18.3	15.1	12.3	5.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1,642)	47.3	17.4	16.3	14.1	5.0	5.731
	중위소득 미만 (1,536)	50.3	15.0	16.0	13.1	5.7	

* $p < .05$, ** $p < .01$, *** $p < .001$

(12)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안함' 응답이 80.7%(매우: 37.3% + 조금 그런 편: 43.4%)로 '불안하지 않음' 응답 19.3%(전혀: 3.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1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4세: 78.7%, 25~29세: 81.5%, 30~34세: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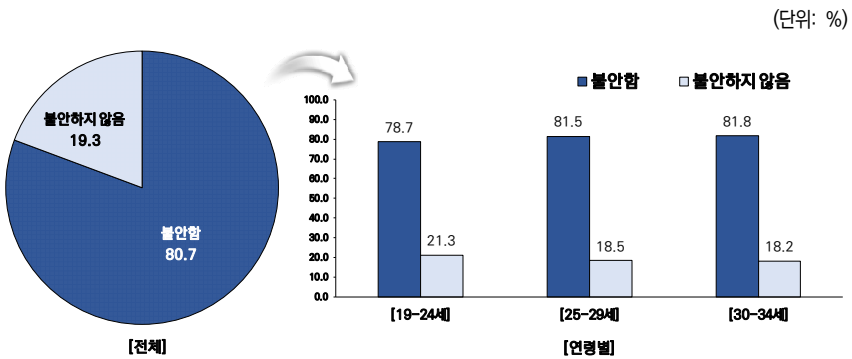


그림 IV-75.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표 IV-150.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있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χ^2
전체	(4,032)	37.3	43.4	16.4	3.0	-
만19~24세	(1,348)	32.1	46.6	17.5	3.8	27.495***
만25~29세	(1,343)	39.3	42.2	16.2	2.2	
만30~34세	(1,341)	40.6	41.2	15.4	2.8	

* $p < .05$, ** $p < .01$, *** $p < .001$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84.3%),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81.2%),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87.6%) 집단에서 주거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1.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여부 (배경변인별)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있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χ^2
전체		(4,032)	37.3	43.4	16.4	3.0	-
성별	남성	(2,000)	33.6	43.5	19.4	3.6	41.862***
	여성	(2,032)	41.0	43.3	13.4	2.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0.0	37.6	19.1	3.3	10.419
	대학교(재/졸)	(3,356)	37.1	44.2	15.9	2.8	
	대학원(재/졸)	(194)	34.0	43.3	18.6	4.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2.0	48.4	15.9	3.6	20.968*
	청년 독립가구	(1,141)	38.5	41.5	17.2	2.8	
	청년 동거가구	(1,976)	39.0	42.2	16.1	2.7	
	기타	(10)	50.0	30.0	1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37.8	42.9	16.2	3.1	20.038
	충청권	(418)	41.1	38.0	17.7	3.1	
	전라권	(351)	34.5	46.7	14.5	4.3	
	경상권	(911)	34.2	46.5	17.0	2.2	
	강원/제주	(152)	44.7	38.2	15.1	2.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7.5	40.1	10.7	1.7	242.309***
	비빈곤층	(1,931)	26.3	46.9	22.6	4.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8.8	42.8	15.9	2.5	6.018
	중위소득 미만	(1,904)	35.7	44.0	16.9	3.4	

* $p < .05$, ** $p < .01$, *** $p < .001$

(13)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높음’ 응답이 74.1%(매우 높은 편: 49.5% + 조금 높은 편: 24.5%)로 ‘낮음’ 응답 8.0%(매우 낮은 편: 1.6% + 다소 낮은 편: 6.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19~24세: 74.6%, 25~29세: 73.3%, 30~34세: 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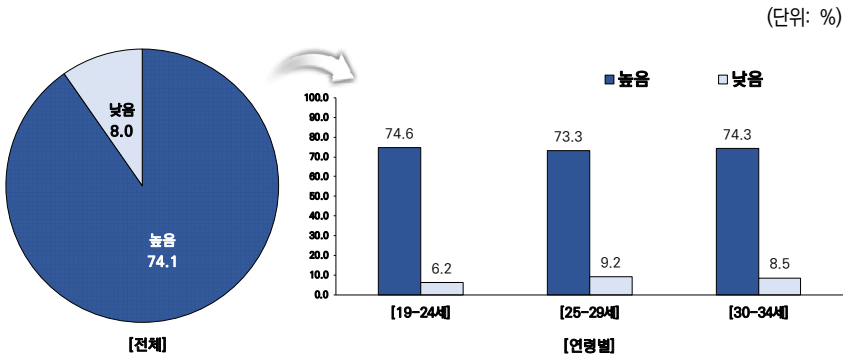


그림 IV-76.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표 IV-152.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조금 높다	적정하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χ^2
전체	(4,032)	49.5	24.5	18.0	6.3	1.6	-
만19~24세	(1,348)	45.6	28.9	19.2	5.1	1.1	34.676***
만25~29세	(1,343)	50.1	23.2	17.5	7.4	1.8	
만30~34세	(1,341)	52.9	21.4	17.2	6.6	1.9	

* $p < .05$, ** $p < .01$, *** $p < .001$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76.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74.9%),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78.4%), 권역별로는 충청권(75.8%),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는 빈곤층(75.4%),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74.9%) 집단에서 현재 주택 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3. 지금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조금 높다	적정하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χ^2
전체		(4,032)	49.5	24.5	18.0	6.3	1.6	-
성별	남성	(2,000)	46.9	25.1	18.5	7.9	1.7	21.617 ***
	여성	(2,032)	52.1	24.0	17.5	4.8	1.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8.5	22.4	18.5	6.4	4.1	29.934 ***
	대학교(재/졸)	(3,356)	50.1	24.9	17.6	6.3	1.3	
	대학원(재/졸)	(194)	42.8	24.2	24.2	7.2	1.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9.8	27.5	24.4	7.2	1.1	77.506 ***
	청년 독립가구	(1,141)	48.6	23.4	18.1	7.9	2.1	
	청년 동거가구	(1,976)	54.5	23.9	15.0	5.1	1.6	
	기타	(10)	60.0	10.0	20.0	1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51.8	23.1	17.8	6.2	1.1	45.790 ***
	충청권	(418)	53.3	22.5	15.8	6.0	2.4	
	전라권	(351)	41.6	25.6	19.7	9.4	3.7	
	경상권	(911)	45.3	29.0	18.4	5.5	1.8	
	강원/제주	(152)	50.0	21.7	20.4	7.2	0.7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53.7	21.7	16.4	6.2	1.9	38.299 ***
	비빈곤층	(1,931)	45.0	27.6	19.7	6.5	1.3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0.8	24.1	16.9	6.7	1.6	5.923
	중위소득 미만	(1,904)	48.1	25.1	19.2	6.0	1.7	

* $p < .05$, ** $p < .01$, *** $p < .001$

(14)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높아질 것이다' 응답이 56.6%(매우: 21.9% + 조금 높아짐: 34.8%)로 '낮아질 것이다' 응답 16.9%(전혀: 1.6% + 다소 낮아짐: 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9~24세: 61.9%, 25~29세: 53.5%, 30~34세: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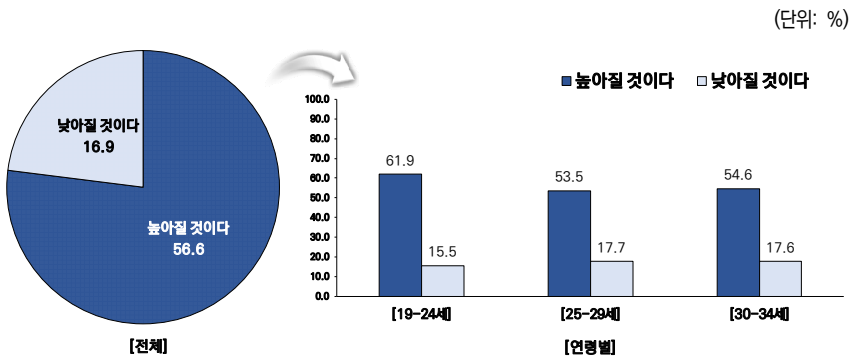


그림 IV-77.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표 IV-154.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높아질 것이다	조금 높아질 것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소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χ^2
전체	(4,032)	21.9	34.8	26.4	15.4	1.6	-
만19~24세	(1,348)	25.6	36.3	22.6	14.2	1.3	31.238***
만25~29세	(1,343)	19.1	34.3	28.8	16.4	1.3	
만30~34세	(1,341)	20.8	33.8	27.8	15.6	2.0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제외한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63.1%),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59.3%), 가구유형별로는 기타(80.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61.0%) 집단에서 향후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5.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높아질 것이다	조금 높아질 것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소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χ^2	
전체	(4,032)	21.9	34.8	26.4	15.4	1.6	-	
성별	남성	(2,000)	18.0	32.1	29.1	18.3	2.6	92.477***
	여성	(2,032)	25.6	37.5	23.8	12.5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7.8	31.5	25.1	13.1	2.5	18.210*
	대학교(재/졸)	(3,356)	21.2	35.3	26.4	15.6	1.5	
	대학원(재/졸)	(194)	19.1	34.0	29.4	17.0	0.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19.8	36.2	29.5	13.1	1.3	29.420**
	청년 독립가구	(1,141)	22.8	32.5	28.0	14.7	2.0	
	청년 동거가구	(1,976)	22.1	35.5	24.2	16.8	1.4	
	기타	(10)	60.0	20.0	10.0	10.0	0.0	
권역별	수도권	(2,200)	20.5	34.9	27.1	16.0	1.6	21.963
	충청권	(418)	25.4	31.6	29.2	12.4	1.4	
	전라권	(351)	22.2	33.6	28.2	14.5	1.4	
	경상권	(911)	23.4	36.1	24.0	14.7	1.8	
	강원/제주	(152)	21.7	37.5	19.1	21.1	0.7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7.2	33.7	24.8	12.6	1.7	86.087***
	비빈곤층	(1,931)	16.0	35.9	28.2	18.4	1.5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0.5	35.4	27.0	15.6	1.5	5.092
	중위소득 미만	(1,904)	23.3	34.1	25.8	15.1	1.7	

* $p < .05$, ** $p < .01$, *** $p < .001$

(15)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하지 않음’ 응답이 68.7%(전혀: 24.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44.6%)로 ‘빈곤함’ 응답 31.3%(매우: 7.2% + 조금 그런 편: 2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제대로 된 주거에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25.2%, 25~29세: 32.5%, 30~34세: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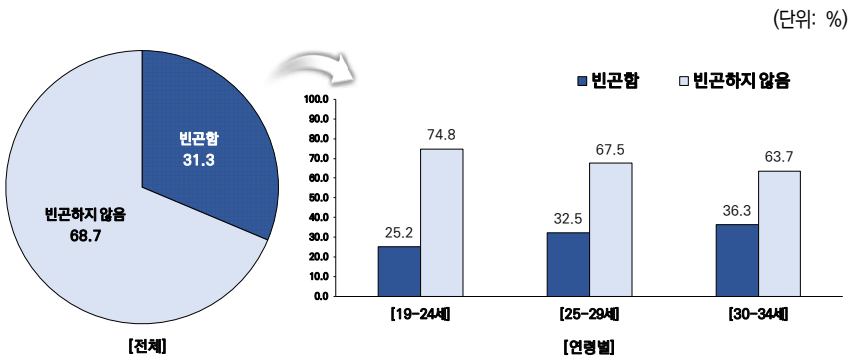


그림 IV-78.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표 IV-156.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7.2	24.1	44.6	24.0	-
만19~24세	(1,348)	6.1	19.1	45.7	29.1	52.928***
만25~29세	(1,343)	6.9	25.6	44.7	22.9	
만30~34세	(1,341)	8.7	27.6	43.5	20.1	

* $p < .05$, ** $p < .01$, *** $p < .001$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34.9%),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39.6%),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41.1%),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52.3%),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4.4%) 집단에서 제대로 된 주거에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7. 주거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32)	7.2	24.1	44.6	24.0	-
성별	남성	(2,000)	8.3	26.6	44.1	21.1	30.785***
	여성	(2,032)	6.2	21.7	45.2	26.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1.2	28.4	43.2	17.2	28.475***
	대학교(재/졸)	(3,356)	6.7	23.5	45.1	24.8	
	대학원(재/졸)	(194)	6.7	24.2	41.2	27.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8.0	33.1	39.0	19.9	228.750***
	청년 독립가구	(1,141)	10.6	29.8	44.5	15.1	
	청년 동가가구	(1,976)	4.8	16.8	47.3	31.1	
	기타	(10)	30.0	10.0	40.0	20.0	
권역별	수도권	(2,200)	7.3	24.0	43.3	25.4	17.399
	충청권	(418)	6.5	23.4	46.9	23.2	
	전라권	(351)	6.6	30.5	42.5	20.5	
	경상권	(911)	7.4	23.3	46.8	22.6	
	강원/제주	(152)	8.6	18.4	50.0	23.0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13.3	39.0	38.2	9.5	1,054.225***
	비빈곤층	(1,931)	0.6	7.9	51.7	39.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7.6	26.8	44.1	21.6	25.868***
	중위소득 미만	(1,904)	6.8	21.1	45.3	26.8	

* $p < .05$, ** $p < .01$, *** $p < .001$

3) 청년의 주거에 관한 정책요구

(1) 주거분야 청년정책에 관한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효과성 인식

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3.3%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6%) 응답이 ‘수혜 받음’(4.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6.7%(매우: 14.0% + 조금 그런 편: 42.8%)로 ‘부정’ 응답 43.3%(전혀: 10.6%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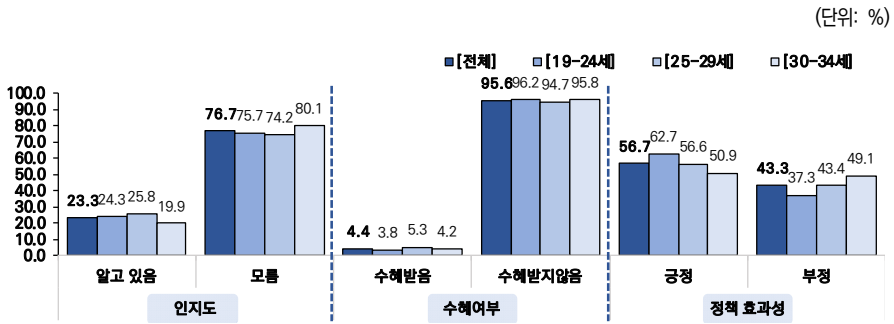


그림 IV-7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표 IV-15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3	76.7	-	4.4	95.6	-	56.7	43.3	-
만19~24세	(1,348)	24.3	75.7	13.867 ***	3.8	96.2	3.874	62.7	37.3	45.313 ***
만25~29세	(1,343)	25.8	74.2		5.3	94.7		56.6	43.4	
만30~34세	(1,341)	19.9	80.1		4.2	95.8		50.9	49.1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3	76.7	-	4.4	95.6	-	56.7	43.3	-		
성별	남성 (2,000)	24.3	75.8	1.947	6.0	94.0	23.636	53.8	46.2	38.709		
	여성 (2,032)	22.4	77.6		2.9	97.1		***	59.6		40.4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3.0	77.0	1.393	4.8	95.2	1.775	55.0	45.0	10.517		
	대학교(재/졸) (3,356)	23.2	76.8		4.3	95.7		57.2	42.8			
	대학원(재/졸) (194)	26.8	73.2		6.2	93.8		52.1	47.9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6.6	73.4	68.589	8.2	91.8	70.745	54.4	45.6	22.815		
	청년 독립가구 (1,141)	30.1	69.9		6.0	94.0		***	55.7		44.3	
	청년 동가가구 (1,976)	17.9	82.1		1.8	98.2		***	58.6		41.4	**
	기타 (10)	10.0	90.0		0.0	100.0			30.0		70.0	
권역별	수도권 (2,200)	22.4	77.6	4.613	4.0	96.0	4.397	54.5	45.5	21.010		
	충청권 (418)	21.8	78.2		4.3	95.7		55.5	44.5			
	전라권 (351)	26.2	73.8		6.3	93.7		64.1	35.9			
	경상권 (911)	24.9	75.1		4.4	95.6		59.2	40.8			
	강원/제주 (152)	24.3	75.7		5.9	94.1		61.2	38.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7.0	73.0	33.116	5.8	94.2	18.792	56.0	44.0	16.886		
	비빈곤층 (1,931)	19.3	80.7		3.0	97.0		***	57.5		42.5	***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4.2	75.8	2.202	4.7	95.3	0.865	53.5	46.5	25.827		
	중위소득 미만 (1,904)	22.3	77.7		4.1	95.9		60.3	39.7		***	

* $p < .05$, ** $p < .01$, *** $p < .001$

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2.6%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7.4%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7%) 응답이 ‘수혜 받음’(3.3%)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8.1%(매우: 16.0% + 조금 그런 편: 42.1%)로 ‘부정’ 응답 41.9%(전혀: 11.5%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0.4%)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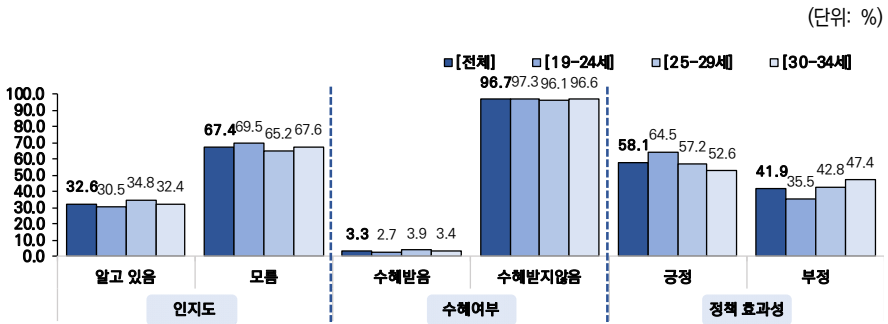


그림 IV-8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표 IV-16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2.6	67.4	-	3.3	96.7	-	58.1	41.9	-
만19~24세	(1,348)	30.5	69.5	5.836	2.7	97.3	3.002	64.5	35.5	53.976 ***
만25~29세	(1,343)	34.8	65.2		3.9	96.1		57.2	42.8	
만30~34세	(1,341)	32.4	67.6		3.4	96.6		52.6	47.4	

* $p < .05$, ** $p < .01$, *** $p < .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2.6	67.4	-	3.3	96.7	-	58.1	41.9	-
성별	남성 (2,000)	29.9	70.2	13.555 ***	4.5	95.5	16.268 ***	53.7	46.3	47.944 ***
	여성 (2,032)	35.3	64.7		2.2	97.8		62.5	37.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9.0	71.0	4.292	3.5	96.5	1.151	57.3	42.7	9.175
	대학교(재/졸) (3,356)	32.9	67.1		3.2	96.8		58.5	41.5	
	대학원(재/졸) (194)	36.6	63.4		4.6	95.4		53.6	46.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0.8	69.2	33.609 ***	5.9	94.1	39.957 ***	55.5	44.5	21.457*
	청년 독립가구 (1,141)	39.2	60.8		4.4	95.6		57.4	42.6	
	청년 동가가구 (1,976)	29.7	70.3		1.6	98.4		60.0	40.0	
	기타 (10)	10.0	9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32.0	68.0	8.110	3.3	96.7	1.392	55.7	44.3	21.580*
	충청권 (418)	32.5	67.5		2.6	97.4		58.9	41.1	
	전라권 (351)	28.2	71.8		4.0	96.0		64.7	35.3	
	경상권 (911)	34.5	65.5		3.5	96.5		60.7	39.3	
	강원/제주 (152)	39.5	60.5		3.9	96.1		59.9	40.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5.9	64.1	21.725 ***	4.6	95.4	20.212 ***	57.1	42.9	14.162 **
	비빈곤층 (1,931)	29.0	71.0		2.0	98.0		59.2	40.8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5.0	65.0	11.552 ***	4.0	96.0	5.814*	55.4	44.6	26.564 ***
	중위소득 미만 (1,904)	29.9	70.1		2.6	97.4			61.2	38.8

* $p < .05$, ** $p < .01$, *** $p < .001$

다. 취약 주거지 개선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 주거지 개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18.0%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82.0%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6%) 응답이 ‘수혜 받음’(3.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4.4%(매우: 14.7% + 조금 그런 편: 39.7%)로 ‘부정’ 응답 45.6%(전혀: 11.9%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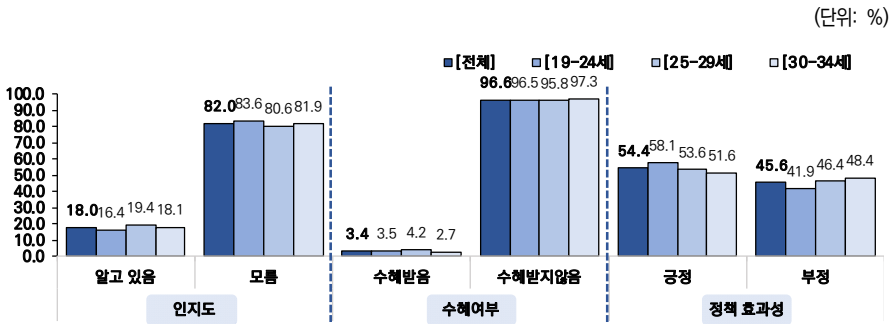


그림 IV-81. 취약 주거지 개선

표 IV-162. 취약 주거지 개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8.0	82.0	-	3.4	96.6	-	54.4	45.6	-
만19~24세	(1,348)	16.4	83.6	4.241	3.5	96.5	4.456	58.1	41.9	18.349 **
만25~29세	(1,343)	19.4	80.6		4.2	95.8		53.6	46.4	
만30~34세	(1,341)	18.1	81.9		2.7	97.3		51.6	48.4	

* $p < .05$, ** $p < .01$, *** $p < .001$

취약 주거지 개선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 유형,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3. 취약 주거지 개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18.0	82.0	-	3.4	96.6	-	54.4	45.6	-
성별	남성 (2,000)	19.6	80.4	7.052 **	4.6	95.5	14.494 ***	50.2	49.9	38.751 ***
	여성 (2,032)	16.4	83.6		2.4	97.6		58.7	41.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18.0	82.0	0.554	3.3	96.7	3.025	47.5	52.5	27.922 ***
	대학교(재/졸) (3,356)	18.1	81.9		3.3	96.7		55.4	44.6	
	대학원(재/졸) (194)	16.0	84.0		5.7	94.3		55.7	44.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4.3	75.7	36.280 ***	7.5	92.5	62.287 ***	53.6	46.4	17.976*
	청년 독립가구 (1,141)	18.1	81.9		3.2	96.8		52.2	47.8	
	청년 동거가구 (19,76)	15.1	84.9		1.8	98.2		56.2	43.8	
	기타 (10)	10.0	90.0		0.0	100.0		30.0	70.0	
권역별	수도권 (2,200)	17.2	82.8	6.155	3.2	96.8	5.159	52.6	47.4	23.620*
	충청권 (418)	17.2	82.8		3.1	96.9		54.3	45.7	
	전라권 (351)	19.7	80.3		5.1	94.9		60.7	39.3	
	경상권 (911)	18.6	81.4		3.3	96.7		56.5	43.5	
	강원/제주 (152)	24.3	75.7		5.3	94.7		53.9	46.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19.1	80.9	3.632	4.6	95.4	16.587 ***	53.4	46.6	15.401 **
	비빈곤층 (1,931)	16.8	83.2		2.2	97.8		55.6	44.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19.9	80.1	10.992 ***	3.9	96.1	3.384	52.6	47.4	11.077*
	중위소득 미만 (1,904)	15.9	84.1		2.9	97.1		56.5	43.5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50.6%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8%) 응답이 ‘수혜 받음’(4.2%)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3.3%(매우: 18.0% + 조금 그런 편: 45.3%)로 ‘부정’ 응답 36.7%(전혀: 10.4%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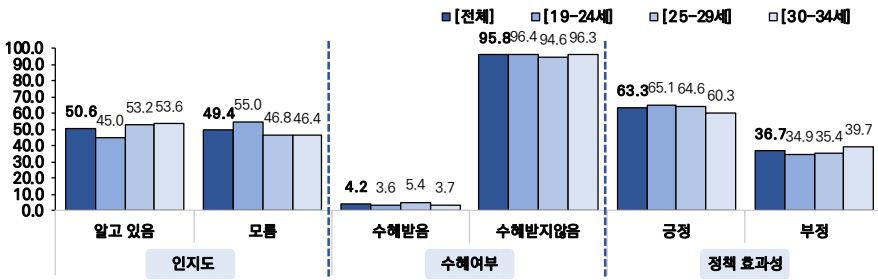


그림 IV-82. 청년주택 공급 확대

표 IV-164. 청년주택 공급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50.6	49.4	-	4.2	95.8	-	63.3	36.7	-
만19~24세	(1,348)	45.0	55.0	25.149 ***	3.6	96.4	7.122*	65.1	34.9	12.734*
만25~29세	(1,343)	53.2	46.8		5.4	94.6		64.6	35.4	
만30~34세	(1,341)	53.6	46.4		3.7	96.3		60.3	39.7	

* $p < .05$, ** $p < .01$, *** $p < .001$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5.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50.6	49.4	-	4.2	95.8	-	63.3	36.7	-
성별	남성 (2,000)	45.2	54.8	46.214 ***	5.2	94.8	8.986 **	58.4	41.6	48.300 ***
	여성 (2,032)	55.9	44.1		3.3	96.7		68.2	3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0.5	59.5	23.253 ***	4.6	95.4	0.240	58.5	41.5	10.155
	대학교(재/졸) (3,356)	52.1	47.9		4.2	95.8		64.2	35.8	
	대학원(재/졸) (194)	49.0	51.0		4.6	95.4		59.3	40.7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8.6	51.4	8.872*	6.5	93.5	34.841 ***	58.9	41.1	37.710 ***
	청년 독립가구 (1,141)	51.9	48.1		5.7	94.3		62.4	37.6	
	청년 동거가구 (1,976)	51.0	49.0		2.4	97.6		66.1	33.9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53.3	46.7	21.998 ***	4.5	95.5	4.000	61.7	38.3	19.474
	충청권 (418)	45.9	54.1		3.1	96.9		61.5	38.5	
	전라권 (351)	41.6	58.4		5.4	94.6		68.4	31.6	
	경상권 (911)	49.5	50.5		3.6	96.4		65.9	34.1	
	강원/제주 (152)	51.3	48.7		5.3	94.7		65.1	34.9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9.5	50.5	2.291	5.0	95.0	6.985 **	62.0	38.0	16.176 **
	비빈곤층 (1,931)	51.8	48.2		3.4	96.6		64.8	35.2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3.5	46.5	15.468 ***	4.7	95.3	2.329	62.1	37.9	4.174
	중위소득 미만 (1,904)	47.3	52.7		3.7	96.3		64.7	35.3	

*p<.05, **p<.01, ***p<.001

마.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44.4%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55.6%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7%) 응답이 ‘수혜 받음’(4.3%)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8.9%(매우: 15.5% + 조금 그런 편: 43.4%)로 ‘부정’ 응답 41.1%(전혀: 11.4%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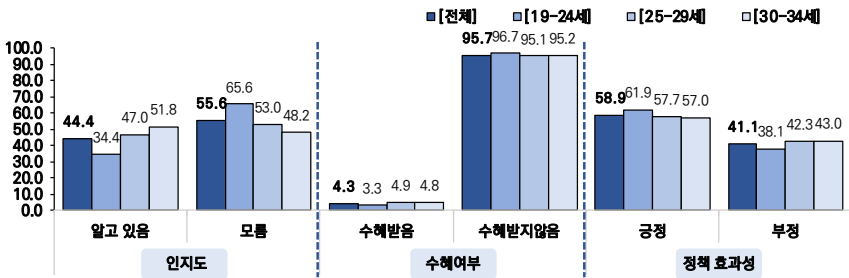


그림 IV-83. 공공지원 민간임대

표 IV-166.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44.4	55.6	-	4.3	95.7	-	58.9	41.1	-
만19~24세	(1,348)	34.4	65.6	87.381 ***	3.3	96.7	4.929	61.9	38.1	16.896 **
만25~29세	(1,343)	47.0	53.0		4.9	95.1		57.7	42.3	
만30~34세	(1,341)	51.8	48.2		4.8	95.2		57.0	43.0	

* $p < .05$, ** $p < .01$, *** $p < .001$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권역 및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7. 공공지원 민간임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44.4	55.6	-	4.3	95.7	-	58.9	41.1	-
성별	남성 (2,000)	40.8	59.3	21.070	5.4	94.6	10.734	53.0	47.1	84.292
	여성 (2,032)	47.9	52.1	***	3.3	96.7	**	64.7	35.3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3.6	66.4	27.927 ***	4.6	95.4	14.931 ***	53.9	46.1	16.793 *
	대학교(재/졸) (3,356)	45.5	54.5		4.0	96.0		59.7	40.3	
	대학원(재/졸) (194)	51.0	49.0		9.8	90.2		56.7	4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9.9	50.1	24.770 ***	8.3	91.7	59.274 ***	58.7	41.3	24.476 **
	청년 독립가구 (1,141)	45.7	54.3		5.1	94.9		55.7	44.3	
	청년 동거가구 (1,976)	41.2	58.8		2.1	97.9		61.0	39.0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46.3	53.7	12.866 *	4.4	95.6	6.636	56.0	44.0	24.500 *
	충청권 (418)	40.2	59.8		4.1	95.9		59.3	40.7	
	전라권 (351)	38.7	61.3		5.7	94.3		63.8	36.2	
	경상권 (911)	43.0	57.0		3.4	96.6		63.7	36.3	
	강원/제주 (152)	49.3	50.7		7.2	92.8		59.2	40.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3.7	56.3	0.703	5.2	94.8	7.593 **	56.9	43.1	30.946 ***
	비빈곤층 (1,931)	45.1	54.9		3.4	96.6		61.1	38.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0.8	49.2	76.563 ***	4.9	95.1	3.247	58.3	41.7	1.284
	중위소득 미만 (1,904)	37.1	62.9		3.7	96.3		59.5	40.5	

* $p < .05$, ** $p < .01$, *** $p < .001$

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48.5%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51.5%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4.3%) 응답이 ‘수혜 받음’(5.7%)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5.0%(매우: 22.9% + 조금 그런 편: 42.1%)로 ‘부정’ 응답 35.0%(전혀: 10.3%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4.7%)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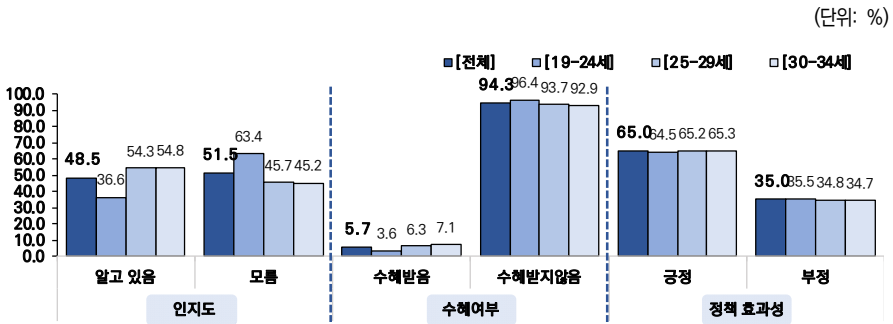


그림 IV-84.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표 IV-168.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48.5	51.5	-	5.7	94.3	-	65.0	35.0	-
만19~24세	(1,348)	36.6	63.4	116.116 ***	3.6	96.4	16.350 ***	64.5	35.5	13.941*
만25~29세	(1,343)	54.3	45.7		6.3	93.7		65.2	34.8	
만30~34세	(1,341)	54.8	45.2		7.1	92.9		65.3	34.7	

* $p < .05$, ** $p < .01$, *** $p < .001$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9.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48.5	51.5	-	5.7	94.3	-	65.0	35.0	-
성별	남성 (2,000)	42.5	57.5	57.897	6.6	93.4	6.646	58.8	41.2	73.519
	여성 (2,032)	54.5	45.5	***	4.7	95.3	**	71.1	28.9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3.8	56.2	8.425 *	5.8	94.2	8.433 *	62.2	37.8	12.736 *
	대학교(재/졸) (3,356)	48.8	51.2		5.4	94.6		65.2	34.8	
	대학원(재/졸) (194)	55.7	44.3		10.3	89.7		68.0	32.0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53.8	46.2	70.861 ***	9.7	90.3	95.681 ***	64.8	35.2	30.452 ***
	청년 독립가구 (1,141)	55.7	44.3		8.7	91.3		64.7	35.3	
	청년 동거가구 (1,976)	42.2	57.8		2.1	97.9		65.5	34.5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49.7	50.3	7.472	6.2	93.8	6.627	63.7	36.3	21.943 *
	충청권 (418)	51.0	49.0		6.5	93.5		64.1	35.9	
	전라권 (351)	43.3	56.7		5.7	94.3		70.9	29.1	
	경상권 (911)	46.5	53.5		4.0	96.0		66.3	33.7	
	강원/제주 (152)	49.3	50.7		5.9	94.1		64.5	35.5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9.5	50.5	1.631	6.8	93.2	10.021	63.7	36.3	9.411
	비빈곤층 (1,931)	47.5	52.5		4.5	95.5		**	66.4	33.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7.4	42.6	142.520	6.8	93.2	11.349	66.9	33.1	10.840
	중위소득 미만 (1,904)	38.6	61.4	***	4.4	95.6	***	62.9	37.1	*

* $p < .05$, ** $p < .01$, *** $p < .001$

사.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41.4%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58.6%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3.4%) 응답이 ‘수혜 받음’(6.6%)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3.6%(매우: 22.9% + 조금 그런 편: 40.7%)로 ‘부정’ 응답 36.4%(전혀: 10.0%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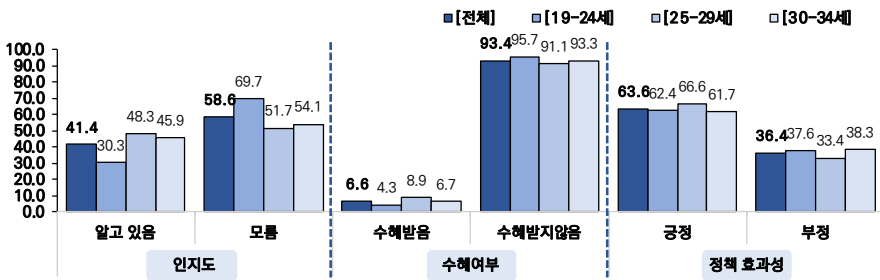


그림 IV-85.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표 IV-170.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41.4	58.6	-	6.6	93.4	-	63.6	36.4	-
만19~24세	(1,348)	30.3	69.7	105.810 ***	4.3	95.7	23.281 ***	62.4	37.6	19.434 **
만25~29세	(1,343)	48.3	51.7		8.9	91.1		66.6	33.4	
만30~34세	(1,341)	45.9	54.1		6.7	93.3		61.7	38.3	

* $p < .05$, ** $p < .01$, *** $p < .001$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1.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41.4	58.6	-	6.6	93.4	-	63.6	36.4	-
성별	남성 (2,000)	35.4	64.7	60.719 ***	7.0	93.1	0.588	56.7	43.4	96.815 ***
	여성 (2,032)	47.4	52.6		6.3	93.7		70.4	29.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6.1	63.9	10.352 **	5.2	94.8	4.757	61.4	38.6	8.172
	대학교(재/졸) (3,356)	41.8	58.2		6.7	93.3		63.8	36.2	
	대학원(재/졸) (194)	49.0	51.0		9.8	90.2		65.5	34.5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4.1	55.9	87.577 ***	10.2	89.8	131.648 ***	63.2	36.8	23.766 **
	청년 독립가구 (1,141)	51.2	48.8		11.7	88.3		64.2	35.8	
	청년 동거가구 (1,976)	34.8	65.2		2.1	97.9		63.6	36.4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43.7	56.3	16.450 **	6.8	93.2	5.277	62.0	38.0	17.456
	충청권 (418)	37.6	62.4		5.3	94.7		66.0	34.0	
	전라권 (351)	34.2	65.8		6.3	93.7		67.2	32.8	
	경상권 (911)	40.0	60.0		6.4	93.6		65.1	34.9	
	강원/제주 (152)	44.7	55.3		10.5	89.5		61.8	38.2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4.1	55.9	12.511 ***	8.1	91.9	15.742 ***	61.5	38.5	13.050 **
	비빈곤층 (1,931)	38.6	61.4	5.0	95.0	65.9	34.1	**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51.1	48.9	174.155 ***	8.6	91.4	27.695 ***	65.7	34.3	21.811 ***
	중위소득 미만 (1,904)	30.6	69.4	4.5	95.5	61.2	38.8	***		

* $p < .05$, ** $p < .01$, *** $p < .001$

아.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3.2%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6.8%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6%) 응답이 ‘수혜 받음’(3.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8.2%(매우: 15.5% + 조금 그런 편: 42.7%)로 ‘부정’ 응답 41.8%(전혀: 11.5%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0.3%)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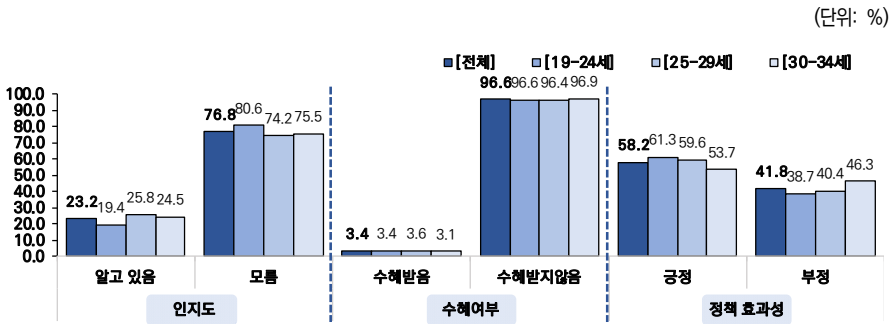


그림 IV-86.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표 IV-172.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2	76.8	-	3.4	96.6	-	58.2	41.8	-
만19~24세	(1,348)	19.4	80.6	17.295 ***	3.4	96.6	0.547	61.3	38.7	26.190 ***
만25~29세	(1,343)	25.8	74.2		3.6	96.4		59.6	40.4	
만30~34세	(1,341)	24.5	75.5		3.1	96.9		53.7	46.3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최종학력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2	76.8	-	3.4	96.6	-	58.2	41.8	-
성별	남성 (2,000)	22.3	77.7	1.763	4.5	95.6	13.385 ***	52.1	47.9	70.799 ***
	여성 (2,032)	24.1	75.9		2.4	97.6		64.2	35.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2.0	78.0	3.319	3.7	96.3	5.208	54.8	45.2	25.379 ***
	대학교(재/졸) (3,356)	23.1	76.9		3.2	96.8		59.0	41.0	
	대학원(재/졸) (194)	28.4	71.6		6.2	93.8		52.6	47.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27.4	72.6	64.482 ***	6.2	93.8	47.077 ***	55.0	45.0	26.881 **
	청년 독립가구 (1,141)	29.2	70.8		4.5	95.5		57.6	42.4	
	청년 동거가구 (1,976)	17.9	82.1		1.5	98.5		60.2	39.8	
	기타 (10)	10.0	9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23.5	76.5	3.042	3.2	96.8	14.459 **	56.5	43.5	24.503*
	충청권 (418)	21.3	78.7		1.9	98.1		59.1	40.9	
	전라권 (351)	20.5	79.5		5.4	94.6		65.2	34.8	
	경상권 (911)	24.3	75.7		3.1	96.9		59.2	40.8	
	강원/제주 (152)	24.3	75.7		7.2	92.8		57.2	42.8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6.3	73.7	23.421 ***	4.3	95.7	11.646 ***	56.0	44.0	26.411 ***
	비빈곤층 (1,931)	19.8	80.2	2.4	97.6	60.6	39.4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6.9	73.1	35.335 ***	3.8	96.2	2.292	58.0	42.0	0.345
	중위소득 미만 (1,904)	19.0	81.0	2.9	97.1	58.4		41.6		

* $p < .05$, ** $p < .01$, *** $p < .001$

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3.8%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6.2%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6%) 응답이 ‘수혜 받음’(4.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8.7%(매우: 16.7% + 조금 그런 편: 42.0%)로 ‘부정’ 응답 41.3%(전혀: 11.3%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30.1%)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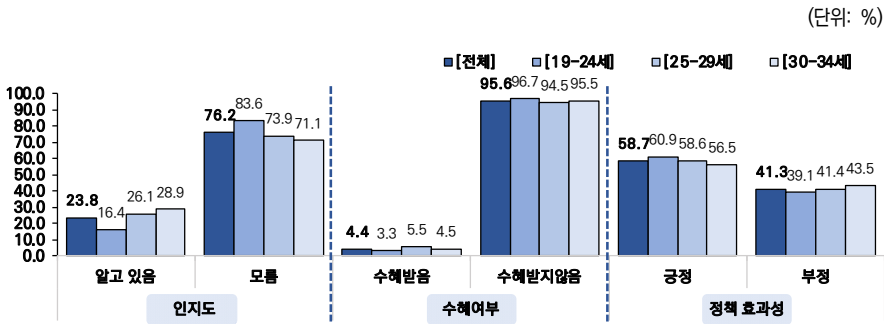


그림 IV-87.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표 IV-174.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8	76.2	-	4.4	95.6	-	58.7	41.3	-
만19~24세	(1,348)	16.4	83.6	63.542 ***	3.3	96.7	8.056*	60.9	39.1	7.423
만25~29세	(1,343)	26.1	73.9		5.5	94.5		58.6	41.4	
만30~34세	(1,341)	28.9	71.1		4.5	95.5		56.5	43.5	

* $p < .05$, ** $p < .01$, *** $p < .00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최종학력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3.8	76.2	-	4.4	95.6	-	58.7	41.3	-	
성별	남성 (2,000)	23.1	76.9	0.954	5.6	94.4	12.598	53.1	47.0	61.110	
	여성 (2,032)	24.4	75.6		3.3	96.7		***	64.2		35.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2.0	78.0	4.226	4.8	95.2	1.694	55.8	44.2	11.881	
	대학교(재/졸) (3,356)	23.7	76.3		4.3	95.7		59.0	41.0		
	대학원(재/졸) (194)	29.4	70.6		6.2	93.8		59.8	40.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1.5	68.5	75.591	8.1	91.9	52.510	58.3	41.7	19.161*	
	청년 독립가구 (1,141)	27.6	72.4		5.3	94.7		58.4	41.6		
	청년 동거가구 (1,976)	18.1	81.9		***	2.3		97.7	59.2		40.8
	기타 (10)	10.0	90.0		0.0	100.0		10.0	90.0		
권역별	수도권 (2,200)	23.8	76.2	2.975	4.3	95.7	9.791*	56.6	43.4	33.875	
	충청권 (418)	23.2	76.8		3.3	96.7		64.4	35.6		
	전라권 (351)	21.9	78.1		6.0	94.0		61.5	38.5		
	경상권 (911)	23.8	76.2		4.0	96.0		60.5	39.5		
	강원/제주 (152)	28.9	71.1		8.6	91.4		55.3	44.7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25.7	74.3	9.135	5.6	94.4	13.188	57.6	42.4	15.356	
	비빈곤층 (1,931)	21.6	78.4	**	3.2	96.8	***	59.8	40.2	**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28.7	71.3	59.864	4.8	95.2	1.706	58.2	41.8	10.263*	
	중위소득 미만 (1,904)	18.3	81.7	***	4.0	96.0		59.2	40.8		

* $p < .05$, ** $p < .01$, *** $p < .001$

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61.4%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38.6%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81.6%) 응답이 ‘수혜 받음’(18.4%)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6.3%(매우: 24.4% + 조금 그런 편: 41.9%)로 ‘부정’ 응답 33.7%(전혀: 8.9%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4.8%)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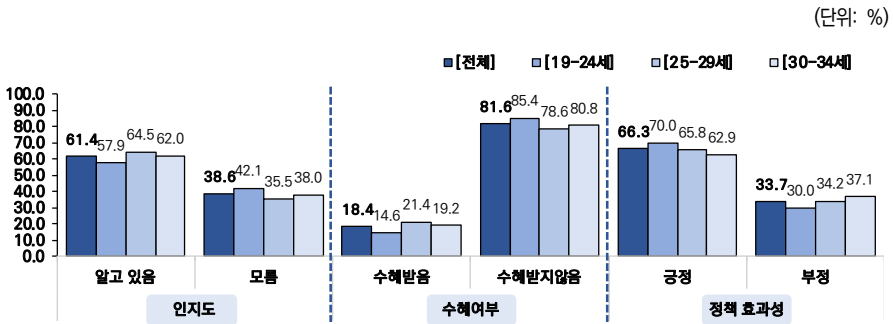


그림 IV-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표 IV-17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61.4	38.6	-	18.4	81.6	-	66.3	33.7	-
만19~24세	(1,348)	57.9	42.1	12.683 **	14.6	85.4	21.299 ***	70.0	30.0	25.503 ***
만25~29세	(1,343)	64.5	35.5		21.4	78.6		65.8	34.2	
만30~34세	(1,341)	62.0	38.0		19.2	80.8		62.9	37.1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권역 및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61.4	38.6	-	18.4	81.6	-	66.3	33.7	-
성별	남성 (2,000)	53.7	46.3	100.177	16.0	84.0	14.960	60.4	39.7	83.252
	여성 (2,032)	69.0	31.0	***	20.7	79.3	***	72.1	27.9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52.3	47.7	19.359 ***	12.4	87.6	13.479 **	63.5	36.5	17.127 **
	대학교(재/졸) (3,356)	62.7	37.3		19.3	80.7		66.9	33.1	
	대학원(재/졸) (194)	62.4	37.6		17.0	83.0		62.9	37.1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54.9	45.1	29.856 ***	15.9	84.1	27.933 ***	63.0	37.0	36.614 ***
	청년 독립가구 (1,141)	62.3	37.7		23.3	76.7		63.3	36.7	
	청년 동거가구 (1,976)	64.1	35.9		16.8	83.2		69.7	30.3	
	기타 (10)	20.0	80.0		0.0	100.0		30.0	70.0	
권역별	수도권 (2,200)	61.2	38.8	9.357	18.2	81.8	5.511	64.8	35.2	27.677 **
	충청권 (418)	62.9	37.1		19.4	80.6		67.2	32.8	
	전라권 (351)	55.0	45.0		20.2	79.8		67.8	32.2	
	경상권 (911)	62.8	37.2		16.8	83.2		69.2	30.8	
	강원/제주 (152)	67.1	32.9		23.7	76.3		63.8	36.2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61.5	38.5	0.007	19.3	80.7	2.618	65.1	34.9	20.987 ***
	비빈곤층 (1,931)	61.4	38.6		17.3	82.7		67.5	32.5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64.9	35.1	22.811 ***	22.6	77.4	52.450 ***	65.0	35.0	8.858*
	중위소득 미만 (1,904)	57.6	42.4		13.7	86.3		67.6	32.4	

* $p < .05$, ** $p < .01$, *** $p < .001$

카. 신혼희망타운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8.1%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2%) 응답이 ‘수혜 받음’(3.8%)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1.0%(매우: 17.9% + 조금 그런 편: 43.1%)로 ‘부정’ 응답 39.0%(전혀: 11.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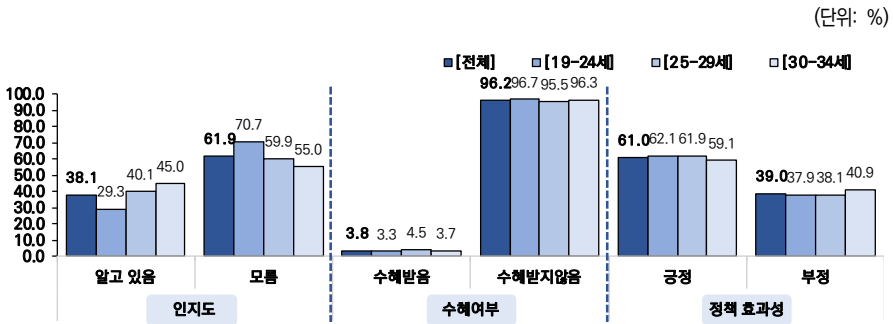


그림 IV-89. 신혼희망타운

표 IV-178. 신혼희망타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8.1	61.9	-	3.8	96.2	-	61.0	39.0	-
만19~24세	(1,348)	29.3	70.7	73.235 ***	3.3	96.7	2.778	62.1	37.9	11.102
만25~29세	(1,343)	40.1	59.9		4.5	95.5		61.9	38.1	
만30~34세	(1,341)	45.0	55.0		3.7	96.3		59.1	40.9	

* $p < .05$, ** $p < .01$, *** $p < .001$

신혼희망타운에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9. 신혼희망타운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8.1	61.9	-	3.8	96.2	-	61.0	39.0	-
성별	남성 (2,000)	33.7	66.3	32.508	4.9	95.1	13.282	56.0	44.0	47.668
	여성 (2,032)	42.4	57.6	***	2.7	97.3	***	65.9	34.1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9.5	70.5	23.095 ***	4.8	95.2	3.699	54.8	45.2	22.978 ***
	대학교(재/졸) (3,356)	38.8	61.2		3.5	96.5		62.2	37.8	
	대학원(재/졸) (194)	47.4	52.6		5.7	94.3		56.2	43.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8.6	51.4	64.718 ***	7.7	92.3	65.916 ***	61.0	39.0	29.337 ***
	청년 독립가구 (1,141)	38.2	61.8		4.5	95.5		60.0	40.0	
	청년 동거가구 (1,976)	33.4	66.6		1.6	98.4		61.8	38.2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41.7	58.3	31.960 ***	3.6	96.4	2.259	59.6	40.4	23.705 .
	충청권 (418)	37.3	62.7		3.1	96.9		62.2	37.8	
	전라권 (351)	29.9	70.1		4.3	95.7		62.4	37.6	
	경상권 (911)	33.0	67.0		4.2	95.8		63.6	36.4	
	강원/제주 (152)	37.5	62.5		5.3	94.7		59.9	40.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8.0	62.0	0.024	4.4	95.6	4.102*	58.3	41.7	28.467 ***
	비빈곤층 (1,931)	38.2	61.8		3.2	96.8		64.0	36.0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4.9	55.1	87.906 ***	4.0	96.0	0.492	61.3	38.7	1.084
	중위소득 미만 (1,904)	30.5	69.5		3.6	96.4		60.7	39.3	

*p<.05, **p<.01, ***p<.001

타. 공공자가주택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공자가주택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29.5%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70.5%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6.7%) 응답이 ‘수혜 받음’(3.3%)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1.2%(매우: 18.7% + 조금 그런 편: 42.6%)로 ‘부정’ 응답 38.8%(전혀: 10.2%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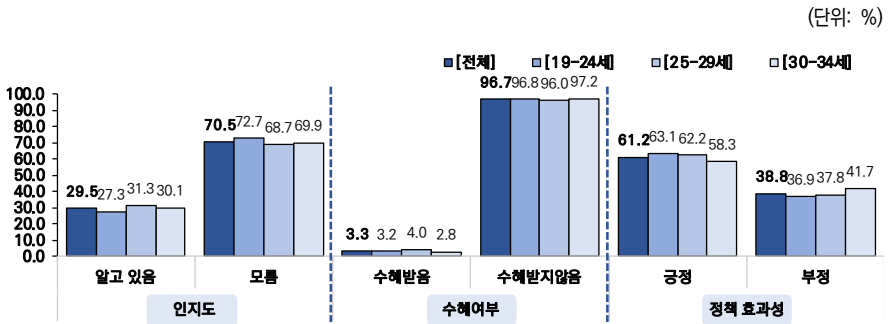


그림 IV-90. 공공자가주택

표 IV-180. 공공자가주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9.5	70.5	-	3.3	96.7	-	61.2	38.8	-
만19~24세	(1,348)	27.3	72.7	5.358	3.2	96.8	3.437	63.1	36.9	10.136
만25~29세	(1,343)	31.3	68.7		4.0	96.0		62.2	37.8	
만30~34세	(1,341)	30.1	69.9		2.8	97.2		58.3	41.7	

* $p < .05$, ** $p < .01$, *** $p < .001$

공공자주주택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성별,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최종학력 및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1. 공공자주주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29.5	70.5	-	3.3	96.7	-	61.2	38.8	-
성별	남성 (2,000)	28.6	71.5	1.864	4.3	95.7	11.780	55.6	44.4	56.578
	여성 (2,032)	30.5	69.5		2.4	97.6	***	66.8	33.2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25.9	74.1	5.422	3.9	96.1	0.932	58.5	41.5	7.770
	대학교(재/졸) (3,356)	29.8	70.2		3.3	96.7				
	대학원(재/졸) (194)	34.5	65.5		2.6	97.4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33.4	66.6	12.509	5.9	94.1	33.649	58.3	41.7	26.220
	청년 독립가구 (1,141)	30.2	69.8		3.9	96.1				
	청년 동거가구 (1,976)	27.5	72.5		1.8	98.2				
	기타 (10)	10.0	90.0		0.0	100.0				
권역별	수도권 (2,200)	30.2	69.8	7.695	3.5	96.5	1.056	58.4	41.6	39.054
	충청권 (418)	26.1	73.9		2.6	97.4				
	전라권 (351)	26.5	73.5		3.1	96.9				
	경상권 (911)	29.5	70.5		3.2	96.8				
	강원/제주 (152)	36.2	63.8		3.3	96.7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0.7	69.3	3.079	4.2	95.8	11.373	60.7	39.3	11.309
	비빈곤층 (1,931)	28.2	71.8		2.3	97.7	***	61.8	38.2	*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31.7	68.3	10.301	3.5	96.5	0.333	60.7	39.3	6.674
	중위소득 미만 (1,904)	27.1	72.9	**	3.2	96.8				

* $p < .05$, ** $p < .01$, *** $p < .001$

파. 민영주택 특별공급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 응답은 39.5%로 나타났고, ‘비인지’ 응답은 60.5%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 여부의 경우 ‘수혜 받지 않음’(95.2%) 응답이 ‘수혜 받음’(4.8%)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64.8%(매우: 20.9% + 조금 그런 편: 43.9%)로 ‘부정’ 응답 35.2%(전혀: 10.1%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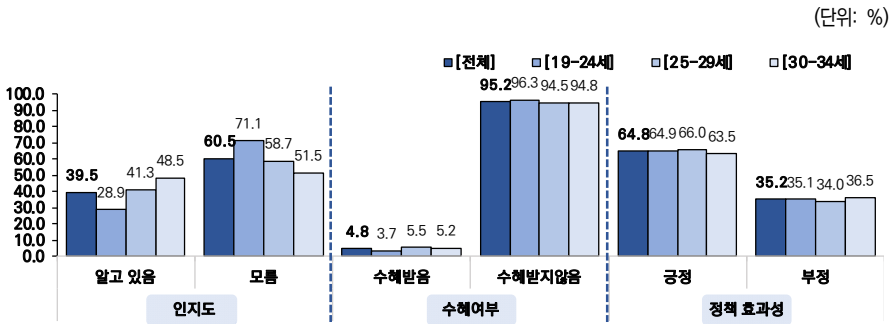


그림 IV-91. 민영주택 특별공급

표 IV-182. 민영주택 특별공급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9.5	60.5	-	4.8	95.2	-	64.8	35.2	-
만19~24세	(1,348)	28.9	71.1	110.765 ***	3.7	96.3	5.496	64.9	35.1	8.379
만25~29세	(1,343)	41.3	58.7		5.5	94.5		66.0	34.0	
만30~34세	(1,341)	48.5	51.5		5.2	94.8		63.5	36.5	

* $p < .05$, ** $p < .01$, *** $p < .001$

민영주택 특별공급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 및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 결과, 최종학력 및 권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 배경변인별 차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3. 민영주택 특별공급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 효과성		
		알고 있음	모름	χ^2	수혜 받음	수혜받 지않음	χ^2	긍정	부정	χ^2
전체	(4,032)	39.5	60.5	-	4.8	95.2	-	64.8	35.2	-
성별	남성 (2,000)	33.8	66.3	55.071 ***	6.1	93.9	14.385 ***	60.6	39.4	38.129 ***
	여성 (2,032)	45.2	54.8		3.5	96.5		68.9	3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31.5	68.5	19.198 ***	5.4	94.6	2.142	60.8	39.2	18.725 **
	대학교(재/졸) (3,356)	40.2	59.8		4.6	95.4		65.7	34.3	
	대학원(재/졸) (194)	47.9	52.1		6.7	93.3		59.3	40.7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7.6	52.4	44.981 ***	10.5	89.5	92.107 ***	66.3	33.7	23.458 **
	청년 독립가구 (1,141)	40.8	59.2		4.7	95.3		62.8	37.2	
	청년 동거가구 (1,976)	35.2	64.8		2.3	97.7		65.5	34.5	
	기타 (10)	10.0	90.0		0.0	100.0		20.0	80.0	
권역별	수도권 (2,200)	40.2	59.8	5.195	4.2	95.8	5.143	64.0	36.0	23.713 .
	충청권 (418)	41.1	58.9		4.8	95.2		68.4	31.6	
	전라권 (351)	35.3	64.7		5.7	94.3		65.5	34.5	
	경상권 (911)	38.1	61.9		5.7	94.3		64.5	35.5	
	강원/제주 (152)	43.4	56.6		6.6	93.4		65.8	34.2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39.7	60.3	0.101	5.5	94.5	4.824*	62.4	37.6	25.646 ***
	비빈곤층 (1,931)	39.3	60.7		4.0	96.0		67.4	32.6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7.0	53.0	105.588 ***	5.5	94.5	5.295*	66.2	33.8	16.334 ***
	중위소득 미만 (1,904)	31.1	68.9		4.0	96.0		63.2	36.8	

* $p < .05$, ** $p < .01$, *** $p < .001$

(2)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월세 비용 경감' 응답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청년 주택 공급 확대'(34.3%), '주거 취약청년 지원'(1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집단에서 전월세 비용 경감 정책이 청년 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9~24세: 42.1%, 25~29세: 43.2%, 30~34세: 4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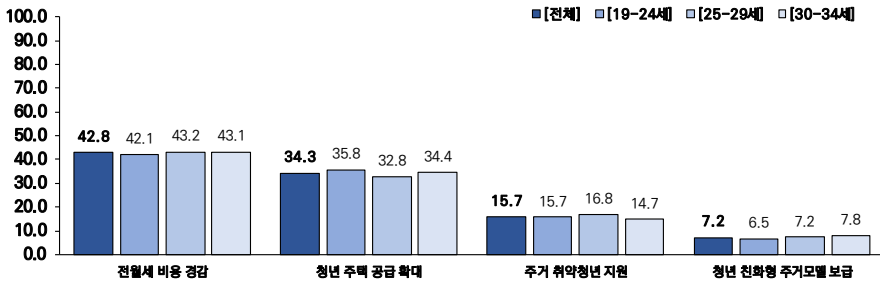


그림 IV-92.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표 IV-184.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월세 비용 경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취약청년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χ^2
전체	(4,032)	42.8	34.3	15.7	7.2	-
만19~24세	(1,348)	42.1	35.8	15.7	6.5	5.716
만25~29세	(1,343)	43.2	32.8	16.8	7.2	
만30~34세	(1,341)	43.1	34.4	14.7	7.8	

* $p < .05$, ** $p < .01$, *** $p < .001$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주관적 계층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47.0%),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42.9%) 집단에서 전월세 비용 경감 정책이 청년 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5.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월세 비용 경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취약청년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χ^2	
전체	(4,032)	42.8	34.3	15.7	7.2	-	
성별	남성	(2,000)	38.5	35.2	18.5	7.8	39.797***
	여성	(2,032)	47.0	33.4	13.0	6.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2.5	32.4	17.2	7.9	2.473
	대학교(재/졸)	(3,356)	42.8	34.7	15.5	7.0	
	대학원(재/졸)	(194)	43.3	32.5	16.0	8.2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905)	45.6	35.8	13.1	5.4	14.768
	청년 독립가구	(1,141)	42.6	33.4	16.9	7.1	
	청년 동거가구	(1,976)	41.7	34.1	16.2	8.0	
	기타	(10)	30.0	40.0	20.0	10.0	
권역별	수도권	(2,200)	43.3	33.9	15.5	7.4	17.880
	충청권	(418)	47.8	31.6	15.1	5.5	
	전라권	(351)	36.8	36.5	19.1	7.7	
	경상권	(911)	41.1	35.2	16.5	7.2	
	강원/제주	(152)	46.1	37.5	9.2	7.2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2.9	33.4	17.1	6.5	9.137*
	비빈곤층	(1,931)	42.7	35.3	14.2	7.9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3.2	35.0	14.5	7.3	5.045
	중위소득 미만	(1,904)	42.4	33.6	17.1	7.0	

* $p < .05$, ** $p < .01$, *** $p < .001$

(3)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전체(N=4,032)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순위 기준, ‘청년 임대주택 확대’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청년 주거비 관련 대출금리 인하’(41.5%),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3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임대주택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19~24세: 50.1%, 25~29세: 47.9%, 30~34세: 47.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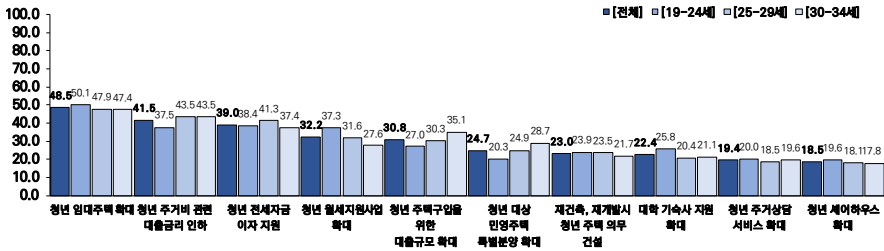


그림 IV-93.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1+2+3순위)

표 IV-186.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임대주택 확대	청년 주거비 관련 대출금리 인하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확대	청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규모 확대	청년 대상 민영주택 특별분양 확대	재건축, 재개발 시 청년 주택 의무 건설	대학 기숙사 지원 확대	청년 주거상담 서비스 확대	청년 셰어하우스 확대
전체	(4,032)	48.5	41.5	39.0	32.2	30.8	24.7	23.0	22.4	19.4	18.5
만19~24세	(1,348)	50.1	37.5	38.4	37.3	27.0	20.3	23.9	25.8	20.0	19.6
만25~29세	(1,343)	47.9	43.5	41.3	31.6	30.3	24.9	23.5	20.4	18.5	18.1
만30~34세	(1,341)	47.4	43.5	37.4	27.6	35.1	28.7	21.7	21.1	19.6	17.8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1.2%),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학/졸업)(49.0%),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동거가구(51.3%), 권역별로는 강원/제주(57.2%),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는 빈곤층(49.0%), 1인 가구 중위소득 별로는 중위소득 미만(51.9%) 집단에서 청년 임대주택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7.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1+2+3순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임대 주택 확대	청년 주거비 관련 대출 금리 인하	청년 전세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모 확대	청년 대상 민영 주택 특별 분양 확대	재건축, 재개 발시 청년 주택 의무 건설	대학 기숙사 지원 확대	청년 주거 상담 서비스 확대	청년 세어 하우스 확대	
전체	(4,032)	48.5	41.5	39.0	32.2	30.8	24.7	23.0	22.4	19.4	18.5	
성별	남성	(2,000)	45.7	38.2	35.4	29.4	30.7	23.8	26.4	26.4	22.7	21.6
	여성	(2,032)	51.2	44.8	42.6	35.0	31.0	25.5	19.7	18.6	16.1	1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82)	46.9	42.9	37.3	36.3	28.4	24.7	23.0	19.3	22.2	18.9
	대학교(재/졸)	(3,356)	49.0	41.4	39.3	31.8	30.8	24.4	22.8	23.1	18.8	18.6
	대학원(재/졸)	(194)	43.8	39.2	38.1	29.4	36.6	28.4	26.3	19.6	22.7	16.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905)	44.5	36.9	36.1	27.7	32.8	19.4	24.3	30.8	23.8	23.5
	청년 독립가구	(1,141)	46.7	41.3	38.7	33.0	32.1	25.2	24.7	22.1	19.5	16.7
	청년 동거가구	(1,976)	51.3	43.9	40.6	33.8	29.3	26.6	21.5	18.7	17.3	17.2
	기타	(10)	40.0	20.0	30.0	40.0	10.0	50.0	10.0	40.0	30.0	30.0
권역별	수도권	(2,200)	48.1	41.5	39.4	30.5	32.9	24.1	23.8	22.0	19.0	18.7
	충청권	(418)	45.0	44.3	41.4	33.0	28.9	26.8	21.3	21.3	20.1	17.9
	전라권	(351)	48.4	39.6	39.6	35.3	27.4	21.1	25.1	20.5	23.1	19.9
	경상권	(911)	49.4	41.7	37.7	34.5	29.3	25.5	21.0	24.4	18.7	18.0
	강원/제주	(152)	57.2	36.8	34.9	34.2	22.4	30.3	24.3	24.3	18.4	17.1
주관적 계층	빈곤층	(2,101)	49.0	41.3	39.0	33.7	28.9	23.6	22.8	21.5	20.4	19.8
	비빈곤층	(1,931)	47.9	41.7	39.0	30.6	32.8	25.8	23.3	23.5	18.2	17.1
1인가구 중위 소득	중위소득 이상	(2,128)	45.3	43.3	40.3	28.8	35.1	26.1	23.0	20.1	19.7	18.2
	중위소득 미만	(1,904)	51.9	39.5	37.7	36.0	26.0	23.0	23.0	25.1	19.0	18.9

4. 요약 및 시사점

1) 청년의 교육훈련

(1)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경험 및 실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학 진학보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진학하지 않았다는(56.6%) 의견이 두드러진 반면,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로는 취업을 하려면 대학 진학이 유리(59.1%) 하고,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51.5%)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견이 과반수다.

전체 응답자의 약 79%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문과(57.2%) 진학 비율이 이과(42.8%) 진학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30.0%)을 받은 응답자는 취업/고시 준비(42.9%)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응답자(82.7%)가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23.3%)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45.1%)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직업훈련 교육 전반적 만족도는(77.0%)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직업훈련 교육과 관련된 질적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일반적 인식 및 전망

본인이 졸업한 대학이 하위 대학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47.0%) 상위 대학(20.6%)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87.8%),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89.7%)을 대부분의 청년들이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85.9%)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83.3%)에 영향을 매우 크게 준다고 느끼고 있지만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54.3%)하는 경향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이 부족해(39.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86.8%)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

청년 취업난의 지속으로 인해 대학 서열화 문제에서 비롯된 학벌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규교육 이외에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내일배움카드 등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3)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정책요구

대학생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혜 경험률 또한 대학생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약 90%가 모든 정책에 대해 수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55.1%)하거나, 국가 장학금을 확대(42.9%)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준비(42.8%)를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2) 청년의 주거

(1) 청년의 주거에 관한 경험 및 실태

과반수 응답자가 아파트에(55.7%)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8.5%로 파악되었다. 현재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향(63.3%)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 스스로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보다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53.9%)을 통해 주거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80.7%)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이 필요(81.2%)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약 5년~10년 이내(26.8%)에 내 명의의 자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자가 취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9.9%) 청년들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고(66.9%), 내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28.5%) 자가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에 자가 마련(63.0%)을 희망하고 있었고, 대부분 아파트(76.6%)를 희망하였다. 또한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전세(56.9%)가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자가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3~5억 이내(31.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청년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 거주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주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전망

우리 사회에서 주거란 ‘안정적인 삶의 기반’(64.6%)이며, 청년 과반수가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이 필요(64.4%)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해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25.8%)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37.1%)과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23.0%)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금 지원(76.9%)이 있어야만 자가 마련이 가능하며, 청년 대다수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가 마련이 불가능(76.3%)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51.5%)이 우리 사회에서 자가를 취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며,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74.4%)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또한 주거를 마련하기에 환경적인 측면도 수월하지 않다(78.8%)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이 너무 높고(48.7%), 부모의 도움 없이 청년들이 주거 마련(16.2%)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주거 마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가 마련을 위한 무리한 투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도록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청년의 주거에 관한 정책요구

청년 주택 공급 확대(50.6%), 공공지원 민간임대(44.4%), 청년버팀목 전세대출(48.5%),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4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61.4%) 정책의 경우 인지 비율이 약 40% 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제외하고 정책을 수혜 받은 경험이 모두 약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비용이 경감(42.8%)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34.3%) 또는 청년 임대주택(48.5%)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청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여타의 청년정책보다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실제 수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대상의 주택 공급 및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해 수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 — 제5장 청년 빈곤의식 심층 면담: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 1. 면담조사 개요
- 2. 면담조사 분석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금년도 연구의 중점 조사영역인 청년 교육 및 주거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성, 연령, 지역 등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력, 자가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30명의 청년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교육 및 주거 현황과 현행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파악을 조사 목표로 설정하였다.

1) 면담조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교육빈곤에 각각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자가 주택 보유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30명을 심층면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남녀 각각 15명으로 동일하며, 연령별로는 20대(만 19세~24세 10명, 만 25세~29세 10명) 20명, 30대(만 30세~34세) 10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조사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 10명, 대학교 재학 이상 20명이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19명, 비수도권 거주 11명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주거빈곤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 30명 중 10명은 자가 보유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세부 특성은 다음과 같다.

47)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표 V-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연번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 지역	자가 보유여부	혼인 여부	경제 활동여부	경제활동 세부상태
1	남성	만 19세 ~ 24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2	여성	만 25세 ~ 29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3	여성	만 25세 ~ 29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4	남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수도권	미소유	기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5	남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6	남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7	여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기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8	여성	만 19세 ~ 24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9	남성	만 30세 ~ 34세	고졸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10	여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기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11	여성	만 19세 ~ 24세	대재이상	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12	남성	만 25세 ~ 29세	대재이상	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비임금근로자(프리랜서)
13	여성	만 19세 ~ 24세	대재이상	수도권	미소유	미혼	미취업	무직(구직 중)
14	여성	만 25세 ~ 29세	고졸	수도권	소유	기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15	여성	만 30세 ~ 34세	고졸	수도권	미소유	기혼	비경활	무직(주부)
16	여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기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17	남성	만 19세 ~ 24세	대재이상	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임시직)
18	여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19	남성	만 19세 ~ 24세	고졸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20	남성	만 25세 ~ 29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21	남성	만 25세 ~ 29세	대재이상	비수도권	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임시직)
22	남성	만 25세 ~ 29세	고졸	수도권	미소유	미혼	미취업	무직(실업급여 수령 중)
23	여성	만 19세 ~ 24세	고졸	수도권	미소유	미혼	비경활	무직(재수 준비 중)
24	남성	만 25세 ~ 29세	고졸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25	여성	만 19세 ~ 24세	고졸	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26	여성	만 25세 ~ 29세	대재이상	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27	남성	만 19세 ~ 24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미혼	미취업	무직(창업을 위해 공부)
28	남성	만 30세 ~ 34세	대재이상	수도권	소유	기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29	남성	만 19세 ~ 24세	고졸	비수도권	미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30	여성	만 25세 ~ 29세	고졸	수도권	소유	미혼	취업	임금근로자(상용직)

선발된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명 중 7명이 동거,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 중인 경우에 해당했고, 취업 중인 대상자는 19명이었다.

2) 면담조사 주요 내용

청년빈곤에 대한 조사 내용은 크게 1) 교육관련 현황, 2) 교육 인식 및 전망, 3) 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4) 주거 상황, 5) 주거 인식 및 전망, 6) 주거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2. 청년빈곤 심층면담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교육관련 현황	①면담자의 학력 상태 ②(대학 재학 이상)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 경제적 여건, 대학 생활중 어려움 ③(대학 미진학 및 중퇴) 미진학, 중퇴 사유 및 인식 ④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⑤현재 경제활동 및 직업 교육 훈련 경험
2) 교육 인식 및 전망	①우리 사회의 학력 관련 차별, 인식 ②교육 및 훈련 기회의 충분성 및 평가 ③향후 받고 싶은 교육 및 훈련 ④니트(NEET)족 및 교육 빈곤층 인식
3) 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①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인지 ②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경험 및 효용성 ③향후 개선 사항
4) 주거 상황	①주거 상태, 동거인 및 비용 지원 여부 ②주거 비용 및 부담 정도 ③아주 의향 및 선호 조건
5) 주거 인식 및 전망	①집의 의미 및 선호 조건 ②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 ③주거지 선택 시 기준 ④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 ⑤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기성 세대의 도움 ⑥주거 빈곤층 인식
6) 주거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①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원인 ②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 인지, 경험 및 효용성 ③향후 개선 사항

3) 면담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전반적인 빈곤 의식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조사의 내용은 본 연구의 중점주제인 교육훈련과 주거와 관련한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 다양한 청년 층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자가 보유여부 등을 응답자 선정 층화변인으로 결정했다. 응답자 선정 절차는 우선 조사업체의 응답자 Pool을 활용하여 층화변인에 적합한 면담 참여자를 구분, 면담 참여와 면담의 결과를 연구 활용에 동의한 청년들을 참여자로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개별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별심층면담은 코로나19 상황과 심층면담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면과 온라인 면담을 병행하였다. 조사 참여자 총 30명 중 9명에 대해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면담을 희망한 21명의 경우,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해당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니트(Neet), 교육빈곤, 주거빈곤 등 청년 참여자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물어 본 항목에 대해서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은 단어의 중요도나 빈도 등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달리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자주 언급된 단어를 통해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위해 전사된 텍스트를 주제별(니트층에 대한 인식, 교육 빈곤층에 대한 인식, 집의 의미, 주거지 선택 요인, 주거 빈곤층에 대한 인식 등)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텍스트는 형태소 분석기(mecab-ko 기반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형태소 단위로 분리한 후, 사전(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센터의 형태소 사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미리 등록해둔 사전정의어, Wikipedia 등을 통해 구축)을 통한 인식 과정을 거쳐 명사 형태로 추출한 후 진행되었다. 추가적으로 성, 연령, 거주지역, 학력, 경제활동 상태, 혼인여부, 자가 보유여부 등의 분석 단위에 따라 단어별 빈도표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면담 과정에서의 언급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다르게 나타내어 주제와 집단 특성에 따라 어떠한 단어가 중요성을 지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이미지화 했다.

2. 면담조사 분석결과

본 조사에서는 면담 항목별 주요 의견 분석 외에도 면담자 구성을 위해 활용한 층화변인(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자가 주택 보유여부, 경제활동상태, 혼인여부)과 지원 제도 수혜 여부 등의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간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1) 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인적 경험, 인식

- 청년들의 교육 환경 및 경험

“대학 및 전공 선택 : 청년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혹은 창업에 유리한지, 성적, 그리고 개인적 관심”

청년들은 대학 및 전공 선택 시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분야인지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고교 재학 당시 취득한 내신 성적 및 수능 성적에 맞추어 입학하였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대학은 성적에 맞추어 입학하면서도 전공은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를 선택하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 의견으로는 취업 및 창업 시 유리한 학교 및 학과를 선택,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선택하였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대학 재학 이상)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공통)

“원래 미술을 전공했다가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 갔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저랑 적성도 안 맞고. 그렇기도 한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좀 더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미술 쪽 분야니까 그쪽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군대에서 마음을 먹고 오게 되면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비수도권 거주, 4년제 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만30-34세, 미혼, 남성)

“성적에 맞춰서 갔고 실용음악과는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붙여졌을 때 가지 못하면 내년에 붙을

(대학 재학 이상)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공통)

법이 없었는데 제가 재수하고 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다 떨어지고 거기만 붙어서.”
(수도권 거주, 2년제 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만30-34세, 기혼, 여성)

“2, 3년제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성적 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4년제 이상에 진학한 청년들의 경우 당시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였다는 응답이 다수”

전체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전공 및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진학한 학제에 따라 부수적인 선택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4년제 이상에 진학한 청년들의 경우, 개인적인 관심과 더불어 진학 당시의 성적이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 재학 이상)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4년제 이상 진학) - 성적에 맞추어

“대학교는 그냥 성적 맞춰서고요. 서울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맞춘 대학교를 갔고 전공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영상 편집에 있어서 그냥 영상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과로 선택을 했어요.”
(수도권 거주, 4년제 대학교 디지털콘텐츠 학과 졸업, 만25-29세, 미혼, 여성)

“저희 할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셨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 집에서 제일 가까웠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합격한 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수도권 거주, 4년제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만30-34세, 미혼, 여성)

반면, 2, 3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성적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로 꼽은 사례가 많았으며, 관심있는 분야의 학문이 개설 되어 있거나, 해당 분야가 유명한 대학으로 진학하였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대학 재학 이상)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2, 3년제 진학) - 관심있는 분야

“사실 실용음악에서 쳐주는 대학이 있는데 공부에 스카이가 있듯이 딱 3개 정도 대학교가 나오거든요. OO예대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거기 지원했고 붙어서 갔어요. 위에 학교들은

(대학 재학 이상) 대학 및 전공 선택 사유(2, 3년제 진학) - 관심있는 분야

아쉽게 떨어지고”

(수도권 거주, 2년제 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중, 만19-24세, 미혼, 여성)

“첫 번째로는 저희 가족 영향이 크고요. 저희 가족이 대대로 전기 쪽 업을 종사를 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기라는 분야가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흥미로운 분야거든요. 그런 쪽에서 흥미를 가지게 돼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 3년제 대학교 전기공학과 재학중, 만19-24세, 미혼, 남성)

“대학 생활 중 어려움 :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과 함께 경직된 학과 분위기, 교수와의 마찰 등의 학교 관련 문제가 함께 거론”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대학 생활 중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학생활 중 학비, 등록금 등에 대한 부담, 학과 혹은 교수와의 마찰, 대학 생활 중 대면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고르게 거론되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의 개인에서 비롯된 어려움 보다는 교수, 학과, 교육 커리큘럼 등에 대한 불만 등 학교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학 재학 이상) 대학 생활 중 어려움(공통)

“교수에게 불만이 있었던 거 말고 과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거 같아요. 가르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가르쳐주시어, 좀 흥미가 잘 안 생겼어요. 약간 이론 위주로 그냥 오래된 책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이, 매해 매해 비슷하게만 알려주니까 새로운 거 없이.”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여서 재학생들은 건물에서 건물 사이로 이동을 하면은 QR체크인 같은 걸 되게 꼼꼼하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만약에 공간에 들르면 QR체크인을 못하거든요. 그럼 외부인을 막아야 되는데 외부인을 아예 안 막는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학교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실용음악과에 재즈나 이런 걸 하는 가요나 이런 걸 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학과장님이 클래식 쪽 학과장님이시거든요. 아예 이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아예 뭔가 잘한다는 기준을 나눌 때 보는 기준이 다른데 커리큘럼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대학 재학 이상) 대학 생활 중 어려움(공통)

비해서 실용적이지 못해서 힘들었죠”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대학 휴학 이유 : 휴학을 결정 가장 큰 원인은 타 학교로의 편입,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 등을 위한 공부 목적이 다수”

청년들은 학비 마련, 휴식, 자격증 취득 혹은 편입을 위한 공부 등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고려하였다고 응답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응답된 유형은 편입,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 등을 위한 공부 목적이었으며, 그 외 여행 등을 통한 개인정비, 교환학생,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휴학을 고려하였다는 언급도 있었다.

(대학 휴학 시) 휴학을 했거나 하려한 이유(공통)

“저희 교육과 자체가 교육봉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전공과목도 많고 그리고 대외 활동도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딸 시간 여건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선배들도 휴학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3학년에 휴학을 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차라리 2학년 끝나고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네, 우선은 편입 때문에 전 학교에서 2학년 수료하고, 1년 편입을 했었고요. 1년 휴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한 다음에 1년을 학교 다니고 1년을 휴학을 했었어요. 첫 번째 휴학은 아무래도 이제 편입 준비 때문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휴학은 이제 유럽 여행을 간다고 휴학을 했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휴학을 하고 나서는 첫 번째로 자격증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 부업 개념으로 아르바이트 000000에 지원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는 제가 앞으로 군대 가기 전에 자격증을 따 두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대학 미진학 및 중퇴 이유 : 경제적 사정, 성적 부족, 진로 미 결정으로 인한 포기가 주요 원인”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중퇴한 응답자의 사유로는 경제적 사정, 성적 부족, 향후 진로에 대한 고려로 인한 포기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성적 부족의 경우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진학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로 차선의 학교, 학과의 선택 없이 재수나 취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수도권 거주자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경우도 응답되었다.

대학 미진학 및 중퇴 사유 및 인식(공통)
“가정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는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빚을 내고 다니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면 돈을 통장에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수도권,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제가 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성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원하는 학과를 가지 못할 바에 그냥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도권, 고졸, 만30-34세, 기혼 여성)
“제가 사실 경찰 공무원을 꿈꿨었는데 굳이 대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대학 진학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비수도권, 고졸, 만19-24세, 미혼 남성)

“사교육 경험 및 도움 : 사교육이 도움되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에서만 나타나”

심층면담에 참여한 응답자 모두 사교육을 경험했고, 사교육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예습, 성적 향상 및 유지, 공부 방향 설정, 공부에 대한 흥미 유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특히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교과목일 때 사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경우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무작정 학원에 등록하거나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녀야 한다는 식으로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사실상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대재이상,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에서만 나타났다.

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공통)
<p>“문제 푸는 그 방식들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수능 영어 보면 패턴이 남아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원 이렇게 다 안 다녔더라면 성적은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p> <p>“제가 다닌 학원이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많이 따라 갔는데 그 학원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p> <p>“사교육이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강의는 선생님별로 편차도 너무 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의 진척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p>
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경찰자) - 도움되지 않음
<p>“어떻게 보면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확실 가서 반복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게 그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배웠었던 거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확실에서 그것을 습득을 할 때 좀 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것들은 사실상, 그게 뭔가 몸에 남아 있지도 않았었고. 그게 습득된 거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p> <p>“그냥 어린애들한테 영어를 주입시킨다는 게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온 애들이라 도움이 안됐던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p> <p>“중학교 때까지 수학, 영어를 받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전과목으로 사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저랑 안 맞아서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안 맞았어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p>

- 교육/훈련 충분성 및 평가

“기회의 충분성 : 경제적 문제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은 부족하였음”

지금까지 본인에게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에 대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그 이유로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원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거나 들었던 교육이 전부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되어 다양한 교육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충분했다는 청년들에게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 봤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받은 교육인지, 부모 등 타인의 의지로 시작하게 된 교육인지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컸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충분성(공통) - 부족 했다
“부모님이 주시기는 충분히 주셨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거 비용이나 생활비라든지, 미래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단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결국에는 학업비를 빼야 되는 건데 그 학업비가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 못 빠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기혼, 여성)
“일단은 고등학교가 가장 큰 문제였다란 생각을 가지긴 하는데, 제가 나온 학교는 공부만 시켰었던 학교다 보니까 자율성이라든지 사실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시기였던 거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충분성(공통) - 충분 했다
“저는 충분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교육을 받아서 제가 조금 부족하게 받아서 못 갔다 이런 것보다 자기 개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미혼, 여성)

이외에 교육을 받던 시기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받은 청년 중 일부는 서울 및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및 훈련 인프라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충분성(비수도권) - 부족 했다

“중학교까지는 제가 서울에 살다 고등학교 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서울 쪽에는 많은 교육 단체라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곳은 너무 한정적이고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해봐야 사무용 PPT나 이 오피스 자격증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교육적으로 배우기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향후 받고 싶은 교육/훈련 : 본인의 전공/일자리 외의 다른 전문분야, 취미 및 교양 위주의 교육 훈련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

향후 받고 싶은 교육 훈련으로는 크게 현재까지 배워보지 못한 타 전문분야와 취미활동 양쪽으로 구분 되었다.

타 전문분야를 듣고 싶다는 청년은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에 관계 없이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야의 교육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영상 편집, 드론 교육, 프로그래밍 및 코딩 등 향후 유망 할 것 같은 분야의 교육, 훈련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취미활동을 듣고 싶다는 청년은 영어 등의 어학, 수영, 요리, 주조, 격투기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교육 항목 또한 다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20대 청년들의 취미 교육 선호도가 높았다.

향후 받고 싶은 교육 및 훈련(공통) - 타 전문분야

“지금은 영상 편집, 제작 이런 거 위주로 이런 거 교육을 많이 받고는 싶어요.”

(비수도권 거주, 4년제 경영학과 졸업, 만30-34세, 임금근로자, 남성)

“드론 쪽 교육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거랑 방사선 비파괴사 같은 전문적인, 약간 특화된 쪽의 교육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제가 기계, 전기 쪽을 주로 해서) 여러가지 쪽 분야를 다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3년제 전기공학과 재학, 만19-24세, 임금근로자, 남성)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을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개인적 흥미도 있고 지금은 전공인 사회복지과로 취업할 예정이지만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비수도권 거주, 2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만25-29세, 임금근로자, 남성)

- 니트(NEET)족 및 교육 빈곤에 대한 인식

“니트(NEET)족 인식 :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 공존”

니트(NEET⁴⁸)에 대해 청년들은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포기하게 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경제력 덕분에 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직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촉매제가 없어 시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동기가 부족하고 의지,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포기하게 된 사람’은 높은 취업 현실의 벽, 투자(학원,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 잦은 실패에 부딪혀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일종의 번아웃 상태가 온 경우로 이상 대비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된,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 하였다.

니트(NEET) 인식(공통)

“그냥 일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서이고 두 번째는 그냥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학원을 다녀야 되면 결국 비용이나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작점이 다른 사람 이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목표는 저긴데 어차피 이걸 해봤자 저기까지 못 가는 건 확실하니까 이걸 하는 건 돈 낭비야 라고 생각하니까”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48) 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빈곤층 인식 : 교육빈곤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

인터뷰 참석자의 대부분은 교육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교육빈곤층이라고 인식했다. 인식 중에서는 특히 부모의 여건, 지원, 가정형편 등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많이 언급 되었다.

일부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질 높은 사교육을 받지 못해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빈곤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자산이나 조건에 관계 없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교육빈곤층이라는 의견도 언급되었다.

교육빈곤층 인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부모’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육빈곤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 나타났다.

교육빈곤층 인식(공통)

“교육이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아닐까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여건 때문에 하기 어려운 느낌,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지원을 잘 못해 주시는
그리고 자기 혼자 돈을 벌기에도 상황이 안 맞고...”
(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교육이나 교육훈련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많이 없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 같습니다”
(비수도권, 고졸, 만19-24세, 미혼 남성)

(2)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학력/학벌 차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학력과 성공의 상관 관계 : 좋은 학력이 사회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

좋은 대학이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데 유리하다는 의견에 청년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좋은 학력을 일종의 자격 능력으로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기업에서의 평가 기준에서 학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다만, 학력 관련 인식과는 관계 없이 청년들 대부분이 좋은 학력이 성공에 유리한 면은 어느 정도 있으나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극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수 있었다.

학력 관련 인식(공통) - 좋은 학력이 성공에 유리하다

“(좋은 학력도) 어찌 보면 자격증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학 능력이 서언고를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위에 있으면 그 수학 능력을 잘 했다고 보여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로서도 잘할 수도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 가지고 저는 그 명제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아직 블라인드 채용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학을 보는 데가 많아서 주위 취업하는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부분들도 많았고”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유리하죠. 일을 이 사람을 줄까 이 사람을 줄까 하다가 학벌이 더 좋은 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기업주나 상사라면 그럴 것 같아요. 객관적 지표잖아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학력 관련 인식(공통) -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극복 가능하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적으로 먼저 찾아 나서는 발 벗고 뛰어들면 어느 정도는 학벌 상관 없다고 봐요. 대신 뭔가 학벌이 높은 사람한테 비하면 힘들겠지만 똑 같은 자리를 놓고 보면 확연히 학벌이 부족한 사람이 힘들겠지만 자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학벌이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 100이 만점이면 한 6 정도?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물론 그게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우대해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요즘은 워낙 길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학벌에 상관없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순수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는 여러가지 부업을 하던지 아니면 기회를 잡고 학력 상관없이 또 연봉이 올라가거나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또 너무 크게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서 숫자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미혼, 여성)

이를 학력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졸자(대학 중퇴자 포함)의 경우에는 입사 지원 자격, 사내에서의 고졸-대졸 간 차별로 인해 학력과 성공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보유자 중에서도 2, 3년제 대학 졸업생은 4년제 대학 졸업생과의 차별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유리한 면이 확실히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학력 관련 인식(고졸) - 좋은 학력이 성공에 유리하다

“아직 제가 그렇게 느끼진 못했는데 친구 중에서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잘못을 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더 많이 혼내고 나쁘게 말을 하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있긴 있구나 느꼈던 적은 있었어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미혼, 여성)

학력 관련 인식(대재 이상) - 좋은 학력이 성공에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전문대 초대졸보다 4년제를 더 뽑고 싶다는 뉘앙스를 많이 들었고 다음에 좀 약간 이왕 전문대 갈 거면 4년제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비수도권 거주, 2년제 대학 졸업, 만25-29세, 미혼, 남성)

“좋은 대학의 정이가 우리 사회에 서울대, 연대, 고대라면. 그것도 학사가 아닌 석사 이상이라면 (성공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거주, 4년제 대학 졸업, 만25-29세, 미혼, 남성)

“학력 및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 : 청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학력 관련 차별은 취업 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간접적인 차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청년들만이 학력 관련 차별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력 관련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학력에 관련한 직접적인 모욕 등을 경험한 사례는 적었고, 대부분 취업 시 지원자격 미달로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체감한 적이 있거나 학력에 따른 업무 범위 구분을 통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학력 관련 차별 경험(공통)

“처음에 구직할 때, 약간 그런 데가 많았어요. 최종 학력 초대졸 이상, 이런 데가 많아서. 아 진짜 대학을 가야겠냐, 약간 그럴 때 있었어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25~29세, 미혼, 여성)

“이게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 지방 소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디 나왔지를 밝힐 때 말하기 좀 그랬던 게 있죠. 근데 차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지방대면 사실 그런 게 아직은 있죠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체에서 느낀 건데 일단 고졸이랑 대졸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대졸은 약간 사무직이라든가 해외영업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고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대학을 4년제 이상을 나오지 않으면 여기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명시돼 있는 것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학력 관련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대다수는 수도권에 거주, 가장 많이 경험한 차별 유형은 일자리 지원자격에서의 제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비수도권 거주 청년 대비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 주로 경험한 차별은 학력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이었으며, 그 외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나왔거나,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입에도 좋은 학벌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학력 관련 차별 경험(수도권) - 지원자격에서의 제한

“네, 간접적인 느낌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옛날이랑 다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오픈카톡방에 그 회사 넣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 있어서 막 떠들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없는데 저는 떨어지고 이 사람은 되고.”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훈, 남성)

“학력으로는 차별받은 적은 없는데 학교에 대해서, 그런 대학 올 거면 왜 서울 왔어? 라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있어요. 크게 명문이 아닌데 왜 학교로 왔냐 이런 얘기는 들었던 거 같아요. 한 10번 이상”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훈, 여성)

반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하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체감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직접 경험하기 보다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등에 해당했다.

우리 사회의 학력 관련 차별 경험(비수도권) - 차별경험 상대적으로 적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기업 입사할 때는 그걸로 커트라인이 정해진다고 듣지만 들었는데, 누구라도 일할 사람은 서류고를 뚫고 싶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차별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훈, 남성)

(3)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책인식 및 요구

- 가장 많이 알려진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인지 :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국비 지원 교육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 정책으로 주로 인지”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중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 주로 내일배움카드 등의 국비지원 교육과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도 명칭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수료 후 연계된 기업에 취업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는 활동 공간 대여, 창업센터 등의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년 대상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인지(공동) - 국비지원교육

“제가 받았던, 3D프린트 학원 간다고 받았던 그런 교육 제도도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국비지원으로 회계 같은 거 조금 더 배우고 그랬어요.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그걸로 해가지고요. 제가 원래도 관심이 있던 내용이라서 들었던 건데 도움은 안 되었어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기혼, 여성)

청년 대상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인지(공동) - 취업 연계 프로그램

“국가장학재단에서 창업하거나 지자체 프로그램 듣고 특정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은 장학금,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업 훈련 교육을 수료를 하고 그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정책을 본 것 같거든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의 효용성

“효용성 평가 : 취업과 연결이 되지 않는 점과 정책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효용성이 낮다고 인식”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와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도움이 된다는 청년들은 부담이 큰 금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실제 도움이 되는 점, 직업 전환 등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상담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제 취업과 연결이 가능한 점에서 효용성이 높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의 효용성(공통) - 도움이 된다

“저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원가를 배우는) 가격이 싸진 않으니까 부담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금전적인 걸 지원해 주면 좀 더 한국에 사람들이 뽐내지 못한 잠재성을 키워서 취직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일단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직업 연계까지 시켜주다 보니까 자기가 기업체 서칭, 지원, 연락을 할 필요가 없고, 경기도에서 주치를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편했고, 그 다음에 취업 시에 지원금이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런 금전적인 이득인 부분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반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청년들은 지원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는 점과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홍보 부족을 효용성이 떨어지는 점으로 꼽았다. 특히, 홍보 문제의 경우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 만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들 모두 취업과의 연계 효용성을 높이고 이를 적극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향후 청년들에게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와 더불어 실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충분성(공통) -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뭔가 딱히 관련해서 성과 지표를 발표 하거나 뉴스에서 이 정도의 예산과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어 이런 걸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청년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없고, 만약에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으면 아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힘들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없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걸 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지원 정책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 대상 교육, 직업 훈련 제도를 이용해 본 청년들의 경우 오히려 지인이 이용해보거나 이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신청, 이용, 교육 후 결과 등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충분성(수혜 경험 있음) -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약간, 사실 지원을 해주시는 분의 태도가 뭔가 애를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줘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상자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직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 느낌이 강했던 말이지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취업 박람회 같은 곳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갔었을 때 제가 원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것들이 컨택이 잘 안 돼서, 그냥 한번 체험하고 말았어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 청년들이 바라는 교육, 직업 훈련 지원 정책

**“향후 개선 사항 : 획일화된 취업 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용성, 다양성, 포괄성을
답아내야”**

기존 기성세대들이 만든 현재의 청년 교육/훈련 제도에 대해 직접적 수혜자인 청년들은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나 실무 특강 등 실용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개개인의 특성, 현재의 취업 여부,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맞춰 단순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원 요건을 까다롭지 않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되어야하고 연령에 맞는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청년 교육과 훈련을 위한 향후 개선 사항(공동)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실무 경험까지 같이 쌓을 수 있게 회사 인턴과 같이 연계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최종적인 일자리 연계까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일자리 연계에 더 개선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청년들이 자신이 하려는 여러 가지 기회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원정책은 취업에만 집중된 것 같고 청년이 예술, 고시, 이런 쪽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관련된 지원 정책을 찾아보는데 힘들다. 접근성이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 (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2) 주거

(1) 주거에 대한 개인적 인식

- 청년들의 주거환경

“주거 비용 마련 : 목돈이 드는 주거 비용의 경우에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지를 위한 주거 부담은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 정도임”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월세 보증금 등 목돈이 들어 가는 주거 비용 마련 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님 도움을 받았고 대출을 같이 받아 마련하였다는 응답이 다수 나왔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청년의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 등 대출 상품을 통해 비용을 마련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이 월세 등 아닌 주거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부부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주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거 비용 마련 시 지원 및 부담 정도(공통)

“학교 내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학기당 식비 포함해서 130만원 정도 내요. 부모님한테 지원 받고 알바로 번 돈은 주로생활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기숙사 거주,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빌라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금은 한번 올려서 3억 정도. 전세자금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대출해주는 것과 부모님께 일부 지원 받았어요. (이자 30만원, 관리비 25만원) 한달에 55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가구 소득으로 보면 10% 미만 정도.”

(전세 빌라 거주,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아파트 자가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께 지원 받았어요. 저희는 주택을 증여 받은 케이스인데 증여세를 내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매달 3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주거비용은 저희 부부가 경제적인 걸 합쳐서 관리하고 있어서 공동으로 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가 아파트 거주,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현재 집값 수준 : 현재의 집값 수준이 높은데에 모두 동의, 향후 상승, 하락, 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

상승, 하락, 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지만 현재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같은 의견이었다. 향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다소 높은 가운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도 소수 언급되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한번 오른 집값은 내려간 적이 없었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를 수 밖에 없다, 물가 상승만큼 같이 오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주택 공급은 계속 이뤄지나 출생률이 낮아지는 만큼 수요 감소로 하락할 것,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으므로 하락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급등 이후이므로 거품이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하락을 예상한 청년들도 장기적 하락보다는 급상승에 따른 조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공통)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격을 놓고 보면 한 번도 조정이 온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의 양은 정해져 있고 주가도 그렇고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주식도 3, 4, 5배 올라가다가 요즈음 그런 주식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닿으면 짹 빠지거든요. 저도 경험했고, 부동산은 그 속도가 느릴 뿐이지 언젠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마혼 남성)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던 한테,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마혼 남성)

“이주 의향 및 이유 : 거주 환경 개선, 교통 및 직장 출퇴근 고려”

향후 이주 의향 여부 및 이유를 물어본 결과 평형, 방 개수 등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 편리한 교통, 직장과 가까운 거리로 이주하겠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 외 이주 사유로는 자녀교육 고려, 문화 시설 등 인프라가 많은 지역, 바닷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주 의향 및 이유(공통)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층간 소음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위치는 굳이 다른 데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냥 아파트 위주로, 화장실은 두 개였으면 좋겠고 방 개수도 3개면 좋을 것 같고, 방법이 잘 되어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미혼, 여성)

“(여건만 되면)서울 회사 지역 근처에 왔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회사 출퇴근이 제일 힘들어서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 중 30대의 경우에는 다른 대상에 비해 자녀 양육을 고려한 이주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직장을 옮긴다는 전제하에 문화시설 등이 많은 서울로 이주를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주 의향 및 이유(수도권, 30대) - 자녀 양육 및 교육

“이사 계획은 있습니다. 아이 학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아닌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는 한번 이사할 거예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아이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목동으로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형편의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자녀 교육이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이주 의향 및 이유(비수도권) - 문화, 여가 인프라 고려

“(이주를 한다면) 직장도 옮긴다는 전제 하에 서울로 가고 싶죠. 서울도 가끔씩 가긴 하는데, 가면 워라밸이라고 치면 라이프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보여가지고 가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직장도 많고”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서울은 되게 인프라가 좋을 거 같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서울에서 좀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여건이 된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미혼, 남성)

- 집의 의미

“집이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

‘집’의 이미지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휴식, 편안함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집이라는 공간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루종일 밖에서 지내다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친 몸을 달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말해준다.

그러나 집의 거주 의미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를 하는 대상으로 집을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집을 사면 당연히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정보로 인해 투자 상품으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집의 의미(공통)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학교에서 학교 다니고 일 다니고 하면, 보통 공부하고 들어오면 10시, 11시거든요. 그때 딱 씻고 더 공부하고 나서 바로 자다 보니까 약간 딱 휴식하는 데라고 인식이 드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를 유일하게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신경 없이 쉴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쉼터? 진정한 집은 이렇게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비수도권,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집의 의미(공통)
<p>“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가는 게 거의 대다수라 그냥 딱 씻고 휴식하고 자는 게 거의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p>
<p>“일단은 거주를 위한 장소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투자 상품으로 국한된 이미지도 꽤 큰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p>

“집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편안, 휴식, 공간, 보금자리)이라는 주된 인식, 30대는 20대 대비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집 인식 비율 높고, 주택(자가)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 언급 빈도 높아”

‘집의 의미’ 항목에 대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편안, 휴식, 공간, 보금자리’ 등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서의 본래적 집의 의미를 언급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

20대 대비 30대는 ‘투자, 집값, 재테크, 수단’ 등 부동산 자산으로서 집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과 혼인 등이 보다 당면한 문제인 30대에서 20대 대비 ‘집값, 주택마련, 대출상환, 감당, 매매’ 등 자가마련과 관련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단어 언급량이 많았다.



그림 V-5. 집의 의미 인식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 청년들이 기대하는 주거지의 조건

“집이 갖췄으면 하는 조건 : 거주 시설,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선호 조건 존재”

내 집이 갖췄으면 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평수, 위생 상태, 설비, 교통편, 직장과의 거리, 치안, 주변 인프라, 자녀 양육 환경 등이 응답되었다.

독립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에 가게 된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살게 된다면 등 전제 조건은 달랐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하거나 마당을 원하는 등 현재보다 상향된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 주거 정책 수혜 여부 등 개인별 특성과 관계없이 교통이 편리한 곳, 치안이 좋은 곳, 쾌적한 시설, 좋은 인프라 등의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집의 선호 조건(공통)
“최소 전세 이상인곳, 교통이 편리한 곳, 습하지 않은 곳, 방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곳을 선호 합니다” (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교통편이 좋은 데로 가서 살고 싶고요. 집도 30평 후반대면 좋겠고요. 교통편이 좋은데 복잡한 느낌은 싫고 그래도 창문 열었을 때 자연도 보이고 한적한 느낌이면 좋겠고요. 인테리어도 깔끔하면 좋겠고요. 화이트한 느낌이면 좋겠고”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만약에 독립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이랑 합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업도 가능한 공간이면서 거주도 가능한 공간으로 움직일 생각이예요. 보통은 그런 공간이 이제 일반적인 원룸이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상가 같은 건물에다가 공간을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로. 보통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은 치안, 젊은 연령대는 주변 인프라를 조금 더 선호”

여성의 범죄 위험 노출이 높은 것이 염려된다는 점, 돈에 맞춘 집보다 동네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치안에 대한 조건은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에게서만 언급 되었다.

집의 선호 조건(미혼 여성) - 치안

“치안이 괜찮고 학교와 가까운 원룸으로 가고 싶어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보안, 치안,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은 곳이면 좋겠죠. 서울이 후미진 곳도 많고, CCTV가 없는 지역도 많아서 범죄 여성 위험 노출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거슬리죠.”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교통을 보면서도 치안은 보고 갈 것 같아요. 무작정 돈이랑 맞다고 바로 입주하지 않고 동네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는 여가시설, 전통시장, 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의 주변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의 집을 선호했다.

집의 선호 조건(30세 미만) - 주변 인프라

“인프라가 제일 중요해요, 조용한 주거단지가 많은 곳, 구체적인 그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동네가 시장이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한강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런 거였어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여성)

“최소한의 조건은 주변에 큰 마트나 이런 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기본적인 난방시설이 갖춰진 집에 들어가는 게 꼭 필수일 거 같습니다.”
(비수도권, 고졸, 만19-24세, 미혼, 남성)

“학교나 여러 편의시설들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인프라 발달이 잘 이뤄진 곳이면 좋겠다는 거죠”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이주 시 선호 조건 : 수도권 청년은 직주근접, 투자가치, 비수도권 청년은 자연환경, 주변 인프라 조건 고려”

주거지 선택 시, 선호하는 조건으로 투자 가치, 현재보다 더 넓은 평수, 층간 소음이 없는 곳, 신축 아파트, 교통이 편리한 곳, 자연 친화적인 곳,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들은 주로 직장과의 멀지 않은 곳에 교통이 잘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였으며 향후 투자가치를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이다. 투자가치를 고려하는 응답자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원한다, 지역은 상관 없다는 등의 의견을 통해 투자 이익을 위해 불편함도 감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 시 선호 조건(수도권) - 직장 근접(교통), 투자가치
“서울 회사 지역 근처에 왔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회사 출퇴근이 제일 힘들어서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환경인데 부동산 가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한 여건이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 재개발 예정 안에 있는 아파트면 가장 좋겠고...”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엄청 안 오르더라도 최소 가격 방어는 하고, 조금 오르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지역은 솔직히 아무 곳이나...” (수도권, 고졸, 만25-29세, 기혼, 여성)

반면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일자리와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있는 주거를 선택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도권 거주자의 응답과 달리, 사생활 보호, 독립공간, 층간소음 없는 곳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에서 개인 혹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주 시 선호 조건(비수도권) - 자연 환경, 주변 인프라, 독립공간

“교통편이 잘 되어 있고 바다가 있는 제주도나 부산 위주로 가고 싶어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일자리도 많고 라이프에서 즐길 수 있는게 많은 서울로 가고 싶어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어디도 괜찮으니까 단독주택이고 웬만하면 옆집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족끼리 공간을 침범 받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주택을 원합니다.”
(비수도권,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기혼자는 투자가치와 자녀 양육을 미혼자는 다양한 주거 조건 선호”

미혼의 경우 개인별 특성에 따라 기존 거주 시설의 개선(독립, 꾸미기 등), 교통, 주변 인프라, 프라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거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역 이동이 자유로운 미혼이기 때문에 직장 위치와 멀지 않은 곳 또는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곳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 시 선호 조건(미혼) - 교통, 독립, 환경 개선 등 다양

“단독주택인데 마당이 있고 어느 정도의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는 데 전혀 문제없을 수 있는, 예로 들면 지금 집이 한 40평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가, 이 정도 급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비수도권,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만약에 취업하게 된다면 거기서 가까운 직장 근처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회사 지역 근처에 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출퇴근이 제일 힘들어서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기혼의 경우 자녀 교육에 안정적인 곳,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지금보다 넓은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환경과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치를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주거 정책 수혜 경험이 없는 수도권 거주자들로 현재 자가를 보유 중인 경우이며 이들은 향후 5년 이내 주거지 이동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주 시 선호 조건(기혼) - 투자가치, 자녀 양육
“넓은 집으로 가고 싶죠. 민약에 여유가 된다면 넓은 집으로 가서 더 자녀계획을 세우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수도권, 고졸, 만30-34세, 기혼, 여성)
“아이를 키우기 관철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목동으로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녀 교육이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환경인데 부동산 가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 주거지 구입 의사 및 시기

“주택 구입 의사 : 내 집 마련 원하지만 상황에 따른 현명한 선택을 하겠다”

인터뷰 참가자 모두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조건 집을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의견과 대출 규제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언급되었다.

주택 구매 희망 연령이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20-30대인데 반해 수도권의 미혼 거주자의 경우 30-40대로 지역별 집값 수준에 따른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에 구매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역시 수도권 거주자에서만 나타나 수도권 주택 구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공통)
“아무래도 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있잖아요. 집 전체 금액의 70%, 자금 계속 낮춰가는 추세니까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대출이 안 되는 만큼의 금액을 저희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니까 일단 돈을 더 모아야 되고, 그런 시간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공통)

판단하고 있어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아마 40대 그때쯤이면 저도 마련을 할려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무조건 집 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상황에 맞춰서 그냥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50대 되야지 정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주거지 구입 시 교통> 주거 환경> 가격 및 투자> 교육> 거주 안정성의 순으로 고려”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가격 및 위치, 교통과 직장과의 거리, 주변 인프라, 거주 환경, 투자가치에 대해 주로 응답하였다.

주택의 위치는 서울권(중심부) 안에 속해 있는 곳, 직장과 멀지 않은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주거지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주로 교통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치안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수도권 거주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년 대부분은 평생 살 집이 아닌, 팔았을 때 이익을 고려한 투자처로써 주거지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지 선택기준(공통)

“서울 내에서도 외지거나 경기도 가까운 지역에 사는 친구만 만나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심부 있는 위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수도권, 고졸, 만19-24세, 미혼, 여성)

주거지 선택기준(공통)

“가능하면 교통이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돈 조금 더 모으면 서울권으로 올 생각은 있어서요”
(수도권, 고졸, 만25-29세, 미혼, 여성)

“가격이죠 아무래도 일단 지역에서 금액대를 보고 동을 정하고 좁혀 나가면서 집을 보니까 애매한데,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라든가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을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여성)

“저는 가격과 투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평생 살게 아니라 이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매매하고 그런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비수도권, 대재이상, 만19-24세, 미혼, 남성)

“보안, 치안,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은 곳이면 좋겠죠. 서울이 후미진 곳도 많고, CCTV가 없는 지역도 많아서 범죄 여성 위험 노출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거슬리죠.”
(수도권,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청년의 주거지 선택 주요 요인을 키워드 언급량 순으로 살펴보면, 아래 다섯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교통: 교통, 지하철역, 거리, 직장, 출퇴근, 교통편 등
- ② 주거시설과 환경: 서울, 방, 아파트, 공간, 주변, 치안, 시설, 인프라 등
- ③ 가격 및 투자 요인: 돈, 가격, 투자, 가치, 입지 등
- ④ 교육: 아기, 자녀, 학교, 교육, 학군, 초등학교 등
- ⑤ 거주 안정성: 결혼, 자가, 전세, 월세, 원룸, 매매

'교통' 관련 단어는 주로 직장과의 거리 및 출퇴근 편의성 관련 의견에 포함되어 언급되었다.

'거주 안정성' 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 때,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결혼'의 전후를 구분하여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친구들도 다 결혼을 안했는데... 등) 또, '전세'나 '월세'보다는 '매매'를 통한 '자가' 소유형태를

선호하며, 이것을 보다 안정적인 주택 소유 형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해당 단어들을 주거지 선택 요인 중 '거주 안정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V-8. 주거지 선택 요인 워드클라우드 분석(전체)

- 주거빈곤층 인식

“주거빈곤층 : 집을 소유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주거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인식”

주거빈곤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인식으로는 주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계층’,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계층’, ‘집 또는 주거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여 어려움을 겪는 계층’ 등의 응답이 주로 나타났다. 집 미소유와 열악한 환경 외에도 집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 상환 부담이나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주거 빈곤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빈곤층에 대한 인식 - 주택 미소유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2030 세대들 같은 느낌.”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돈을 벌고 있지만 집을 마련하지 못한 모두를 지칭하는 말인 거 같네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주거빈곤층에 대한 인식 -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닭장 같은 생활. 빛 한 점 들어오지도 않고 남이 담배 피면 담배 피는 대로 다 방에 들어오고 화장실도 공용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오밀조밀하게 모여 가지고 서로서로 영향을 받아가면서 사는 답답한 생활”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사는 분들에 대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미혼, 남성)

주거빈곤층에 대한 인식 - 주거 관련 비용을 감당 못함

“소득에 비해 주거에 내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니면 돈을 모으기 어렵다거나”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25-29세, 미혼, 남성)

(2) 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청년 주거 마련에 대한 기성세대의 도움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 : 청년 주거에 대한 관심 부족, 보여주기식 지원, 청년의 주거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 입안”

청년 주거 마련에 대한 기성 세대의 관심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기성세대의 청년 주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기성 세대의 관심 부족과 연결되어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지원이 반복되고, 실제 청년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다보니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청년 주거 마련을 위한 기성세대의 도움(공통) - 실효성이 없다

“관심만 있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주택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질적인 정책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성세대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한 5% 정도요? 정책들이 뭔가 선거용처럼 느껴져요. 제도 자체가 막상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게 되게 기간이 짧고요, 예를 들면 입주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금액도 생각보다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선거용처럼 느껴져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기혼, 여성)

“관심은 있는데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봤었던 것도, 행복주택 입주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행복주택이에요. 거기다가 월세 시세가 40만 원이라고 하던대요. 아무리 새 아파트더라도 청년을 위한 거였으면 최소한 40% 정도는 DC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여성)

(3) 주거에 대한 정책인식 및 요구

- 주거문제의 원인

“높은 집값, 그리고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거 문제 악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이라는 응답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은 오르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낮은 소득 수준과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한 주거 환경 개선의 어려움, 수도권 지역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주택 물량 공급이 부족하여 청년 주거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로 응답하였다.

그 외 의견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 및 자립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원인(공통) - 높은 집값

“그냥 요즘에 너무 집값이 오르고, 월세도 비싸고, 이제 전세도 월세로 돌리는 추세인데, 이래서 어떻게 청년들이 살 수 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집을 매매한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저희도 전에 전세 살았을 때 갑자기 집 앞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 되니까 1년 만에 2억이 오르니까 너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청년들은 집을 구하기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25-29세, 기혼, 여성)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취업인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모아야 집을 살 텐데 일단 취업부터 안 되니까 주거빈곤층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일단 소득에 비해 주택이 너무 비싼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쌓아온 자산이 없는 시기인데 소득이나 어떤 그런 걸로 본인이 주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단계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나”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공통적으로 지적인 높은 집값 외에 청년 주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주택, 특히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아 가격이 폭등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청년들이 점점 더 떨어지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원인(수도권) - 주택 물량 공급문제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몰려있다가 아니라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구가 너무 몰려서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집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 생각이예요 ”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주택 자체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냥 청년들조차도 저도 그렇지만 역세권을 찾고 서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신축을 찾고 약간 욕심은 또 큰 게 있는 것 같아서”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와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주로 꼽았다. 일자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몰려 있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지방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원인(비수도권) - 일자리 및 소득 문제

“청년의 주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가장 몰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 결국에는 일자리라는 지점이 같이 따라가는 거 같거든요.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는 청년이 주거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미혼, 남성)

“일단은 제일 큰 문제로서는 제 벌이에 맞지 않는 주택의 가격이겠죠. 제가 고시텔이라는 곳에 살아 보니까 줄일 수 있는,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게 결국에는 당장은 그렇게 빈곤 같은, 말 그대로 몸 하나 높일 공간만 있으면 당장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중략) 결국 그러다 보면 계속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 가장 많이 알려진 주거 지원 정책

“정책 인지 :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주택공급, 월세지원, 세액공제 등의 금전 지원, 청년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등의 대출 정책”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두 번째는 대출 측면에서 청년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등 저렴한 주거대출 상품 지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전 지원 측면에서 월세지원,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 지원 중 세액공제 지원 정책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액공제 상품 특성 상 경제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인지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 정책(공통) - 주택공급 정책
“행복주택, 직접 대상이 되지 저도 알아봤거든요.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세대 나누고 제 소득 증명을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소득 증명하기 쉽지 않더라구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신촌희망타운도 생각나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임대 SH, LH에서 임대 주택 공급하는 거,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이것 저것 혜택 주려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인지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 정책(공통) - 대출 정책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이랑 그리고 월세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공제 해주는 것,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도.”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맞는 지 모르겠는데 청년 대상으로 전세 대출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세도 지원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전세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했나 그런 쪽의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인지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 정책(공통) - 금전적 지원

“정확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어디 그 대상에 들기만 하면은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금을 무이자로 이렇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임금근로자, 여성)

“서울시에서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한테 월세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 동료 중 한명이 월세 보조금 받는 친구였거든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임금근로자, 남성)

-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점과 현재 주거 상황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효용성이 낮다고 인식”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청년들은 주로 저소득층 등에 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저소득층 외에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만큼 지원 요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집값 급등 등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제도 자체는 도움이 되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효용성(공통) - 도움이 안 된다

“저소득층 쪽에는 효과가 있으나 평범한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구조에 도달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거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소득이 어려운데도 경쟁을 때문에 밀려나서 정말 받아야 하는 사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수혜 경험 없음, 남성)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진짜 지원을 받았구나 그걸 정도의 정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19-24세, 타인 수혜 경험 있음, 남성)

특히, 본인 또는 지인이 주거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상 선정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지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영구임대나 분양 등 주택 구매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효용성(수혜 경험 있음) - 도움이 안 된다
<p>“효과가 없다고 봐요. 일단 소득 등 지원 자격 자체도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3교대 공장에 들어가면 버는 돈이 많다보니 일은 힘들고 집도 먼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커 가지고 세전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일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멀리 다니고 있는가를 척도를 비교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19-24세, 타인 수혜 경험 있음, 남성)</p> <p>“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디딤돌 대출 받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당장은 분명히 도움이 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죠. 사실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타인 수혜 경험 있음, 남성)</p>

- 청년들이 바라는 주거 지원 정책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원 확대 등 기존 정책 보완, 정책 대상자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원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의 개선 사항으로는 행복주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물량과 구매할 수 있는 집의 물량 모두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 대부분이 현재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기존의 정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거환경이 불안한 청년들에게는 월세지원, 임대차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주거 안정을, 주거 매매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확대, 매매 시 수수료 절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현재 주거 지원 정책의 효용성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등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수혜 대상자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p>향후 청년 주거 정책 개선 사항(공통) - 공급 물량 확대</p>
<p>“저는 행복주택 같은 뭔가, 자기를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출이나 일시적 금전 지원도 좋긴 좋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원 받은 만큼) 주거비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가 쪽의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여성)</p>
<p>청년 주거 정책 개선 사항(공통) - 직접적인 지원</p> <p>“저는 지원으로 특히 20대 청년들, 취업생이나 재학중인 친구들한테는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금전적인 그런 지원을 해줘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 고졸, 만25-29세, 기혼, 여성)</p>

수도권 거주 청년들 및 기혼자의 경우에는 특히 공급물량의 확대를, 비수도권 거주 및 미혼인 청년들은 주로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지원금액 차등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p>청년 주거 정책 개선 사항 (수도권 거주 및 기혼)- 공급 물량 확대</p>
<p>“금액도 그렇지만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지부 임대주택또는 향후 분양을 받는다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보니 안정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한테. (구체적으로)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같은 거요. 서울에는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기혼, 여성)</p>

청년 주거 정책 개선 사항 (수도권 거주 및 기혼)- 공급 물량 확대

“청년들도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규모들만 계속 짝어내듯이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많이 비고 진짜 필요한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주택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급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30-34세, 기혼, 남성)

청년 주거 정책 개선 사항 (비수도권 거주 및 미혼)- 지원제도 개선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물론 정책상으로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을 볼 때는 서울에서의 20만원과 지방에서의 20만 금액이 체감 상 다르듯이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주는 돈은 주는데 참 애매한, 고맙긴 고마운데 진짜 고마운 것 같지 않은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비수도권 거주, 고졸, 만30-34세, 미혼, 남성)

“심사 기준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사람 다 똑같이 집은 없는데 한쪽은 소득이 많아서 떨어지고 한쪽은 소득이 적어서 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소득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여러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수도권 거주, 대재이상, 만25-29세, 미혼, 남성)

3. 요약 및 시사점

청년의 교육과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인식, 경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본 심층면담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빈곤과 기회에 대한 인식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미진학 사유를 물어본 결과,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또는 고시, 공무원 시험 등으로 미리 진로를 결정하여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제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말한 경우도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고 그 보다 향후 진로 계획에 따라 대학 진학을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사회에 학력 관련 차별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면담참여자 대부분이 학벌과 성공 가능성의 상관관계가 높다는데 동의했다. 블라인드 채용 등의 도입을 통해 과거보다는 학벌의 영향력이 일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상위권 대학 출신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참여자들은 학력별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자와,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에 대비하여 채용이나 업무 평가 등에서 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존재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학력 관련 차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종과 분야 및 개인 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 훈련 경험과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웠다는 소수의 응답을 제외하면, 본인의 관심분야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사교육과 훈련 참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참여 기회를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나 교육 참여 횟수 보다는 본인의 참여 의지와 노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종합해보면 심층면담 참여 청년들은 대학 교육, 사교육 및 이외 교육 훈련 비참여가 경제적 빈곤에 의한 교육빈곤이라기 보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불참'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교육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를 경험하

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소수 있었고, 특히 고용 분야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체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2) 니트(NEET)족 및 교육빈곤층 인식

교육, 훈련, 진학 및 취업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그늘 아래 교육이나 경제활동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거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과다한 경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현 청년세대들이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취업 실패 등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격차 등 '부모'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청년 대상 교육 및 훈련 정책에 대한 요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업 훈련과 함께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 인지도가 높았다.

청년 교육지원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취업연계로 이어지거나 업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단발성 교육으로 후속 지원이 따르지 않거나 교육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교육 및 훈련 지원 정책의 개선 사항으로 실무자의 현장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동일 훈련 분야 참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등 공유의 장을 만들어 줄 것, 일자리 연계를 보다 강화해 줄 것, 청년 진로 방향 등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4) 주거비 부담 및 전망

심층면담 참여 청년들은 현재 주거 관련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 및 자가 마련을 위한 대출 의존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독립과 혼인이 보다 당면한 문제인 30대 청년들은 주택마련과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20대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집값과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 및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집의 주요 가치와 기능은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20대 대비 30대는 집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주거지 선택 기준 및 이주 선호 조건으로는 교통(주로 일자리 접근성), 주거시설과 환경, 가격 및 투자요건, 자녀 교육과 거주 안정성 관련 사항을 주로 언급하였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는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향후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청년들도 장기적 하락이라기 보다는 최근 급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5) 주거빈곤층 인식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빈곤이란 ‘자가가 없어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주거비용을 감당이 어려운 상태’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 등으로 분석된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주거빈곤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이유로 수도권 청년들이 학업성적을 주로 제시한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했다. 학력 차별은 수도권 청년들이 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에 관해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도권 청년들이 주거지를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높고 주거 문제의 원인도 너무 비싼 가격이나 공급 부족에서 찾는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거지 주변의 인프라를 중시하고 주거 문제의 원인을 일자리와 낮은 소득에서 찾았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일자리만 있다면 인프라가 더 좋은 주거지를 찾아 이주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도권 청년들은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에 더 가까운 주거지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다르다 보니 정책적인 수요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들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현행 주거 지원 대상의 확대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7)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 관한 요구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으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 대출, 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참여 청년 다수가 낮게 평가하였는데, 주된 이유로 다수의 청년 주거 정책이 금전 지원, 임시 거주 주택 제공 등 현재의 주거 불안을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데에만 치우쳐 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주택 가격의 급등, 전·월세 대란 등 주택시장 상황을 제도가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 개선 의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 보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월세 지원, 임대차보호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당장의 주거빈곤과 어려움을 경감하는 지원 외에도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8) 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교육 빈곤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비록 교육이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서는 받고자 원하는 교육을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의 교육 수준은 당사자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이지 열악한 환경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학벌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더라도 그것을 차별하는 조직이나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좋은 학력을 보유하려는 선택이나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교육 지원 정책의 효과를 성공적인 결과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교육이나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얼마나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본인이나 주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체험한 경우에 교육 지원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실제 직업 훈련 교육이나 취업 지원을 받아본 청년들 중에는 담당자의 태도나 교육의 내용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학한 대학입에도, 대학 문화나 학생들과의 교류, 교수 혹은 교과 내용의 질이 기대만큼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이 대상의 선정과 질적인 보장임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포함해 사업에 투입하는 자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예민한 문제다. 2021년도 기준,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빈곤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의 빈곤 청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다수의 청년들에게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 빈곤 문제와는 달리 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각된 주택가격 급등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의 내용은 청년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가진(혹은 가질 계획이 있는) 청년들은 직장에서 가깝고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불만인 반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열악한 주변 인프라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뚜렷했다. 특히 수도권 청년들은 주거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의 구입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자기 주택

소유가 대략 10년 쯤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자기 주택 소유는 50대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주택 소유를 중시하는 수도권 청년들에게 그 목표가 너무 멀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불만이였다. 반면에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택 구입 자체보다는 괜찮은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것, 그런 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 직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정책 대상이 너무 좁다는 불만도 많았는데, 현행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직장을 가진 자신들은 주거 지원 정책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들에게 주거는 소유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주택 소유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빈곤 정책에 있어서도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두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빈곤 청년 맞춤형 정책보다는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더 바람직하며, 주거 빈곤이 단지 주거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취업환경 및 교육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제6장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6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⁴⁹⁾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우리 사회의 청년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의 기초가 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금년 2차년도 연구에서 중점주제로 다룬 교육훈련 분야와 주거 분야, 그리고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하여 3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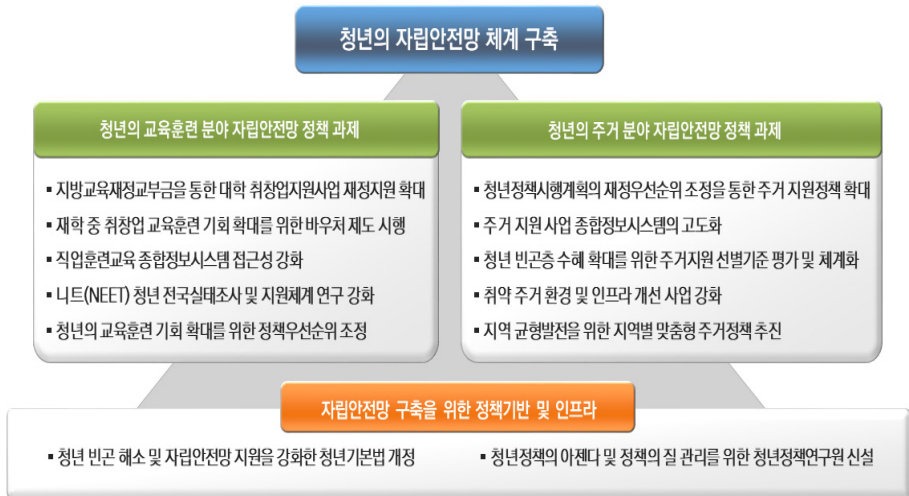


그림 VI-1. 정책 비전 및 분야

49)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2. 정책 제언

1) 교육훈련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 내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많은 재학생들이 관련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의 교육훈련 관련 실태 및 정책욕구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에서,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있음' 응답이 40.8%로 나타났고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 없음' 응답이 59.2%로 나타나 수혜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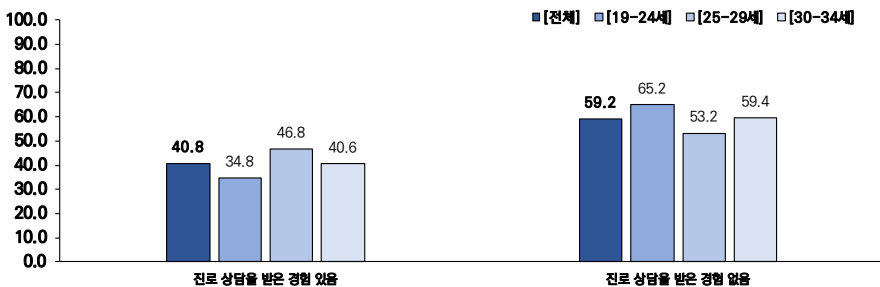


그림 VI-2.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 받은 경험

다. 추진내용

2015년 이래로 교육부를 통해 대학에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 취창업지원을 위한 투자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간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의 취창업 지원 관련 수혜 경험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재학생들의 수혜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새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재정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천명한 만큼 대학의 취창업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관리 주체인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한 평가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교부금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 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2023년	500,000	-
	2024년	550,000	-
	2025년	600,000	-

※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교육 활용방안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

가. 필요성 및 목적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졸업 이후의 진로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경로를 밟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제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 별도의 시간과 경비를 들이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과정 자체가 사회진출에 유용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겪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교육훈련 관련 청년들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 응답이 87.0%로 '부담 없음' 응답 13.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고시 준비'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격증 준비'(31.4%), '학교(전공) 교육의 보완'(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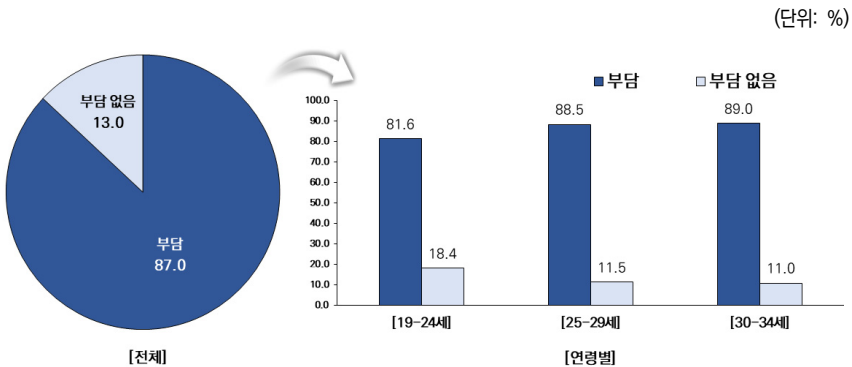


그림 VI-3.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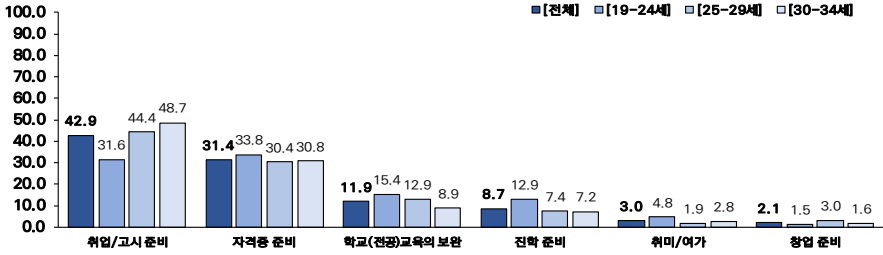


그림 VI-4.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 받은 이유

다. 추진내용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하는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카드 사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교육 바우처’ 제도를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기존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전달체계로 17개 시도 지자체와의 연계 하에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2.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직업훈련교육 바우처’ 제도 시행	2023년	14,100	1,000
	2024년	15,510	1,100
	2025년	17,061	1,210

※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연간 10% 순증하는 것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시기의 취업 준비와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등학교든 대학교이든 간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제공되는 직업세계, 직업훈련교육 등의 내용이 충분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비사회인들에게 직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24세: 51.0%, 25~29세: 43.1%, 30~34세: 41.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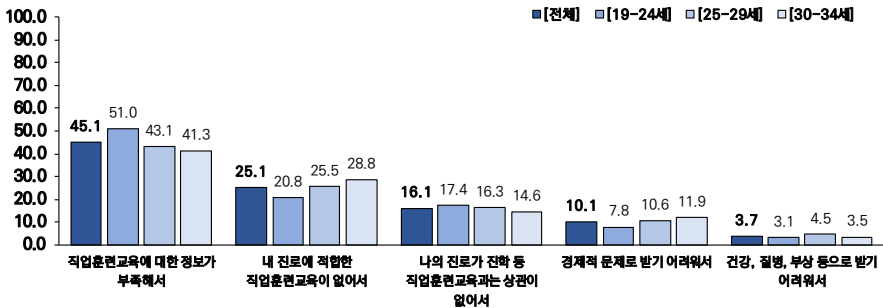


그림 VI-5.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이유

다. 추진내용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등이 있다. 여기서는 구직자와 재직자 등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의 직업훈련 관련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종합정보서비스에서의 정보 다양성과 접근 용이성이 보다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파악, 접근방법의 개선, 홍보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여 정보시스템의 콘텐츠 확대와 접근방식 등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I-3.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 (직업훈련정보 실태조사,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등)	2023년	36,745	-

※ 고용노동부의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예산을 준용하여 10% 증액하는 것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4)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앞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 빈곤 상태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20년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비율은 20.6%로 OECD 평균인 13.4%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난 4주간 그냥 쉬었다는 응답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도 안하고 교육훈련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 청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대상 실태 및 정책육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 '일을 하였음' 51.3%, '취업준비를 하였음' 18.0%, '그냥 쉬었음'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 보다는 지방 거주 청년이,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미만의 청년들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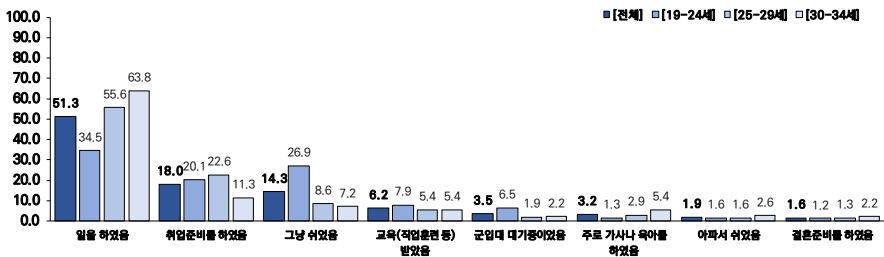


그림 VI-6.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경험 여부

다. 추진내용

OECD 국가들의 경우 니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니트 청년의 비율이 완만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니트 증가의 원인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든 아니면 고용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구직 포기의 증가든 간에 전국적으로 니트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역별로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과 니트의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단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실태 통계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방안으로 연계되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국책연구기관간이 협동연구 방식으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각 참여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정책연구의 기관간 공동추진이 요구된다.

마. 소요예산

표 VI-4.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23년	1,200	-
	2024년	1,320	-
	2025년	1,452	-

※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연구 예산규모를 준용하여 연차별 10% 순증하는 것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5)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의 정책고객으로서 청년들의 정책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정책자산의 한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해당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는 마땅히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아야하고 이는 해마다 정책고객의 의견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설문조사 결과,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1+2+3순위 기준, ‘대학등록금 인하’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가 장학금 확대’(42.9%),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준비 지원 확대’(4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집단에서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9~24세: 55.2%, 25~29세: 55.7%, 30~34세: 54.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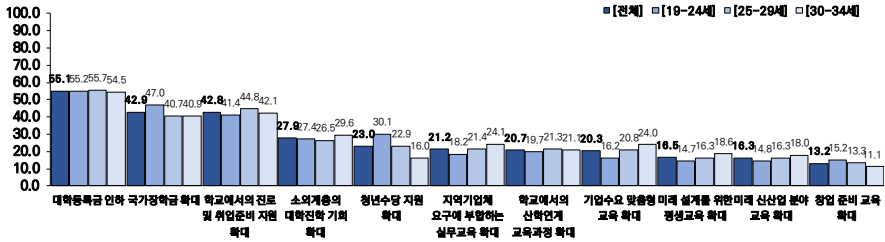


그림 VI-7.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다. 추진내용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20%이상의 응답치를 나타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5.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우선순위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1	대학등록금 인하
2	국가장학금 확대
3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준비 지원 확대
4	소외계층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5	청년수당 지원 확대
6	지역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교육 확대
7	학교에서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
8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확대

라. 추진체계

정책우선순위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 주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I-6.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2023년	40	204
	2024년	40	204
	2025년	40	204

※ 국무조정실의 시도 청년정책위원회 연간 운영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청년의 주거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1) 청년정책시행계획의 재정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주거 지원정책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청년들이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

나. 추진근거

위에 열거한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을 살펴본 결과, 18.4%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 사업(6.6%),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5.7%)을 제외하고는 수혜율이 5%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나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3%대의 수혜율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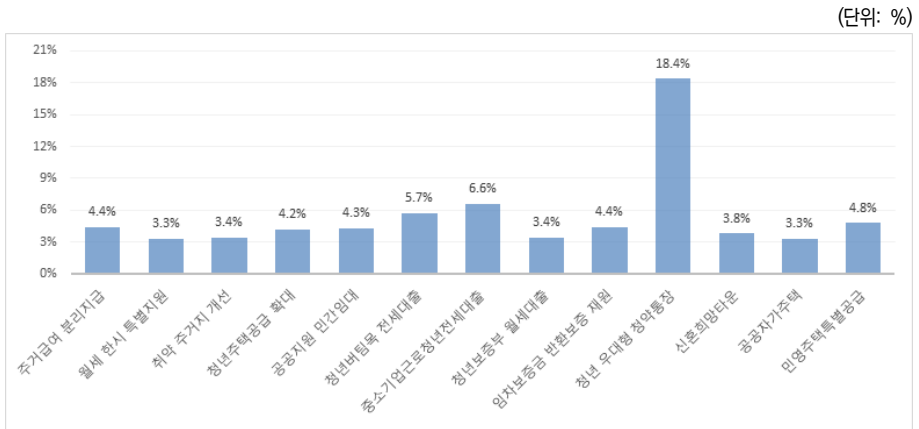


그림 VI-8.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수혜 경험률 전체(%)

다. 추진내용

청년 주거 문제가 부각된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청년 정책사업 예산 중 에서 주거 부문 예산이 8조 8천 380억 원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인 31.4% 보다 많은 35.8%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거 지원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건별 소요 예산 규모가 매우 크므로 수혜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단위의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거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거 사업 예산의 재정 우선순위 조정과 주거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7.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예산 확대

(단위: 억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중앙	비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주거지원 사업 예산 확대	2022년	88,380	-
	2023년	92,799	전년 대비 5% 증액
	2024년	97,439	전년 대비 5% 증액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거 지원정책 전체 예산안을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주거 지원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대상 주거지원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들만 나열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업, 청년 주택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사업이다.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의 개별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따라서 청년 대상 주거지원 사업이 세분화될수록 이들 개별 사업의 정보를 통합하여 해당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각종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사업(61.4%), 청년주택공급 확대 사업(50.6%), 공공지원 민간 임대사업(44.4%) 등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주거 급여 분리지급(23.3%),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23.2%) 사업 등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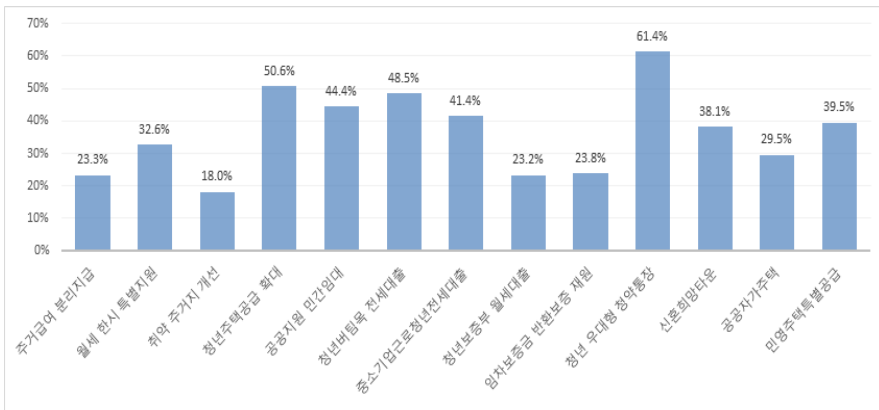


그림 VI-9. 청년 주거 지원정책 인지도

다. 추진내용

현재 청년 주거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과 서울시 등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 등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별도의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정책수혜자에게 모든 지원 사업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방향 정보 활용 등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 지원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의 중앙과 지자체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원 신청과 전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등 기능을 고도화하며,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지원 포털의 내용 업데이트와 포털 간 정보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능 보완 사업과 함께 해당 포털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을 실시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8. 주거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접근성 강화(중앙정부 지자체 정보 연계,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등)	2023년	52,000	-

※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청년 빈곤층 수혜 확대를 위한 주거지원 선별기준 평가 및 체계화

가.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시행되는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 대부분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선별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이 목표로 하는 수요자에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별로 선별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된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 수혜 경험 비율을 빈곤층과 비 빈곤층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비 빈곤층 청년들의 정책수혜 경험 비율은 빈곤층 대비 최대 89.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최소 43.5%(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청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 실제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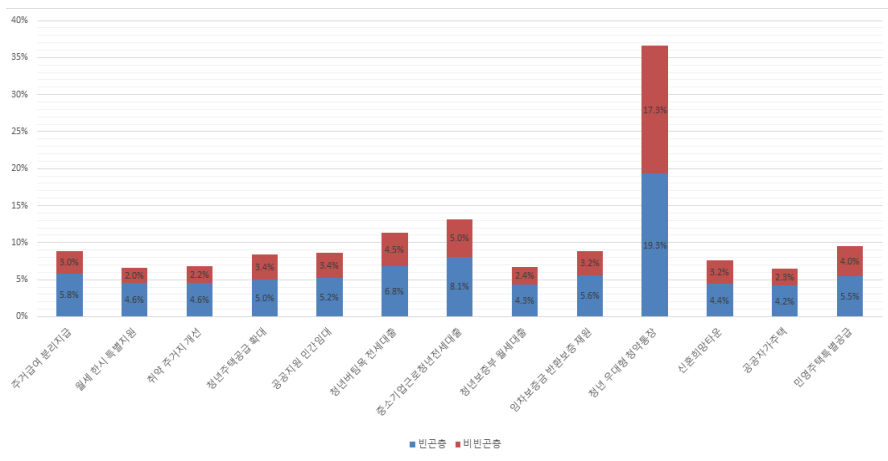


그림 VI-10. 빈곤층 대비 비 빈곤층 청년의 주거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을 분포

다. 추진내용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적지 않은 청년들이 선별적 주거지원 사업들이 실제로 의도한 선별 목표와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산은 없으나 근로 소득 금액이 주거 지원 기준 상한선을 넘으면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 소득 금액은 적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청년은 반대로 선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선별적 지원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별 기준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매년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격한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이 예상되는 지금에는 정책 수혜 대상의 전반적인 확대와 선별 기준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혹은 그에 준하는 청년정책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매년 청년 주거지원 대상 선별 기준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선별 기준에 반영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9. 청년 주거 지원 선별기준 분석 평가 및 체계화 사업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청년 주거지원 선별기준 분석 평가 및 체계화	2023년	625	-
	2024년	644	3% 증액
	2025년	663	3% 증액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다. 추진내용

현재 청년 주거 정책은 주거비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월세 지원은 낙후된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더 비싸지만 거주하기 편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택지 가격이 낮은 지역에 공급되는 청년 대상 주택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거주환경을 충족하지 못해서 외면당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주거비가 비싼 서울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교통편을 포함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에 아파트가 있고, 그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 개인 대상의 주거비 지원이나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전반적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제안한다.

라. 추진체계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거 취약 청년 집중지원 사업」중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사업’의 내용에 교통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0. 취약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사업 강화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사업	2023년	5,000	지자체별 매칭
	2024년	5,500	"
	2025년	6,000	"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청년친화 특구조성 사업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5)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전달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주거비용 부담에, 비수도권은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인프라의 확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수도권 청년들은 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 주택, 전세대출 등의 공급확대 정책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수도권 청년들은 취약 주거지 개선이나 월세 특별 지원,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등의 주거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의 핵심은 괜찮은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것, 그런 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 직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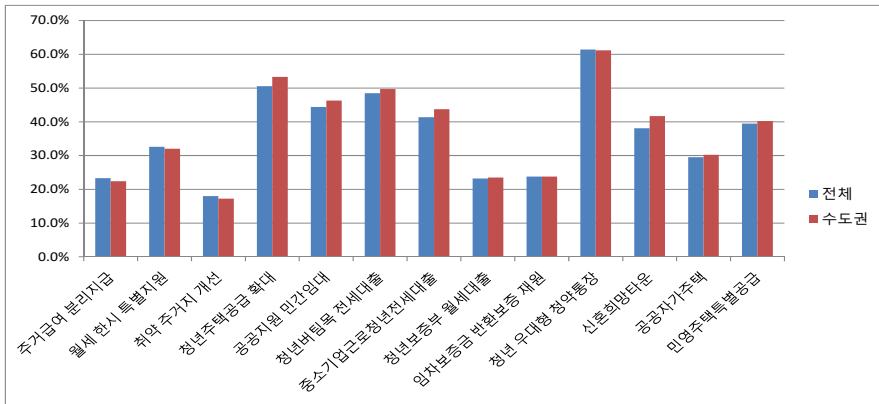


그림 VI-12. 청년들의 주거정책 인지도 (수도권 대비 전체)

다. 추진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세대출, 민간임대 주거 공급 등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은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수요에 부합한다. 반면에 취약주거지 환경 개선,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등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다. 이러한 비수도권 청년 수요 사업은 2021년에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었다가 22년부터 타 사업으로 통합된 '주거취약 청년 집중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배분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신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 중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예산의 일부를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사업 예산에 배정하고 사업 내용을 확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

(단위: 억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취약 주거지 개선 사업,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3년	36,834	지자체별 매칭
	2024년	38,676	"
	2025년	40,609	"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매년 5% 증가하는 것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자립안전망 체계를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1) 청년 빈곤 해소 및 자립안전망 지원을 강화한 청년기본법 개정

가.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초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가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청년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역할로 명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소외되거나 빈곤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다음 표와 같이 총 5개 장,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청년 일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빈곤 청년 지원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2. 청년기본법 조문 구성

장별 주제	조문 주요내용
제1장(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날
제2장(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3장(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5장(보칙)	권한의 위임위탁, 포상, 국회 보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c).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2년 9월 21일 인출

다. 추진내용

청년기본법은 현재 총칙과 보칙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빈곤 등 소외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의 장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I-13. 청년기본법 개정(안)

장별 주제	조문 주요내용(안)
제1장(총칙)	-
제2장(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
제5장(빈곤 등 소외청년 지원)	빈곤 등 소외청년의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지원, 빈곤 등 소외청년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제6장(보칙)	-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법제처와의 협력 하에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발의하여 개정 법률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I-14. 청년기본법 개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공청회	2023년	100	-

※ 국무조정실의 법제도 관련 정책연구 위탁용역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청년정책의 아젠다 및 정책의 질 관리를 위한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가. 필요성 및 목적

새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7번째 국민과의 약속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인데, 여기서 청년들에게 주거·일자라·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우리사회의 청년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거기반 정책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치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양질의 정책을 수립하고 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새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92번 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에서 청년정책 인프라와 관련하여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표 VI-15. 청년기본법 개정 소요예산

국정목표	국정약속	국정과제	주요내용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에서 2022년 10월 5일 인출하고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함.

다. 추진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인문사회 관련 정책의 연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들이 각자의 정책주제와 기능에 맞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근거기반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하다. 이는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축되어 전담연구기관 설립의 타당성 연구, 설립 준비를 위한 테스크포스(설립준비위원회) 운영, 재정 확보 및 조직 구성 등 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담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소요예산

표 VI-16.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설치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및 준비위원회 운영	2023년	200	-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설치 및 운영	2024년	15,000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소규모 연구기관 연간운영예산을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결론

앞서 연구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의 청년층의 삶은 빈곤에 직면하거나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장기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장기간의 고용 침체로 인한 삶의 여러 부문에서의 문제가 다발적으로 촉발되어 회복탄력성이 상실된 측면이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기가 개인의 인생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가장 가난한 시기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이다. 청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로 자산의 축적이나 사회적인 지위 역시 가장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년 시기의 빈곤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 대다수는 자신이 결국에는 삶이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와 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청년 빈곤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청년의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미래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과 행복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3개년 연속과제 연구로서 금년도는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목적⁵⁰⁾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 실태를 다년 연속연구를 통해 이행경로 및 영향요인을 누적하여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차년도는 청년 빈곤의 분류를 및 지표 개발, 지표별 실태, 빈곤 집단 유형 분석, 소득 및 노동 빈곤에 관한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금년도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한 빈곤 인식, 정책 욕구를 토대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김형주 외, 2021).

1차년도에 이어 통계청 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다.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 시계열 변화 추이,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통해 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과 양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은 이행기 주요 과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는 청년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0) 본 연구는 3개년 연속연구로서 연구의 기본 목적과 연차별 세부 연구목적은 1차년도에 수립한 목적과 동일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경제: 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 실업, 비정규직, 정신건강)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빈곤, 비정규직 비율, 정신건강 결핍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년은 전통적인 빈곤 기준인 소득 외에도 자산,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다차원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가구소득 빈곤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의 빈곤지표는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일부 지표는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단의 빈곤이 감소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가구주의 높은 자산빈곤율과 열악한 주거는 최근 청년층의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성인초기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청년의 자산과 주거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년기 자산 격차와 주거 문제는 이후 중장년, 노년기의 불평등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자산과 주거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특히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위험이 매우 증가하였다. 청년의 경우 건강한 집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코로나19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의료비 과부담 비율에서도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근로연령 집단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사례로 언급되는 수월 세 모녀, 송파 세 모녀 사건 모두 젊은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실직과 질병으로 인해 빈곤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결핍과 이로 인한 빈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영역의 근로소득 빈곤과 노동영역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의 상대적 빈곤 위험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임금 근로가 아닌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청년층의 노동 등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금년 2차년도 중점주제인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첫째,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경험 및 실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학 진학보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진학하지 않았다는(56.6%) 의견이 두드러진 반면,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로는 취업을 하려면 대학 진학이 유리(59.1%) 하고,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51.5%)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79%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문과(57.2%) 진학 비율이 이과(42.8%) 진학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30.0%)을 받은 응답자는 취업/고시 준비(42.9%)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응답자(82.7%)가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23.3%)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45.1%)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직업훈련 교육 전반적 만족도는(77.0%)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직업훈련 교육과 관련된 질적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일반적 인식 및 전망의 경우, 내가 졸업한 대학이 하위 대학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47.0%) 상위 대학(20.6%)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87.8%),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별(89.7%)을 대부분의 청년들이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유리(85.9%)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 동안의 교육이 향후 소득과 자산의 차이(83.3%)에 영향을 매우 크게 준다고 느끼고 있지만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54.3%)하는 경향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이 부족해(39.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86.8%)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 청년 취업난의 지속으로 인해 대학 서열화 문제에서 비롯된 학벌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규교육 이외에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정책요구에 있어서 대학생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의 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혜 경험을 또한 대학생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약 90%가 모든 정책에 대해 수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55.1%)하거나, 국가 장학금을 확대(42.9%)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준비(42.8%)를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첫째, 청년의 주거에 관한 경험 및 실태의 경우, 과반수 응답자가 아파트에(55.7%)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8.5%로 파악되었다. 현재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향(63.3%)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 스스로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보다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53.9%)을 통해 주거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80.7%)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 취득이 필요(81.2%)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약 5년~10년 이내(26.8%)에 내 명의의 자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자가 취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 취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9.9%) 청년들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고(66.9%), 내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28.5%) 자가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에 자가 마련(63.0%)을 희망하고 있었고, 대부분 아파트(76.6%)를 희망하였다. 또한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전세(56.9%)가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자가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3~5억 이내(31.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청년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 거주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의 주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전망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주거란 '안정적인 삶의 기반'(64.6%)이며, 청년 과반수가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이 필요(64.4%)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해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25.8%)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37.1%)과,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직(23.0%)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금 지원(76.9%)이 있어야만 자가 마련이 가능하며, 청년 대다수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가 마련이 불가능(76.3%)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51.5%)이 우리 사회에서 자가를 취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며,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74.4%)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또한 주거를 마련하기에 환경적인 측면도 수월하지 않다(78.8%)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이 너무 높고(48.7%), 부모의 도움 없이 청년들이 주거 마련(16.2%)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주거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주거 마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가 마련을 위한 무리한 투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도록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청년의 주거에 관한 정책요구에 있어서 청년 주택 공급 확대(50.6%), 공공지원 민간임대(44.4%), 청년버팀목 전세대출(48.5%),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4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61.4%) 정책의 경우 인지 비율이 약 40% 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제외하고 정책을 수혜 받은 경험이 모두 약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비용이 경감(42.8%)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34.3%) 또는 청년 임대주택(48.5%)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청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여타의 청년정책보다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실제 수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대상의 주택 공급 및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해 수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청년의 교육과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인식, 경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본 심층면담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빈곤과 기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미진학 사유를 물어본 결과,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또는 고시, 공무원 시험 등으로 미리 진로를 결정하여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제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말한 경우도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고 그 보다 향후 진로 계획에 따라 대학 진학을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 참여 청년들은 대학 교육, 사교육 및 이외 교육 훈련 비참여가 경제적 빈곤에 의한 교육빈곤이라기 보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불참'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교육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를 경험하

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소수 있었고, 학벌에 따른 특히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을 체감한다는 의견은 다수를 차지했다.

둘째, 니트(NEET)족 및 교육빈곤층 인식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 진학 및 취업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그늘 아래 교육이나 경제활동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거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현 청년세대들이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취업 실패 등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 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격차 등 '부모'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청년 대상 교육 및 훈련 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청년 교육지원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취업연계로 이어지거나 업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단발성 교육으로 후속 지원이 따르지 않거나 교육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교육 및 훈련 지원 정책의 개선 사항으로 실무자의 현장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동일 훈련 분야 참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등 공유의 장을 만들어 줄 것, 일자리 연계를 보다 강화해 줄 것, 청년 진로 방향 등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넷째, 주거비 부담 및 전망에 있어서 심층면담 참여 청년들은 현재 주거 관련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 및 자가 마련을 위한 대출 의존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독립과 혼인이 보다 당면한 문제인 30대 청년들은 주택마련과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20대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집값과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 및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는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움' 수준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향후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청년들도 장기적 하락이라기 보다는 최근 급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섯째, 주거빈곤층 인식의 경우,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빈곤이란 ‘자가가 없어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주거비용을 감당이 어려운 상태’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 등으로 분석된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주거빈곤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있어서 수도권 청년들이 주거지를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주거 문제의 원인도 너무 비싼 가격이나 공급 부족에서 찾는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거지 주변의 인프라를 중시하고 주거 문제의 원인을 일자리와 낮은 소득에서 찾았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일자리만 있다면 인프라가 더 좋은 주거지를 찾아 이주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도권 청년들은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에 더 가까운 주거지를 찾고 있었다. 수도권 청년들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현행 주거 지원 대상의 확대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일곱째,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 관한 요구에 있어서는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으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 대출, 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참여 청년 다수가 낮게 평가하였는데, 주된 이유로 다수의 청년 주거 정책이 금전 지원, 임시 거주 주택 제공 등 현재의 주거 불안을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데에만 치우쳐 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 개선 의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 보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교육 빈곤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이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서는 받고자 원하는 교육을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개개인의 교육 수준은 당사자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이지 열악한 환경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학벌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을 차별하는 조직이나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좋은 학력을 보유하려는 선택이나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교육 지원 정책의 효과를 성공적인 결과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교육이나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얼마나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본인이나 주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체험한 경우에 교육 지원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실제 직업 훈련 교육이나 취업 지원을 받아본 청년들 중에는 담당자의 태도나 교육의 내용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학한 대학임에도, 대학 문화나 학생들과의 교류, 교수 혹은 교과 내용의 질이 기대만큼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이 대상의 선정과 질적인 보장임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포함해 사업에 투입하는 자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예민한 문제다. 2021년도 기준,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빈곤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의 빈곤 청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다수의 청년들에게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 빈곤 문제와는 달리 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각된 주택가격 급등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의 내용은 청년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가진(혹은 가질 계획이 있는) 청년들은 직장에서 가깝고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불만이 반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열악한 주변 인프라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뚜렷했다. 특히 수도권 청년들은 주거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의 구입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자기 주택 소유가 대략 10년 쯤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자기 주택 소유는 50대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주택 소유를 중시하는 수도권 청년들에게 그 목표가 너무 멀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불만이였다. 반면에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택 구입 자체보다는 괜찮은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것, 그런 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 직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정책 대상이 너무 좁다는 불만도 많았는데, 현행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직장을 가진 자신들은 주거 지원 정책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들에게 주거는 소유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주택 소유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빈곤 정책에 있어서도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두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빈곤 청년 맞춤형 정책보다는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더 바람직하며, 주거 빈곤이 단지 주거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취업환경 및 교육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1차년도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화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서 처음에는 청년 빈곤이 향후 나머지 생애 전반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넣었으나 가능성의 상태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한 실태분석의 측정가능성, 빈곤 개념의 추상성 등의 한계로 최종적인 개념에서 제외한 바가 있다. 청년 시기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부족한 시기일 수 밖에 없고,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른 청년들 간의 격차나 양극화는 향후 나머지 삶의 안정성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전 생애에 걸쳐 빈곤에 빠질 위험성을 청년 빈곤의 개념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청년 시기의 빈곤이 향후 이어지는 삶에서의 빈곤 가능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청년 빈곤의 예방과 타개는 각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안정성과 집단적 행복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의 사회 진출을 위해 부담없이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갖게 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청년 빈곤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진우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강미나, 박미선, 이재춘, 이길제, 이후빈, 조윤지, 우지윤, 이진우 (2021). 2020년도 주거 실태조사. 세종: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 장정구, 마강래 (2017). 지역의 주택가격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97-110.
- 고용노동부 (2022a).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1070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2b).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2c).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 8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9.13.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 곽윤철 (2017).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관계부처 합동 (2018).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관계부처 합동 (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 (2021). 청년특별대책 보도자료. 21.08.26.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청년, 빈곤에 관한 정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 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 국토교통부 (2011).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 제2011-490호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8285.에서 2022년 11월 28일 인출.
- 국토교통부 (2020).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 주거복지 로드맵 2.0 - .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16호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조양진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박성재, 정지운, 조양진 (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18-142.
-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 김성태, 권영상 (2020). 도시빈곤 주거지로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옥탑방의 형성과 변화 - 관악구 봉천동 일대 청년가구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2), 25-40.
-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 김영주, 박인경 (2020).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4), 241-250.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 청년, 주거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2.
- 김택수 (2019). 물리적 주거환경이 중년기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정책연구**, 20(1), 117-134.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배진우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배진우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자, 박진아, 이해정 (2019).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생애사 연구: 일반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5(1), 25-52.
- 노혜진 (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사회복지정책**, 46(4), 65-90.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에서 2022년 5월 13일, 2022년 10월 5일 인출.
- 도난영, 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 163-189.
- 두산백과사전 (2022). 빈곤에 관한 정의.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8485 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층의 특징과 양상 :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4), 110-140.

- 박미선, 이후빈, 조정희, 정우성, 하동현, 최민아 (2019).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박미희 (2017).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 확률에 미친 영향: 교육·노동시장·복지 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3), 69-98.
- 박미희, 조미라 (2019). 니트 청년의 시간사용 유형과 설명요인. **청소년학연구**, 26(5), 413-442.
- 박신영(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33-46.
-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청년 세대의 주거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9(2), 16-17.
-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46(2), 101-123.
-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137-159.
- 박지현 (2020). 청년세대 주거 빈곤 경험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43-1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청년고용촉진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 2022년 4월21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2년 4월 21일, 2022년 9월 21일 인출.
- 변금선, 이해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1**. 미간행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신상영 (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45(4), 91-119.

신수민, 정규형 (2017). 노년기 주거비부담이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 : 노후생활비 준비 여부에 따른 차이 비교. **노인복지연구**, 72(4), 191-215.

외교부,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2022).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551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2), 25-57.

유근식 (2021).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16호, 101-107.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 반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 (2020). **서울의 미래 시정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미간행.

유다은, 이지원, 장은지 (2022). 최저 및 적정 주거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3), 47-58.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배진우 (2015).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2017). 한국의 무업청소년 현황,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심포지엄 자료집.

이다은, 서원석 (2019).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 요인 분석, **주거환경** 17(4), 75-89.

이병희.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2월호.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은 (2022). 주거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42(3), 455-479.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 1인 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0-500.
- 임광빈, 강동훈 (2018).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467-479.
- 임보영, 강정구, 마강래 (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도계획**, 53(1), 137-151.
-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66, 133-164.
- 임세희, 김희주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지원 후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정책**, 26(3), 287-319.
- 임세희, 박경하 (2017).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한국사회정책**, 24(4), 31-62.
- 임세희, 이창숙 (2020). 주거개선이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51(4), 5-37.
- 장은지, 유다운 (2021).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 유형 및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2), 121-124.
- 정재현 (2022). 청년 NEET 특성 및 유형분석. 고용이슈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 조한혜정, 엄기호, 천주희, 최은주, 이충한, 이영룡, 양기민, 강정석, 나일등, 이규호 (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파주: 창비.
- 진형익, 강지윤, 최동수, 이미숙 (2020). NEET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의 효과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5(1), 251-272.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2). 2022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2. 9. 16.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2월 9일, 2022년 8월 22일 인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한수정, 전희정 (2018).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6(2), 313-34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22일 인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national-state-and-territory-population/sep-2021>에서 2022년 5월 31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 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Youth Jobs PaTH. <https://www.dese.gov.au/newsroom/articles/explainer-youth-jobs-path>에서 2022년 5월 26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a). Youth Allowance.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b). Youth Allowance for students and Australian Apprentic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for-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2022c). Youth Allowance for job seeker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youth-allowance-for-job-seekers>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Child and Youth Wellbeing (2022). <https://childyouthwellbeing.govt.nz/>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Davidson, P., Saunders, P., Bradbury, B. and Wong, M. (2020). *Poverty in Australia 2020: Part 1, Overview*. ACOSS/UNSW Poverty and Inequality Partnership Report No. 3, Sydney: ACOSS,
-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22). Child Wellbeing and Poverty Reduction Group. <https://dpmc.govt.nz/our-business-units/child-wellbeing-and-poverty-reduction-group>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Domain (2022). March 2022 Rental Report. <https://www.domain.com.au/research/rental-report/march-2022/>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D Wynd (2012).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s Expert Advisory Group’ Solutions to Child Poverty*, Child Poverty Action Group Submission.
- Engage Victoria (2022). <https://engage.vic.gov.au/project/victorian-youth-strategy/timeline/30625>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ILO. (2020).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
- Jobs Victoria (2022). Youth Employment Scheme. <https://jobs.vic.gov.au/help-for-jobseekers/skill-and-training/youth-employment-programs>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Kangas O. and Palme J. (2000).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the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0: 335-52.
- NSW Government, Regional NSW (2022). Office for Regional Youth. <https://www.regional.nsw.gov.au/our-work/pwa-rd/office-for-regional-youth>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NSW Government, Service NSW (2022). Rent Choice Youth.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rent-choice>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OECD (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 Income Inequality Update (June 2014). 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Paris: OECD.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 OECD (2021a).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http://database,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에서 2022년 8월22일 인출
- OECD (2021b). *OECD Family Database*(HM1.4 LIVING ARRANGEMENTS BY AGE GROUPS). OECD.
- Phillips, B., Miranti, R., Vidyattama, Y., & Cassells, R. (2013). *Poverty, Social Exclusion and Disadvantage in Australia*, NATSEM, Report prepared for Unit ing Care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 Queensland Government (2022). Free apprenticeships for under 25s. <https://desbt.qld.gov.au/training/training-careers/incentives/free-apprenticeships>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Schwartz, A. F. (2021).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Routledge.
- Stats NZ (2021). Youth unemployment rate three times national average. <https://www.stats.govt.nz/news/youth-unemployment-rate-three-times-national-average/>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Tanton, R., Peel, D. and Vidyattama, Y., (2018). *Every suburb Every town Poverty in Victoria*, NATSEM, Institute for Governance and Policy Analysis (IGPA), University of Canberra. Report commissioned by VCOSS, P.21
- The State of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 Child Safety and Disability Services (2017). *Building young Queenslanders for a global future*.
- United Nations OHCHR (2022). <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sr-housing/human-right-adequate-housing>에서 2022년 4월3일 인출.
- Work and Income (2022a). <https://www.workandincome.govt.nz/>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Work and Income (2022b). Youth Paymen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youth-payment.html>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Work and Income (2022c). Young Parent Payment.<https://www.workandinco>

me.govt.nz/products/a-z-benefits/young-parent-payment.html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Work and Income (2022d). Jobseeker Suppor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jobseeker-support.html>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Yfoundations (2022). Barriers to young people renting. <https://yfoundations.org.au/wp-content/uploads/2022/01/Barriers-to-young-people-renting-position-paper-FINAL-2022.pdf>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 — 부 록

- 1. 설문 조사지
- 2. 심층면담 조사지

부 록

1. 설문 조사지

청년의 교육(훈련) 및 주거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알컨설팅입니다.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청년의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차년도 연구로서 교육(훈련)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빈곤 의식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만19~34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주거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요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A. 응답자 선정

문A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A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문A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중 ③ 대졸 ④ 대학원 석사졸 ⑤ 대학원 박사졸

※ ① 선택의 경우 A4, A5 응답 후 문B8로 이동

문A3-1) (문A3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가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진학 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② 가고 싶었으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파서
③ 가고 싶었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한 형편이 안되서
④ 가고 싶었으나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 안 되어서
⑤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 중임(재수 등)

문A3-2) (문A3에서 ②, ③ 선택의 경우) 귀하가 다니신 대학의 종류는 어떠합니까?

- ① 2년제 대학 ② 3년제 대학 ③ 4년제 대학

문A3-3) (문A3에서 ②, ③, ④, ⑤ 선택의 경우) 귀하의 학과는 어디 계열에 속합니까?

- ① 문과 ② 이과

문B2) 귀하가 대학(학부) 등록금을 마련한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
- ② 스스로 벌어서 마련(아르바이트 등)
- ③ 국가 장학금
- ④ 학자금 대출
- ⑤ 민간 장학금(성적 장학금 포함)
- ⑥ 금융권 대출
- ⑦ 사채

문B3) 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한 적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B3-1) (문B3에서 ① 선택의 경우)대학교육 기간동안 휴학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고시 준비
- ② 자격증 준비
- ③ 경제적 어려움(돈을 벌기 위해)
- ④ 질병, 사고, 부상
- ⑤ 해외여행 등 여가
- ⑥ 병역
- ⑦ 졸업을 늦추기 위해(졸업후 바로 취업이 안될 것 같아서)
- ⑧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려고

문B4) 귀하는 대학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조금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B5) 대학은 내가 진로를 준비하기에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조금 충분하다 ③ 별로 충분치 않다 ④ 전혀 충분치 않다

**문B5-1) (문B5에서 ③, ④ 선택의 경우) 충분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학문적이어서
② 전공이나 학과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대학교육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도움이 안되서
④ 고등교육으로서 대학교육 자체가 부실해서
⑤ 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파서
⑥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B6) 귀하는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해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B6-1) (문B6에서 ① 선택의 경우) 대학에서의 취창업이나 진로상담 지원은
충분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7)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B7-1) (문B7에서 ① 선택의 경우)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전공)교육의 보완 ② 진학 준비 ③ 취업/고시 준비 ④ 창업 준비
⑤ 자격증 준비 ⑥ 취미/여가

문B7-2) (문B7에서 ① 선택의 경우) 대학교육 기간에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어떠셨습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조금 부담된다 ③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④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문B8)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B8-1) (문B8에서 ① 선택의 경우) 직업훈련교육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조금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B9) 나는 지금까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혹은 다양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9-1) (문9에서 ③, ④ 선택의 경우)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② 내 진로에 적합한 직업훈련교육이 없어서
③ 건강, 질병, 부상 등으로 받기 어려워서
④ 경제적 문제로 받기 어려워서
⑤ 나의 진로가 진학 등 직업훈련교육과는 상관이 없어서

문B10)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였거나 혹은 취업준비, 교육(직업훈련 등)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일을 하였음
② 취업준비를 하였음
③ 교육(직업훈련 등) 받았음
④ 군입대 대기중이었음
⑤ 결혼준비를 하였음
⑥ 주로 가사나 육아를 하였음
⑦ 아파서 쉬었음
⑧ 그냥 쉬었음

**문B11)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학교교육과 학교 이외 교육 모두 포함)이
나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일반적 인식 및 전망

문B12)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자와 비졸업자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13) 우리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14) 일명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을 졸업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15)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B15-1) (문B15에서 ①, ② 선택의 경우)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이 부족해서
- ②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 교육내용에 적합하지 않아서
- ③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의 내용이 취업준비에 보다 적합해서
- ④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서

문B16)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17)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청년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B18)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동안 개개인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는 향후 개인의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에 관한 정책요구

문B19)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청년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알고(들어본적) 있는지,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효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교육 분야 청년정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효과성 인식			
	알고 있음	모름	수혜 받음	수혜 받지 않음	매우 효과적임	조금 효과적임	별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대학생 국가장학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대학의 중소기업/농업분야 등 취업연계 장학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디지털 신기술 혁신고유대학, 디지털 분야 선배 멘토링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ICT기반 수산인력 양성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문화콘텐츠/미디어/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사업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지식재산 인재 양성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고졸 청년 취업연계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직업계고 취업전용시스템(고졸만JOB) 운영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 확대 운영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온라인 평생교육/훈련중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문B20) 다음 중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혹은 지자체)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고르십시오.

- ① 소외계층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 ② 대학등록금 인하
- ③ 국가장학금 확대
- ④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준비 지원 확대
- ⑤ 학교에서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
- ⑥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확대
- ⑦ 지역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교육 확대
- ⑧ 미래 신산업 분야 교육 확대
- ⑨ 미래 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 ⑩ 창업 준비 교육 확대
- ⑪ 청년수당 지원 확대

PART C. 청년의 주거

1. 청년의 주거에 관한 경험 및 실태

문C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명의의 주택이더라도 다음 중 해당되는 형태 선택

- ① 아파트
- ②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④ 하숙
- ⑤ 고시원
- ⑥ 단독주택
- ⑦ 기숙사
- ⑧ 오피스텔
- ⑨ 숙박시설의 객실
- ⑩ 특수사회(복지시설) 시설
- ⑪ 판잣집/비닐하우스
- ⑫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문C2)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이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명의의 주택일 경우 부모의 주거 이용형태를 선택

- ① 자가(자기 소유의 주택)
- ② 전세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④ 사글세, 연세, 일세 등
- ⑤ 무상

문C2-1) (문C2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는 시세로 대략 얼마나
합니까?

약 () 원

문C2-2) (문C2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의 대출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있다 : (원)

② 없다

문C2-2-1) (문C2-2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는 매월 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갚고
있습니까? () 원

문C2-2-2) (문C2-2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C2-3) (문C2에서 ②, ③ 선택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은 얼마나
합니까?

() 원

문C2-4) (문C2에서 ③, ④, ⑤ 선택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주거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보증금 제외, 월 관리비는 포함)() 원

문C3) 귀하는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가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조금 부담된다 ③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④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문C4) 귀하는 현재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か?

※ 대출을 하여 마련한 경우, 원리금을 누가 갚는지를 기준으로 응답 요망

- ①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②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일부는 내 스스로 마련
③ 전적으로 내 스스로 마련
④ 기타()

문C5) 귀하는 현재 주거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조금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C6) 귀하는 향후 내 명의의 집(자가)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이미 취득했다

문C6-1) (문C6에서 ①, ③ 선택의 경우) 귀하는 향후 자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② 자산 상승을 목적으로
③ 결혼을 하기 위해서
④ 주변의 권유로
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⑥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문C6-2) (문C6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는 향후 몇 년 내에 내 명의 집(자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2년 이내
- ② 2~5년 이내
- ③ 5~10년 이내
- ④ 10~15년 이내
- ⑤ 15~20년 이내
- ⑥ 20년 이상
- ⑦ 자가 취득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C6-2-1) (문C6-2에서 ⑦ 선택의 경우) 귀하가 향후 자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택가격이 높아서
- ② 내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
- ③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적어서
- ④ 임대로 사는 것이 괜찮아서
- ⑤ 주택 이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아서

문C6-3) (문C6에서 ①, ③ 선택의 경우) 귀하는 자가를 마련한다면 어느 지역에 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까?(이미 취득한 경우는 향후 이전 희망지 기준)

- ① 수도권 대도시 ② 수도권 중소도시 ③ 비수도권 대도시 ④ 비수도권 중소도시
- ⑤ 농산어촌

문C6-4) (문C6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는 향후 자가를 마련한다면 기대하는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다가구/다세대/빌라 ② 아파트 ③ 단독주택 ⑤ 오피스텔

문C6-5) (문C6에서 ① 선택의 경우) 귀하는 자가 마련을 위해 얼마나 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① 1억 이내 ② 1~3억 이내 ③ 3~5억 이내 ④ 5~10억 이내 ⑤ 10~15억 이내
⑥ 15~20억 이내 ⑦ 20억 이상

2. 청년의 주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전망

문C7)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청년 시기(만 19~34세)에 자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C8)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필요하다
② 향후 주택 마련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영향이다
③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요소가 된다
④ 주택가격 상승 상황에서 무리하지만 불가피하다

문C9)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C10) 우리 사회에서 자가를 마련할 때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C11)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정적인 삶의 기반
- ② 자산 상승의 투자기회
- ③ 결혼의 전제 조건
- ④ 자녀 출산의 전제 조건
- ⑤ 사회적 성공
- ⑥ 부의 대물림

문C12)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월세 ② 전세 ③ 자가 ④ 부모 합가

문C13)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C14) 우리 사회에서 자가 취득을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신의 소득 규모
- ② 맞벌이 여부
- ③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
- ④ 대출할 수 있는 여력
- ⑤ 정부의 주거정책

문C15)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주거(자거나 임대)를 마련하는데 수월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C15-1) (문C15에서 ③, ④ 선택의 경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주거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년들에게 임대비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 ② 청년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 ③ 청년들이 주거 마련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서(부모 등의 지원 필요)
- ④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부족해서
- ⑤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산 상승 욕심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문C16) 귀하는 전반적으로 살피볼 때 현재의 주거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조금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C17) 귀하는 주거를 유지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혹시 마련하지 못할까봐 불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C18) 지금 주택가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조금 높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낮다 ⑤ 매우 낮다

문C19) 우리 사회에서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높아질 것이다 ② 조금 높아질 것이다 ③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④ 다소 낮아질 것이다 ⑤ 매우 낮아질 것이다

3. 청년의 주거에 관한 정책요구

문C20)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분야 청년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알고(들어본적) 있는지,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효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 분야 청년정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효과성 인식			
	알고있음	모름	수혜받음	수혜받지않음	매우효과적임	조금효과적임	별다른효과없음	전혀효과없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자금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별도거주 청년에게 추가 지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실비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취약 주거지 개선(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확충, 대학가 부동산 허위매물 조사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청년주택 공급 확대(도심지 기존주택 매입 후 재임대나 공급, 일자리/육아 테마형 주택 공급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공공지원 민간임대(민간 임대사업자를 국가가 지원하되, 일정기간 청년주택으로 운영의무 부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청년버팀목 전세대출(7천만원 한도, 1.5~2.1% 전세대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1억원 한도, 1.2% 전세대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 한도 대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재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할 일(10~50%))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신혼희망타운(국공립어린이집, 육아시설 등 제공)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공공자주주택(청년이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 공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민영주택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 등에게 특별공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문C21)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② 전월세 비용 경감
- ③ 주거 취약청년 지원
-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문C22) 다음 중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를 선택하십시오.

- ① 대학 기숙사 지원 확대
- ② 청년 임대주택 확대
- ③ 청년 세어하우스 확대
- ④ 재건축, 재개발시 청년 주택 의무 건설
- ⑤ 청년 주거상담 서비스 확대
- ⑥ 청년 월세지원사업 확대
- ⑦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 ⑧ 청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규모 확대
- ⑨ 청년 주거비 관련 대출금리 인하
- ⑩ 청년 대상 민영주택 특별분양 확대

PART D. 공통문항

문D1) 다음은 청년의 다양한 가구형태입니다. 귀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 ① 청년 부부 + 자녀가구
- ② 청년 부부가구
- ③ 청년 한부모 + 자녀가구
- ④ 청년 독립 1인 가구 (※세어하우스 포함, 본인이 가구주임)
- ⑤ 청년 독립 기타가구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경우 포함)
- ⑥ 부모 동거 청년 가구 (※부모와 청년자녀로 구성된 가구)
- ⑦ 부모 동거 청년 기타가구 (※혼인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포함)
- ⑧ 기타 (적을 것 : _____)

문D2) 귀하는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D3) 귀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못받은 교육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D4) 귀하는 제대로 된 주거에 살고 있지 않는 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D5)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

문D6) 귀하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문D7) 귀하는 현재 나의 주거 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부모 명의 집에 동거 중인 경우 부모 집을 기준으로)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2. 심층면담 조사지

청년빈곤 심층면담 문항 (교육/주거)

안녕하십니까?

본 면접의 목적은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본 면담의 질문에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2022년 07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된다.

•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Hankook Research

담당자 : 여론조사부 이동휘 차장/김지혜 과장

연락처 : 02-3014-0995/1039



Part 1 도입

- 인사 및 소개
 - ▶ (대면 면접인 경우)
 -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 어디서 오셨나요?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 거주하시는 곳은 어떤가요?
 - ▶ (온라인 면접인 경우)
 - 어디서 접속 중이신가요?
 - 접속 환경은 어떠신가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 인터뷰 소개 및 안내
 - 본 면접의 목적은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본 면담의 질문에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나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 보안 유지에 대한 안내, 녹음 안내 등



Part 2 교육관련 현황

2-1. 현재 면담자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 (대학재학 혹은 졸업한 경우)

2-1-1. 대학 및 전공

- 어떤 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니시나요? 혹은 졸업하셨나요?
(학제 (2년제, 4년제 등), 대학/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 그 외 지역 등))
-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가요(하셨나요)? (주전공, 복수전공 등)

2-1-2. 선택의 이유

- 그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2-1-3. 선택의 결과 평가

- 본인이 선택한 대학과 전공은 어떠셨나요? (어떠신가요?)
-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신다면 주로 어떤 면이 좋은가요?
- 기대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2-1-4. 경제적 여건

- 대학 등록금과 학비생활비 포함)는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 대학 학비는 부담스러웠나요? 학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 *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 이로 인한 학업 등의 영향 정도
 - * 학자금 대출 경험
 - * 학비 문제로 휴학을 한 경험
- 본인의 여건은 주변 친구들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였나요?
(좋은 편 vs 힘든 편)

2-1-5. 그 외 여건

-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대학 다니면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인간관계, 학교 학과 분위기, 사건이나 사고 등)
-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가요?

2-1-5. 휴학을 하거나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휴학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학을 했거나 하려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대학 입학하지 않은 경우)

2-2-1.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 의지 vs 여건)
- (본인 선택인 경우) 어떤 이유로 가지 않기로 선택하셨나요?
- (여건인 경우)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2-2-2. 결과에 대한 인식

- 지금 상태에 만족하시나요?
- 다시 그 때로 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3. 면담자는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이나 개인교습 같은 사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 사교육의 정의: 입시관련 학원교육/컨설팅, 자격증 관련 학원교육, 외국어 교육, 직업훈련교육 등, 정규교육을 제외한 교육이나 훈련을 모두 포함

▶ (받은 경우)

- 제일 처음 사교육을 받았던 시점은 언제였나요? 그 교육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지금까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시기별로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 너무 오래전 일은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고등학교 이후부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사교육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 지금까지 받은 사교육 중 본인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무엇인가요?
- (대학재학/졸업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에도 사교육을 받으신 적 있나요? 어떤 교육이었나요? 얼마나 오래 받으셨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현재 상태에 관한 내용이면 문항 2-5의 항목을 적용)

▶ (받지 않은 경우)

-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 이유만 아니었으면 사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 받지 않아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2-4. 만약 본인이 사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 (응답과 무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 인 경우)
- 어떤 상황이 가장 많이 바뀌었을 것 같으신가요? (학벌, 직업, 연애 등)
- 가장 아쉬운 교육은 무엇이었나요?

2-5. 현재 상태

- 지금 일을 하거나 직업 교육 혹은 훈련을 받으시고 계신가요?

▶ (일을 하는 경우)

- 어떤 일을 하시나요?

- 그 일은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 귀하의 월 소득은 주로 그 일을 통해서 버시나요? 다른 일도 하시나요?

- (다른 일도 하는 경우)

* 어떤 일을 하시나요?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왜/어떻게 병행하시게 되었나요?

▶ (직업 훈련, 자격증, 외국어 교육 등을 받는 경우)

* 직업 훈련에 회사에서 하는 신입사원 교육, 상사 등으로부터 받는 일반 직무 교육, 사업장 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 안전 교육 등)은 제외합니다.

- 교육은 어떤 목적으로 받게 되셨나요?(취업, 승진, 업무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등)

-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 교육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비용 중 자비 지출, 회사지원, 국가지원 여부 등을 확인

- 교육 내용은 도움이 되나요?

*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한 목적 달성 여부



Part 3 교육 인식과 전망

3-1.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체감하신 적이 있나요?

- (학력 또는 학벌에 따른 차별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3-2.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3. 지금까지 본인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혹은 직업훈련 교육까지 포함해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지금까지 가장 만족스러웠던 교육이나 훈련은 무엇이었나요?

3-4. 앞으로 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3-5. 주변에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 준비나 일하고 있지도 않는 니트(NEET)족이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나요?

- 니트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6. 우리 청년세대들 중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 빈곤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어떤 사람을 교육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학력, 학벌, 학업중단 등)

-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 4 교육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4-1.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 면접자가 기억하거나 인지하는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예시 없이 진행)

- 혹시 본인이나 친구들 중에 교육이나 직업 훈련 관련해서 정책 지원을 받아본 경우가 있나요?
- (받아봤다면) 그 지원은 도움이 되셨나요?

4-2.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정부나 지자체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필요하다면/필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4-3.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교육 훈련 지원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효과가 있다면/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본인이나 아는 사람 중에 지원이 필요했는데 지원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 지원 정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4. 정부나 지자체의 미래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부나 지자체가 향후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지금 정책에서 개선하거나 바꾸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Part 5 주거 상황

5-1.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어떤 주거 형태인가요? 아파트, 단독주택, 고시원... 등
-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 부모님 소유, 전세, 보증금 있는(없는) 월세, 일세, 무상 등
- 거주하는 집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상층,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
- (아파트가 아닌 경우) 부엌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나요?
- 수세식 화장실은 있나요? 해당 시설은 공용시설인가요 본인만 사용하는 시설인가요?
-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있나요? 해당 시설은 공용시설인가요 본인만 사용하는 시설인가요?
- 냉난방은 어떻게 하나요?

5-2. 지금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 (같이 사는 경우) 본인만의 방이 따로 있나요?
- 주거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나요?
- (부모와 독립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 거주 주택 마련 당시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셨나요?
 - * (자가 거주자) 자가 주택 구입 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 * (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나 초기 월세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5-3. 주거 비용은 얼마나 되시나요?

- 매월 기본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월세, 전세대출 상환금(이자/원금 포함)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본인이 (모두 또는 공동)부담한다면) 본인의 소득 대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대략 몇 %나 되나요?

5-4. 주거비용은 얼마나 부담이 되시나요?

- 본인의 소득 또는 생활비 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본인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시나요?
- 관리비나 전세 대출(주택담보 대출)이자 혹은 월세 등 주거비를 체납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5-5. 지금 사시는 곳에 만족하시나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건가요?

- (만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만이라면)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Part 6 주거 인식과 전망

6-1. 본인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결혼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가, 전세... 규모, 지역...)

6-2. 앞으로 본인 또는 (부모 아닌)본인 가구의 집을 취득할 생각이신가요?

- ※ (이미 보유한 경우) 그 집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6-3. 만약 본인 명의의 집을 취득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 (응답이 모호한 경우)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생애최초 내집 마련 연령의 평균이 40세라고 하는데 본인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그 즈음에는 집을 마련했을 것 같으신가요?
-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6-4.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예) 비용, 입지(거주지역), 집의 형태(아파트/단독주택), 내부 공간, 안전성, 이웃, 투자가치 등...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6-5. 주택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금 주택 가격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 앞으로도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6.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거나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청년세대들의 주거마련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7. 우리 청년세대들이 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떤 경우를 주거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자가주택이 없으면, 소득대비 주거지출 부담, 주거환경에 어떤 항목이 없거나 나쁘면 등.)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제로 주변에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청년(34세 미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Part 7 주거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7-1. 청년들에게 있어 주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예) 높은 주택가격, 낮은 소득, 임대료, 정책 부족 등

7-2.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면접자가 기억하거나 인지하는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예시 없이 진행)

- 혹시 면담자 분 본인이나 친구들 중에 주거 관련 정책 지원을 받아본 경우가 있나요?

7-3.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필요하다면/필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확대,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성 향상,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청년월세 지원, 전월세 대출 확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7-4.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효과가 있다면/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본인이나 아는 사람 중에 주거에 관해 지원이 필요했는데 지원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 지원 정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5. 정부나 지자체의 미래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부나 지자체가 향후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주거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예, 주택 물량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기존 주거 안정성 증가 등)
- 지금 정책에서 개선하거나 바꾸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Part 8 종결

● 마무리

-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면접조사에서 말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긴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속연구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한 빈곤 인식과 정책 욕구를 토대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청년 빈곤과 관련된 개념화 논의,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고찰, 주요국 해외사례 분석, 둘째, 우리나라 청년의 빈곤 현황에 관해 1차년도에 개발하여 수립한 6개 영역의 총 12개 청년 다차원 빈곤 지표에 대해 다차원적인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셋째, 청년 빈곤 문제 주요영역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에 관한 욕구 조사 및 분석, 넷째, 청년 빈곤의 2차년도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및 주거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청년층 심층면담조사 실시, 다섯째, 정책제언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청년 빈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금년도 중점주제인 교육훈련, 주거, 그리고 법제도 기반 및 인프라의 3개 분야에 대해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빈곤의 타개와 더불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년, 다차원, 빈곤, 실태, 자립안전망

ABSTRACT

Study of Youth Poverty Reality and Establishment of the Self-Reliance Safety Net System II

In its second year of three consecutive years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prepare measures to establish a self-reliance safety net,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reality of youth poverty, analysis of pathways to youth poverty, poverty awareness and policy needs centering 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housing poverty

This year, the study primarily focused on the following: First, to discuss conceptualization related to youth poverty, analyze previous studies, review relevant policies and laws and programs, and conduct a case study on major countries; second, to conduct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the situation of the 12 poverty indicators across six areas that the study had developed and established in its first year on the poverty reality of Korean youth, thereby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third, to survey and analyze reality and perception of and policy needs for major areas of youth poverty; fourth, to conduct an in-depth interview with young people in order to have deeper understand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housing, which are the key areas of the second year; and fifth,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based on various analysis results, drew a total of 12 policy tasks across three areas of education and training, housing and underlying laws and programs and infrastructure, which are this year's key them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elf-reliance safety net to prevent and resolve youth poverty. And based on these the study proposed detailed measures of assistance to provide policy supports to the self-reliance of young people who are on the pathway to adulthood as well as the eradication of youth poverty.

**Key words: Youth, Multidimensional, Poverty, Reality,
Self-Reliance Safety Ne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은희·송현주
-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은경·박광욱·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규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교육용)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쑈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조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조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2-78-01
연구보고 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78-7 93330

연구보고 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78-7